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 2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정부의
태동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희망을 나누는 국민성공시대





상.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이경숙 인수위원장(2007.12.26)

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007.12.26)



상. 이천 냉동창고 화재현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2008.1.8)

하. 인수위원회 시무식(20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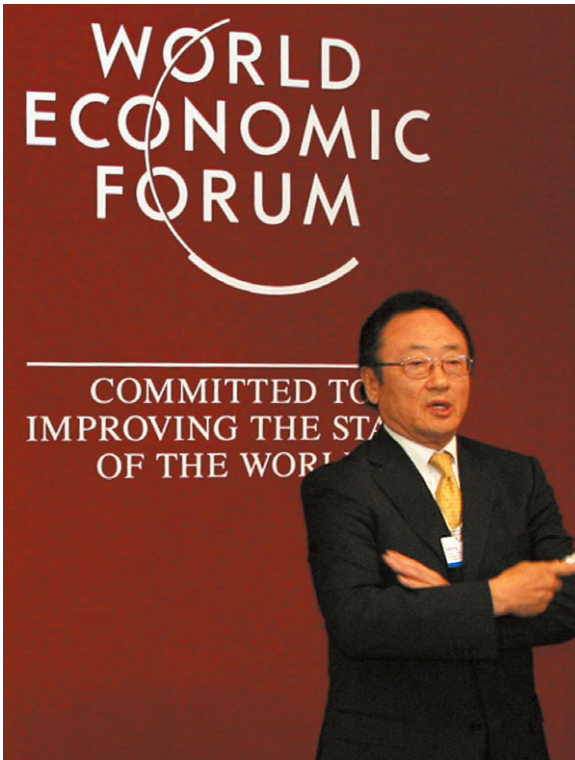
상. 인수위 시무식 후 구내식당에서 배식(떡국)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2008.1.1)

하. 오찬 후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을 배웅하는 인수위원들(2008.1.1)



상. 감사원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김형오 부위원장(2008.1.8)

하. 간사단회의에 참석한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2008.1.3)



상. 대통령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포럼에 참석, 새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사공일 국가경쟁력특위 공동위원장(2008.1.25)
하.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의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이동관 대변인(2008.1.13)

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2008.1.6)
하.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사전 보고하는 박재원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2008.1.16)



상.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인사하고 있는 유인촌 상임자문위원(2008.1.8)

하. 법무부-검찰청 업무보고(2008.1.6)



상.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2008.1.13)

하.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태안 유류오염사고 관련 정책간담회(2008.1.11)



상.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2008.1.13)

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경숙 위원장(2008.1.16)





좌. 서해교전 참상을 간직한 침수리호에서 목념하고 있는 외교통일안보분과 인수위원단(2008.1.22)
 상. 국립경찰병원을 방문, 부상 전·의경을 위문하고 있는 인수위 법무행정분과 정동기 간사(2008.1.30)
 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새만금TF팀 강현욱 팀장(2008.2.4)



상. 구내식당에서 열린 인수위 파견공무원 오찬간담회(2008.1.28)

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2008.2.10)



상. 아치쇼오타루 일본 외교부 차관을 접견하는 이경숙 위원장(2008.1.9)

하. 국정운영에 관한 합동 워크숍에서 직접 차를 타 마시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2008.2.16)



상. 취임식 준비현황을 브리핑하는 백성운 행정실장 겸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2008.2.18)

하. 초청장 발송 작업에 바쁜 취임행사준비팀 초청반(2008.2.15)



상 왼쪽, 전화 제안을 받고 있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직원들(2008.1.15) / 상 오른쪽,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인수위(2008.1.29)
하, 인수위 해단식 후 기념촬영하는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원들(2008.2.22)



상. 2월 25일 0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종 타종(2008.2.25)
하. 취임식 참석자들의 환호에 답례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2008.2.25)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 2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정부의
태동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희망을 나누는 국민성공시대



세계 선진인류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대한민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열게 됩니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 국민은 땀 흘린 수고와 희생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냈습니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를 성숙의 단계로 한걸음 전진시켰습니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를 이끌며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성장엔진을 발굴해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 험난한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온 국민 한명 한명이 성공의 주인공이 돼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선진화의 사명을 감당해 세계일류국가로 비상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선진화는 국민적 희망이자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실용주의로 선진화를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화합을 도모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업과 도전을 실용주의에 입각한 창조적 방안으로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더불어 '섬김 리더십'으로 밑거름을 다지며 실용정부의 싹을 틔우고 국민성공시대를 꽃피우게 되리라는 믿음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선진화로 이룩한 보람의 결실과 기쁨을 나누고, 대한민국이 세계인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매력 있고 아름다운 국가, 성숙한 세계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인수위원회는 50여일의 숨가쁜 여정을 보내며 새 정부의 초석이 될 미래 청사진과 전략 및 계획들을 세우는 데 매진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동시에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면밀히 살펴 개선할 부분은 고치고 본받을 내용은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터전 마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고자 애썼습니다.

한편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안

목과 시야로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분석으로 정책 하나하나를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작지만 유능한 정부,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부로 탈바꿈하기 위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본 백서는 이러한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발자취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핵심정책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중점활동과 쟁점정책 등 인수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두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원들의 열의 넘치는 행보와 끊임없는 토론 끝에 창출한 국정 실천계획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로써 본 백서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정운영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하며, 후대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해 세계일류국가로 우뚝 서는 그날을 꿈꾸며 밤샘 작업과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본 백서를 편찬하느라 정성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의 지평을 여는 데 본 백서가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2008년 3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이 경 속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白書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정부의 태동 2

발간사

제1부 인수위원회구성과 중점활동/23

제1장 인수위원회 구성과 역할/24

1. 개관 / 25
2. 위원장실 / 37
3. 부위원장실 / 40
4. 대변인실 / 43
5. 행정실 / 47
6. 분과위원회 / 55
7.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95
8.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 133

제2장 쟁점정책 도출과정/146

1. 국토발전의 새로운 틀, 5+2 창조적 광역발전전략 / 147
2.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 156
3.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 165
4. 방송·통신 기구통합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 173
5.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 / 180
6.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방안 / 190
7.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 198
8. 대운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준비와 쟁점 대응 / 211
9.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환경대책 / 219
10. 글로벌 과학연구 거점 조성 / 227

제3장 인수위 활동 개선방안/238

1. 인수위 활동 안내 매뉴얼 / 239
2. 인수위 사무실 / 240
3. 인수위 홈페이지와 통신 시스템 / 241
4. 분과위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 / 242
5. 인수위 위원에 대한 기강 확립 / 242
6. 인수위원과 각료 후보자의 연계방안 / 243
7. 예비 인수위제도 도입 방안 / 244

제2부 이명박대통령 시대개막/247

제1장 대통령당선인 주요활동/248

1.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장정 / 249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52

발행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행인 이경숙
편 집 문화체육관광부 www.mct.go.kr
편집인 유인촌
발행일 2008년 3월 24일

제작협력 (주)사사연
인쇄제본 삼성문화인쇄(주)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005-13

3. 경제살리기 / 266
4. 국민통합 / 277
5. 성숙한 세계국가 / 286
6. 인재대국, 문화강국 / 302
7. 방문 및 주요 행사 / 308
8. 연설문 / 314
9. 외신이 본 이명박 대통령 / 327
10.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주요 어록 / 336

제2장 제17대 대통령 취임사준비 / 340

1. 구성 및 작업경과 / 341
2. 위원 구성 / 343
3. 취임사의 내용 및 취지 / 344

제3장 제17대 대통령 취임행사 / 358

1. 개요 / 359
2. 첫걸음 / 360
3. 4대 기본원칙 / 362
4. 조직 구성 / 363
5. 추진과정 / 367
6. 행사 계획 및 진행 / 381
7. 평가 / 384

제3부 인수위원회 현장스케치 / 391

부록

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543
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46
3.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 / 548
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구표 / 550
5.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 및
특별위원회 위원·팀장 분장업무 / 551
6.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및 TF 팀장 / 552
7.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근무자 현황 / 554
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 일지 / 556

편집후기 | 국민성공시대를 기다리며 / 562



인수위원회 구성과 중점활동

1.

제1장 인수위원회구성과 역할

제2장 쟁점정책 도출과정

제3장 인수위 활동개선 방안

1장

인수위원회 구성과 역할

1. 개관
2. 위원장실
3. 부위원장실
4. 대변인실
5. 행정실
6. 분과위원회
7.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8.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1. 개관

1) 목적과 근거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3년 2월 4일 제정(법률 제6854)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 국정과제 설정,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007년 12월 26일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하 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성운 행정실장 사회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 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 인수위원 26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기능, 분과위 등의 구성, 회의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포함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 구성

인수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조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대변인실, 행정실, 6개 분과위원회(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Ⅰ, 경제Ⅱ, 사회교육문화) 및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를 설치했다.

행정실은 위원회 각종 회의 지원, 서무, 인사, 회계 소관업무 등을 담당하고, 대변인실은 위원회 활동 등의 대외 공표 및 홍보를 담당하도록 했다.

각 분과위 및 경쟁력강화특위 분장업무로는 ① 기획조정분과위원회(간사 : 맹형규)는 국정목표 수립, 운영기획, 총괄조정, 국정과제 설정, 국정 실천계획 등을 담당하고 ② 정무분과위원회(간사 : 진수희)는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업무 ③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간사 : 박진)는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소관업무 ④ 법무행정분과위원회(간사 : 정동기)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검찰청, 경찰청 소관업무 ⑤ 경제Ⅰ 분과위원회(간사 : 강만수)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소관업무 ⑥ 경제Ⅱ 분과위원회(간사 : 최경환)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소관업무 ⑦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간사 : 이주호)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보훈처 소관업무 ⑧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 사공일, 데이비드 엘든)는 투자유치, 정부혁신·규제개혁,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한반도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소관업무 ⑨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센터장 : 이상목)는 국민들과 공직자들의 정책제안을 접수해 새 정부 조정과제에 반영하는 소관업무를 담당했다.

3) 회의 운영

인수위가 의사를 결정하는 채널은 크게 두 가지였다. 각 분과위 대표간사위원들이 참석해 1일 추진상황과 쟁점사항을 토론하는 간사단회의(주 6회)와 각 분과·특위의 1주일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주 1회), 각 분과위 사이에 업무조정을 위해 개최된 업무조정회의(주 1회)가 그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간사위원들은 회의 결과를 각 분과위 위원들에게 전달해 업무에 반영토록 했다.

(1) 전체회의 및 업무조정회의

인수위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분

과위 및 특위의 1주일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관계없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필요시 개선·보완은 물론, 정책으로 발표되기 전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갖기도 했다.

참석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등 인수위 분과별 인수위원과 경쟁력특위 위원장·부위원장·팀장,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 등 총 32인이 참석했다. 대통령당선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당선인 비서실장과 당선인 대변인도 함께 참석했다.

이와 별도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업무조정회의를 개최, 각 분과위원의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고 모든 위원들이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발제·토론을 통해 학습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2) 간사단회의

전체회의가 열린 경우는 제외하고 매일 오전 7시 30분에는 대회의실에서 각 분과위 대표간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단회의가 열렸다. 각 분과위 및 경쟁력특위의 일일 추진상황과 쟁점사항 등을 토론하고 점검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간사위원들은 회의결과를 해당 분과위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게 전달해 추진과제 설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 있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과 검증 등을 위해 각 분과위별 자문위원 등을 참여시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등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신중을 기했다.

간사단회의가 아침 일찍 열리다 보니 대부분 참석자들이 아침식사를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김밥 등 가벼운 식사가 제공됐는데, 당선인과 위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체회의, 업무조정회의, 간사단회의 등 위원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는 국회에서 지원된 전속 속기사를 배치해 기록관리에도 철저를 기했고, 이러한 내용은 향후 백서 발간에 반영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4) 인원·예산·시설

(1) 인원

제17대 인수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2인, 부위원장 1인, 인수위원 23인, TF 팀장 3인(인수위원에 포함된 팀장 3인 제외),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 1인 및 전문위원·실무위원 151인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인수위 구성 방침에 따라 지난 16대 인수위 233명에 비해 21% 줄어든 규모로써, 그동안 늘어난 정부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 감축규모는 그 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수위 직원에 대한 임명은 두 차례로 나눠 이뤄졌는데 2007년 12월 26일 1차로 위원장 및 인수위원 등 32인을 임명했고, 나머지 151인은 12월 31일 2차로 임명됐다.

위원회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실무위원은 당직자·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인력과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당직자·선대위에서 파견된 실무진의 인선은 분과별 인수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기여도·능력·태도 등을 기준으로 정책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파견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부처로부터 2배수의 추천을 받아 관련 인사자료와 내부 자료를 검토해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업무처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선발했다.

이와 아울러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서는 인수위 활동에 직접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적극 활용했다.

인수위 직원과는 별도로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설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전문지식인 그룹 558명을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해 효율적인 인수위 업무를 돕도록 했으며, 각종 기록관리를 위해 국회에서 파견된 속기사, 사무실 확보 및 시설관리를 위해 시설지원 등 일부 지원인력은 부득이 별도 정원으로 운영했다.

(2) 예산

제17대 인수위 운영예산은 2007년 12월 31일, 제2차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부터 예비비로 21억 9,70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했다.

[illegible]

※ 행정실장은 위원장 비서실장 겸임

제1장 인수위원회 구성과 역할 029

● 제17대 인수위 주요 예산편성 내역

내역	금액
사무실 사무용품비, 유인물 인쇄 등 관서운영비	745,000,000원
PC 등 사무기기 및 방송통신장비 등 임차경비	395,000,000원
분과위별 운영비, 인수위원·전문위원 활동비	812,000,000원
정책기조설정, 정책자료 수집·분석 등 정책개발비	200,000,000원
인수위원회 워크숍, 사회단체 등 간담회 경비	40,000,000원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000원
계	2,197,000,000원

인수위 운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은 당선인의 주문에 따라 마련한 인수위 예산절감 방침에 최대한 충실했다.

예산편성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예산집행은 구내식당 이용 활성화, 실례가격 등에 따른 철저한 가격지달, 제16대 수준으로 급여성 활동비 동결, 예산편성은 됐으나 실효성 검토결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불용처리(예 : 여론조사 비용 6,800만원), 특수활동비 현금지출 최소화 및 법인카드 사용 등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절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3) 예산 결산

① 예비비 결산 총괄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A-B)	%
합계	2,197,087,000	1,636,366,030	560,720,970	25.5
210(관서운영비)	1,140,087,000	776,953,680	363,133,320	31.9
230(특수활동비)	1,052,000,000	859,412,350	192,587,650	18.3
430(자산취득비)	5,000,000	0	5,000,000	100.0

예산집행액은 16억 3,636만 6천원으로 16대(14억 7,485만원) 대비 10.9%(1억 6,151만 6천원)가 증가된 규모이다. 이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15.4%), 조달청 무상지원분(4억 720만 7천원), 정부청사 외부사무실 사용 같은 추가소요 등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집행액은 16대 대비 줄어든 규모라고 할 수 있다.

② 세부 집행내역

○ 관서운영비

- 국정과제보고서 등 각종자료 인쇄비 :	77,137,640원
- 사무용품, 신문, 생수, 난방료 등 운영비 :	76,046,460원
-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 구입비 등 :	44,355,300원
- 현수막, 분과위 안내사인, 출입증 등 제작 :	32,367,900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USB, 전산서버 임차 등 :	38,010,000원
- 당선인과 인수위원 등 합동 워크숍 :	31,406,640원
- 취임사 작성, 백서 발간 원고료 등 :	18,100,000원
- 전화회선료 및 전화요금 :	54,357,060원
- 인터넷 전용회선, 케이블TV 사용료 등 :	18,021,680원
- 직원 특근매식비 :	20,000,000원
- PC,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 임차료 :	312,561,000원
- 회의실, 브리핑실 음향장비 임차료 :	52,590,000원
- 업무용차량 유류비 :	2,000,000원

○ 특수활동비

- 위원장·부위원장실, 분과·TF별 운영비 :	152,100,000원
- 간사·위원, 전문위원 등의 직무 활동비(136명) :	265,400,000원
- 전문위원 등 원소속기관 급여가 없는 자에 대한 급여성 활동비(38명) :	106,200,000원
- 자문위원 운영비 :	105,000,000원
- 정책개발 및 간담회 경비 :	230,712,350원

○ 자산취득비

- 제17대 인수위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모든 집기·기기는 100% 렌탈(임차) 했으므로 전액을 절감(불용)한 것임.

③ 예산집행액 절감 사유

대통령당선인 및 인수위원회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제17대 인수위 예산 운용결과 편성예산액 대비 총 25.5%(5억 6,072만 1천원)를 절감했다. 회의용

생수는 서울특별시의 상수도사업본부 협조를 얻어 전량을 “아리수(상수도)”로 대체했으며, 간사단회의 조찬도시락, 전체위원 및 직원 간담회, 직원 1일 1식권 배부 등으로 구내식당을 적극 활용토록 해 관련 예산을 절감했다. 또, 급여성 활동비는 지급단가를 16대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원소속기관 급여 유무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지급대상자가 16대 대비 20명이 감소돼 예산액 대비 9,760만원이 절감됐다.

기타 사무기기 임차, 홈페이지 개발 등에 철저한 가격시담과 편성된 예산이라도 필요성이 다소 낮은 사업은 과감히 불용처리(예 : 여론조사 6,800만원)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대통령당선인 예우보상금 지출결과(인수위 예산과 별도 운영)

(단위 : 원)

예산액	지출액	절감액		집행근거
			%	
513,000,000	445,812,960	67,187,040	13.1	대통령직인수예관한법을 제4조(예우)

※ PC등 사무기기 렌탈 1억 132만 3천원, 사무용품 등 운영비 1억 1,433만 8천원, 당선인 간담회경비 7,002만 5천원, 직원 활동비 1억 5,500만원, 수행경비 512만 7천원.

※ 제16대의 경우는 예산액(2억 3천 6백만원) 전액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없었음.

(4)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2007년 12월 26일, 인수위 업무가 시작된 이후 행정실 소속 전문위원 1인이 인수위 홈페이지(www.17insu.or.kr) 구축업무에 착수했다.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디자인은 외부 전문회사에 맡기지 않고 내부에서 진행해 홈페이지 구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홈페이지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도 기성제품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구축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홈페이지는 제작 업무에 착수한 지 5일만인 2008년 1월 1일에 오픈했다. 홈페이지에는 간사단회의 등 인수위 일일 활동상황을 실시간으로 게재해 인수위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업무에 충실했다. 특히 당선인 주재 회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게재하고 각종 활동상황을 포토뉴스로 만들어 올리는 등 국민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대변인실의 브리핑 내용을 영문으로 게재해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했으며, 백서발간팀의 현장스케치 기사도 게재했다. 백서발간팀의 현장스케치는 백서발간팀 소속의 전문 작가가 인수위 각 분과 및 특위 활

동에 직접 참가해 현장감 넘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 인수위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켰다.

홈페이지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의 창구로도 이용돼 일반 국민과 공직자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접수하는 창구로도 이용됐으며,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됐다.

홈페이지는 구축부터 운용까지 행정실에서 담당했으며, 인수위에 대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어 인수위 활동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에 충실했다.



(5) 시설

제17대 인수위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길 116번지 한국금융연수원 본관 및 별관 일부, 종로구 가회로 142번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일부, 종로구 효자로 9번지 금융감독원연수원 일부, 종로구 세종로 37번지 정부중앙청사 별관 일부 등 연면적 4,170m²(1,261평) 규모의 사무실을 사용했다.

위원회 사무실은 당초 서울의 3개 지역(여의도, 상암동, 광화문 인근지역)을 두고 비교 검토했는데, 그중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이 편리한 광화문 인근의 한국금융연수원과 금융감독원 연수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예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2007년 12월 7일, 12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지원준비단'을 발족, 인수위 발족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원했다. 사무실 확보 및 사무집기 지원계획, 인수위원 및 파견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준비, 위원회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 회계관서 등록 및 회계 전산 프로그램 가입, 구내 통신·전산망 구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한 결과 인수위 발족과 함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수위원회의 가장 의미 있는 시도라면 행정자치부에서 자체개발해 지원한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한 그룹웨어(<http://onnara.ptc.go.kr>)라 할 수 있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결재시스템을 간편하게 재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직원간의 정보교환, 이메일 기능, 게시판 공지, 메모보고, 결재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위원회 사무실 사용현황

건물명	위치	사무실명
한국금융연수원	본관	3층 경제Ⅰ분과, 경제Ⅱ분과, 대변인실, 기자실
		2층 브리핑실, 기사송고실
		지하 1층 아나운서 대기실, 속기사실,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별관	2층 위원장실, 부위원장실, 행정실, 법무행정분과, 외교통일안보분과, 회의실
		1층 기획조정분과, 정무분과, 사회교육문화분과
	외부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운전원대기실
금융감독원 연수원	4층	당선인실, 비서실장실, 비서실, 경호실
	3층	보좌역실, 비서실, 당선인 대변인실
	2층	총리 후보자실, 부위원장실, 대통령실장 내정자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4층	특위위원장실, 한반도대운하TF, 과학비즈니스벨트TF, 새만금TF,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 중회의실, 소회의실
	3층	정부혁신·규제개혁TF, 투자유치TF
중앙청사 별관	3층 로비	취임준비위원회, 백서발간팀
	지하 1층	법률선진화TF팀

● 위원회 통신·음향시설 설치현황

구분		내용
통신회선	직통전화	504회선
	행정전화	178회선
	전용전화	27회선
통신단말기	키폰전화기	188대
	다기능 전화기	9대
	발신표시전화기	192대
	MFC 전화기	211대
	팩시밀리	49대
음향시스템	회의용 마이크	38개
	다이내믹 마이크	8개
	파워앰프	2대
	스피커	6개
	디지털 녹음장치	1식

● 위원회 전산환경 구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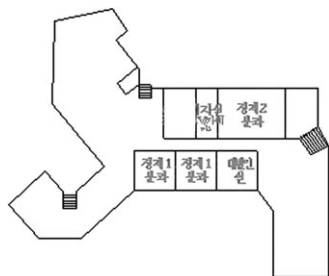
구축 분야	구축 내용
구내통신망(LAN) 구축 및 운영	인수위 파견 직원의 전자우편, 그룹웨어, 인터넷 접속 지원을 위한 장비, 케이블 설치 등(스위치 6대, HUB 52대, PC랜 설치 755대)
전자정부통합망과 상호연계 및 관리	인수위와 정부기관 간 원활한 전자적 업무보고 지원을 위해 전자정부통합 망에 연결 운영(금융감독원 통의동청사 : 100M, 한국금융연수원 : 100M,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10M, 중앙청사 및 별관 : 100M)
기자실 인터넷	국내외 언론사 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을 위한 인터넷 장비, 케이블 설치 등(인터넷 전용회선 20M 연계, HUB 17대, 랜 설치 308대)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	인수위 내부 자료의 외부유출 차단 및 웹, 바이러스 등 보안위협 방지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USB 보안관리 시스템, 사용자권한관리(NAC) 시스템 등 설치, 지원

● 위원회 사무실 집기 및 사무기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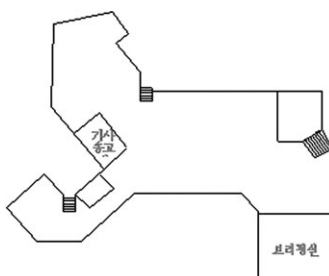
장비명	입차수	장비명	입차수	장비명	입차수
컴퓨터·모니터	452	냉온수기	48	캐비닛	45
프린터	51	파티션	118	2중 캐비닛	13
노트북	5	대회의실 책상	33	3인용 소파	17
복사기	35	목재의자	56	1인용 소파	14
팩시밀리	37	오픈장 올문장	26	소파 탁자	10
문서세단기	35	원형테이블	11	임원용 책상	1
평면TV(29")	40	차단봉	6	임원용 의자	35
PDP	4	사무용책상	348	팀장용 책상	94
빔프로젝트	2	사무용의자	346	팀장용 의자	58
공기청정기	8	프린터 테이블	44	고급목재탁자	1
가습기	23	이동서랍	420	기자용 테이블	70
오디오	1	2단 파일박스	60	기자용 의자	169
DVD콤보	1	회의용 테이블	75	접의자	88
냉장고	31	회의용 의자	303	옷걸이	81

● 위원회 사무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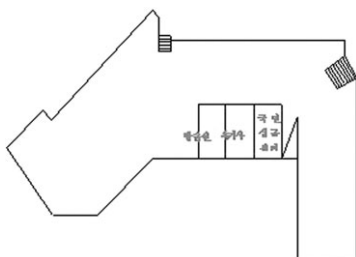
한국금융연수원 본관(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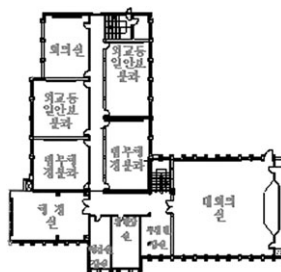
한국금융연수원 본관(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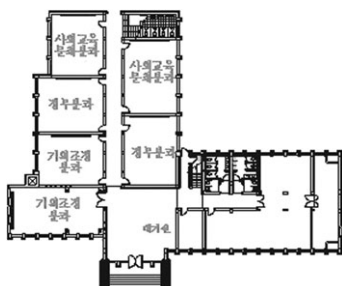
한국금융연수원 본관(B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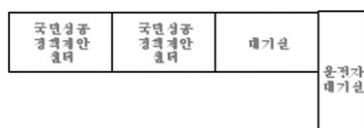
한국금융연수원 별관(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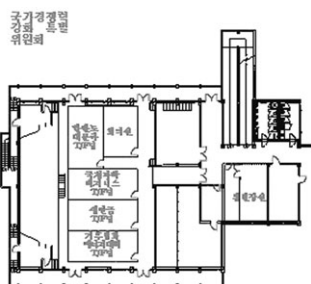
한국금융연수원 별관(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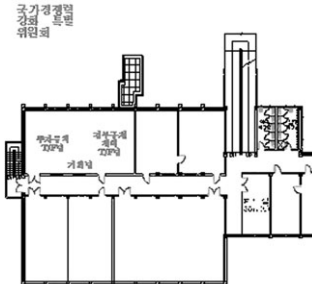
한국금융연수원 대지내(컨테이너)



교원소청심사위원회(4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3층)



2. 위원장실

1) 구성

이명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작업을 담당하게 될 제17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2007년 12월 25일 이경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2007년 12월 26일 서울 삼성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당선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수업무를 시작했다. 여성이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장실에는 자문위원 1명과 정책연구위원 1명이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1) 활동방향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인수위 업무를 통괄하고 인수위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했다. 또한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와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업무조정회의,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리는 간사단회의 등 대부분의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국민을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가 되겠다는 당선인의 국정운영철학을 인수위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인수위원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인수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먼저 챙기고 서민에게 변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어 나가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인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당선인의 섬기는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 이경숙 위원장은 4C를 인수위 상 정의제로 제시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care), 정직한 투명성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부가 되기 위한 신뢰(credibility), 국민과 국민, 국민과 정부간 상호소통하고 화합 하는 협력(cooperation),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과 정책을 제시하는 창조성(creativity)을 강조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명박정부의 국가비전을 이루기 위해 위원장은 인수위가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추구하며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항상 당부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을 잘살게 하고,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대한민국을 세계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2) 활동내역

위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인수위 내에 설치된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국민정책제안들을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따뜻한 관심이라 생각하고 귀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바쁜 일정 중에서도 위원장은 하루 수십 통씩 위원장실로 밀려드는 건 의서와 정책제안들을 일일이 검토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추구하는 최선의 결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수위 내부의 소통도 매우 중요시 해 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기본적인 과정을 상기하자고 주문했다. 인수위 모든 관계자들에게 위원장실을 개방해 건의 사항이나 협의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



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인수위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알 차게 일하는 인수위’를 모토로 새 정부 국정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형식이나 모양 갖추기에 매달리지 않고, 외양보다는 내실을 기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우선하는 인수위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원래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통의동에 마련됐던 위원장실을 삼성동 인수위 사무실로 옮긴 것은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위원장의 일중심 업무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위원장은 겸손한 인수위가 되자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권력기구가 아니라 정권이양을 위한 한시적 실무기구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부처 업무보고시에는 실무자 중심의 맞춤형 보고를 지향하도록 지침을 내려, 업무보고 자리가 호통을 치고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실무자와 소통하며 지금까지의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방식을 새로이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운영은 안정성과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위원장은 활동기간 내내 기본에 충실한 내실 있는 정부인수를 위해 언론 인터뷰나 외부활동보다는 인수위 내부업무에 주력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시 가능한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에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국정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현장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인수위원들이 접하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각국 외교사절단을 면담해 국제사회에 차기정부의 국정운영철학과 정책방향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역할도 수행했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를 비롯해 중국 왕이 부부장, 일본 외무성 야치 쇼오타루 차관, 비센테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레 드안 훙 베트남 정보통신부장관, 마씨모 안드레아 레제리 주한 이탈리아 대사, 모하마드 레자 바흐티아리 주한 이란 대사 등을 접견하고 양국간 상호이해와 새 정부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 부위원장실

1) 구성

이명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 작업을 담당하게 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부위원장으로 김형오 의원을 선임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경쟁력강화특위 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원활하고 순조로운 대통령직 인수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부위원장실에는 자문위원 2인이 부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1) 활동방향

김형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당선인의 철학과 시대적 소명, 그리고 국민적 요구 등을 잘 조율해 인수위를 이끌어 나가도록 보좌하면서 당선인, 국회, 인수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나 오해가 없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과거 정권의 인수위와는 달리 정부기관의 맞춤형 업무보고 등을 제안·실시하고 신속·체계적인 정권인수 업무를 진행해 국민들에게 '일하는 인수위'를 구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인수위의 활동을 언론에 소개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위원장의 핵심활동은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짜는 것이었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작업에 참여하고 동시에 정부조직법 전면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상 창구 역할을 맡았다.

김형오 부위원장의 업무는 매일 아침 7시 30분 간사단회의 참석으로 시작

됐다. 10년만의 정권교체의 참뜻을 구현하고,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작업은 설 새 없이 전개됐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활동, 일 중심의 정책활동,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활동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부위원장의 역할이 전개됐다.

정권교체기의 전환기에는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했다. 국민의 관심이 인수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의 운영상황은 곧 정치·사회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인수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 정치문제보다는 정책 분야에,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조정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안정적인 국정마무리를 위해 참여정부에 합리적인 협조를 했다.

(2) 활동내역

경제살리기는 새 정부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었다. 부위원장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총괄했던 경험을 살려 당선인과 위원장을 보좌해 인수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 신경을 쏟았다.

대통령직 인수라는 막중한 역할은 사실상 정부업무 인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 국회, 당, 각종 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의 정책밀그림을 그리는 데 반영하는 등의 정부역할도 중요한 일이다. 부위원장은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 대선공약의 방향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과 내용에 부합한 정책을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는 역할을 꼼꼼히 수행했고, 때로는 농가의 비료·사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 등 주요 정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어느 인수위를 막론하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이 인수위 내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었다. 50여일이라는 한시적

조직임을 감안하면 인수위 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인수위 구성 직후부터 부위원장이 보여 준 조정역할은 매우 돋보였다. 내부 소통과 협조체제 등은 향후 18대 인수위에서도 잘 챙겨야 할 대목이라고 하겠다.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같이 인수위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해 당과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일을 도맡았다. 각당 원내대표를 면담, 정부조직법 처리를 요청했고, 당 소속 상임위원들을 세 차례 만나 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각종 방송과 언론에 출연해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했고, 20여 차례에 걸쳐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중앙선관위 주최로 각당 원내대표들과 생방송 토론을 통해 알뜰하고 일 잘하는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언론은 부위원장을 가리켜 '정부개혁의 전도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교육정책, 서민생활부담비 완화, 규제완화, 정부조직 개편 등 굵직한 정책들에 대해 각 분과위 인수위원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을 역임한 경륜이 돋보이는 대목이었다. 참여정부 임기 말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 청와대와 인수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업무의 연속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했고, 이 가운데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데 원만한 협조를 이뤄냈다.

300여명의 중소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새 정부 정책강연에서는 이명박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했다. 그 외에 과학자단체, 체신노조, 해운단체, 농민단체, 수산단체 등 수많은 직능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새 정부의 정책노선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부위원장의 인수위 활동은 한마디로 '변화와 실용'이었다. 과거보다는 미래로, 이념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용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바라보고 풀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부위원장의 합리적이고 무리없는 조정역할은 인수위 활동 전반에 걸쳐, 그리고 활동기간 내내 곳곳에서 돋보였고 성공적인 인수위 활동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4. 대변인실

1) 구성

대변인실은 대변인을 비롯해 부대변인 3명, 전문위원 1명, 실무위원 1명과 다수의 자문위원과 실무요원들로 구성됐다.

대변인은 인수위를 대표한 대 언론 창구역할을 했다. 오전·오후 인수위 활동 관련 정례 브리핑,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인수위의 공식 입장·성명·논평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변인실 업무 전반을 특유의 순발력과 판단력으로 이끌어갔다.

3명의 부대변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 언론 인터뷰, 취재 편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론인들의 의견 수렴 업무를 담당했다.

실무위원 및 자문위원들은 언론과 정당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변인을 비롯한 부대변인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17대 인수위 출입 언론사 및 기자 현황

구분	언론사(개사)	기자 수(명)
신문	68	360
방송	8	103
인터넷	27	88
기타(주간지, 외신)	48	185
총계	151	736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1) 활동방향

대변인실의 주요 역할은 인수위의 활동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신속, 정확히 알리는 일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국정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수위의 논의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등 대언론 및

대국민 홍보 업무 전반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국민의 알권리 충족) : 인수위 차원의 의사결정이나 각 분과위 활동,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언론을 통해 가급적 가감 없이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브리핑 자료 등 인수위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실시간 제공했다.

② 양질의 취재지원 서비스 : 언론인들의 취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했으며, 이와 함께 인수위 활동에 관한 다양한 기사거리와 정보를 제공했다.

③ 오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치열한 취재경쟁 과정에서 생기는 사실의 오기와 오보 등을 신속히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④ 분과위원회별 홍보 업무 지원 :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홍보 업무를 지원했다.

⑤ 적극적인 여론 수렴 기능 : 취재진과 자주 대화해 예상되는 문제점, 이슈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2) 활동내역

대변인실은 본격적인 인수위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각 언론사별로 구성된 취재기자단의 출입증 발급, 취재기자실 설치, 집기·장비 배치, 방송 취재환경 지원과 같은 행정적 지원업무를 끝내야 했다.

인수위와 언론과의 공식적인 채널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뤄졌다. 대변인실은 간사단 회의를 포함해 분과위별로 진행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해 논의사항과 결정 내용을 정리해 오전·오후 두 차례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 광역경제권 구상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간사단회의에서부터 분과위별로 진행되는 모든 회의와 간담회, 인수위 관련 일정과 행사 등에 빠짐없이 참석해 논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브리핑 자료로 만드는 작업을 매일같이 반복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실시간 보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전개되는 쟁점 현안에 대한 언론 취재에 대해서도 대응했다. 브리핑 다음날 보도 내용을 점검해 인수위 활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으며, 잘못된 보도나 사실관계의 오기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 조치해나갔다.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분과위 회의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회의 참여 위원이나 실무자를 개별 접촉해 취재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것이 혼선과 설익은 정책 발표라는 오해를 불러들였다.

취재진과의 다양한 대화를 통해 취재 분야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슈, 보도 기획 등을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인 언론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또한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www.17insu.or.kr)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도자료를 실시간 서비스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해 외신 기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시켰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문서나 법령을 외국인들에게 서비스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인수위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최상의 취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자실 출입비표 발급, 사무집기, 전화기, 인터넷 환경 구축 등의 다양한 업무 지원 외에 on-off 보도자료 배포 등의 대언론 서비스를 해나갔다. 아울러 신문 스크랩 등 보도현황을 파악해 인수위 각 분과위별로 제공했다.

3) 평가

대부분 인수위 활동경험이 없었던 대변인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먼저 16대 인수위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를 살펴봤다. 참고할 점도 많았지만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것은 언론에 대한 관점이었다.

16대 인수위는 “인수위원회 활동은 한마디로 언론과의 전쟁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언론의 속보경쟁 때문에 비롯되는 각종 부작용, 갈등과 혼선에 초점을 맞춘 보도 경향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평가였다.

하지만 17대 인수위 대변인실은 전혀 다른 인식과 자세로 접근했다. 언론과 정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를 준비하

는 인수위도 이 같은 긴장관계에서 예외일 수 없다. 때문에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은 어찌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불가피한 긴장관계를 인정하고, 언론의 정당한 비판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교정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명백한 왜곡과 오보에 대해서는 설득과 이해를 통해 사실을 바로 잡아나가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동관 대변인이 인수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첫 기자회견을 통해 “프레스 프렌들리의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대변인실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매개로써 언론의 역할도 존중했지만, 인수위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언론의 역할도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4) 문제점

대변인실이 인수위 기간 동안 좀더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해결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정책 전 영역을 대변인실이 모두 점검하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가관이나 아침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분과위별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각 분과와 대변인실의 긴밀한 공조와 커뮤니케이션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정례 브리핑 외에도 취재 아이디어, 기사거리 등을 제공해야 하며 취재기자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어 각 분야별로 예상되는 문제나 여론 등을 미리 파악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대언론 창구를 대변인실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설익은 정책 전달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책이기도 하다.

넷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수위 활동기간 동안 태안 기름 유출사고, 냉동창고 화재 등의 사건이 터졌다. 예기치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대변인실은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항상 구축해놓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실에 맞는 실무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도 사전에 만들어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5. 행정실

1) 구성

행정실은 서무팀, 행사지원팀, 인사팀, 회계팀, 백서발간팀 등으로 구성돼 인수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행정실 총인원은 인수위원인 행정실장 1인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총 15명(위원장, 부위원장 제외)으로 구성됐고, 이와 별도로 사무실 시설지원을 위해 행사부에서 3명, 백서발간용 사진촬영을 위해 국정홍보처에서 사진기사 1명, 국회 속기사 10명, 국방부 차량운전원 2명 등의 실무직원이 지원됐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1) 활동방향

행정실은 인수위 각 분과 및 경쟁력강화특위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설정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지원, 사무실 배치, 인력·예산·물품 등을 신속히 지원함을 목적으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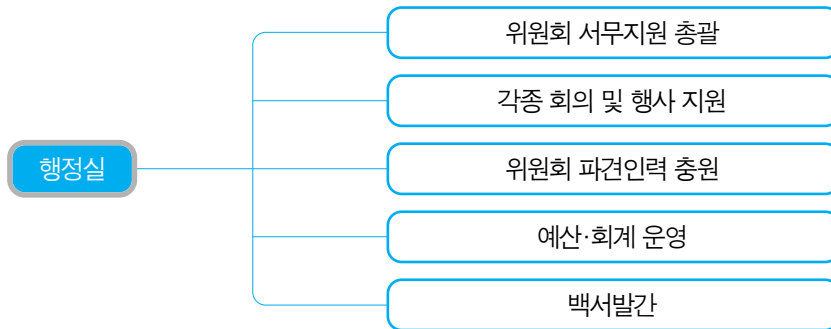
인수위 발족 초기부터 각 분과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건의받아 신속히 지원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했다.

사무실 집기는 당선인 지시에 따라 인수위원과 근무 직원 간의 차별화를 두지 않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취지로 동일한 규모의 책상 등을 배치했고, 또한 위원과 직원 간에 수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회의공간을 확보하고 간이 회의용 탁자를 지원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설정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분과위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가 그룹인 대학교수 등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회 운영비도 각 분과위 근무인원과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120만원~23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회의운영에 사용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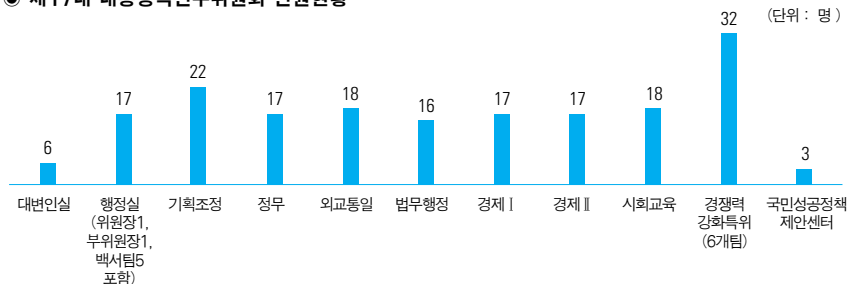
(2) 활동내역

- 인수위 사무실 연면적 4,170㎡(1,261평) 확보(2007.12.22)
 - ※ 한국금융연수원 등 4개 기관
- 인수위 현판식,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 전체회의(2007.12.26)
 - ※ 인수위 운영규정 제정, 인수위 1차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
- 인수위 및 회계직 공무원 직인 등록 및 공고(2007.12.26)
- 중앙부처 업무보고 계획 통보(2007.12.27)
- 인수위 회계직 공무원 임명(2007.12.28)
- 인수위 제2차 전체회의(2007.12.31)
 - ※ 인수위 운영규정 개정 및 운영예산(예비비) 편성안 의결
- 인수위 전문위원, 실무위원, 자문위원 임명장 수여(2007.12.31)
- 인수위 12월분 운영비 및 활동비 지급(2007.12.31)
- 당선인 주재 인수위 시무식 및 인수위원 오찬(2008.1.1)
- 중앙부처 업무보고 일정 및 작성기준 등 통보(2008.1.1)
- 인수위 실무안내서 제작(500부)·배부(2008.1.8) 및 교육 실시(2008.1.9)
- 인수위, 당선인에게 중앙부처 업무보고(2008.1.13)

● 행정실 주요 업무 개념도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원현황



-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2008.1.14)
- 인수위 제2차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2008.1.15)
- 정부조직개편(안) 발표(2008.1.16)
- 당선인 주재 인수위원 격려만찬(2008.1.17)
- 당선인 주재 제1차 간사단회의 개최(2008.1.18)
- 인수위 1월분 전문위원, 실무위원 활동비 지급(2008.1.21)
- 위원장 주재 월례조회(2008.1.25)
- 당선인, 한승주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기자회견(2008.1.28)
- 당선인 주재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격려오찬(2008.1.28)
- 인수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2008.1.30)
- 위원장 주재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 공청회 지원(2008.1.30)
- 당선인 주재 제2차 간사단회의(2008.1.31)
- 인수위 2월분 각 분과위 등 운영비 및 활동비 지급(2008.2.4)
- 위원장 삼청동파출소 및 동주민센터 현장방문(2008.2.4)
- 인수위 해산식 개최(2008.2.22)

3) 평가 및 문제점

(1) 서무 분야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분과위 사무실 사무집기 배치, 전산 시스템(LAN 등) 설치, 통신장비 설치, 사무실 방호 및 주차관리, 당선인 및 위원회 직인 제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무기능을 총괄 지원했다. 또 당선인 및 위원장 주재 각종 회의 준비, 중앙부처 업무보고 계획 및 일정, 작성기준 통보 등 인수위 핵심활동을 지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및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인수위 운영과 관련한 문서, 보안, 회계, 그룹웨어(온-나라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운영 실무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인수위 홈페이지를 기획, 운영해 인수위 활동상황과 대변인 기자회견 자료 공지, 국민성공정책제안 및 대통령취임식행사 참석희망자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아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전체회의, 간사단회의, 당선인 신년기자회견, 당선인 주재 파견공무원 격려오찬, 당선인 주재 각 분과위 사업별 간담회 등 포괄적인 행사 지원을 원만히 수행하는 등 위원회 서무총괄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그러나 인수위 사무실을 대통령선거 후 당선인의 최종 결심을 받아 준비하다 보니 준비기간이 부족했으며, 사용 중인 민간 또는 공공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사무실 준비는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연초에 광화문 인근 사무실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될 경우 행정자치부가 사전에 이용 가능한 사무실을 대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 인수위 활동기간 중에는 교육 횡수를 축소(한국금융연수원 등)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인수위 발족 즉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와 책상·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배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수위 발족 시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과 중앙부처 업무보고 계획 및 기준 등은 사전에 당선인측과 협의해 범위 등을 미리 준비해 시행하는 것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중앙부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17대 인수위에는 제16대와는 달리 시민단체 및 개인(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많았다. 인수위의 활동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자칫 설익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인수위 활동 및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또는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제외기관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인사분야

인수위는 당선인의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직원·자문위원·정책연구위원 등 전 분야에 걸쳐 16대에 비해 인력을 21% 이상 감축했다.

이는 인수위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구성에 있어 위인설관 등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줄이고 실용적인 인수위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선대위 측의 실무진은 능력·태도·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전

문성을 중점 검증해 인력을 선발했으며, 중앙부처 파견인력은 각 부처별 추천 및 자체 인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각 분과위와 경쟁력특위의 검증을 거쳐 최종 선발·배치했다.

자문위원의 경우도 당, 선대위, 학계, 직능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각 분과위와 경쟁력특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규모 감축에 따른 효율성을 보완했다.

인수위 직원 및 자문위원 등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심의와 적절한 조치방안 마련을 위해 김형오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수위 복무관리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직원복무 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인수위 관계자의 사소한 언행도 새 정부의 신뢰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수위의 인적자원 구성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회계 분야

제17대 인수위 운영 예비비는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소요를 중심으로 편성·집행하는 등 정부예산의 일반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금융연수원 구내식당을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먹을거리를 지원했다.
 - 인수위 근무자에게 1인 1식(3,500원) 구내식당 식권 배부
 - 매일 아침 간사단회의시 조찬 도시락, 업무조정회의, 2008년 1월 1일 시무식 후 전 직원 떡국식사, 당선인 주재 파견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구내식당 활용
- 인수위의 사무용 집기·기기는 모두 임차로 사용토록 하고, 인수위원 집기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종류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 원소속기관이 없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일부 위원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인수위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비 이외의 급여성 활동비를 지급하되 지급단가를 제16대 수준으로 동결했다. 원소속기관 및 급여의 유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함으로써, 관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 제16대에 비해 지급대상자 크게 감소(58명 → 38명)

- 운영예산은 2007회계년도 예비비로 초기 운영비(1억 1천만원)를 배정받아 인수위 발족 직후 분과·팀별 운영비 및 인수위원 활동비에 지원했다.
- 제16대는 인수위 출범 후 20여일이 지난, 다음 연도 1월 중순에 예비비 배정
- 회계 분야의 아쉬운 점은 서무 분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수위 사무실 확정과 인수위 출범간의 기간이 너무 짧고, 예산(예비비) 편성은 인수위 전체회의 의결→기획예산처 검토→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배정되기 때문에, 인수위 사무실 설치(사무기기 임차 등) 등은 불가피하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추진됨으로써 회계원칙에 반하는 예산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무실 설치를 위한 예산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행정자치부 본예산에 편성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설치해 지원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보안 특별전담팀 운영

(1) 구성

행정실은 인수위 출범과 함께 인수위 운영과정에서의 각종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관련 활동도 병행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보안담당관 1명, 사이버안전담당관 1명 등 2명으로 특별전담팀을 구성했다. 보안담당관은 인수위의 인원·문서·시설에 대한 보안활동을 전담했으며, 사이버안전담당관은 인수위 전산망 안전측정·보안관제, 개인 PC, USB 메모리와 같은 저장매체, 내·외부로부터의 해킹 시도에 대한 보안활동을 전개하며 인수위 각 분과별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수시로 사이버 안전측정과 해킹방지 요령 등의 현장 교육을 병행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목표

인수위는 국가기밀은 물론 각급 국가기관의 중요정보 자료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북한과 외국 정보기관 등의 중점 정보수집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정치인, 대학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다양한데다 보안의식 미흡 등으로 보안관리가 허술해 역대 인수위에서

각종 기밀 누설 등 보안사고가 빈발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행정실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당선인의 보안 강화 의지를 받들고 인수위 운영과정에서 주요 자료 유출, 전산망 해킹 피해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활동을 전개했다.

② 활동방향

과거의 인수위는 자체적으로 보안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보안대책이 다소 부신했다. 이에 제17대 인수위부터는 국정원에서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인수위 실정에 적합한 보안대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이 인수위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수시 보안교육과 점검활동을 하는 등 실질적인 보안활동을 수행토록 했다. 특히 인수위 분과 중 중요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외교통일안보분과 등에 대해서는 보안USB메모리 사용 등을 여타 분과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현장 실정에 따라 보안대책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인수위 구성원이 정치인,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로 구성됐기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에 역점을 뒀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중요 자료가 정보통신망에 저장돼 유통되고 있고, 인수위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악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전산망 마비나 해킹 공격에 의한 내부자료 유출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③ 활동내역

보안 특별전담팀은 인수위 구성 초기부터 ‘인수위 보안관리 대책’ 및 ‘인수위원 개인별 보안점검 리스트’,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용역업체 보안관리 요령’ 등 각종 보안대책을 지원하는 한편 각 분과별로 현장을 방문해 보안 및 사이버 안전교육을 13회에 걸쳐 150여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새 정부 각료, 청와대 수석 등 주요 직위자 선정을 위한 인수위 ‘인사검증TF’ 사무실의 도청점검과 함께 TF 참여자에 대한 특별 보안교육을 실시해 보안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수위 정보통신망의 비밀성·무결성·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3회의 안전측정으로 홈페이지 관리자권한 획득가능 등에 대한 해킹 취약점을 발굴하고 보안장비 보강, 프로그램 up-date 등의 보안대책을 지원했다. 한편 개인별 업무 PC와 USB 메모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킹 바이러스를 점검하고 악성코드를 탐지해 삭제 조치했다.

이 외에도 인수위 전산망과 홈페이지, 당선인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24시간 보안관제를 실시해 국·내외 해커들의 불법 침입과 서비스 거부 공격을 실시간 탐지해 긴급 보안조치를 취함으로써 인수위 운영 기간 중 각종 사이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한, 평소 민간 정보보호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인수위 업무용 PC에서 미상 해킹 바이러스 33종을 탐지, 즉시 국내 백신업체에 샘플을 제공함으로써 당일 보안패치를 배포토록 조치했으며,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당선인과 인수위 홈페이지에 대해 미상세력이 해킹과 함께 서비스 방해 공격을 시도, 적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안대책을 지원했다.

(3) 평가

인수위는 다양한 경력의 구성원으로 조직돼 보안업무, 보안 특별전담팀의 보안활동에 대해 생소함과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에 업무 초기 인수위 내부에서 보안활동이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발목을 잡는 격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보안담당관들이 인수위의 보안관리상 취약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증빙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인수위 참여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시켰다.

제17대 인수위는 보안 특별전담팀의 적극적인 보안활동과 인수위 구성원들의 동참으로 국가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인수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했으며, 보안누설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했다.

(4) 정책제언

차기 인수위 구성시에는 출범 초기부터 국가보안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보안전담조직 구성 및 도청 방어 장비 설치, 전산망 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 확보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외발 해킹에 대비해 인수위 전산망은 국방부·외교부 등 국가 중요 부처와 같이 인터넷과 업무전산망을 분리해 구축·운영토록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각 분과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등을 위촉하는 경우와 전 직원 업무 조회 시간 등을 통해 수시로 국가정보원 보안전문가의 보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안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한편 기밀취급부서·회의실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무실에 대한 도청 우려를 점검하는 등 취약점을 발굴·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분과위원회

1) 기획조정분과위원회

(1) 구성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10명, 실무위원 9명과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획조정분과는 정부측 파견인력과 당측 파견인력의 조화 속에서 인수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업무분장을 통해 소관 담당분과를 지정하는 한편 규제개혁 추진, 광역경제권 구축, 예산 10% 절감 등 개별과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임무를 부여했으며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 자문위원을 국정과제 수립 과정과 광역경제권 구축 등 개별과제에 참여토록 해 과제내용에 있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방향

기획조정분과는 인수위 전체 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기획하고 인수위 업무의 전 과정과 일정을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해 '선진일류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동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신발전체제'를 제시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

② 활동내역

○ 국정과제 수립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나타

난 주요 정책현안과 당선인 공약 등을 종합 검토·수렴해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등 새 정부에서 직접 챙겨야 할 193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요도에 따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했다.

선정된 국정과제는 각 분과에서 제시된 과제(안)를 기초로 해 기획조정분과에서 과제의 적절성, 공약 내용 중 누락여부, 분과별 과제 숫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1차적 검토를 거친 후 전문위원회의, 간사단회의, 당선인 보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해 새 정부에 인계했다.

○ 당선인 보고

2008년 1월 13일 1차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인수위 중간활동 결과를 점검하고 경제 분야 52개 등을 포함해 155개 국정과제(초안)를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2008년 1월 18일 인수위 회의에 참석한 당선인에게 조속 추진과제 중 보완이 이뤄진 과제와 새롭게 발굴한 과제를 보고했다.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거쳐 2008년 2월 5일에는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를 최종적으로 보고했다.

○ 별도 독립과제 수행

2~3개 분과에 걸쳐 있어 개별 분과에서 다루기 힘든 과제는 기획조정분과에서 별도로 제도개선 등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부처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광역경제권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외부 자문회의, 시·도 관계관 회의, 세미나 등을 거쳐 '새 정부의 5+2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마련, 언론에 발표(1.24)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을 위해 별도로 TF를 구성해 종합보고서를 제출(2.3)했으며,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대학생 학자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기획조정분과 차원에서 보고서를 마련했다.

○ 분과별 활동 조정

각 분과별로 추진 중인 과제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쟁점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세부실천계획, 사교육비 경감대책, 외국인 출입국 제도 개선, 금융소외자 해소대책, 디자인 코리아 추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쟁점과제에 대해서

는 이해 관계부처와 분과위를 참여시킨 가운데 수차례 회의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조정해 나갔다.

○ 규제개혁 워크숍 구성·운영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혁과 작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금융, 대기업, 방송통신, 창업 및 공장설립, 수도권 규제 및 토지이용규제 등 8개 핵심분야에 대한 근원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혁신·규제개혁TF와 관련 분과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워크숍’을 구성·운영했다. 특히, 공장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심층적으로 추진했다.

○ 인수위 활동 조기정착 지원

인수위 활동 초기부터 인수위 전반의 업무처리 일정, 운영계획 등을 제시하는 동시에 각 분과별로 실무 책임자를 지정하고 협의채널을 구축했다. 부처보고에 대비해 참여위원들에게 별도 임무를 부여하는 등 사전준비를 강화토록 하고 분과별 대응지침을 시달했다. 부처 보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고서 작성시 지난 5년간 정부 주요 정책 평가, 당선인 공약실천계획, 규제개혁 및 완화방안, 예산 10% 절감 및 활용방안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부처 업무보고 후 주요 사항에 대한 대 언론 브리핑시에도 별도 지침을 마련했다. 자칫 인수위 전체 정책기조와 다르거나 너무 앞서가는 내용을 개별 분과에서 발표할 경우 내부 혼선을 야기하거나 대국민 안정감과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사전 기획조정분과와 협의를 거친 후 발표토록 한 것이다.

○ 분과 간 업무 유기성 제고

각 분과 간의 업무 유기성 제고를 위해 각 분과별로 대표 전문위원이 참석하는 ‘전문위원회’를 매일 개최했다. 각 분과에서 위원회의 당일업무와 익일업무를 공유토록 하는 한편, 위원장 등 지도부의 지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분과 간 연계성을 높여나갔다.

○ 공식 회의 지원

인수위에서 진행된 공식회의는 위원장 주재 간사단회의와 업무조정회의 및

분과별 대표 전문회의가 있었다. 기획조정분과에서는 인수위 공식회의에 보고해야 하거나 논의돼야 할 사항을 종합 정리해 각종 회의에 자료로 제출하고 회의소집, 기타 준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진행 관리했다.

● 회의 현황

구분	일시 및 장소	참석 범위
간사회의	매일(07:30) / 대회의실	위원장(주재), 부위원장, 각 분과별 간사 인수위원, 기조분과 인수위원, 대변인, 행정실장
업무조정회의	매주 토요일(14:00) / 대회의실	인수위원 전원
전문위원 회의	매일(09:00) / 중회의실	각 분과 및 TF 대표 전문위원

○ 기타 사항

인수위 활동이 정점을 넘어서면서 각 분과에서 추진한 현장 방문일정과 계획을 사전 조율했으며 새 정부 출범초기(100일)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천계획을 마련해 새 정부에 전달했다.

(3) 평가

기획조정분과는 인수위 전반의 활동 계획을 수립·이행·점검하고, 주요사안별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일시에 모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었으나, 각 부처 업무보고를 조율하고 간사회의, 전문위원회의, 실무회의를 운영해 나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체계를 갖추게 됐다.

기조분과는 기획하고 조정한다는 점에서는 인수위를 이끈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인수위의 타 분과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각종 공약에 대한 새 정부의 실천 계획서이자 내각에 대한 과업 지침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정과제 보고서’ 작성에 있어 기획조정분과는 인수위원,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자문위원의 담당 전문분야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규제개혁과제와 같이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개별분과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분과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인수위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4) 문제점

기획조정분과는 파견 공무원, 당측 인사,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들이 분과원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출범 초기 분과원 간 역할분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인수위가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도 뚜렷한 지침이 없어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등에 애로가 있었다.

또한 인수위의 주요 과업이 공약사항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드는 작업임을 고려할 때 기획조정분과에서 인수위 시작과 함께 세부적인 공약사항을 각 분과에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2개월에 걸친 인수위 활동 기간도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수위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인수활동과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 선정 등에 제한된 업무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자칫 지나친 의욕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인수위 피로도'로 연결될 우려가 있고 엄연히 현 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이념과 정책노선을 달리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무분과위원회

(1) 구성

정무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2명, 전문위원 7명, 실무위원 8명과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무분과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분과의 소관부처 및 기관으로 했다. 분과 출범 직후 내부 인력을 소관별 TF(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TF,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중앙인사위TF, 감사원TF, 국가정보원TF)를 편성해 부처별 업무보고 실무 준비, 정부조직 개편 및 부처 운영 관련 제안, 국정과제 발굴·심화 등의 업무를 특화해 맡도록 했다.

한편 다수의 분과 자문위원들이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 정당·국회 업무의 전문성을 보유한 것을 감안해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 국정과제와 각종 제안의 깊이·실효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방향

정무분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세계일류국가'라는 국가비전을 대전제로, 그리고 인수위가 선정한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첨기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했다.

정무분과의 소관 부처들은 '첨기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어야 할 부처들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무분과는 우선 소관 부처인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향후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설정하는데 업무 역량을 집중했다.

② 활동목표

제17대 인수위의 경우 과거 인수위에 비해 부처 업무보고가 매우 신속하고 실무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맞추어 정무분과도 초기에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분석해 각 부처의 현황 및 당면현안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과 언론 인터뷰 자료 등을 분석, 각 부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내는데 노력했다.

치열했던 내부 토론을 통해 결정된 각 부처 및 기관의 기본 업무 방향은 각 부처별 업무보고시 진수희 간사의 모두발언을 통해 언론 및 부처에 공개됐다. 이러한 기반 하에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기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보고가 가능했으며, 국정과제의 도출과 주요 내용을 확정하는데 있어서도 부처와 분과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업무보고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작업도 함께 진행됐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위한 제안을 만드는 것 또한 정무분과의 중요한 업무였다. △청와대 및 총리실의 기능조정·운영방안 △인사 시스템 운영 개선 방안 △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 기능 개선방안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감사지적규제 개선사례 분석결과 등의 제안들을 작성해 정부조직 개편작업 실무를 맡은 경쟁력강화특위의 정부혁신·규제개혁TF에 전달해 반영되도록 했다.

③ 활동내역

○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 관련

업무 특성상 대면보고 없이 서면보고, 자료 요구·제출을 통해 현황을 파악했다. 정책을 생산하고 수행하는 부처가 아니라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총괄 조정하는 부처라는 특성을 감안, 별도의 국정과제 작성은 하지 않았다. 다만 바람직한 대통령실의 모습을 구현하고 향후 기획·통합·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바람직한 대통령·총리의 관계 및 역할 분담 △당정협조 모델 △의회와 정부간의 협조체제 구축 △청와대 정보시스템의 활용 등 대통령실 및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제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혁신·규제개혁TF 및 당선인비서실, 대통령실 등에 전달했다.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관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과제 및 제안의 도출은 현재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청와대 및 타 부처와의 업무중복, 적정한 총리실의 규모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논의의 결과를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제안으로 만들어 정부혁신·규제개혁TF에 제출했으며,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국무총리실이 맡게 될 업무 중 ‘정부업무평가의 내실화’, ‘사회갈등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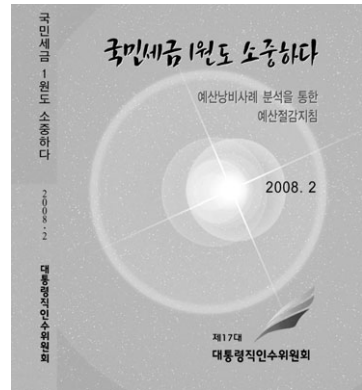
정부분과 핵심과제
토론 모습.



○ 감사원 관련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는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충실한 감사원을 만드는 것이 감사원이 새 정부 들어 수행해야 할 핵심과제로 지목됐다. 이러한 기조하에 새 정부가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예산 10% 절감, 규제 혁파, 부정부패 척결 등에 초점을 맞추어 △내실 있는 회계감사에 의한 집행예산 절감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 강화 △직무감찰 강화로 부정부패 척결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과 같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예산 10% 절감과 관련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간 감사원 감사에서 공통·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잘못된 예산집행 사례를 유형화하는 한편 낭비의 원인까지 분석해 향후 정부 예산절감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라는 책자를 인수위 명의로 발간했다.



정무분과에서 발행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 표지

○ 중앙인사위원회 관련

중앙인사위원회는 유능하고 성실한 일류 공무원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인식하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행정 총괄 담당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 이후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부처별 맞춤형 채용제(공직 예비시험제) 도입·정착 등의 국정과제를 발굴·제안했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현장방문

섬기는 정부, 국민성공시대의 실천은 바로 현장에 있다는 취지에서 국정 현장 방문 활동을 추진했다. 소관 부처가 주로 권력과 관련된 기관이기에 현장 방문은 오히려 민생과 밀접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진수희, 남주홍 인수위원의 제안에 따라 정부 서비스의 최일선 기관인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동사무소를 방문했으며, 이곳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주민생활 서비스 통합 개편사업의 현황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3) 평가

인수위 활동이 매우 짧은 시간 속에 이뤄졌으며, 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분과의 특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및 각종 제안을 통해 내실 있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정무분과 내외의 전반적인 평가였다. 분과가 마련한 국정과제들은 향후 소관 부처·기관들의 업무활동 방향으로 정립됐으며, 각종 제안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됐거나,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4) 문제점

정무분과의 소관 부처·기관의 특성상 많은 국정과제를 도출하거나, 다양한 곳의 현장방문을 하거나, 자유롭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제안을 필요한 곳에 전달했지만 다른 분과에 비해 비교적 제한된 숫자의 국정과제를 낼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부분은 국정과제의 수나 현장방문, 토론회 개최 등 양적인 차원에서 분과활동을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기 인수위에서는 국가비전, 국정이념 및 국정과제의 도출 외에도 국정운영의 시스템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토론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인력과 조직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무분과에서 그러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정무분과의 경우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진행됐다. 정무분과에 보고된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결과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는 파문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결국 국정원장이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문제로 인해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분과의 책임 소재와 관련 없이 업무보고 내용이나 분과 내 검토 중인 국정과제 시안 등은 언제라도 언론에 보도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항상 감안돼야 한다.

인수위 활동 초기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에 공개돼야 할 부분과 원할하고 효율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1) 구성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7명, 실무위원 8명과 교수 및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으로 분과를 구성했다.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소관 인수업무를 담당한 외교통일안보분과는 박진 인수위원(간사)이 분과 업무를 총괄하고, 외교·통일 분야는 현인택 인수위원, 국방 분야는 홍두승 인수위원이 실무를 총괄했다.

외교통일안보분과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 내 외교·통일·국방 등 3개 소위원회를 편성해 소위별로 국정과제 선정, 실천계획 작성 등 자체적으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분야별 주요 현안 및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이슈별 TF를 편성해 진행상황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방향

새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은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 외교 및 안보 정책'으로 요약된다. 이는 국익중심의 선진 실용외교와 첨단정예 국방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전략환경에 적극 대응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세계화 시대의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협력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성숙한 세계국가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해 비핵화에 기초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 경제공동체의 토대 마련,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FTA 체결 다변화, ODA 확대 등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실용외교를 구현하는 것을 주된 전략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외교통일안보분과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실용외교·안보 전략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통일·국방 분야별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② 활동목표

외교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세계와 호흡하는 실리외교를 전개한다는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분과 활동을 시작했다.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전으로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외교 △4만달러 시대 조기 진입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성숙한 세계국가' 고양 외교를 선정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

통일 분야에서는 북한이 핵포기를 결단하고 개방으로 나올 경우 각종 경제 협력과 수출진흥을 통해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천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당선인의 '비핵·개방·3000' 구상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당선인의 안보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방향으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튼튼하고 강한 국방태세 확립 및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기술군 육성 △한·미관계 복원과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및 대외 군사외교 확대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등을 선정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산하기관(방위사업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일선 부대장 및 장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분야별로 TF를 두어 국정과제 관련 정책간담회와 관련 부처와의 정책협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③ 활동내역

외교통일안보분과는 외교·통일·국방 등 3개 소위원회별로 자체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TF를 운영하는 등 업무 수행에 효율을 기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정과제 정책간담회, TF 활동,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무엇보다도 실현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새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시켜 나갔다.

외교통일안보분과는 먼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순으로 부처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지난 5년간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검토하며,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인수위원과 부처 담당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정과제 관련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을 시도했다. 국정과제 정책간담회는 외교소위 6회, 통일소위 8회, 국방소위 13회 등 모두 27회에 걸쳐 실시됐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 자체 또는 부처 내 해당 부서와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및 조정이 이뤄졌다.

주요 현안사항 및 중점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쟁점별로 TF(외교 분야 2개, 국방 분야 4개)를 운영했고, 해군2함대사령부(서해교전 전적비 참배)와 전방부대(육군 9사단·1사단) 시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 외교 분야 활동

〈국정과제 정책간담회〉

경제·에너지 외교, 성숙한 세계국가,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대중외교(public diplomacy) 강화방안, 신아시아 외교, 대중국 외교 추진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에너지 외교 정책간담회에서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하에서 자원·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가 우리 경제외교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에너지 외교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성숙한 세계국가 정책간담회’에서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실용외교 구현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비전으로 △우리 특성에 맞는 한국형 기여모델 개발 △새로운 ‘브랜드 파워’ 구축을 위한 핵심가치 개발 △기여외교의 필요성을 알리는 범국민 차원의 ‘평화교육’ 강화 △안보와 예방외교 중심의 대전략 수립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 구현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TF 활동〉

북핵TF : 북한 핵문제의 현 상황 분석과 향후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북한의 신고 및 불능화의 조기완료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

며, 북한의 핵폐기 이행시 각국의 상응조치계획도 점검했다.

경제통상TF : 향후 5년간 FTA 체결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고, 그간의 FTA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FTA 추진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이행할 구체적인 FTA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검토했다.

○ 통일 분야 활동

〈국정과제 정책간담회〉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및 경제공동체협력협정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통일부 인력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방안 △북한 바로 알기 및 북한 인권개선 등 다양한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에 대한 ‘철저하고도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전제로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구체적인 사업이행은 통일부가 담당해 나가면서, 북핵문제 등 정치·외교적인 측면의 기능은 외교부가 관장하고 경제부처와 협력하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현 단계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을 구체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인 추진과 관련해서 ‘비핵·개방·3000 구상’은 견고하게 유지하되 북핵 및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견인과 연계를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이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이며 유

연한 접근보다는 원칙과 목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비핵·개방·3000’ 추진과정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을 이뤄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남북경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해군 2함대사령부를 찾은 박진 간사.



남북경제공동체 및 경제공동체협력협정 관련 정책간담회도 개최해 다각적인 의견을 취합했다. 이명박정부의 남북경제공동체는 보다 뚜렷한 틀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남북경협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북한주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동북아공동체의 모체로서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체결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추진단계로서 기존의 남북간 경제관련 합의들(4대 경협합의서 등)을 하나로 묶어서 체계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은 이외에도 남북간 직접금융거래, 역외가공지역을 위한 개방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방문〉

최근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현실적인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일안보분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시설의 운영과 교육내용, 교육생들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원을 방문했다.

은행이용방법, 맞춤식 직업교육 등 하나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수위원들의 질문이 있었고, 8주 교육기간 중 5주를 할애해 각종 직업을 소개하는 체험교육을 하고 있다는 하나원측의 설명이 있었다. 교육생들은 외래어와 한자어가 많은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언어교육이 매우 긴요하다는 반응이었다.

인수위원들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입국자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외교통일안보분과
정책 간담회.

○ 국방 분야 활동

〈국정과제 정책간담회〉

△국방개혁 2020 개선 △전작권 전환 및 북한정책 △무기획득체계 개선 △군사랑 민사랑 구현과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군사시설보호 구역 합리적 조정방안 △군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확대방안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대도시 인근 공군기지 이전 문제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등 국정과제와 관련 있는 쟁점들에 대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방개혁 2020 개선 관련 정책간담회’는 현 ‘국방개혁 2020’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 2020’ 보완방향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현 ‘국방개혁 2020’은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방개혁 소요예산의 제한 등으로 인해 계획수립 당시의 필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검토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국방개혁 2020’ 계획의 기본 전제가 부합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최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년마다 재평가하도록 돼있는 법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전력구조·문민화 문제 등 제반과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방개혁 2020’ 계획 중 비중이 높은 과제들이 후반부에 집중돼 있어 계획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정할 과제·가속화할 과제·추가할 과제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을 보장하는 필수요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작권 전환 및 북한정책 관련 정책간담회’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보완 문제,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가 ‘자주’의 논리 위주로 접근해 한·미동맹의 가치와 정통성이 왜곡됐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추진상황의 적정성과 보완책 등을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안보환경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수위원들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남북한유해공동발굴사업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2008년 중 시범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과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부대 안보현장 방문〉

남북이 대치돼 있는 서해 NLL 해상과 육군 전방부대 현장 확인을 위해 해군 2함대사령부와 육군 1·9사단을 방문했다.

2함대사령부 방문시 인수위원들은 서해교전 참전비에서 6명의 전사자에게

헌화와 분향을 하고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에 승선해 서해 NLL 인근 해상을 시찰함으로써 NLL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고, 함상에서 실시된 장병들과의 대화를 통해 군 장병의 사기·복지 분야를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3) 평가

외교통일안보분과는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모두 24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충실히 작성해 새 정부 출범 후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 외교통일안보분야 24개 국정과제

분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 신탁력체제 구축 FTA 체결 다변화 추진 기여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조 (ODA) 확대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등) 강화 외교부 인력 충원 및 해외공관 인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안보·문화 공동체 구축 인권외교 및 문화외교 강화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지원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들섬 구상 추진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개혁 2020보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세대 병영생활 개선과 복지 증진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시행 국방경영의 효율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새 정부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근간인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외교'는 과거 이념과 한반도·동북아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을 창조적으로 재건하고, 국익중심의 선진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세계화시대의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협력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안보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 구상'은 새 정부가 추진할 외교·안보 분야 핵심과제

다. 정부가 동 구상에 대한 실천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 북한체제의 개방은 물론 남북 간 경제통합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의 만성적 에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외교, 총리·특사 파견 등을 통해 에너지 협력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에너지 거점공관을 확대하며, 자원·에너지 외교 담당대사를 임명하는 등 강력한 에너지 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새 정부의 전략은 우리 외교가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4) 문제점

분과위 운영 면에 있어서 외교통일안보분과는 부처 업무보고와 국정과제 검토회의 등 각종 회의 및 토론회 과정에서 소관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대체로 원활하게 이뤄졌다. 인수위 지침에 따라 업무보고에 대비 부처 관계자들과의 사전 검토회의를 통해 인수위원들의 보완할 점 등을 검토, 반영함으로써 부처 업무보고에 충실을 기할 수 있었다. 또 수차례에 걸친 국정과제 정책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두고 인수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그리고 부처 담당 공무원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다만, 노무현 정부 청와대와 각료들의 통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지난 5년간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부처 자체의 평가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당선인의 공약 실천계획을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인수위 출범 초기 인수위 업무에 대한 분과별 또는 직책별 역할이나 지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부처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소수 인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등 인수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이는 인수위의 활동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4) 법무행정분과위원회

(1) 구성

법무행정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2명, 전문위원 7명, 실무위원 7명과 자문위원 등으로 분과를 구성했다. 법무행정분과에서는 법무부, 검찰,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법제처,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가청렴위원회 등 7개 부처의 기능과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소관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부처별 주·부책임자 지정, 과제별 주·부책임자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밀도 있는 분석과 대안모색을 위해 활발한 토론활동을 전개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방향

법무행정분과위원회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 방향인 경제살리기(민생경제 활성화, 국내외 투자유치 등), 부패 척결 및 법질서 확립, 실천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활동방향으로 설정했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법령의 정비, 부패요인의 제거,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방안 등을 집중 검토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경찰자치, 지방재정의 건전화 등 실천적 지방자치제도 구현 방안과 반복적인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점검·대응·복구할 수 있는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요 활동과제로 선정했다.

② 활동목표

법무행정분과에서는 법무부·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주요 쟁점·중점정책 위주로 당면현황을 파악하고 심층토론을 거쳐, 당선인의 비전인 '선진화를 통한 선진일류국가 실현' 과 국정지표인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고신뢰사회의 구현' 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부처별 기존 정책의 평가,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뒀다.

③ 활동내역

법무행정분과에서는 7개 부처별 업무보고, 42개 공약과제(법무부·검찰청 8, 행정자치부 17, 경찰청 9, 소방방재청 6, 홍보처 2) 및 16개 시·도 168개 지역공약과제(서울 11, 부산 12, 대구14, 인천 12, 광주 11, 대전 7, 울산 10, 경기 11, 강원 10, 충북 7, 충남 7, 전북 7, 전남 14, 경북 10, 경남 13, 제주 12)를 분석해 15개 국정과제로 정리했다.

법무행정분과에서는 인수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실무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공직자 부패 척결,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법질서 확립 등 중점과제별로 수차례의 자문회의, 업무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법무행정분과 내에 현행 법령의 전반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령의 재정비를 위해 선진화 법령정비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과제별 TF 구성현황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공직자부패척결TF

공직자부패척결TF는 7회의 자문 및 토론회의를 거쳐 공직자부패 요인분석, 5대부패 특별감찰단 구성 등 부패사범 적발시스템의 활성화와 공직자부패 범죄수익의 50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징역형과 병과하는 방안 검토 등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청렴문화 확산 및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단의 사기 진작 등 공직자부패척결(청렴화)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 법질서확립TF

법질서 확립 TF는 네 차례의 자문 및 토론회의를 거쳐 법질서 확립을 위한 합리적 법령정비, 시민질서(줄서기, 공공장소 금연 등)·안전질서(교통, 소방 등)·사회질서(성매매, 마약 등)·신뢰질서(가짜 학위, 식품위생 등) 등 분야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력의 확보, 불법과업·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산업평화정책 방안과 아울러 사회지도층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차원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전개 등의 법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했다.

○ 통합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TF

통합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TF에서는 총 11회의 자문 및 토론회의를 거쳐 법령 정비를 통한 재난 기획총괄 기능의 강화, 반복적 수해 피해 및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적 대책마련, 민간 안전관리역량의 활용방안 및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등을 마련했다.

○ 실천적 지방자치 구현 TF

실천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7개의 세부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세부 TF(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TF, 자치경찰 도입 TF, 기관위임사무 폐지 TF,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내실화 TF,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TF, 중앙-지방간 국정협력 시스템 구축 TF, 교육자치의 확대 TF)를 구성해 활동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평가주체나 평가기준이 상이해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여러 형태의 자치단체 평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자치단체 평가제도를 개선했으며, 실질적 지방자치와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지방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추진 및 지방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간 협력시스템 구축안을 마련했다.

제1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TF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TF에서는 한 차례의 공식 토론회의를 거쳤고 수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거쳐 특별교부세 제도개선과 지역발전교부세 도입 등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조례에 의한 선택적 과세제도의 확대 등 지방세의 구조개편,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선진화 법령 정비 TF

선진화 법령정비 TF에서는 현행 법령의 전반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의 재정비를 위해 노력했다. 법령정비 TF에서는 세부과제로 정부조직개편 후속 법령정비 지원,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령정비 지원, ‘경제살리기’ 저해 법령의 정비, 국민 중심의 법체계 단순화, 현실성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령의 정비 등을 선정했다.

○ 기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폐지, 주택거래세 인하,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포함),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경제법령 등 주요법령의 영문본 제공서비스 추진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의 실무자들과 수차례의 업무회의를 거쳤다.

(3) 평가

법무행정분과에서는 소관 부처별 업무보고 및 과제별 TF 토론 등을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화합적 자유주의), 행동규범(창조적 실용주의) 및 5대 국정지표를 법무행정분과 위원과 소관 부처담당 공무원들이 공유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등 국민적 관심사항을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경제살리기 및 당선인의 관심사항 등 당면현안을 반영해 경제 관련 법령의 영문 서비스 제공, 중국인 관광객

비자발급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의 신속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자치경찰 도입, 기관위임사무 폐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자치단체 평가 일원화 및 중앙-지방 간 국정협력 시스템 구축 등 실천적 지방자치구현과 지방교부세제도 및 지방세 구조의 발전적 개편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당선인은 신년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시다”라고 밝히면서 선진한국을 위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법무행정분과에서도 전문가가 참여한 선진화 법령정비TF를 구성해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고 국내외 기업이 편안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엄정한 법 집행력 확보 및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전개 등을 포함한 법질서 확립도 분과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당선인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 좋은 결실을 거뒀다.

(4) 문제점

짧은 기간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쉬운 점도 있으며 보완해야 할 점도 있었다.

인수위 활동 초기 단계에는 인수위의 성격과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립이나 내외부의 공감각이 미흡해 과제선정과 배분에 있어 편중되거나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있었으며, 보안 문제가 이슈화돼 다른 분과의 업무추진 내용을 접하기 어려워 중복된 업무처리 또는 실익이 없는 일을 추진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서 자문회의 또는 TF 활동이 활발했으나, 일부의 경우는 국정과제와는 별개로 위원별 관심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업무보고를 요청하는 등 효율성의 문제도 있었다. 일부과제의 경우는 개별 부처보다는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한국사회 전반의 의식수준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제시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향후 주관 부처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의 마련이 요구된다.

5) 경제 I 분과위원회

(1) 구성

경제 I 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8명, 실무위원 6명과 다수의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분과를 구성했다. 인수위원들은 분야별 구분 없이 '3인 회의체'를 구성해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실무진들은 각각의 전문성에 따라 거시경제, 재정, 금융, 세제·세정, 공정거래분야로 세분화된 소관업무를 수행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방향

경제 I 분과는 당선인이 밝힌 '선진 일류국가'의 건설을 위한 '경제살리기'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투자지지를 회복시켜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정책이며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 I 분과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투자 활성화→경제성장→일자리 창출→분배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분과의 핵심 활동방향으로 추진했다.

② 활동목표

경제 I 분과의 기본적인 활동목표는 소관부처의 업무 인수작업, 소관 분야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 실현방안 강구, 그리고 소관 분야별 현안과제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이었다.

이에 따라 소관 분야별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수행 성과 및 주요 쟁점현안 등을 파악해 경제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했다. 분야별 담당자들은 당면 현안사항들 중 인수위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을 중요도와 실행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과제, 중점과제 및 일반과제로 분류했다. 과제별로 공약사항,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를 정리하고, 모든 과제마다 중요도, 추진시기, 예산사업 여부, 법령 제·개정 필요 여부, 공약내용 수정 필요 여부 및 추진을 위한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명기했다.

● 경제 분야 21개 국정과제

중요도	과제명
핵심	1.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2. 예산절감 10% 추진(국책사업 관리방식 개선 포함)
	3.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추진(법인세율 인하, 임투세액 공제 연장,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중소기업 가업상속 등 포함)
	4. 출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5.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감독 시스템 개선방안 포함)
	6.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중점	7. 물가 안정화 방안
	8.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
	9.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서비스 무역지원방안 포함)
	10. 금융산업 발전방안 추진(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동북아 금융 허브와 국부펀드 활성화 방안,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 포함)
	11. 제조업 U턴 지원대책
	12.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
	13.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
일반	14.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15. 단기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16. 공정거래법을 독과점 규제와 경쟁촉진 중심으로 개편
	17. 원화의 국제화 방안
	18. 국제행정 선진화 방안
	19.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20.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감시 강화
	21.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③ 활동 내역

경제 I 분과는 인수위 활동기간 동안 자문위원 전체 간담회와 관계 부처 인사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간담회를 30여 차례 개최해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간 협의하는 자리를 통해 정책과제를 다듬었다.

특히 ‘자율과 경쟁’이라는 당선인의 경제철학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민간의 견해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경제연구원장, 금융회사 대표, 자본시장 전문가 등을 초청하는 자리를 개최했다.

당선인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는 총 세 차례 이뤄졌다. 1월 2일 인수위 대회 의실에서 ‘당선인 초청 경제연구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 위원, 그리고 정부출연·민간 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세계·국내 경제전망, 국제 무역·금융시장·원자재가격 전망,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1월 9일에는 ‘당선인 초청 금융인 간담회’를 개최해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 위원, 그리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산업의 현실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1월 25일에는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금융시장 동향 간담회’를 개최해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위원, 그리고 금융시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총 29회의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를 실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제 I 분과 관계 위원과 경제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747 공약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총 4회 개최해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정부예산 10% 절감방안’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검토회의를 총 2회 개최해 최저가 낙찰제 등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및 2009년 예산 10% 절감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밖에도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 관련 회의를 비롯해 감세 관련 회의, 금융규제 개혁 관련 간담회,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안 협의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경제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총 2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경제 I 분과 관계위원과 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민간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재정경제부 제1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금융인 간담회.



런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시장현황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알아보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동북아 금융 허브와 국부펀드 활성화 방안(1.31), 해외투자 활성화의 과제와 대책(2.1), 원화의 국제화 방안(2.1) 등도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원화의

국제화 의미 및 유형, 각국 사례(일본·싱가포르·호주), 원화국제화의 장단점, 단계별 추진방안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검토회의도 총 4회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경제 I 분과 관계위원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 축소를 위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해외 수요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3) 평가

경제 I 분과는 소관 부처별 업무보고, 여러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참여정부의 현황과 쟁점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새 정부와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공유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권한이 없는 인수위의 한계를 잘 인식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마련하기보다는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맞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거나 시장 실정에 반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했다.

특히 과거 인수위의 경우 부처별 업무보고가 기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질책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경제 I 분과는 현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일할 ‘파트너’이자 ‘동료’라는 인식하에 부처별 업무보고가 향후 국정운용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보고였다는 평을 들었으며, 현안·쟁점사항을 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4) 문제점

경제 I 분과의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이하 모든 실무진은 차질 없는 정권 인수작업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결과 경제 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완성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 금융, 세제, 공정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의 수많은 과제들을 점검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인수위 출범 초기에 이뤄졌으며 특히 경제 I 분과의 경우 9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1주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했기에, 사전 준비 및 업무보고 결과에 따른 쟁점정리 등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다.

6) 경제 II 분과위원회

(1) 구성

경제 II 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7명, 실무위원 7명과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6개 분야(건설교통, 과학기술, 산업자원, 농림, 해양수산, 정보통신)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방향

건설교통분야에서는 국정목표인 ‘신발전체제’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동산 가격 급등, 인위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잘사는 튼튼한 경제를 실현한다는 대전제를 담아 나가고자 노력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이 기술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일류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한다”는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첨단산업 무역강국 건설 △벤처 및 중소기업의 육성 △에너지 절약과 자원 확보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 등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농림 분야는 FTA 확산, DDA 등 개방 확대, 농가의 고령화, 인구감소, 농가 부채 등으로 인해 농촌이 활력이 잃어 가고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성공한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든다는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수산 분야는 수산의 경쟁력을 강화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FTA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어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에, 해운물류 분야는

우리 항만을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만들어 외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항만 분야는 노후 항만을 친환경적 Waterfront로 개발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정보통신 분야는 “침체돼 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과 세계 최강의 디지털국가 건설 공약을 전제로 활동을 시작했다.

② 활동목표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부처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당면현황을 파악하고 심층토론을 거쳐 당선인의 국정운영방향인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최우선 활동목표로 두고, 효율적인 국토 및 해양관리의 추진, 747 공약에 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활동목표로 삼았다. 대도시 교통난 해소와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택시문제 해결방안, 수도권과 토지이용 규제와 부담금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당면 현안과 공약이행계획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계자, 민간기업 CEO, 이공계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주제별 간담회를 가져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와 효율성 제고, 세계적인 과학인재 양성 및 해외 과학두뇌 유치,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건설교통분야 부처별
업무보고 회의.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자원 분야의 당면 현안과 당선인의 공약이행계획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기업인, 연구기관,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주제별 간담회를 가져 산업자원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농림 분야는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한·미 FTA, 농가부채 문제 등 농업·농촌의 당면 현안과 공약 이행 방안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 학계,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요 사안별 간담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해 농어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어업 경쟁력 강화, 식품산업 육성, 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해양수산 분야는 당선인의 공약인 동북아 물류 허브 육성과 외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항만배후부지'를 활용해 외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물동량을 창출해야 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등과 연결되는 주요 현안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와 항만재개발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산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 지원대책 추진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으며, 과제의 성격이 농업과 유사한 분야는 통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와 전문가와 토론을 거쳐 기존 정책의 평가,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대응방향, 그리고 우정사업 경영체계 개편 등이 도출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가계통신비 20% 인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법·제도 정비와 투자 활성화, 그리고 세계 일류 IT 인프라 구축 및 u-Korea 구현을 설정했다.

③ 활동내역

○ 건설교통 분야

건설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문회의를 갖고 건설교통부 정책담당자의 견해를 참조했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신혼부부 보증자리 주택공급 등 부동산 공약 실천방안과 관련해 산·학·연의 관계 전문가들과 2차(1.3,1.12)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해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분형 분양주택 추진방안과 관련해 2차례 검토회의(1.21,1.25)와 민간 전문가, 재무적 투자자와의 자문회의(1.23,2.1)를 열어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가능 여부, 실거주자와 투자자 간 권리관계, 청산시기와 방법 등 세부 추진방안

을 논의했다. 택시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택시연맹(1.24), 택시살리기연대(1.24),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1.25), 운수노조(1.29)등 총 5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택시 문제와 운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도시계획체계의 합리적 조정 등 토지이용규제 10건, 정비발전 지구제도 도입 등 수도권 규제 8건, 산업단지 지정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의제 등 산업단지 규제 3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경제Ⅱ분과의 핵심과제인 신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 당선인을 모시고 산업체 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1.18)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간담회 과정에서 제시된 P2P프로그램 실명제도입, 지능형 대운하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 등 5건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과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이 중심이 돼 매주 수요일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해 출연연 기능 정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투자 효율성 제고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등의 논의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아울러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1.14,21,28)를 개최해 연구개발 지원범위 확대, 세액 공제, 규제 완화, 병역특례, 산·학·연 역할분담, 인력양성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등의 국정과제에 반영해 수정·보완했다. 출연연구기관 간담회(1.8,11,23,30)를 통해서서는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열띤 논의를 거쳐 출연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해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또한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1.7,9,22)를 개최해 과학인재양성 및 해외 과학두뇌 유치 등 국정과제의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 산업자원 분야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1월 18일에 열린 당선인과 산업체 CEO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5건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한편 이의 후속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21)를 개최해 연구개발 지원범위 확대, 세액 공제, 규제 완화, 병역특례, 산·학·연 역할분담, 인력 양성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친환경·고부가가치 미래 지능형자동차' 간담회를 통해서도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정과제를 수정·보완해 나갔다. 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1.15)를 개최해 벤처기업의 침체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전경련·대한상의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입지 규제, 인·허가 간소화 등 신속한 공장설립을 위한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민가계비 부담경감의 일환으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수송 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에 대해 LPG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과 후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LPG 사용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종전에 정부에서 연탄을 지원하던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가구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각 부처별로 유사·중복 등 복잡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해 15개 관련 부처, 중소기업 유관기관 간 간담회(1.18,29,31,2.11) 등을 통해 공급자인 정부보다 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정책들을 검토해 지원장구를 단일화하고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지원체계를 효율화했다.

○농림 분야

농림 분야는 인수위원회와 전문위원, 실무위원 및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농어촌 관련 현안과 국정과제 추진방안에 대해 수시로 회의를 하는 한편 주제별로 간담회도 가졌다. 1월 4일 농림부·산림청·농촌진흥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요 현안과 공약이행방안 등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1월 5일에는 농민연합 대표, 한우협회장 등 28명의 농업인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당선인 공약의 이행 방안과 신정부 농정 과제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1월 9일과 10일, 15일에는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과 홍문표 인수위원 등의 주재로 학계, 기업, 농업인·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산업 육성

및 식품안전관리업무 일원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월 14일과 20일에는 농림부·농협·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1월 16일에는 농림부·건교부·산림청 관계관과 농촌경제연구원·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농지,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1월 21일에는 당선인 주재로 한국농업경영자중앙연합회장 등 34명의 농업인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2월 4일에는 화학비료와 배합사료 가격이 급등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과 홍문표 인수위원이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등 농가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해양수산 분야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국정과제 도출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자체적인 토론과 자문회의를 수시로 갖고 해양수산부 정책담당자와의 견해를 청취했으며 수산단체 대표, 항만물류업계 대표, 해양과학기술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월 5일에는 수산단체 대표와 선사·하역사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각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월 8일에는 한·미 FTA 관련 수산 분야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수,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어민들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1월 11일에는 해양과학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개최 준비부터 개최 및 행사시설 활용 계획까지를 새 정부에서 총괄하게 될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출했다.

○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가계통신비 경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갖고 이해당사자, 정보통신부 정책담당자의 견해를 참조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YMCA 등 시민단체의 견해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 관련 정책을 소비자 이익과 통신사업

의 발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통신 분야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해 사업자의 자율적 요금인하 환경을 조성해 2008년 안에 지금보다 휴대전화 요금이 15% 가량, 2012년에는 30%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1월 22일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위원, 학계, 관련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송·통신 융합간담회'를 개최해 방송의 중립성 확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3) 평가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그리고 현장방문, 관계자와의 면담과 건의사항 검토, 전국운수노조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강국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출연연구소, 기업, 대학을 비롯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입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농림 분야에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농림 관련 유관기관 등 폭 넓은 간담회를 개최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들을 발굴하고 그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농어민대표 간담회.



을 위해 헌법이 정하는 '경자유전 원칙' 내에서 과감히 농지 소유 및 거래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실용화' 사업과 당선인 공약사항인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연계해 '신해양산업 개발·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도출했

다.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
과 외국인 고용제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항만배후단지의 틀
을 넘어 항만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물류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방한은, 전 국민의 열기 속에 유치되
고 당선인 재임기간 중 준비하고 개최하게 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확인해 주었다.

(4) 문제점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지분형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무주택서민과 젊은 세
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이와 유사한 구조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
도 있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투자유치 가능성과 새 정부의 집값 안정 기조에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율적
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결정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과 효과
성을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자문위원들은 인수위 자문위원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망각하
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자문위원 직위를 남용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인수위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는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앞으로 차기 인수위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자문위원을 선발하고,
임명된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과학기술 및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 확보, 민간의 투자 활성화 등
범정부적인 어젠다를 관계 부처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정부정책의 상호연계
측면에서 효과적이었으나 아직까지 소관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가 남아
있어 향후 기능별 업무융합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연연
구기관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기능 정립은 중요한 현안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
치지 못하고 추진돼 연구원의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국정과제를 정함에 있어서 포함해야 할 범위와 과제의 크기에
대해 초기에 명확한 방향설정이 안돼 인수위 내부 및 관계 부처에서 혼란을 겪
기도 했다. 또한 국정과제 보고 일정 등에 맞추다 보니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시간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또한 단일 과

제는 국 단위에서 처리할 수준이라고 정의한 지침이 늦게 나온 점, 당 공약 내용도 추가로 검토하게 한 것 등은 효율적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됐다.

인수위 발족 초기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 공약이행방안을 포함시킨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각 부처에서는 공약이행방안을 수립할 시간의 부족이, 인수위에서는 관계 부처와 밀도 있는 협의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와 공약이행방안은 분리해 공약이행방안은 국정과제와 함께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그 범위 등의 문제는 당선인의 공약과 업무보고에서 나온 현안과제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 회의와 간사단 회의를 거쳐 1차 과제를 선정해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7)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1) 구성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8명, 실무위원 7명과 다수의 정책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소관 분야에 따라 교육, 노동, 환경, 문화, 보건·복지·여성·보훈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새 정부 국정과제의 큰 틀을 잡아나가는 활동을 전개했다.

사회교육문화 핵심추진과제는 △교육개혁방안 △저출산·고령화대책 △4대 연금 개혁방안 △문화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등으로 전문가회의, 실무정책협의, 현장방문, 공청회 활동을 통해 해당 기관·단체, 국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집중논의가 필요한 13개 과제(대학입시, 영어교육, 학교교육 내실화, 고등·평생교육, 사회복지전달체계, 고령화대책, 저출산·보육, 국민연금개혁, 보건의료, 여성일자리창출, 보훈·보상체계개편, 제대군인지원,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TF를 가동해서 완성도 높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방향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사회갈등 완화 및 지속가능한 신발전체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푸른 한반도와 선진문화강국, 인재대국 등 선진화된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공교육 강화와 능동적 복지, 고용 서비스 선진화 등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선진일류국가 도달'이라는 국가비전을 이루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도록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② 활동목표

교육 분야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수능등급제 등 중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명확히 해 정책 수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입 자율화, 영어 공교육 문제 등 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에 대해 역점을 두었다.

노동 분야에서는 최우선 과제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중요한 전제로 인식하고 노사협력의 새로운 모델 개발, 노동시장 법치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빈곤의 대물림 단절'이라는 큰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빈곤에서 탈출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으며,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재편해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보건·의료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문화 분야에서는 새 정부 국정방향인 국가선진화를 추진함에 있어 전통과 미래, 예술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문화의 창조와 향유가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창조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추진, 전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등 국민체감형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속도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③ 활동내역

사회교육문화분과는 1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월 8일 까지 노동부·문화관광부·환경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보훈처 등 7개 해당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후 과제별 정책협의를 추진하면서 과제 실천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책협의 과정에서는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

도록 했으며, 국민적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현장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을 방문했다.

교육 분야는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에 이어 1월 7일부터 14일에 걸쳐 교육부 조직개편 관련(자치·자율화 방안), 대학입시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 다양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활성화 등 세부 분야별로 정책 협의를 병행했다. 또한 주제별로 인수위, 교육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입시TF, 영어교육TF, 학교교육내실화TF, 고등·평생교육TF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2일에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월 30일에는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했다.

문화 분야는 1월 3일 상암DMC 문화산업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월 4일 방송미디어 현장방문, 1월 8일 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문화재청 업무보고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문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월 11일 문화부문 상임자문위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1월 25일까지 각 분야별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총 6회, 문화계 현장방문을 총 10회 실시해 주요 국정과제별 실천계획을 작성했다.

문화예술인 초청 간담회.

또한 1월 31일에는 문화예술계 저명인사 간담회를, 2월 4일에는 관광산업



계 인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선인이 직접 참석하는 간담회를 2회 개최해 당선인의 문화 전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의지를 표명하고자 노력했다. 2월 말에는 각 분야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수위 활동을 공식 정리하고 향후 차기정부 문화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노동 분야는 1월 8일 업무보고 이후 과제별 정책협의를 추진하면서 노동부의 입장과 과제 실천을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정책협의에는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문위원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구하고자 했으며,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 집행의 구체성을 높이고자 했다.

노사관계TF를 가동해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과 향후 5년간 선진노사관계 로드맵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1월 7일 이후 4차례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뒤 23일 당선인이 직접 참여하는 한국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향후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TF 차원에서 3회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2일에는 이주호 인수위원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이용식 사무총장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이봉화 인수위원이 직접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과 같이 사회복지 일선 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일선의 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주요 과제별로 TF를 구성해 수시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최대한 청취했고, 해당 부처 정책담당자들의 견해도 참조했다.

‘사회복지전달체계TF’에서는 ‘희망복지129센터’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청사진 제시했으며,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 생활지원TF’에서는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및 군 인적자원 활용 및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화대책TF’에서는 노인의 3대 고통해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관련 문제점 점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TF’에서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 따뜻한 국민건강 안전망 확보,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특위 설치 문제와 어젠다 그룹화 작업을 담당했으며, ‘보훈·보상체계 개편TF’에서는 희생장병·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국민연금개혁TF’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통합문제, 기금운용체계의 재구조화 문제 등을 다뤘으며 ‘저출산TF’에서는 드림스타트, 임신부터 취학까지 의료 서비스 지원,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방안 등 임신부터 취학까지 Mom&Baby 공약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TF’에서는 맞춤형(생애주기별·학력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1월 7일 환경부 업무보고에 이어 (구)장항제련 환경오염 문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문제, 음식물쓰레기 문제, 수도권대기오염총량제 제도 개선 문제, 각종 예보제 정확도 제고방안, 환경산업 육성 문제 등 주요 환경 분야 현안 관련 실무정책협의 8회, 환경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자문위원 간담회 2회, 국립생물자원관 및 매립가스 발전소 및 강북정수장 방문 현장 간담회 2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3) 평가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는 다양한 업무지식과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다듬고, 국정 청사진을 그려내는 작업이 치열하고 밀도 있게 진행됐다. 과제 수립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선정된 과제를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관계 전문가와 관련 분과의 자문위원을 적극 참여토록 했다.

분야별 간담회, 현장방문,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려 노력했고, 좀더 논의가 필요하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선인과의 간담회 개최 등 시의성 있는 조치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 마련 및 실현에 최선을 다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부처의 업무와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인식을 확고히 함으로써 시급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의 선정과 추진 방향을 범부처적으로 제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방문과 분야별 전문가회의를 통해 현장에 착근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복지 분야는 무

려 8개의 TF를 가동해 복지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으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건설에 주력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과제의 실천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고용지원센터 및 노조와의 대화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킴으로써 국정과제 실현방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환경 분야는 환경 문제에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편함과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과제를 도출하고, 국정과제별 세부 프로그램 또한 구체성을 가지고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사회교육문화분과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업무 집중 및 역량 최대화를 기함으로써 선언이나 구호의 형태가 아닌 가시적인 정책성과와 이와 연관된 국정과제를 발굴함으로써 50여일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4) 문제점

인수위의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인수위 활동에 있어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인수위가 정책결정권을 가진 기관으로 외부에 비쳐지면서 인수위가 외부 전문가나 관계 부처와 자유로운 정책 토론을 진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인수위의 역할이나 권한을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부처 또는 분과 간 불필요한 논의를 줄이고, 인수위가 부처 업무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짧은 인수위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민제안과제의 경우 상당부분이 새로운 정책결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한정된 인수위 인원으로 제안과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국민제안제도가 인수위의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 활동에서도 국민제안제도의 활용을 고려한다면, 정책결정과 관련된 과제는 과감히 새 정부 출범 이후로 검토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7.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1) 개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다루는 기구로, 역대 인수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이다. 핵심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위는 정부혁신·규제개혁, 투자유치, 한반도대운하, 새만금, 기후변화·에너지대책,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모두 6개 분야의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됐다.

TF별 업무를 보면,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비대한 정부조직을 통폐합하는 작업과 함께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작업을 맡았다. 투자유치TF는 투자환경 개선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본부 역할을, 한반도대운하TF는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한반도대운하 건설의 정책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다. 새만금TF에서는 “새만금을 한국판 두바이로 개발할 것”이라고 약속한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담당했다.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 청정에너지 산업기반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기초과학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 R&D 사업화

경쟁력강화특위 자문회의.



로의 선순환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어가는 업무를 담당했다.

●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분장업무

구분	위원 및 팀장	분장업무
공동위원장	사공일 위원장	특위업무 총괄
	데이비드 엘든 위원장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공동부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	인수위 분과와 업무 협력
	윤진식 부위원장	특위업무 총괄 지원
투자유치TF	윤진식 위원	투자환경 개선정책 수립, 외국인투자 유치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정부혁신·규제개혁TF	박재완 위원	정부조직 개편(안) 수립, 규제개혁(기능 민간이양 포함) 과제선정 등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	허중수 위원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에너지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한반도대운하TF	장석효 팀장	친환경·문화적 한반도 대운하의 건설 추진, 한반도대운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 강구
새만금TF	강현욱 팀장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 변경, 글로벌 인프라 시설 구축계획 수립
과학비즈니스벨트TF	민동필 팀장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 (가칭) 설립 및 과학벨트비즈니스화

2) 위원장실

(1) 구성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실은 자문위원 1명, 실무위원 1명 등 보좌진으로 구성됐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방향

사공일 위원장은 산하 6개 TF의 추진방향과 업무 상황을 점검하는 과제를 맡았다.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도출해 새로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수행에 필요한 지침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역할도 주요 활동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경제요인과 면담을 추진했으며, 국제적 오피니언 리더 및 국내 인사와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② 활동내역

사공일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특위 업무를 시작한 1월 1일 이래 6개 TF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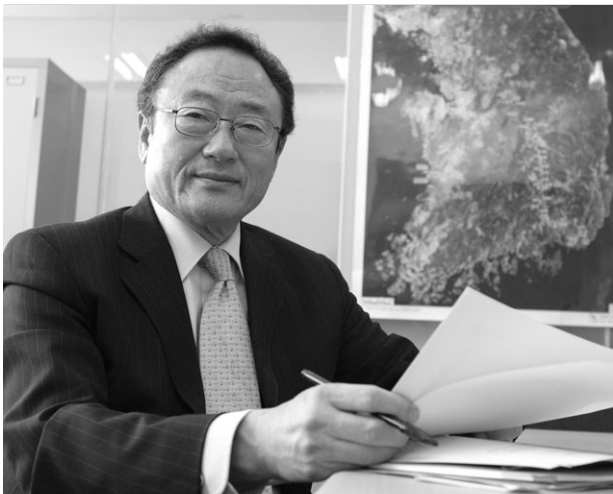
위원장은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대내외에 전파하는 데 업무의 우선순위를 뒀으며,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1월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 당선인 특사자격으로 참석해 '만들어가고 있는 또 다른 경제기적 : 새로운 지도력하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연설을 통해 이명박정부에서 강도 높게 추진될 규제개혁과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 확립, 법치주의 확립 등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보다 앞서 1월 19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기업환경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위원장은 국제회의 외에도 HSBC그룹 회장, 무역투자청장 등 영국의 경제계 인사를 잇달아 면담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

국제적 홍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기업 친화적 정책이 곧 노동자 친화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새 정부 경제정책을 홍보하는데 노력했다. 세계경제 불안, 대불공단의 전봇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신문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제성장률의 목표 달성 가능성과 규제완화의 구체적 방법 등을 설명했다.

사공일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또한 국내외 인사들과 총 13회에 걸친 간담회(영국 파이낸셜타임스 편집국장 등)를 개최해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는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OECD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프랑스 성장위원회 위원장, 씨티그룹 회장 등 국제기구 인사 및 각국 정치

·경제계 요인과의 면담을 통해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은 1월 4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 인수위 업무 조정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한국을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3) 평가

사공일 위원장은 산하 6개 TF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해 각 TF가 주어진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주요 국내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에서의 강연 또는 주제발표(총 8회), 워싱턴포스트 등 국내외 언론 인터뷰(총 12회), 각계각층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총 13회), 주요국 대사·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국내외 재계·정부 고위인사와의 면담(총 30회) 등을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알려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기업경영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주요 국제기구 및 세계 경제계 인사들에게 직접 향후의 국가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경제주체들과 가진 간담회·대담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자의지를 제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외국인 및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4) 문제점

위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활동시한 때문에 더 많은 국내외 인사들과 교감을 갖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수위 경쟁력강화특위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 연결돼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보다 많은 간담회와 면담을 통해 외국인과 국민에게 귀를 여는 주체가 돼야 할 것이며, 수렴된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3) 투자유치TF

(1) 구성

투자유치TF는 인수위원 1명, 전문위원 2명, 실무위원 2명과 자문위원,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정부 인수위는 경제Ⅱ분과에서 투자유치를 1개의 정책과제로 다뤘으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 인수위에서는 투자유치TF를 별도로 설치했다. 투자유치TF는 금융·실물 부문 CEO 출신, 투자유치 실무경험자, 투자유치 분야 학자·연구원, 외국인 생활환경 분야 전문가, 규제개혁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방향

투자유치TF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 발 신용경색, 유가급등 등 세계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당선인의 공약인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국정과제 도출을 활동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제도와 관행 개선 △투자유치 원-스톱 행정 서비스 확립 △각종 세제·절차상의 지원 강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이 제시됐다.

투자유치TF가 제시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외투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을 중시하는 활동을 펴나갔다. 조직 개편이나 법·제도의 개선과 같은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과제는 취임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정책조정이 필요하거나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하는 과제는 임기 내에 추진하도록 분류했다. 투자유치TF가 마련한 실천계획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담당 정부부처가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투자유치TF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뿐 아니라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실질적으로 유치하는 활동방향을 세웠다.

② 활동목표

과거의 투자유치 정책은 총액 위주의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해 실제로 국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이 제기되곤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투자유치TF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자와 국가산업전략상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외국인투자자로 분류해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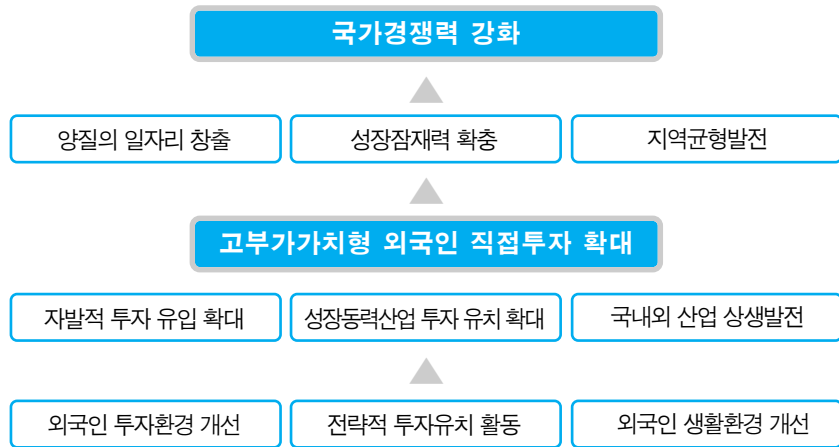
유입형 투자는 자발적 시장동기형 투자이므로 기업투자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해외시장 지향형 투자나 신기술·첨단 분야 투자, 고용유발·지역개발형 투자의 경우 산업전략상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대상이다. 투자유치TF는 이러한 전략산업을 타깃업종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등 3개 분야별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투자유입과 투자유치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투자환경 개선과 생활환경의 개선이다. 투자유치TF는 우선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규제개혁, 부지공급 원활화,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인센티브 개선을 선정했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분야로는 교육·의료·교통·주거환경의 4대 분야가 제시됐다. 참여정부에서도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교육평준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불허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우선시켰기 때문에 실제적인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자유치TF는 외국인 교육환경과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중점유치대상 업종을 선정해 국책사업 투자 유치의 전략적 관리를 채택했다. 특히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과급효과를 감안해 해외지향형 투자나 신기술·첨단 분야 투자, 고용유발형 투자 및 지역개발형 투자를 타깃업종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제시했다.

● 투자유치TF의 활동목표와 비전



③ 활동내역

투자유치TF는 자문위원회의를 매주 월·수·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했다. 1월 7일부터 총 1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총 43명이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을 거쳐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3개), 중점추진과제(13개), 세부추진과제(43개), 실천과제(85개)를 도출했다.

총 15회에 걸쳐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현안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자(제주,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북, 충남, 대구, 경북, 강원, 평택 등)와의 간담회를 통해 투자애로 사항과 정책건의를 청취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려고 노력했다. 2008년 1월 22일에는 동탄신도시 내 입주한 17개 외투기업을 방문해 강제이전에 따른 외투기업의 고충을 경청했다. 이전이 불가피한 외투기업은 양도세와 대토(代土) 문제로 존치가능한 기업은 존치부담금을 물게 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투자유치TF는 존치심의위원회 회의를 조기 개최토록 요청하는 등 문제를 2월중에 해결하도록 매듭지었다. 1월 22일부터 23일 동안 산업자원부, KOTRA, 산업단지공단과 더불어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를 실시, 상당수의 외투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각도로 제시됐다.

투자유치TF는 또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TF 팀장(경쟁력강화위 부위원장)이 1월 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

명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투자유치TF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해외유전개발을 위한 자원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과 한국 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이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광구 개발, 기반시설 구축을 연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확보한 석유매장량은 약 30억 배럴규모이며 동시에 50억달러에 달하는 건설공사 물량도 확보했다. 투자유치TF는 또 두바이투자공사(사장: 모하메드 알 샤이비니)의 한국 투자를 유치했다. 20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코리아펀드를 만들어 우리나라 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투자유치TF는 2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도 지원했다.

총 13회에 걸친 자문위원회의 중 세 가지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먼저 인센티브 지원으로서 조세감면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조세감면이 여전히 투자유치 인센티브로서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이중과세 문제로 조세감면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대립했는데, 인센티브 제공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조세감면 인센티브는 축소하고 현금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다음으로 Invest Korea(IK)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의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깊이 있게 다뤄졌다. 인·허가 절차를 효과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각 부처 파견관을 지식경제부로 파견하되, 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위치는 현행과 같이 IK에 존치시킴으로써 민원 서비스와 파견관의 실질적 권한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경제자유구역을 규제무풍지역(Regulation Free Zone)으로 전환시키는 안건에 대해서도 토의가 활발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규제를 모두 적용배제하고 필수불가결한 규제만 남기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돼 경제자유구역 담당자와 4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다.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 한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3) 평가

인수위에 투자유치TF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 정부의 투자 유치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알 수 있다. 투자유치TF는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국정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외투기업에도 수도권 규제를 적용했고, 평준화정책으로 외국인의 교육·의료 관련 생활환경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다. 따라서 투자유치TF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투자환경 개선(규제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과 생활환경(교육·의료·교통·주거 등) 개선 실천계획을 새 정부가 실천할 때 투자유입 효과는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지향형 투자, 신기술·첨단 분야 투자, 고용유발·지역개발형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유지 등을 활용한 장기임대 산업용지의 비축·공급을 통해 투자기업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저가의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세차익 목적의 가매입 수요를 차단하고 보상단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유치TF가 외투기업의 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신뢰회복의 계기가 됐다. 향후 경제정책방향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대외 설명기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관심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르드 유전광구의 개발로 최대 2~3년치 국내소비량이 확보됐다. 이는 자원개발이 시급한 우리나라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미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시킬 것이다. 특히 유전광구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을 연계한 패키지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자원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윤진식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부위원장 겸 투자유치TF 팀장.



또한 투자유치TF의 노력으로 유치에 성공한 두바이투자공사의 20억달러 규모 두바이코리아펀드는 한국의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

(4) 문제점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추진상의 저항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경쟁력은 투자유치 경쟁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TF가 제시하는 실천계획의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부상이다. 투자유치TF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10년 전, 아니 5년 전이라도 추진했다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크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지향형 투자, 신기술·첨단 분야 투자, 고용유발·지역개발형 투자를 타깃업종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은 해외 투자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산업 클러스터의 축적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유치TF 활동 중 기업현장 방문과 애로사항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총괄부서인 지식경제부와 Invest Korea 등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기관들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정부혁신·규제개혁TF

(1) 구성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인수위원 1명, 전문위원 3명, 실무위원 9명과 자문위원 등으로 TF를 구성했다. TF에 참여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금융, 산업, 공정거래, 복지, 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각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원점에서 재정립하는 업무를 맡았다.

박재완 팀장을 비롯해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전원은 자문위원의 자문과 각계 의견을 토대로 정부 기능과 규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정부의 기본 틀인 정부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했고, 향후 정부운영의 기본방침이 될 규제개혁 실천계획을 완성했다.

TF팀 위원들과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박재완 팀장.



(2) 활동방향 및 활동 내역

① 활동방향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 규제개혁 실천계획을 작성하며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인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자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길목을 열어주고,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감독 기능과 최대한의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대역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전체의 혁신성고가 사회 전 부문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에서 전력·가스·도로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② 활동목표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활동목표를 △앞날에 미리 대비하고 기회를 준비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지방에 활력을 돋우는 작은 정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현행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발목잡기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국민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③ 활동내역

○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정부혁신·규제개혁TF가 추진한 업무 중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은 시한이 정해진 작업이었다. 당선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

부를 구현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의 열개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새로운 정부의 구조를 결정해야만 국무총리 내정자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3주간의 짧은 기간에 밀도 높은 작업을 통해 새 정부의 모습을 확정지었다.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공공 부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지난 수년 동안 학계 등에서 연구돼온 정부 기능과 정부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했고, 각각의 문제점이 지닌 사회적 파급효과와 의미 등을 정리했다. 박재완 팀장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및 자문위원이 수차례 논의한 결과 현행 정부조직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됐다.

첫째, 시대 흐름과 동떨어지게 중앙정부 역할이 방대하고 독점적이어서 민간의 활력과 지방자치를 위축시키고 있다.

둘째, 상층부가 비대한데다 보좌·참모조직도 옥상옥(屋上屋)으로 관여해 행정 각부가 위축되고 책임행정도 실종된 상태이다.

셋째, 비슷한 일들을 이곳저곳에서 중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칸막이 현상이 심각하고, 겹치는 조직이 많다.

넷째,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기능, 갈등조정 및 국민통합 역량은 취약하다.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 등은 헌법에 근거 없이 제4부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학계·언론 등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등을 정리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당선인은 정부가 국민에게 군림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며, 길목마다 규제를 설정해 놓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기능과 조직구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검토 결과 시대에 뒤쳐진 업무와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가 다수 발굴됐고,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중에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발견됐다.

한편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선진국의 정부 기능과 조직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에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21개

국가의 정부조직 체계와 정부 수행 기능을 꼼꼼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진 각국의 정부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부처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또한 개별적 기능분석을 통해서 는 각국의 정부 기능과 조직체계에 정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다시 말하면,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역사적 맥락, 사회 구성원간의 정치적 역학관계, 당면한 사회문제 및 국정철학 등을 고려해 국정책임자가 정치적으로 선택할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다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 언론과의 인터뷰, 인수위 분과별 활동 등을 재점검해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정부 모습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과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도록 대부처주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정부 기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사회 전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교육과 과학·기술·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융합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능과 조직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융합현상을 어떻게 정부조직에 반영을 할 것인가가 커다란 고민거리가 됐다. 교육부터 과학·산업까지를 전부 한 부처로 묶을 순 없기에 어느 정도까지 부처 간 역할을 정리할 것인가가 풀어야 할 고민거리로 대두된 것이다. 더불어, 재정전략, 예산운용 기능과 경제정책·세제·국고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한지, 공룡부처의 탄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회·해양수산부 등의 기능을 분석하면서 개별 부처가 각각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의 핵심기능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점과 다른 기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며 이러한 기능들을 정부조직에 어떻게 내재화할지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박재완 팀장과 팀원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20여 가지의 방안을 참고해 여러 방안들을 놓고 입체퍼즐을 맞추듯 정부 기능과 조직을 구성해 보았다. 이렇게 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저렇게 하면 또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가 나왔다. 그러나 어떤 선택지가 보다 나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적고 명확한 방향이 보이는 기능과 조직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이 대상이 됐다. 비대한 상층부를 줄이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출선수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나라 전반의 입장에서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챙기도록 했다. 다음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기능을 정비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로 흩어져서 비슷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연관된 일들을 모두 묶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해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을 작성하자, 56개 중앙행정기관이 43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축소되고, 1960년 이후 국무의원 수가 가장 작은 정부의 모습이 나타났다. 개발시대에 마련한 육중한 중앙정부가 민간과 지방정부의 자율과 창의를 지원할 수 있는 간소한 정부로 바뀌는 그림이었다. 박재완 팀장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이라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곧바로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당선인은 큰 그림에 대해서는 만족했으나, 통합 부처의 명칭·규제개혁 방안 등과의 연계성 강화 등 몇 가지 보완을 지시했다. 통합 부처의 명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해야 하고, 당선인의 규제 개혁의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했다.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새 정부의 모습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처별 기능을 다시 정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찾기 시작했다.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하고, 관치금융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내용과 부처의 통합에 따른 규제개혁 효과 등을 보완했다.

이렇게 수정된 보고서를 당선인에게 다시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당선인은 며칠을 더 고민한 후에 발표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당선인은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역사적인 과업이자 나라의 미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자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래를 위한 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선진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며, 새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년기자회견이 끝나고, 당선인이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발표일자와 발표자를 정했다. 이에 따라 1월 16일 오후 2시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기자실에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1월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새로운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정치권, 전문가 및 부처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원칙을 가능한 지키는 선에서 국회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4차 협상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2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 인수위가 당초 마련했던 13부 2처의 개편안은 15부 2처로 변경됐다. 이로써 새 정부는 새롭게 짜여진 직제에 맞춰 출범할 수 있게 됐다.

○ 규제 시스템 개선과 규제개혁 실천계획 작성

당선인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는 남달랐다. 경제성장 7%를 달성하고 300만개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유효한 수단이 규제개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 등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경제력 집중규제에서 벗어나 독과점 규제와 공정경쟁 위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했다. 이러한 당선인의 의지는 인수위 활동 기간 여러 계기를 통해 나타났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가 '대불공단 진봇대 사건'이었다

인수위의 규제개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첫째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작업이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개별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것은 일시적 대중요법에 불과하므로 「행정규제기본법」을 정비해 근원적 규제개혁을 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규제법률주의를 강화하고 규제전수를 조사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다소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는 신설규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영향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인수위가 추진한 두 번째 핵심과제는 「규제개혁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규제개혁은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법령

의 제·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법의 제·개정은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려 해도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2004년도 이후 마련된 규제개선 방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77건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규제의 일괄처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로 「규제개혁촉진법」이다

인수위가 역량을 집중해 추진한 마지막 과제는 핵심규제에 대한 규제개혁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규제개혁 실천계획 대상과제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으로 권한이 확대 강화된 부처의 규제가 우선이었다. 실천계획 작성은 주요 덩어리 규제군 별로 인수위 내 관련 분과가 공동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추진했다.

인수위에서 마련한 실천계획은 규제개혁 과제 중에서 인수위 활동기간 동안 방침을 발표할 수 있는 과제,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내에 추진할 과제, 정부 출범 이후 1~2년 내에 추진할 과제로 구분해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규제개혁 실천계획 중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차질 없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이관했다.

(3) 평가

정부혁신·규제개혁TF의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업무는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 보안까지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언론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추측보도를 주요기사로 다룸으로써 공직사회의 동요가 심했고, 이를 막기 위해 팀원 전원이 자료관리 등 보안에 매우 신경을 써가며 활동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의 모임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됐다. 다만 당선인과 몇몇 주요 인사, 박재완 팀장이 각계 의견을 수집하고자 노력했고, 인수위의 각 분과별로 해당 분야의 의견을 TF에 제시해주었다.

당선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경숙 위원장.



있다. 정부는 국민을 편하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새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입장에서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4) 문제점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이 발표되자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부 축소와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일부 인사들은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을 ‘밀실에서 몇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졸속 개편안’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1년 이상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업무’를 내부적으로 준비했고, 기존에 연구된 20여개의 개편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측면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부혁신·규제개혁TF의 업무가 지나치게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치우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개혁이 병행돼야 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키고, 논의 자체가 길어짐에 따라 정부혁신·규제개혁TF의 역량이 규제개혁과 공공기관 합리화에 집중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5)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

(1) 구성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는 인수위원 1명, 전문위원 2명, 실무위원 2명과 다수의 자문위원 등으로 팀을 구성했다.

자문위원단은 기후변화·에너지와 관련된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효율적인 인수위 활동을 위해 자문단을 기후변화대책반과 에너지

대책반으로 나누고 각 대책반의 장은 정부인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방향

전 세계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 기온은 0.74℃가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극지방과 고산 빙하의 소멸, 사막화로 인한 기아의 발생, 홍수·태풍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 각종 국제회의의 핵심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과 Post-2012체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OECD 회원국으로 의무감축 참여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에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에서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활동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기존 4~5%대의 경제성장률을 7%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2~3%의 추가 경제성장동력을 얻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의 경우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반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적응문제와 자원빈국으로서 해외 에너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서로 차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에서는 자문단을 기후변화대책반과 에너지대책반으로 나뉘 대책을 검토하고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

② 활동목표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의 활동 목표는 현재 추진 중인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현황과 사례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개선 모델을 설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화가 가능한 분야 또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기후변화대책반에서는 우선 그동안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이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시민·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한 원인이 부실한 대응체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 세부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추진했다.

에너지대책반에서는 신고유가와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속에서 새 정부의 '747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자원의 안정 공급 및 신성장동력 창출이 최대 현안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종합전략 수립과 집행기능의 미진, 경쟁국에 비해 인력·정보·투자재원 등 자원개발 인프라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 장기전략 수립 및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의 적극적 해외진출과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

③ 활동내역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는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국무조정실·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기상청·산림청·농촌진흥청 등 9개 정부부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지질자원연구소 등 4개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관리공단·한전·석탄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업진흥공사·수자원공사 등 7개 공기업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24회에 걸쳐 그간의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각 기관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결과 그간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수립(2007.12) 등 기후변화대책의 기본골격은 구축했으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보완과 세부대책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47공약의 추진과정에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발생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기에 이러한 여건변화에 맞추어 강력한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추진과제로 단계적인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수립해 국제협상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고, 민간은 자발적 감축에 동참해 기후친화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이며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의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제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조기에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비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제품, 원자력, 탄소시장, 에너지 서비스산업(컨설팅, 설계)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는 대책반별로 논의를 통해 핵심 어젠다와 중점 사업을 선정하고 검토책임자를 선정했다.

기후변화대책반은 △기후변화 대응 비전·전략·대응체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예측·영향평가·적응 △국제협상 및 협력 △R&D 추진 전략 △신산업 성장 전략 △인프라 구축 등 7대 어젠다와 북한조립사업, 탄소시장 육성, 기후친화적 세제 개편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에너지대책반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전략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기술개발 △시장기능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체제 개편 등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했다.

1월 25일에는 TF를 세 개 팀으로 나뉘어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주요 온실가스 발생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1팀은 동해화력과 강원풍력을 방문했으며, 2팀은 포스코 산업과학연구원, 엘콘파워(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LG전자 PDP 업장을 방문해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3팀은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차의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TF는 산업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각과 준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TF는 그간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2월 2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기후변화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동 내용을 총리 내정자와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또한 2월 13일에는 ‘기후변화 위기를 경제성장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3) 평가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는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기후변화대책 추진은 아직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응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응대책의 추진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 점은 성과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에너지의 경우 고유가 시대를 맞아 물가불안,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의 수출산업화, 에너지효율 향상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들 산업을 적극 육성하면 경제성장률을 2~3% 정도 추가로 상승시킬 수 있어 747공약의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문제점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감축·적응·협상 등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 두 달이라는 짧은 인수위 기간 내에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새 정부에서는 이를 구체화한 세부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한반도대운하TF

(1) 구성

한반도대운하TF는 팀장을 비롯해 전문위원 1명, 실무위원 3명과 다수의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했다. 실무진은 소관 분야에 따라 물류·경제성, 민자계획, 환경·문화, 기술·홍보 등 4개 분야로 나뉘 부처별 업무보고와 토론, 반대의견

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수립, 프로젝트 홍보 준비 등을 전개했다. 특히 환경·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부서의 심층적인 검토의견을 토대로 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 내역

① 활동방향

한반도대운하TF는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해 프로젝트 추진의 당위성과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프로젝트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에 대비해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이의 해결방안을 검토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 특히 환경·문화·물류 등 사회적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② 활동목표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운하 프로젝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환경·생태·치수·물류·경제성 등 각 분야별로 프로젝트 추진의 당위성과 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프로젝트 자체의 정확한 이해 증진, 친환경·친문화적이고 재해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 사회적 편익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루기 위한 창조적인 발상전환,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 민자사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 등이다.

③ 활동내역

한반도대운하TF는 팀장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및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환경·문화·물류·경제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논의를 했으며, 각종 회의를 통해 해당부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쟁점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의 견해를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초로 검토하고자 했다. 또한 홍보 동영상 제작을 통해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했다.

○ 부처별 업무보고

한반도대운하TF에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들에

관해 건설교통부·환경부·기획예산처·문화재청·소방방재청 등 부처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를 거듭했다.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논의를, 환경부는 환경성 검토 추진절차를,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조사방안의 논의를,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의 설명을, 문화재청은 문화재 조사절차 및 방안의 설명을,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의 행정절차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문화관광부와 회의에서는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역사, 이야기, 사람이 함께 흐르는 한반도대운하 문화 물길 구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환경부와 회의에서는 환경성 검토와 관련해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 작성,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 TF 자문회의

〈자문위원단 워크숍〉

TF는 1월 9일 장석호 팀장, 박승환 국회의원, 자문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에 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방안과 친환경·친문화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문화·생태환경 조사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1월 16일에는 2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대운하가 국토구조의 선진화, 역사·문화·환경의 복원 및 관광벨트화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홍보하며, 비판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월 25일에 열린 3차 자문회의에서는 한반도대운하 관련 문화재·생태계 훼손, 홍수 위험 등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등 자문위원단의 전문분야별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2월 11일에는 4차 자문회의를 개최해 한반도대운하 관련 쟁점사항(물동량 미흡 및 홍수위험 등)에 대한 논리적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브라운백미팅〉

TF는 1월 30일 물류 분야에 관해 브라운백미팅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물류 분야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운송에 관한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1월 31일에는 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생태 분야 관련 전문가그룹이 참가해 대운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를 나눴다. 생태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운하노선 선택시 생태 보존지역 우회, 강변 식생 복원, 생태하천 복원, 저지대 산림 복원, 하천-육상의 효율적 연결, 지천 복원 등을 제시했다.

○ 홍보 동영상 제작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한반도대운하TF는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했다. 이 작업에는 과학기술부, GIS·동영상 관련 전문가와 대학 교수, 한반도대운하TF가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문화재위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자연보전협회 등이 참가했다.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위성사진·GIS 등을 활용해 한반도대운하의 친환경·친문화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한강 하구에서부터 낙동강 하구언까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3) 평가 및 문제점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는 대선과정부터 학계, 시민단체, 언론, 유관기관, 물류·관광업계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논란이 돼 왔다. 이에 한반도대운하TF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분야별 문제점과 쟁점 위주로 심

한반도대운하TF는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에 주력했다.



충적인 검토를 수행해 왔다. 향후 TF가 인수위의 업무수행기간 동안 수행한 검토결과 및 홍보물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경우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는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7) 새만금TF

(1) 구성

새만금TF는 팀장을 비롯해 전문위원 2명, 실무위원 2명과 다수의 자문위원 등으로 팀을 구성했다.

새만금TF는 농림부장관과 전북도지사 등을 역임한 강현욱 팀장을 비롯하여, 새만금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류철상 전 국무총리실 새만금담당 국장과 김경안 한나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전문위원을 맡았으며, 실무위원은 전라북도에서 파견된 성기만 문화관광위원과 이란우 전 전라북도 공보관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단은 그동안 전라북도 소재 각 대학교 새만금 관련 연구소에서 활동해온 교수들과 함께 그동안 새만금사업에 동참했던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2) 활동 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방향

경쟁력강화특위에 새만금TF가 설치된 것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새만금사업이 추진동력을 얻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기대 속에 출발한 새만금TF는 새만금사업이 농지 확보를 위한 전통적 간척사업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력사업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실천과제 선정과 개발전략 제시를 활동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당선인이 밝힌 새만금 개발 방향은 경제중심기지 건설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용도를 과감히 변경해 경쟁력을 갖춘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만금TF의 인수위 활동은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과제로는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 사업기간 단축, 환경문제해결,

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부처별 업무현황 청취를 통해 중점추진과제는 추가 또는 변경·조정하기로 했다.

② 활동목표

새만금TF의 활동목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향후 추진 사업의 미래비전과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기간 단축, 환경대책 등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중단과 속행을 거듭하면서 한때 국민 갈등사업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새만금사업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만금사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여기에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계획과 기대효과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목표설정의 조건으로 제안됐다.

새만금TF에서는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걸맞고, 새만금의 비전과 일치되는 목표를 설정하되 이에 필요한 과제들을 취임 전, 금년 내, 임기 내, 장기과제로 분류해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제시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새만금TF팀.



③ 활동내역

새만금을 경제 중심기지로 개발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선행조건은 농지가 70%로 계획된 기본구상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새만금 TF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추진 부처의 의견과 그동안 새만금 정책을 조정해온 국무조정실, 그리고 개발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했던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했다. 이들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TF는 전문위원·실무위원과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효율적 내부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내부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추가대책도 면밀히 검토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마련한 기본구상 초안은 농림부와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재협의 및 검토, 그리고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안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안

단위: ha/괄호안은%

구분	농업	산업	관광	농촌도시	에너지단지	환경	유보	기타
당초	20,250 (71.6)	1,870 (6.6)	990 (3.5)	660 (2.3)	430 (1.5)	3,000 (10.6)	- (-)	1,100 (3.9)
조정	8,570 (30.3)	1,870 (6.6)	990 (3.5)	460 (1.6)	430 (1.5)	5,000 (17.7)	9,880 (34.9)	1,100 (3.9)
증감	△ 11,680 (△ 41.3)	-	-	△ 200 (△ 0.7)	-	2,000 (7.1)	9,880 (34.9)	-

* 유보용지: FDI(1,980ha, 7.0%), 관광(1,500ha, 5.3%), 배후도시(1,000ha, 3.5%), 신·재생에너지(1,600ha, 5.6%), 항공·우주복합과학(3,300ha, 11.7%), 국제업무(500ha, 1.8%)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과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을 위해 선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수질개선 등 환경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관계관을 비롯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의 환경담당관들이 참여하는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책회의에는 수질개선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라북도 와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해 그동안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한 의견 등 자치단체의 입장을 피력하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해 새만금방조제 현장을 직접 방문(1월 17, 18일)해 조기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공구별 추진현황 파악으로 사업 공정 단축방안에 관한 사전자료를 확보했으며, 조속한 시행을 원하는 전북도 민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었다. 이후 2월 4일에는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인천대교 건설현장 등 시설현장을 둘러보았다.

또한 2007년 12월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농림부·전라북도·국무조정실 등에 의뢰해 부처 소관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토록 했으며, 이를 통해 △수질오염 억제시책 및 민간자본 유치 근거 △방조제 부지 활용을 위한 지적법 특례 △담수호 내 수상레포츠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특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매립목적이 변경되도록 공유수면매립법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만금TF는 우선 개발가능지역을 파악해 사업착수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이미 땅이 드러나 방수제 없이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 그러한 구역이 1,850ha에 이른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당초 기본구상에 명시된 관광용지(990ha)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8년 3월에 착수하되 향후 관광용지 확대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과업을 지시하도록 문화관광부에 제안했다. 방조제 사면부지(133ha)와 신시도~야미도 간 다기능 복합부지(200ha)는 늦어도 방조제 완공시기인 2009년 말까지 개발을 착수토록 제안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계획에 대한 접근은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09년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했다. 1월 4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지난 1997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 환위기로 인해 추진이 보류된 상태였다.

새만금TF에서는 신항만이 물류거점지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이라고 보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2009년 12월까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실시계획까지 수립해 늦어도 2010년에는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 선석 26석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되 우선 1단계로 8선석을 건설하고, 2단계로 18선석을 추가 건설해 마린나·크루즈기항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새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강현욱 팀장.



등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을 조기완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사업에 대해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2009년에 방조제가 완공되고 부안~군산 간 도로가 개통되면 내방객이 연간 약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시설을 민자로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관련 부처와 대학, 그리고 민간에 분산돼 있는 새만금 관련 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했다. 국립새만금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자는 제안이 1월 28일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접수됐다. 부처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통합적 계획수립이 어렵고, 단체 간 갈등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책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

실제로 농림부의 경우 농지 관련 계획 수립, 전라북도의 경우 산업체 유치 방안, 해수부의 경우 연안환경관리, 환경부의 경우 수질관리에 관한 연구활동을 각각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TF에서는 ‘국립새만금연구소’ (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국정과제보고서에 포함해 새 정부에서 참고하도록 제안키로 했다.

(3) 평가

소관부처별 업무보고 및 대책회의를 통해 정부 부처가 대체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주부처인 농림부는 공약으로 제시된 내부용도 변경방안을 긍정적 측면에서 검토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는 그동안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새만금TF 활동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다.

조기개발의 전제조건이었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농업용수에 대한 T-P(총인)의 기준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제의는 비록 검토사항으로 남았지만,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한 것은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여겨왔던 왕궁축산단지의 폐수처리 문제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에 대한 환경문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활동기간 중 전라북도를 비롯해 김제시 등이 꾸준히 사무실을 방문해 개발

방안을 제시했고, 새만금 현지를 방문했을 때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전달함으로써 전북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열망을 실감할 수 있었다.

(4) 문제점

새만금TF에서는 인수위에 새만금 관련 TF가 구성됨으로써 새만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통치권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국책사업이면서도 마치 전라북도의 사업처럼 비취졌던 새만금사업은 인수위를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또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개발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표명되면서 새만금사업이 정치적 해석에 따라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러한 성과들은 인수위에 새만금TF가 구성되면서 더욱 확실해지고 구체화된 것이 사실이다. 팀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생산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

2개월여의 제한된 기간 동안이나마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조기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했으나, 새만금사업의 특성상 강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있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특히 인수위 구성 초기 활동범위와 정보취득 경로가 불분명해 부처 업무보고 자료에 의지하다 보니 새로운 대안 제시가 미흡했던 점도 반성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된다.

인수위 활동을 통해 새만금을 개발하는 목적, 용도, 방식, 시기에 대한 변경·조정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려면 시행기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단체 간 이견을 초월해야만 새만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8) 과학비즈니스벨트TF

(1) 구성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팀장을 비롯해 전문위원 2명, 실무위원 2명과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실무진은 관련 분야와 연관된 과학·연구소 분야, 과학사업화 분야, 광역벨트화 분야, 융합환경 분야 등으로 업무를 나눠 부처별 업무청취, 토론, 현지조사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2)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① 활동방향

과학비즈니스벨트란 창조적인 환경에서 세계 정상의 과학이 연구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자본과 원천기술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과학창조거점지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인 두뇌가 모일 수 있는 최고의 과학 연구환경(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조성해 과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초과학·비즈니스·문화예술이 결합돼 새로운 과학 ‘한류’의 블루오션을 창출, 미래의 먹줄거리를 만드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위상을 가진다. 그러므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비즈니스-문화-행정 기능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벨트, 기초과학연구단지-응용과학연구단지-과학사업화·산업단지 등이 연계되는 지역벨트, 과학-의료-인문-사회가 엮이는 통섭벨트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학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부합하고자 기초과학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 상품화·산업화로의 선순환을 통한 신발전체계 전략 수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당선인이 추구하는 신발전체제는 요소투입의 ‘양적 증가’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산업·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재구조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궁극적으로 첨단화된 선진경제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TF의 활동은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② 활동목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는 데 역점을 뒀다. 특히 기초과학과 문화·예술이 상호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무한한 창조성과 가능성을 생산하는 창조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부처별 업무청취 등을 통해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점 정책을 주렸다. 이어서 이를 위주로 당선인의 국정철학인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해당 실무팀별로 도출하는 데 역점을 뒀다.

사업시작 단계에서 국제적 인재, 기업·국가 간 협력을 추진해 글로벌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연구 석학의 유치를 사업추진의 기본 조건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다음과 같은 4개 항목의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했다. 4개 항목의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기본 방향 설정.

둘째, 차세대 기초과학 연구 기반시설 검토와 과학계 의견 수렴 및 기존연구 인프라와 연계 결합 방안 모색(기초연구센터, 미래장비센터, 신물질센터, 연구병원).

셋째, 과학·인문·문화예술 등 학제 간 융합연구를 통해 창조적 지식생산과 교류를 지원하는 ‘지식융합센터’ 모색(과학과 문화예술의 교류를 통해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지식융합 심포지엄 운영 및 과학예술센터, 과학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 조성).

넷째,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해 외국의 문화예술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조성(외국인을 위한 주택·학교 등 건설, 의료·종합행정 서비스 지원, 영어 공용화 도입 등 추진).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4개 항목의 중점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토론과 현장방문을 실행했다.

③ 활동 내역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4개 항목의 중점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토론과 관련 정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각 부처 업무 청취시에

는 실무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때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 진단과 문제점을 파악했다.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원로 과학기술인부터 석·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원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활동내역은 자체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 정부업무 청취 및 토론회, 전문가회의,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회의 등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 기본 방향 설정

세계적인 연구소 설립과 벨트 조성을 위해서 인재유치와 더불어 선진국과의 연구개발 투자의 차이를 극복하고, R&D 투자를 선진국 이상으로 확대해 과학기술 분야의 체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의 R&D 투자를 현재 GDP 대비 1.03%에서 2012년까지 1.25%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R&D 중 기초 원천연구 비중 역시 현재 25%에서 2012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협의했다.

기초과학의 장기적인 성과가 전 산업에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중시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선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했다. 과학거점지역은 기초-응용-개발-상품화-산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지역별, 분야별 연구역량과 산업 클러스터가 집적되고 확산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지역이 최우선 고려대상이 됐다. 또한 거점 선택과 관련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에 부응하는 지역주민, 과학기술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공감했다. 또한 기초과학 거대시설(기초과학연구소)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선진국도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과학의 기본 인프라이므로 선택과 집중의 기회가 있으며, 세계시장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분야와 틈새 거대 과학시설을 선택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구협력 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 연구 기반시설 설치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미래과학 연구와 지식의 국제적인 네트워킹 및 과학사업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연

구시설 구축을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TF에서는 구체적 전략과 기능, 운영에 관한 실행방안을 도출했다.

총 4회에 걸쳐 100여명의 과학기술계 원로, 현 연구원, 전현직 교수들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전국 자연대학장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자연과학계로부터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소 설립 방향과 연구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창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출연연구소와 연구개발 분야의 전현직 책임자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연구개발의 연계와 결합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창조적 결합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국제적인 네트워킹과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은 미래 과학 발전을 선도할 과학자들이 창의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연구 및 거주환경과 세계적인 지식교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식융합센터 설치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는 통상적으로 단기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인문학·사회과학·예술 분야의 연구조직과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융합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인문학·사회과학·예술 분야 등 학제 간 융합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융합원(Academic Convergence Center)의 설립을 제안했다. 지식융합원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국내외 학자들을 명예교수로 초빙해 인문학·사회과학·예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인적 연구조직을 확보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융합적 과학지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 과학지식을 비전문가와 대중에게 전파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과학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과학계의 중요 인사 및 젊은 과학도 간의 인적 교류를 통해 과학연구의 세계화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세계적인 석학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유치한 연구 인력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연구 환경과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자면 외국인 과학자 및 투자자를 위한 전용 임대주택 개설 등 외국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외국인 전담 부동산 중개소를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 도우미제도를 도입해 임대주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어로 진료가 가능한 전용의료센터를 확대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외국인 의료보험 통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자녀교육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외국대학(분교)에 대한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우수 학교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우수교사 유치 지원(임대주택 우선 배정), 체육관·강당 등 부족한 부대시설의 공동이용 지원, 외국인 학교와 한국학교 간 교류·협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과학자 또는 투자자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들어와 정착하는 단계마다 불편함이 없도록 일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3) 평가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자문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제기된 과학사업화에 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됐다고 자평할 수 있다. 과연 기초과학의 연구 결과에서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템이 파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초과학이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산업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야와 목표가 다른 것이 어떻게 연계되고 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토론 결과 기초과학은 지적자산의 토대가 된다는 점, 중장기적으로 지식기반사회를 준비하는 의미도 강조돼야 한다는 점,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한 기초연구 분야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게 됐다.

과학·연구소 분야에서는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의 핵심시설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선택, 중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연구 분야와 연구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의 핵심시설인 미래장비개발센터는 가속기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다. 가속기는 물질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시설이며,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가속기 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외의 대표적 가속기 전문가들과의 협의체를 만들고,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국제자문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해 가속기 연구설비와 연구내용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제적 연구그룹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IBM 팔미사노 회장과 당선인이 만나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팔미사노 회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민동필 팀장은 유럽 유수의 연구소와 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해 해외연구소를 방문해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 과학 석학들에게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설명하고 이명박 정부의 과학정책을 알렸으며, 자문단 구성 등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광역벨트화 분야에서는 벨트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많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추상적으로 설정된 벨트를 구체화시키고, 벨트의 공간적·기능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공간적 의미에서의 벨트는 지역적 인접성, 광역교통 인프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팔미사노 IBM 회장을 접견하고 IBM의 연구소를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라, 집적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좌표를 가지면서 지역 간 연계, 결합, 확장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개념임을 정의할 수 있었다. 또한 기능적 의미에서의 벨트는 기초과학, 연구개발, 산업화에 이르는 기능적 연계·결합·확장의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벨트를 통해 과학비즈니스의 신산업 패러다임을 도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립했다.

다만 이런 선언적 신산업 패러다임의 창출이라는 벨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언적 정의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입지분석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현지 기업·연구소·기술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으며, 관련 지역 방문시 구체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향후 광역벨트화와 과학사업화의 연결점을 찾는 것에 주력하면서 ‘벨트기능지도’와 ‘과학사업화지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융합환경 분야는 크게 외국인 정주, 연구환경 조성과 과학과 인문, 예술이 융합하는 창조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미래의 삶을 조망하는 모델로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외국의 도시에서도 이런 융합환경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선진 사례들을 탐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과학자들에게는 낮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에게는 어려운 과학이 서로 만나서 융합해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

(4) 문제점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졌다. 인수위 활동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현황 등을 파악했다.

제한된 기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더군다나 구체적인 모델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컸다. 개별 부처업무가 아닌 다양한 부처와 연계된 사업 성격으로 공유점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았다.

특히 출연연구소 문제를 비롯해 과학정책과의 긴밀성을 가졌음에도 타 분과와 업무영역의 중복 등을 염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타 분과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없지 않았다.

TF의 성격상 다양한 부처의 공무원과 기존 정책의 아이디어를 수렴한 민간

분야 전문가들과의 업무조정도 활동초기에는 혼선이 뒤따랐다. 인수위의 활동 범위와 목적에 맞는 활동내용에 대한 공감각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외부적으로 보면 과학비즈니스벨트TF의 성격이 지역발전 측면이 부각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호응이 컸다. 지역신문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 주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추진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성격, 규모, 입지 등 중요 사업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의해 지자체가 특별팀을 구성하는 것은 자칫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이 지역사업의 성격으로 비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과학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성장 패러다임을 창출하자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이 이를 지역개발 구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았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전략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국가적 사업임을 인지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서로 힘을 합쳐서 상생의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지역적 이해관계로 인식하게 된 점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과학계나 기존의 과학 인프라와의 연계·결합 방안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향후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같은 대책사업에 관한 인수위 활동은 지역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적 안목과 비전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언론 등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1) 활동 개요

새 정부는 시대의 요구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보다 창의적인 정책제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주체적으로 적응해 나간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한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현장·고객지향적 정부로의 변화이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이다.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이하 제안센터)는 이러한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구체적 노력이자 시도이다.

국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애환·고충을 듣고 이들의 제안이 향후 국가 운영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안센터는 국민을 단순히 정책의 소비자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의 생산자로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제안센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인수위 홈페이지 안에 제안 접수창구를 설치해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인수위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팩스·우편·직접방문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 총 36일간(2008년2월5일 마감) 접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08년 1월 4일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책, 각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 그 외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 방안 등의 정책을 제안 받았다.

2월 5일 마감 때까지 국민제안 4만 1,668건, 공직자 제안 3,026건 등 총 4만 4,694건으로 같은 기간 16대 인수위 센터의 2만7,583건 보다 크게 증가해 국민의 큰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민제안 접수건수

구분	인터넷	우편접수	팩스접수	방문접수	전화접수	합계	%
특위	1,843	32	9	8	29	1,921	4.6
정무	1,499	39	4	5	9	1,556	3.7
경제 I	4,144	34	46	18	281	4,523	10.9
경제 II	9,300	206	72	63	330	9,971	23.9
법무행정	5,604	101	32	20	329	6,086	14.6
외교통일안보	952	31	7	10	15	1,015	2.4
사회문화	13,423	226	83	83	451	14,266	34.2
인수위	862	78	21	28	291	1,280	3.1
민원	-	511	145	152	36	844	2.0
기타	-	82	97	20	7	206	0.5
합계	37,627	1,340	516	407	1,778	41,668	100.0
%	90.3	3.2	1.2	1.0	4.3	100	

※ 공직자제안 접수건수 : 총 3,026건(2.16 기준)

● 제안접수 처리

구분	전제건수	검토중	검토완료	제안반영	처리건수	처리(%)
특위	1,921	445	1,473	3	1,476	76.8
정무	1,556	-	1,554	2	1,556	100.0
경제 I	4,523	-	3,807	716	4,523	100.0
경제 II	9,971	993	8,721	257	8,978	90.0
법무행정	6,086	-	5,961	125	6,086	100.0
외교통일안보	1,015	-	856	159	1,015	100.0
사회문화	14,266	3,511	10,477	278	10,755	75.4
인수위	1,280	-	1,175	105	1,280	100.0
민원	844	-	844	-	844	100.0
기타	206	-	206	-	206	100.0
합계	41,668	4,949	35,074	1,645	36,719	88.1
%	100	11.9	84.2	3.9	88.1	

2) 구성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센터장 1명, 전문위원 1명, 실무위원 1명과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으로 구성했다.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소화해야 할 업무성격에 따라 기획팀, 정책팀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팀별 운영 원칙을 정립했다. 기획팀의 주요 업무는 정책제안 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센터 업무의 전 과정과 시스템을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책팀은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

는 창구역할을 담당하며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을 가동해 정책제안 내용 등을 심도 있게 토론·검토를 거쳐 정책반영의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했다.

3) 활동방향 및 활동내역

(1) 활동방향

전반기에는 부여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참여 시스템을 기획, 정비해 국민 정책제안을 성실하게 접수하고 꼼꼼히 분류해 인수위의 다른 분과위와 협의해 처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새 정부의 출범의의, 성격, 목표에 부합되는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검토 후 정책적 가능성을 다양하게 타진해 여러 변수들을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리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접수방식에 있어서는 인터넷 활용도를 높임과 더불어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우편·팩시밀리·방문 등 오프라인을 개방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제안 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견들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정책과 민원 부분을 분류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추상적이고 현실과 괴리된 것은 가능한 배제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철학처럼 실용중심의 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정책 개선 사안과 새롭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 등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자 공직자의 제안도 함께 받았다.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운영되는 인수위의 한계 때문에

일일이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정책제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안센터는 이들 제안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중앙부처의 전자정부 홈페이지 등 행정참여의 채널을 일괄적으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우편, 팩시밀리,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도 정책제안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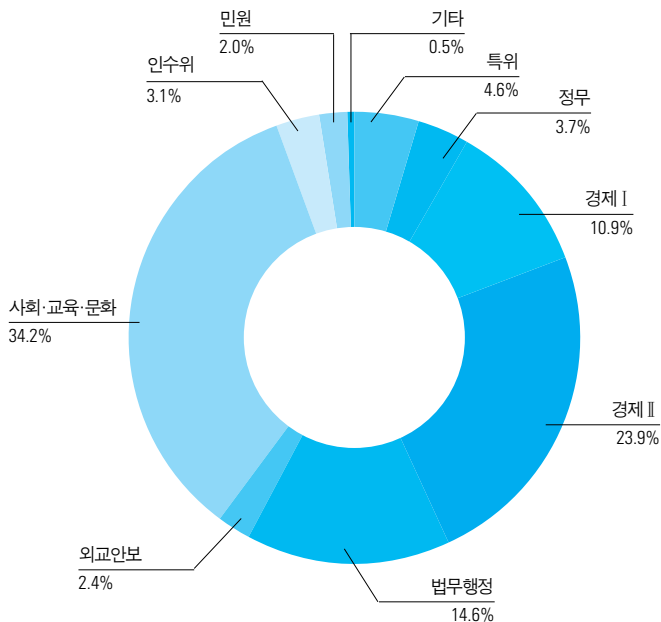
로 조사해 정책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참여형태를 탐구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수립과정에서 국민들의 행정참여 개선방향 모색에 주력했다.

(2) 활동목표

국민들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자신들의 견해와 지식을 반영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안센터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 및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국민정책참여 시스템을 정착하고자 방법을 모색했다. 효율적인 참여 시스템을 구축해 참여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의견이 공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제안센터는 이를 실천하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침을 정책 업무에 반영했다.

● 국민제안 분과별 접수현황



첫째,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정책제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한 제안이나 막연한 내용, 편협하고 특수한 이해관계 반영, 고충 처리 등의 제안을 가급적 지양했다. 반면에 실물경제 등 국민 실생활에 부합하

는 보편적인 것들과 국민적 공통이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사항들을 수렴했다.

둘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책제안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내는 업무를 진행했다. 제안센터는 ‘국민을 섬기겠다’는 낮은 자세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 받아 당선인이 구상하는 국가적 아젠다를 집권초기부터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건설적인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서 접수된 내용을 주제별, 일자별, 문서형태 등으로 정보를 분류·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국민들이 정책의제와 토론의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론과 정책결정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정책제안 목록을 작성해 발굴된 과제가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제안센터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 기다리는 제안접수가 아닌 분야별, 계층별 탐방을 통해 능동적으로 찾아가 접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 개개인은 물론 NGO, 중소기업인, 언론, 오피니언 리더 등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적극 활용했다. 또한 국민정책제안센터는 접수된 정책제안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 자문단의 검토·보완을 거쳐 정책에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3) 활동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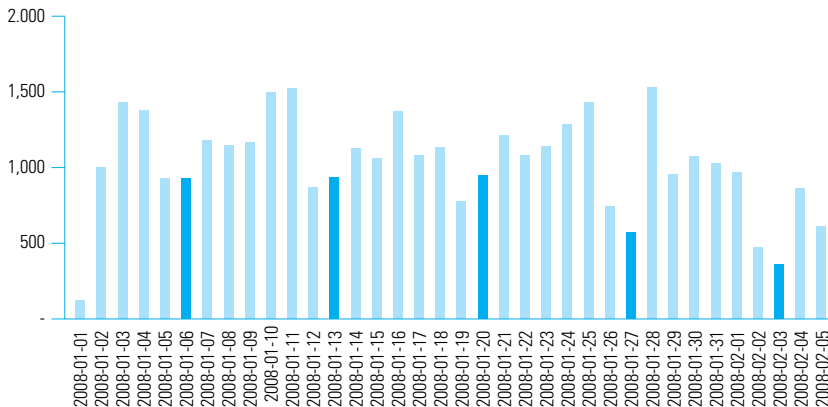
① 운영

제안센터는 국민성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정책제안 발굴을 목표로 인터넷·방문·우편·팩스·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국민정책제안활동을 전개했다.

10여년간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국민들의 염원은 다양한 내용으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됐다. 인터넷은 1월 1일 오후에 오픈하자마자 게시글 수가 200개를 넘었으며, 다음날에는 1,500개에 달했다. 인수위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인수위 밖에 위치한 삼청동 동사무소에 설치한 방문접수 센터와 인수위 구내의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접수창구에도 설 새 없이 방문과 전화가 쇄도했다. 인터넷 제안과 오프라인 제안접수 현황은 총 4만 1,668건, 인수위 분과별로 접

수된 국민제안은 사회교육문화분과가 34.2%로 가장 많았고 경제Ⅱ분과가 23.9%, 법무행정분과가 14.6%로 뒤를 이었다. 제안내용 중에는 막대한 예산이나 법령개정 없이 즉시 추진이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정책들도 많이 제기 됐다. '실용정부'를 천명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정책,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했던 아마추어 외교 정책을 수정하고자 하는 전략적 외교 제안 등도 돋보였다.

● 국민제안 1일 접수 현황



※ 1일 평균 1,157건으로 접수기간 중 큰 등락이 없는 것이 특징

한편 제안센터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간담회도 2회 개최했다. 간담회는 제안센터의 비상근 자문위원 15명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개최됐는데, 여러 의견 중에서도 제안센터의 기능이 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중요한 의견으로 제기됐다.

② 공직자 정책제안 접수

일반 국민은 물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공직자들도 제안을 보내왔다. 공직자들의 정책제안은 16대 인수위에서는 없었던 일로서 새 정부에 대한 공직자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현직 대사와 국영기업체 사장에서부터 기능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연령·분야·직급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 하게 접수된 공직자들의 정책제안은 3,026여건으로 이 가운데 420건이 해당 분과에서 검토완료 또는 제안반영 됐다.

공직자들의 정책제안을 분과별로 살펴보면, 경제분과 943건, 사회교육문화분과 797건, 법무행정분과 776건으로 집계됐으며, 경쟁력강화특위에서도 132

건의 제안이 검토됐다. 소속별로는 지방공무원들의 제안이 635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중앙공무원 (293건), 교육공무원(167건), 공기업(163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직자 소속기관 중 최다 제출기관은 경기도(69건), 국세청(69건), 노원구청(56건), 육군(55건), 부산광역시(53건) 순이었다. 공직자 1인 최다 제출건수는 강남구청 직원으로 34건의 정책제안을 제출했다.

③ 효율적 제안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정책제안과 함께 그동안 억눌리고 소외됐던 국민들의 민원도 봇물처럼 제기됐다. 제안센터에서는 이러한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매주 2회 고충위 관계자가 제안센터를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고충위에서는 내부 절차에 따라 인수위에 제기된 국민들의 민원을 재분류하고 관련기관 등에 민원 내용을 이첩해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또한 인터넷 및 방문·전화·우편·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책제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센터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 추진 시 참조토록 했다. 동 매뉴얼에는 제안접수 및 처리 절차, 제안기록·관리, 각종양식 및 상담 시 주요 요령 등 제안접수·처리와 관련된 상세내용이 수록 됐다.

4) 중점추진사항

(1) 정책제안 수용·반영

일단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해당 분과에 배정돼 분과별 국민제안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책을 취합한 뒤 토의를 거쳐 ‘검토완료’ 또는 ‘정책반영’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게시판에 ‘검토완료’ 표시가 붙으면 말 그대로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 검토를 마쳤다는 뜻이고 ‘정책반영’ 표시가 붙으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의미한다. 국민제안이나 공직자의 정책제안 내용은 정책효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제안 내용을 정책화하기 위해 우수 정책제안 100

선을 장기검토과제로 선정해 당, 청와대, 관계부처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

(2) 주요 정책과제 발굴

제안센터의 1차 기능은 접수된 제안을 내용에 따라 분류·검토해 관련 분야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안센터 자체의 정책과제 발굴도 제안센터의 주요기능으로 검토됐다. 16대 참여정부의 ‘국민참여센터’와 17대 인수위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의 가장 큰 차이는 센터의 자체 정책제안 발굴 기능이라 할 수 있다. 4만여건의 일반제안 중에서 인터넷·우편·팩스 및 공직자 제안(이메일 포함) 약 5천 건을 심층검토했으며, 이중 약 100건을 우수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우수제안은 내부 선정기준을 마련해 선정됐다. 선정기준으로는 정책과제로서의 추진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보편성·체감성·시급성·실현가능성·미래지향 및 글로벌 스탠더드 등이 주요 기준으로 검토 됐다. 100여건의 우수제안을 12개 분야로 분류했으며, 12개 분야 100대 과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추진될 예정이다.

5) 평가 및 향후계획

(1) 평가

제안센터는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센터 명칭이 16대의 ‘국민참여센터’에서 ‘정책제안센터’로 바뀐에 따라 단순한 민원접수 차원을 넘어 정책제안 및 검토기관으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으며,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도 가능하게 해주었다.

둘째, 3천건에 이르는 공직자들의 정책제안은 16대에는 없었던 17대 정책제안센터만의 독특한 특징이며, 성과라 할 수 있다.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공직자의 업무특성상 공직자들이 직접 정책제안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이 일반적임에도 17대 인수위에는 2천건이 넘는 정책제안이 접수됐으며, 그중에는 우수한 내용의 정책제안도 상당수 있었다. 일반국민들에 비해 공직자들의 정책제안은 정책적 시사점이 클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체계적·지속적으로 공직

자 정책제안 기능을 유지·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4만 5천여건이 넘는 국민제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처리과정·결과 등에 대한 실시간 통보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대응성을 높였다. 제안의 80%에 이르는 인터넷 접수의 경우 '접수, 검토중, 검토완료, 제안반영'의 전 처리과정이 홈페이지 상에 제공됐으며,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제안에 대해서도 제안센터에 접수된 즉시 접수여부를 제안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으로 신속히 통보했다.

넷째, 16대 인수위에 없는 17대 제안센터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정책 발굴 노력을 들 수 있다. 실용정부에 걸맞는 주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3만여건에 이르는 제안을 분류·검토하는 한편 언론보도 및 전문가 제언 등을 종합해 새 정부에서 추진이 필요한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다.

(2) 향후 계획

제안센터 운영을 통해서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소망과 의견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정책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나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많이 도출됐다.

인수위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인수위 구내에 설치한 오프라인 접수센터.

따라서 국민들로부터의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청와대 또는 정부 부처 중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추



진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 이후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까지 가능하게 하는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는 다양한 민원·정책제안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민원과 공공이익 차원의 정책제안이 혼재돼 있어 문제해결능력과 정책수용에 있어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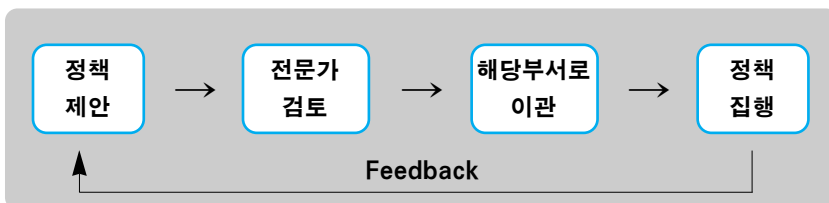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으로, 그리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결과가 국민성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생생한 정책아이디어를 국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대국민 정책소통 시스템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민원과 정책제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제안된 정책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표준화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제안정책을 해당부처에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분야에 있어 실용주의의 핵심은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민정책제안 시스템 구축의 핵심 역시 새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데 두어야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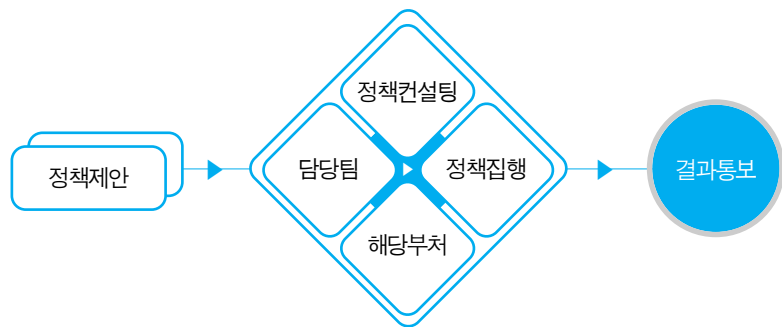
새로운 정책제안수용 시스템의 핵심은 처리절차의 표준화와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안된 정책을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정책제안 수용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서 평가·관리·실현될 수 있는 종합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새로운 국민정책제안 처리 시스템의 주요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국민정책제안 수용시스템은 첫째,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제안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둘째, 처리절차를 최소화해 정책집행에 속도감을 높이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으로부터 반영까지 전 과정을 매뉴얼화해 처리하는 시스템 체계화에 그 특징이 있다. 지난 정부의 대 민원 시스템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했다면, 새 정부의 정책제안 시스템은 이들의 목소리를 실제 국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노력과 결과를 중시한다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운영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제안·수용시스템(One-shot) 체계도



제17대 인수위 정책제안센터 운영경험을 볼 때 정책제안 단계에서는 일반 국민과 공직자 제안을 구분 접수할 필요가 있다. 정책 마인드를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책제안이 가능한 공직자 제안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메일 접수 등의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제안정책에 대한 선별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단계에서는 정책 분야 유경험자를 토대로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팀의 문제해결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청와대 내 국정기획수석실 또는 국가정책력강화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해 1차 검토가 완료된 제안정책에 대해서 해당부서는 의무적으로 그 검토결과를 담당 팀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제안에 대해 정책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문단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칭 ‘국민성공컨설팅그룹’을 구성, 제안정책의 수준과 가치를 평가·조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자문단은 정책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그룹(약 200명 선)으로 인센티브 제공(정부연구용역-컨설팅 마일리지)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해당부처에서 검토가 완료된 제안정책은 즉각 그 시행여부를 최초 제안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제안사항을 DB화해 관리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 아이디어 개발을 유도한다.

새로운 국민정책제안 수용시스템은 특히 관계기관 사이의 복잡한 협의절차와 보완조치기간을 단축해야 할 정책 사안 또는 공직자들의 감사·특혜시비에 따른 업무기피 정책사안을 해결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해결능력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과 조정력을 가지고 관계부처에 문제해결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민정책제안 수용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과제는 제안처리 표준화 방안수립이다. 표준화를 위해서는 제안자와 제안수용기관 책임조항, 인센티브 규정을 두어 책임과 인센티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주요고객인 국민과의 접점마케팅 차원에서 외부교육도 정례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성공에 직접 기여하는 정책,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정책제안 수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첫째,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속도를 업그레이드하고 둘째, 새 정부의 이미지를 기업친화에서 서민친화의 균형감을 갖게 하며 셋째,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정책제안의 국정반영 대표 사례

순번	국민정책 제안 내용	담당분과	반영사항
1	•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공무집행력 확보	법무행정	• 기초질서 관련 법령 정비 • 엄정한 법 집행력 확보방안 마련 • 범국민운동 등 법질서 확립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예정
2	• 부정부패척결센터를 신설해 공무원 불법 부정행위 등에 관한 신고접수 및 부패 시정		•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사전적 부패예방 제도와 전방위적인 부패척결 대책을 마련, 집행 예정
3	•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 제공		• 행자부·국세청 공동으로 업무처리절차 개선 추진 중
4	• 국가예산 집행시 내부통제기능 강화	정무	• 외부 전문가 공개채용 • 내부 통제관 직제 신설 • 국가정보원 직원 계급정년제 폐지 필요
5	• 이명박 당선인에게 드리는 국정원 직원 계급정년제 폐지 호소문		
6	• 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제안 운영규정 개정		• 관련 법 재개정으로 담당자 책임, 인센티브 엄격히 적용
7	• 위헌 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성실납부자 26만명 구제방안	경제 I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특별법제정 제안반영
8	• 신용불량자 처리방안		• 신용불량자 실태조사 후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9	•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건설업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연장 의견		• 건설업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건설업체 자금경색 • 미분양 주택분 중부세 합산배제 3년 연장제안 반영할 필요
10	•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성입학 허용	외교 통일 안보	•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선발 관련 사항 후속 조치중
11	• 민통선과 군사보호구역을 접경지역의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제완화 필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지난해 제정돼 올해 부터 일부 건축행위가 가능함
12	• 결혼 이주민 화상전화 센터 건립		• 동남아, 중국 등 인터넷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이므로 현지 대사관·영사관에 설치 운영
13	• 인터넷에 올린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경제 II	• 대표적 인터넷 부동산 포털 등을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 • 부동산 포털의 매물 검증시스템 도입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정리 • 업계 간담회와 부처 최종의견을 취합해 인터넷 부동산 매물 진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2장

쟁점정책 도출과정

1. 국토발전의 새로운 틀, 5+2 창조적 광역발전전략
2.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3.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4. 방송·통신·기구 통합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5.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
6.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방안
7. 정부기능과조직 개편
8. 대운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준비와 쟁점 대응
9. 새민금토지이용계획 변경과 환경대책
10. 글로벌 과학연구 거점 조성

국토발전의 새로운 틀, 5+2 창조적 광역발전전략

담당 : 기획조정분과

1. 5+2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의 제기

인수위원회 기초분과 박형준 인수위원은 1월 24일 기자실에서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을 브리핑했다. 그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계,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과 지방행정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광역경제권 구상은 이미 대선공약으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제시했던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의 핵심 내용은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기존 시·도 행정구역에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의 공동번영, 그리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발표는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뤄졌다. 행복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하에서 이뤄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입장반영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개진도 이어졌다.

창조적 광역발전이 발표된 이후 여론은 대체적으로 광역경제권으로의 이행 필요성을 공감하는 속에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수도권 지자체와 비수도권 지자체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향후에 수도권 규제완화조치가 함께 이뤄진다면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

도권의 유기적 발전을 위한 광역 인프라의 확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이후 구성될 광역경제권 지역본부가 지자체의 또 다른 상부 조직으로 기능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이번 구상으로 지역간 사업 중복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광역권발전전략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즉 '선-지방 육성, 후-수도권 규제완화'가 광역권발전 전략의 일관된 정책으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창조적 광역경제권에 대한 구상이 이번 대선과정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당선인은 서울시장 재임시 4년 동안(2002.7~2006.6)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당선인은 당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에 있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정부 시·도 공동건의 과제(최근 3년간 143건 요구에 53건이 수용·반영되는 등 정부정책 반영률이 37%에 이르는)는 16개 시·도가 합의한 정책개선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중앙정부의 반영률은 저조했다.

당시 이명박 협의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양 지역 간에 입장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발전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것이 국가발전에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도권의 무질서한 확산과 과도한 집중을 막아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의 성장활력을 살려나감으로써 국가와 개별지역의 선순환적 발전 모델을 찾는 것은 시대적 과제였다.

이에 대한 당선인의 대안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그것은 바로 지역마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개별지역이 상하이, 홍콩, 큐슈 지역과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의 역할은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를 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광역경제권 단위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수반해 시장친화적 투자의 길을 터 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자체 내부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부산·울산·경남발전연구원은 2002년부터 5년여 동안 부산·울산·경남 등 해당 지자체들과 함께 동남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했고, 이후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등은 2004년을 전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이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했으며, 당시 협의회장이었던 당선인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혁신도시 공동추진, 대구와 경상북도의 경제권 통합 선언, 대전·충남·충북의 충청권협의회 구성 운영 등 광역경제권의 필요에 대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이 같은 일련의 논의와 시대적 변화 등을 바탕으로 당선인의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이 나오게 되었다.

인수위에서는 당선인의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8년 1월 6일 기획조정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창조적 광역발전추진팀’을 운영했다. 팀장은 기획조정분과의 박형준 인수위원이 맡았다. 팀 멤버로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박양호 자문위원, 정인철 전문위원, 도태호 전문위원, 성희엽·정재용·진현환·김광희 실무위원, 그리고 법무행정분과에서 한표환 자문위원, 경제Ⅱ 분과에서는 김태경·윤수영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 의견수렴을 위한 주요 활동

일시	활동내역
2008.1.6	인수위 내부 ‘창조적 광역발전팀’ 구성(팀장 : 박형준 인수위원)
2008.1.16	광역경제권 관련 외부 자문회의 개최
2008.1.17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의 자문회의
2008.1.18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시·도별 건의사항 수렴)
2008.1.22	한나라당 수석조정위원장(권경석 의원) 등 의견수렴(한나라당 의견 수렴)
2008.1.22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 건의사항 청취
2008.1.23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토론회 개최
2008.1.24	창조적 광역발전전략 기자브리핑
2008.1.27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기업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및 토론회
2008.1.30	수도권광역교통체계 관련 관계자 간담회
2008.1.31	광역경제권 관련 전문가 좌담회(한국경제신문 주관, 박형준 위원 등 참석)
2008.2.1	광역경제권의 일자리 맞춤형 산·학 링크정책개발 관계자 토론회
2008.2.4	광역경제권 관련 13개 시·도 경제국장 의견수렴(산자부 주관)
2008.2.12	광역경제권 추진 관련 시·도 기획관리실장(6개 광역지자체) 의견수렴

광역발전추진팀은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던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광역경제권 모델을 운영 중인 주요 국가들의 실제 사례까지 벤치마킹해 인수위원회의의 ‘5+2 창조적

광역발전전략 을 내놓았다.

그간에 인수위원회에서는 광역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각계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경제계·학계·전문가 등과의 토론회, 16개 시·도 지사회의 및 기획관리실장회의,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2. 5+2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의 내용

“어느 한 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많은 페이버(혜택) 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페이버를 줘서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가는 게 좋도록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기업 스스로 선택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박 당선인, 16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2008.1.22)

1) 세 가지의 시각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검토됐다.

첫째, 세계경제의 큰 흐름은 이제 개방과 자유화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는 FTA 확산 등 자유화 물결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초미의 국가적 과제이자 지역발전의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과 생산 공간을 확대하고 기업 활동에 유리한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함에 따라 국가·지방정부는 세일즈 경영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적 기업과 자본, 인재, 정보가 동북아 시장을 찾아 이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동시에 신속하게 갖춰 나가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속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이 요구됐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광역화, 초광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고속철도의 본격적 운행과 첨단정보통신체계의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물류공간의 광대역화 추

세가 급진전되고 있다. 일상생활·생산·통행·여가공간이 행정구역을 초월해 확장되고 있다. 지역 간 교류가 공간적으로 초광역화하면서 지역간 생산요소의 공동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요자 선택 중심 시대로 급변해 기업의 선택, 주민의 선택,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해짐으로써 지역발전에 있어 수요자 맞춤형 공급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생활·생산공간이 광대역화되는 추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수도권 집중도 심화 추이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증감(전국 대비)	1997	2006
지역총생산 (GRDP, 2000년 기준연간)	계	231,078,737 (100.0%)	536,326,139 (100.0%)	767,404,876 (100.0%)
	수도권	114,679,517 (0.6%)	255,086,142 (47.6%)	369,765,659 (48.2%)
	비수도권	116,399,220 (-0.6%)	281,239,997 (52.4%)	397,639,217 (51.8%)
주민등록인구	계	2,739,014	46,885,255 (100.0%)	49,624,269 (100.0%)
	수도권	2,762,208 (3.0)	21,364,679 (45.6%)	24,126,887 (48.6%)
	비수도권	-23,194 (-3.0)	25,520,576 (54.4%)	25,497,382 (51.4%)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

셋째, 지금까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지역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숭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생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인천·경기 등을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시·도의 지역총생산(GRDP)은 국민의 정부 수립 전인 1997년 전국 52.4%에서 2006년 전국 51.8% 수준으로 오히려 쇠퇴했다. 주민등록상 인구 역시 1997년 전국 대비 54.4%에서 2006년 51.4%로 낮아져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됐다. 이러한 추세는 국민의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했던 참여정부하에서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 간 사업의 중복, 한정된 국가자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지방의 빈번한 대립 등으로 인한 총체적 결과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틀로서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지하듯이 주요 선진국의 국가경제는 광역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는 이미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해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 단위로 재편 육성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향후 우리나라 각 지역도 국내 타 지역의 동향보다 오히려 중국의 상하이 경제권, 주강삼각주 경제권과 일본 규슈 경제권 등 주요국의 핵심 광역경제권의 움직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는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2) 5+2 광역경제권 설정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산업집적도, 역사적·문화적 특수성과 지방행정 및 지역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다.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이 그것이다.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역 광역권을 인구 500만 정도 내외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 5+2 광역경제권

(5대 광역경제권 + 2대 특별광역경제권)



3)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

‘창조적 광역발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해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의 광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다. 지자체 간 연계 협력사업은 광역유형, 초광역유형, 기초유형으로 구분해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

광역사업으로는 △광역적 유망주력산업 육성 공동사업 △공간구조개선 사업 △광역기반공동사업 △권역중심도시 육성 등 도농재생 및 생활환경 선진화 공동사업 △공공디자인 문화관광 공동사업 △국제교류공동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 간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 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 거점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다.

둘째, 토지구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가 지역마다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이 양질의 값싼 산업용지를 적기에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특히 지방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 간 컨소시엄을 형성해 지방의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셋째, 광역경제권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에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글로벌 인프라와 신성장동력 거점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고속철도 등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를 조기 확충해 나갈 것이다.

넷째, 낙후지역도 광역경제권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성적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초광역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특화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관광레저·여가특구, 도·농 연계 전원마을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 ‘신발전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이들 지역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광역경제권 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발전하는 틀을 구축할 것이다. 수도권외의 전략적 리모델링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외의 합리화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 대(vs.) 지방'의 개념이 '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한 법률의 제정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이 지역 간 협력과 통합적 조정, 실질적 분권체제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적, 통합적, 분권적인 광역권 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간 협력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새로운 광역경제권 전담조직체의 재원을 만들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의 상호협력적, 통합적 사업추진을 촉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물적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4) 추진체계 구축 및 재정확충방안 조속 마련

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광역경제권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광역경제권별로는 광역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서 '광역본부'와 같은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해 나갈 것이다. 광역본부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 등 기동성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광역경제권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제1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3. 5+2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의 의미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은 과거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는 것은 아니다. 잘된 사업들은 적극 계승하고 예산운영 시스템이나 지역혁신사업 추진 방법 등 그간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들은 충분히 살려나갈 것이다. 오히려 광역경제권형성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은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과거의 성과를 더욱 발전토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아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삼았다. 그 외에도 특별행정기관 정비(핵심과제),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중점과제),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중점과제), 중앙권한 지방이양(중점과제), 중앙·지방 간 국정협력 시스템 구축(중점과제), 자치경찰 도입(일반과제), 기관위임사무 폐지(일반과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일반과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일반과제) 등 193개 국정과제 중에 10개 과제가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제로 반영됐다. 지방에 대한 규제완화와 권한 강화를 통해 지역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당선인의 철학과 일관된 방침을 충실히 반영했다.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그리고 5년이 그리 긴 것도 아니다. 세상일에 하나의 정답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광역경제권 구상은 앞서 밝혔듯 개방 경제 체제에서 지역의 체질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가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을 가져다줌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정부부처마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든, 제도나 운영방식에 대한 것이든 간에 어느 일방의 아이디어와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광역경제권제도의 연착륙과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 모두의 경륜과 지혜, 희망과 전례 없는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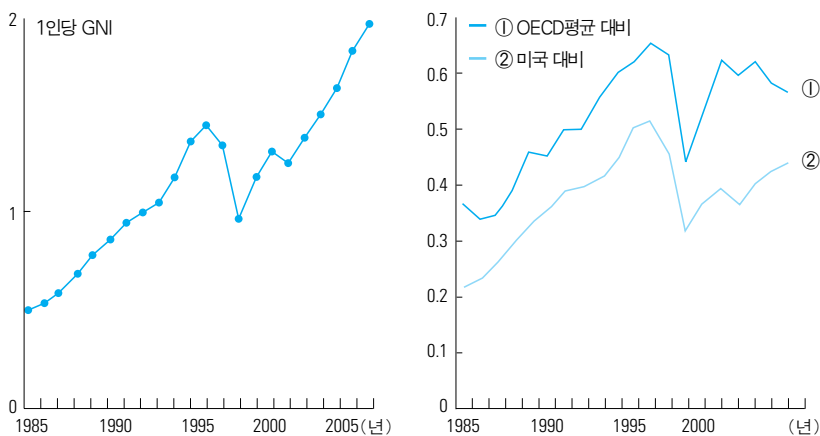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담당 : 경제 I 분과

1. 쟁점정책 선정 배경

7~8%대의 성장세를 지속하던 우리 경제는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4~5%대 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오늘날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에 이르고 있으나 국민소득은 OECD 등 주요 선진국의 50%,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제 경제 성장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서 싱가포르, 아일랜드와 같이 국민 일인당 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등장했다.

● 우리 경제의 1인당 GNI 추이(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대 OECD, 미국)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우리 경제 고용흡수력이 약화되면서 고용사정도 악화됐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정보화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 고용흡수력은 1% 성장당 9만명 수준에서 6~7만명으로 축소됐다. 2007년 신규 일자리 창출실적도 정부와 공공부문의 사회 서비스 고용창출 및 유지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목표(30만명)에 미달하는 28만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성장률 제고와 함께 일자리 창출능력 향상이 이명박정부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됐다.

2. 쟁점정책 딜레마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와 현재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7% 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1980년대 과잉투자 조정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 증가율 둔화, 요소생산성(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 GDP 성장률과 성장요인 분해(KDI)

구분	성장률	노동투입	양적투입	인적자본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TF-P)
1985~1990	9.2 (100.0)	2.9 (32.0)	2.0 (21.2)	1.0 (10.6)	3.4 (37.0)	2.9 (31.0)
1991~1997	6.5 (100.0)	2.0 (31.2)	1.5 (23.7)	0.5 (7.4)	3.3 (50.2)	1.2 (18.6)
2000~2005	4.6 (100.0)	1.6 (34.3)	0.7 (16.1)	0.8 (18.0)	1.7 (37.5)	1.3 (28.2)

우리 경제 능력을 벗어나 단기간 내 성장률을 상승시킬 경우 물가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대내외 균형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기조로의 전환은 단기적인 성장률 상승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1998년 이후 유지돼 왔던 경상수지 흑자기조 붕괴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7% 성장공약은 대선과정뿐만 아니라 종료 이후에도 쟁점이 돼 왔다. 특히 대선 종료 이후 학계와 일부 언론 등으로부터 공약을 현

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7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국제유가 상승,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심리는 이러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3. 쟁점정책 논의과정

7% 공약수정론은 공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공약수정론의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단기적으로(2008년) 7% 성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정부 등 공공부문이 7% 성장을 주도하는 방식이 과거로의 회귀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7% 성장은 기초 법질서 준수, 규제완화, 정부혁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7% 수준의 잠재성장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투자활동에 대한 '도우미'로 한정된다.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그간 제기됐던 쟁점들을 고려하면서 7% 성장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먼저 당선인이 직접 국내 민·관 주요 연구기관의 원장들을 초청해 간담회(2008.1.2)를 개최해 7% 성장공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성장률 제고를 위해 공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완화·감세 등의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요 연구기관 실무자와의 간담회(3회, 2008.1.5~7)에서 우리 경제 잠재력을 상회하는 성장은 물가와 경상수지에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의하면 잠재력을 벗어난 성장은 3%대를 상회하는 물가상승과 GDP 대비 0.5~1.0%(50억~10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확대의 노력과 함께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lead time)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성장률 상승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I 분과위원회는 당초 취지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7% 성장

공약이 ‘우리 경제가 7% 성장능력을 갖춘 체제로 전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리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물가와 경상수지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통화·환율 등 거시경제정책의 조정(realignment) 등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6% 전후의 성장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상승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관계를 갖고 있으나, 우리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 등 성장과 일자리 창출간의 관계가 점차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간 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상승과 함께 직업훈련 및 고용 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하고, 기업이 신규 고용을 일으키는 것을 저해하는 노동시장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 정책방향의 구체화

1) 7%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은 대선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약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장잠재력 제고노력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기반시설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 운하 관련 사업 등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내수기반이 확충되면 탄탄한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주도 투자보다는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2008년에 예상되는 9조 7천억원의 재정잉여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추경예산 편성, 감세 등으로 재정의 성장 상쇄효과를 예방하기로 했다.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4대 원칙(규제 최소화, 세율 최저화, 금융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 법치화)에 의거, ‘세계 최고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4대 원칙 중 첫 번째, 규제 최소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등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경쟁선진국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규제 최소화를 이루기로 했다.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 입지 제한과 환경 관련 규제, 부처별·업종별 칸막이 규제를 폐지·완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 진입을 저해하고 있는 부실 중소기업 퇴출을 촉진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 60% 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등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많은 진입·퇴출규제, 낮은 수준 대외개방도 등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면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 산업간 노동생산성·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 추이

구분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취업자)				총요소생산성			
	전산업	제조업(A)	서비스업(B)	격차(A-B)	전산업	제조업(A)	서비스업(B)	격차(A-B)
1980-89	5.0	6.0	1.9	4.1	1.2	3.4	△0.7	4.1
1990-97	5.0	8.7	1.5	7.2	1.4	4.1	△0.7	4.8
2000-06	3.2	7.8	1.2	6.0	2.0	5.8	0.9	4.9

● 업종별 진입규제 현황(2007.6월말 기준)

구분	업종 수(A)	진입규제 업종 수(B)	진입규제 비율(B/A, %)
제조업	473	95	20.1
서비스업	543	366	67.4
통신업	9	9	100.0
교육서비스업	23	21	91.3
도매 및 소매업	162	67	41.4
금융·보험업	34	34	100.0
보건·사회복지	22	22	100.0

두 번째 원칙인 세율의 최저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이 경쟁선진국 수준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세율을 인하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최고 세율 25%, 최저세율 13%)을 단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여력과 투자성향을 제고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금융에 대한 규제·감독·관행을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개편해 원활한 기업지원과 함께 금융 산업을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의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고 지주회사 등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은 노사관계의 법치화다.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 왔던 불법 노사분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노·사·민·정 합의체로 개편해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후 발생하는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노사분규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노사분규(건)	320	462	287	253	212
근로손실일수(일)	1299	1199	848	1201	536
불법파업(건)	29	58	16	24	17

셋째,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연구개발 투자를 GDP 5%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자 성과 평가 시스템도 강화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미국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술개발 성공보상금(X prize) 도입도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성 등을 이유로 진입이 제한돼 있는 교육·문화·관광·의료 등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들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 또는 다른 서비스산업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 방안

성장률 상승이 곧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성장을 상승과 함께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업종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의료·교육·금융 서비스업의 새로운 창업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이들 업종의 고용창출력이 제조업 또는 다른 서비스업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취업유발계수, 2006, 명/10억원 : 제조업 10.2, 건설

업 18.3, 서비스업 19.9, 교육 서비스업 33.4, 의료서비스업 16.3).

새로운 정부는 의료법인에 외부자본이 투입되면서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증권·자산운용업의 진입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 부문에서도 외부자본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대기업에 비해 크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는 현재 2만 3천 개에 머무르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2012년까지 5만 개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혁신형 기업 창업과 관련한 재정지원 체계 정비를 통해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 성장단계 차원에서 볼 때 성숙단계에 진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퇴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 공개시장(IPO) 위주로 돼 있는 구조를 M&A 시장과 IPO 시장의 균형 잡힌 모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이다. 선진경쟁국에 비해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 구조가 기업 고용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해 전경련을 찾은 이명박 당선인.



유인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스웨덴 등 선진국 경우에도 노동시장 유연성 등 노동시장 개선이 신규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근로자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구직자와 구직희망자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자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근로자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영국(NDYP : New Deal for Young People) 등 선진국과 같이 고용주, 근로자, 사회가 전체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 2008년 성장을 제고 노력 강화

규제완화 등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 성장능력을 7%로 제고함과 동시에 2008년 성장률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2008년 경제 전망을 4%대 후반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외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필요시 미시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외 불안요인에 따른 국내 펀드 환매요구가 급증할 경우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환율정책의 변화가 투자가에 일방적인 기대를 유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균형(물가와 경상수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정책 변수 조정(realignment) 등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 및 지출효율성 제고 등으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활용할 방침이다. 당초 2008년 예산편성 시점에 비해 개선된 세수여건, 2007년 세계잉여금 중 법정지출경비를 제외한 자원 등을 감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8년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7%)를 올해 투자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정여건과 경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법인

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불안 완화를 위해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의 정책 금리 인하 추이, 국내 금리와의 격차, 국내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외환시장 측면에서도 수급조절 등을 통해 환율이 실물 경제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5. 종합평가와 향후계획

7% 성장 및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과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점차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잠재력도 저하되고 있어 성취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다.

즉,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이명박정부의 착안점이다.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경제운영의 비전으로 정하고 달성을 위해 그간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 높은 세율 등을 개혁하고 경제·사회 운영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이런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담당 : 경제Ⅱ분과

1. 활동 개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주택·부동산 정책은 항상 논의의 중심에 서 있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집값상승 등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늘고 이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게 정책적으로 체계화해 보다 세련되고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자가 보유율은 1970년대 68%에서 2005년에는 55%로 오히려 낮아졌다.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기존 서민주택정책은 주로 임대주택공급 위주로 돼 있어 서민의 자산가치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한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서민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형성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대책이다. 이로써 저소득층 서민도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능력에 맞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실현 및 투자가능성이 높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발표돼 논란을 겪었다. 이 제도는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수립된 정책이지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 국민여론 수렴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2. 정책의 선정과 배경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006년 기준 서울시민의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7.5배에 달해 런던 4.7배, 뉴욕 2.7배 등에 비해 매우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소비자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1%인 데 반해 전국 평균 주택가격 변동률은 9.9%로 매우 높았다. 특히, 수도권에서 내 집마련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다.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분양가도 상당히 높았다. 이를테면 판교 85㎡ 이하의 평균 분양가가 3억 6천만원인데, 이는 소득 4분위(월 241만원)인 사람이 12년치의 월급을 꼬박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2004년 말 5.41% 수준이던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2008년 1월 현재 7.47% 수준까지 올라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에 반해 판교 신도시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당첨이 바로 '로또'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 당첨된 소수에게는 불로소득을, 다수의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했다.

따라서 '로또'식 시세차익의 사유화와 청약과열의 부작용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분양에 따른 초기부담을 대폭 낮춰 저소득층과 신혼가구에게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게 할 것이다. 더불어 새 정부는 국민들이 주택을 통한 과도한 시세차익 기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라면 시행이 어려우므로 이 제도는 입안 초기부터 반값아파트의 실패사례와 비축 임대아파트투자 모집사례를 참조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3. 정책 소개 및 의의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한 채의 주택을 실수요자와 연·기금 등 투자자가 공동으로 분양받고 처분시 수익도 지분대로 나눠 갖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의

양호한 지역에서 지분형 분양주택이 공급되면 분양대금을 입주자와 투자자가 나눠 부담하게 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이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내집을 마련하는 부담과 기간이 줄어들어 현재의 전세금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도 전세자금으로 자가 소유 및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수단이다. 그동안 개인이 가져갔던 과도한 시세차익은 연·기금으로 사회화하고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에게는 전세금 수준으로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 기회(Asset Building Welfare)를 주는 것이다. 임대와 분양의 중간 형태인 이 주택은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을 마련하기 곤란한 계층들에게 내집마련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소비자의 주택에 대한 선택기회를 넓혀준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임대주택이나 100% 지분을 갖는 분양주택만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들 선택의 폭이 제한돼 있었다. 그런데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경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4. 정책 단계별 논의과정

인수위가 2008년 1월 17일 무주택 서민주거대책으로 집값의 25%만 있어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발표하자 찬반양론이 뜨겁게 전개됐다.

언론의 주요 쟁점은 안정적 수익률 보장과 배당수익 문제, 투자회수금 확보,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저조 예상 등이었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매일 경제신문이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사(응답자 1,866명)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지분형 아파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7명은 ‘찬성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말해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인 의견에서는 서민 입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주택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부정적인 의견은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집값이 금리 이상으로 올라야 하는데 집값이 이미 너무

올라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집값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충분히 검토됐으나 인수위 차원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발표는 보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두 차례의 검토회의(1.21, 1.25)와 민간 전문가 및 재무적 투자자와의 자문간담회(1.23, 2.1)를 열어 지분형 분양주택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검토회의 및 자문간담회는 언론이 제기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가능 여부, 투자지분에 대한 임대료 적용 여부, 청산기간 및 방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자문간담회 결과 주택시장 안정화정책 방향과의 모순, 지분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실수요자가 주택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 청산시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됐고, 투자유치 차원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과 입주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 검토회의에서는 주공·토공 등이 준비한 송파·안양·동탄 등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지역과 대구 등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시세와 차이가 없는 지역에 대한 연계투자 수익률 분석을 토대로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간의 권리관계, 주택처분 및 청산방식, 세금부담, 대상지역 등이 논의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들을 토대로 각 은행·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예상대로 투자자들은 투자자금 회수방법, 예상수익률, 임대료 등 현금수입 여부, 매각시 입주자와 협의방법 등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 등의 예상과 달리 관심이 높은 편이었고, 이들이 제기한 문제들도 대부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것이었다.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완대책을 이해한 후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4명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8명(57%)이 특별한 보완 없이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6명(43%)도 청산회수의 확실성 보장 등 일부 문제점만 보완되면 충분히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5. 정책방향 설정

지분형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전세금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위치한 비싼 아파트를 내집으로 마련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설계됐다. 재무적 투자자가 분양금의 반을 부담하고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용자받게 되므로 분양가의 반의 반값에 불과한 적은 자금으로도 주택소유와 입주가 가능하게 계획됐다.

전세제도와 비교해 보면, 전세주택은 거주 기간 동안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나 지분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 규제에 따른 분양차익이 발생하므로 일정 수준의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 전세제도와 지분형 분양제도 비교

구분	차익 분배 방법	비고
전세제도	다주택 투자자가 세후 시세차익 100% 향유	2년 계약임대
지분형 분양제도	입주자와 투자자가 절반씩 나눠 갖는 제도	10년 거주 소유주택

지분형 분양주택의 지분구조는 실수요자가 지분의 51% 이상을, 재무적 투자자가 49% 이하를 가지도록 설정하고 주택 처분에 따른 시세차익도 지분대로 분할하도록 했다. 이때 재무적 투자자는 연·기금, 리츠, 신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받게 되므로 연·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는 안정적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주택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부터 입주자와 투자자가 나눠 납부한다. 분양가 2억원인 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자기부담률 1억원 중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5,500만원을 용자받아 분양가의 1/4 수준의 자기 자금만을 가지고도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예상 수익률, 임대수익 배분방법 등에 따라 투자자와 약정을 통해 수익배분율이나 분양대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지분형 분양주택의 지분구조

구분	거주 목적 실수요자	지분투자자(연·기금 등)
권리관계	지분 51%, 거주권	지분 49%
분양가	분담분양대금의 51%	분양대금의 49%

투자자가 가진 지분에 대해 입주자가 일정 금액의 비용(임대료)을 납부할지의 여부는 논란이 있었으나, 무주택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취지와 투자자의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를 위한 재무투자자 유치를 동시에 고려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실수요자가 거주할 경우 투자자 지분에 대해 비용(임대료)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투자자 수익구조상 필요시 투자지분에 대해 관리비용 정도를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실수요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투자지분의 보호를 위해 임대조건 등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임대료 수입은 일정한도 내에서 지분투자자와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분형 주택의 처분 및 청산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적정한 전매제한으로 투기를 예방하는 측면과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데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지분형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투자자는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지분거래를 할 수 있으나 청산시기는 지분 매입일로부터 7~10년 정도 경과 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투자자는 청산시기 이전까지 자신의 지분권을 기초로 ABS 등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실수요자와 투자자 지분매각은 민법상의 공유지분 법리에 따른다. 그렇지만 분쟁가능성을 우려해 투자를 기피할 수 있으므로 청산방법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상 공유지분권자에 대해 상호 우선 매수하는 법리에 따라 각각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감정가로 매각하거나 협의해 제3자에게 청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과 더불어 분쟁소지나 실수요자의 거주불안 문제를 고려해 실수요자가 청산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청산시점(7~10년)에서 실수요자는 ① 투자지분을 감정가로 매입하거나 ② 자가지분을 지분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③ 지분투자자에게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①과 ②를 선택하지 않을시 투자자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세금부담은 다음과 같다. 실수요자는 취득세·등록

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기존의 부동산 세제에 맞춰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담한다. 지분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리츠·민자사업 등의 재무적 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되, 투자유인 차원에서 별도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6. 정책 구체화 방안

지분형 분양주택은 수도권·광역시 등 분양가가 높은 지역의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단지에서 우선 추진된다. 다만, 송파 등 예상 투자수익이 과도한 지역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단지와 묶어서 투자자상품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투자자의 모집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주관해 추진하며 선정된 투자자와 투자조건 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한다.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서 연·기금, 펀드, 리츠 등이 참여할 것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순차제, 가점제 등 기존의 청약제도에 따라 분양된다. 다만, 일부 물량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해 저소득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급되는 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로 하되, 우선 60㎡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7. 당선인 기조와의 밀접성 및 실천계획

1) 대통령 기조와의 밀접성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새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산형성 촉진 복지이념을 실현하는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소극적인 '주거안정'에서 '주거안정+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화 유도'라는 적극적인 주거복지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 제도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촉진해 중산층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써 국민성공시대를 실현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정책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2) 정책추진 실천계획

지분형 분양주택은 2008년 중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시범사업 물량을 공급할 것이다. 제도 도입 시안을 토대로 해 2008년 5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에 제도 시행을 위한 주택법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008년 9월경에는 적당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실적합성 등을 점검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8. 평가

인수위에서 발표 당시 정책추진 준비가 다소 미흡해 언론과 여론의 비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세부내용이 전달되면서 좋은 정책으로 이해됐고 참신한 아이디어, 실수요자의 높은 선호도, 투기가 아닌 안전한 투자라는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소득에 비해 집값이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경우 지분형 분양주택제도가 정착되면 주택분양에 따른 초기부담을 덜게 되어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또한, 선호지역 아파트 분양시 발생하는 '로또'와 같은 시세차익을 실수요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나누어 가지게 됨으로써 청약과열이 완화될 것이며, 공적 연·기금이 참여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이 국민에게 환원돼 경제정의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기구통합및 방송통신위원회설립

담당 : 경제Ⅱ분과

1. 활동 개요

인수위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응해 방송통신융합TF를 구성하고, 방송·통신 기구통합,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 등의 정책을 검토했다. 그 결과 방송·통신 기구통합과 관련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사한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 통합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2. 쟁점정책의 선정과 배경

오늘날 방송과 통신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네트워크·서비스·기기·콘텐츠’ 측면에서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 급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아날로그 시대 규제 틀에 따라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던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타당성이 약화돼 방송·통신 통합기구를 설립하고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 방송·통신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3. 내용 및 의의

방송과 통신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로 영국·호주·이탈리아 등 선진 각국은 기구를 통합하고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에 적극 대응 중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 등으로 방송과 통신에 대한 행정권한이 분산돼 있어서 방송·통신 융합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증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현행 조직체계는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 사이에 정책갈등 및 중복규제 등을 초래해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사례 : 방송영상·광고 정책, DTV 전송방식, DMB 해외진출, IPTV 도입 등).

무소속 민간기구인 현행 방송위원회 체제는 방송·통신 융합산업 진흥 및 관계 부처와의 정책조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 기구를 통합하고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수년간 지속해 왔으나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방송과 통신 기구통합은 정책권한 분산에 따른 기관 간 정책갈등 및 중복규제를 방지해 방송·통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IPTV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는 국민들의 매체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4. 쟁점정책의 단계별 논의과정

1) 방송·통신융합 1차 간담회 개최(2008.1.10)

제1차 간담회에는 이재웅 의원, 형태근 전문위원, 박천일 교수, 강상현 교수, 최성진 교수, 정윤식 교수 등이 참여해 새 정부의 대(大)부처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능, 방송위원회 방송기능 등을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 방송통신융합 2차 간담회 개최(2008.1.22)

제2차 간담회에는 김형오 부위원장, 최경환 경제Ⅱ분과 간사, 이재웅 의원, 강상현 교수와 관련 업계가 참석해 방송·통신 기구통합 필요성, 통합기구 소관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2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첫째, 방송·통신 기구통합, 방송·통신 진흥과 규제, 정책권한과 규제권한을 묶는 기구통합은 미래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기존 방송의 공익성 위주에서 탈피해 산업발전 측면과 시장 자율성을 중시하면서도 공익성과 상업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둘째, 효율적이며 일관된 방송·통신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방송광고를 포함한 미디어정책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송·통신 경쟁력은 네트워크나 서비스보다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확보에 달려 있으므로 콘텐츠 업무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셋째, 방송·통신사업자 허가는 결국 네트워크 전송방식에 대한 허가이므로 전송방식에 따른 기술기준과 표준화 업무도 통합이 필요하며, 규제와 함께 진흥을 연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및 집행 효율성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넷째, 위원회 조직으로 인한 업무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별 전담업무 지정과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고, 방송과 통신 교차 진입에 따

른 공정경쟁 여건 조성 필요 및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비대칭규제 해소와 소유제한 완화 등 방송 분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 방송통신융합 제3차 간담회(2008.1.31)

제3차 간담회에는 최경환 경제Ⅱ분과 간사, 형태근 전문위원, 정일영 외국어대 교수, 박진우 고려대 교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통신사업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석해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정부 역할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차 간담회에서는 첫째,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통신시장 포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및 시장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둘째, 현재 통신망으로는 IPTV 등 광대역 서비스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품질보장(QoS-Quality of Service),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한 고품질 융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 구축, 국민 PC 보급, 시범사업 등과 같이 차세대 네트워크에도 산·학·연·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네트워크 관련 연구개발·표준화·시범사업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고도화와 서비스 활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정보통신부 업무 보고



USN(센서네트워크), 모바일 TV, UCC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첫째, 규제완화 정책방향은 동일 기술에 대한 과당경쟁을 유발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기술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수익률에 따른 기업 투자 변화에 비춰 경매제 도입시 네트워크 고도화 지연이 우려되나 주파수 재배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셋째, DTV 전송방식 논란, DMB 개발과 서비스 개시시간 지연 재발방지를 위해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규제정책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달리 케이블 주파수용도(Internet, TV 등)를 일일이 지정하는 현행 기술기준 규제를 완화해 투자여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언론보도 분석

언론은 미국 FCC와 같이 방송통신정책과 규제를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 규제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그간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신규 융합 서비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방송영상과 방송광고 등 방송진흥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신문·방송의 겸영규제 완화 등 미디어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보도와 함께 미디어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제기했다. 그리고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효율적 정책추진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방송 독립성 보장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정책방향 설정

방송·통신의 경제·산업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기능이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방송·통신 기구를 통합하고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통신·전파·방송기능과 방

송위원회 방송기능 등을 통합해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모두 관장하는 방송통신 통합기구를 설립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6. 쟁점정책 구체화 방안

방송·통신 기구통합을 위해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기능과 방송위원회 방송기능을 우선적으로 통합해 대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대통령, 3인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했고,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에 대한 인사 청문·탄핵소추, 위원 직무독립성·자격요건 등을 법정화했다.

위원회 소관 사무는 방송·통신·전파연구 및 관리 등으로 하고, 19개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방송·정보통신 내용심의와 관련해서는 현행 방송위원회 방송심의 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심의기능을 통합해 무소속 민간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이 중 6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7. 당선인 정책기조와의 밀접성 및 실천계획

1) 당선인 정책기조와의 밀접성

당선인은 방송·통신 융합산업 활성화, IPTV 서비스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방송통신 기구통합은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현행 규제체계에서 발생하는 정책갈등과 중복규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 방송통신 융합산업 및 IPTV 등 신규 융합 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므로 당선인 정책기조와 부합한다고 판단됐다.

2) 정책추진 실천계획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방안을 포함했다(2008.1). 전자정부와 정보보호기능은 행정안전부로, IT산업 진흥기능은 지식경제부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능은 문화부로 이관하되, 통신정책 및 규제 기능은 방송위원회 방송정책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방송·통신 융합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08년 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특위에 상정하고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 취임 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8. 평가

방송·통신 기구통합은 수년간 논의돼 왔으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인수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 독립성이 훼손되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으며, 방송영상·방송광고 등 관련 기능도 기구통합시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해 실질적으로 방송정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방송영상·광고 정책을 포함해 방송과 통신정책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

담당 : 사회교육문화분과

1. 쟁점정책 선정과 추진 배경

학교에서 10년 넘게 영어 공부를 해도 막상 영어로 의사소통을 못하는 것이 우리 영어 교육의 현주소다. 한해 초·중·고교 학생 3만 5천명이 해외 조기유학을 떠나고, 1만명이 방학 때마다 어학연수를 떠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도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하겠다.

공교육에서 해결하지 못한 영어 교육 때문에 많은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도 영어 회화학과 각종 영어 시험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이렇게 영어 사교육에 소요되는 돈이 연간 1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 교육은 단지 교육격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졸업 이후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나아가 가정소득에 따른 사회격차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학교 영어 교육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이 국가경쟁력과 사회의 통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인수위에서는 그것을 구체화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2. 대선 공약과 영어교육 개혁 방안

지난 대선 기간 대선후보들의 영어 교육 혁신방안이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됐다. 2007년 10월 초에 당시 이명박 후보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포함한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어 공교육 완성 이외에도 △고교 다양화 300 △대입 3단계 자율화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제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5개 공약이 포함돼 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통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만 받으면 외국인과 일상 대화가 가능하도록 학교의 영어 교육 방식을 바꾸고,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현재 우리 사교육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비부터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은 대입제도의 개선과 함께 교육 분야 핵심공약이자 전체 대선과정에서 대표적인 정책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공약에 포함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는 크게 여섯 가지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첫째,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자격제도를 마련하고, 신규 초·중등교사 1천명, 현직교사 중에서 2천명 등 해마다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3천명을 양성·배치한다.

둘째, 영어로 하는 수업을 점차 확대하되, 장기적으로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수업 교재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셋째,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보조교사의 충원부터 입국, 한국 적응, 학교 배치, 고충 해결에 이르는 과정 및 자격관리 체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체계를 확립한다.

넷째, 외국의 정부나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지원해 양국 교사들의 국제이해 및 교육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다섯째, 영어 잘하는 대학생을 방학기간이나 방과후 시간 동안 초등학교의 영어전용수업 교사로 활용하고, 외국 거주 한국인 자녀가 국내 학교에서 영어 교육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지막 여섯째로, 국내에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이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

하면서 국내의 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교육국제화특구를 확대·도입한다.

3. 쟁점정책 논의과정

인수위는 교육부 관계자와 교육계 전문가들과 함께 대입개혁과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의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인수위 출범 초기에 외부 전문가와 교육부 관계자를 포함하는 ‘영어공교육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영어 공교육과 관련된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수심회의 논의를 거듭하면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영어 교육 방안이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의 방향에 대해 모두들 공감했으나, 일부에서는 굳이 모든 학생이 영어를 잘해야 하는지, 영어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사교육비가 줄어질 것인지와 같은 이견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나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영어 교육의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또한 영어 사교육이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므로 현재 사교육 시장에 몰려 있는 영어 수요를 공교육으로 끌어오는 것이 새 정부의 교육 부문에서 중요한 정책이라는 합의가 도출됐다. 또한 영어 공교육 강화에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을 들이고, 교원을 확충하고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등 여건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대수술을 계획대로 잘 해내면, 결국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리라는 확신도 공유됐다.

한편 1월 22일 인수위는 대입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현재까지의 교육제도가 대학도 수험생도 학부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주요 원인을 정부의 과도한 입시규제와 획일적인 학교 교육운영에서 찾았다. 따라서 대학입시는 그 책임과 권한을 단계적으로 대학에 넘기고,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는 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어를 수능 과목에서 분리하고 복수응시가 가능

한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리고 영어 수업이 가능한 교사를 매년 3천명 양성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말하기와 듣기 등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일반과목 영어 수업 확대에 대한 방안 또한 포함됐다.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감소시키고,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말하기와 듣기 등 영어 공교육을 완성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방안들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과 실행에 대한 실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특히 실행해서 얻게 될 좋은 결과는 믿지 못하고 파생될 수도 있는 역기능을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비한 별도의 학습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됐고, 영어교사 양성·확대에 관해서는 영어실력 및 자격을 갖춘 교사 양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학부모들은 새로운 정책이 도리어 사교육을 부채질할까봐 우려하기도 했다.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방안과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 가장 큰 논란이 있었다.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것이 공교육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교육’ 또한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전문가, 언론, 그리고 국민들에게서도 반대 의견이 표출됐다.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대한 공청회.



이런 여론의 관심을 등에 업고, ‘영어를 잘하면 군대 안 간다’, ‘실력 미달 영어교사 삼진 아웃제 추진’이라는 기사도 보도됐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기 때문에 인수위는 빈번히 공식 해명을 해야 했고, 이런 모습이 인수위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춰져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방안에 관심이 쏠려 있고, 찬반양론이 치열한 가운데 인수위는 1월 30일 학자와 교

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경숙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2013년까지 영어 전용교사 2만 3천명 신규 채용과 연간 3천명의 현직 영어 교사에게 심화 연수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한 ‘영어 공교육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는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하게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등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과 2013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영어를 분리하고, 학교공부만으로 부담 없이 영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에서 영어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제도 개편방안,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도 영어로 하는 수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영어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농어촌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선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공청회 참석 패널의 구성에 대해 새 정부의 영어 교육안 찬성자들로만 이뤄졌다는 일부 교육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는 지금까지 영어 공교육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학계 인사들과 현장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 패널들 사이에서 ‘교원을 2만 3천명 양성한다는 안’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교사들은 “영어 교사를 지원하는 따뜻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 안이 나왔는데 국내 심화 연수는 물론 고용휴직제, 연수휴직 등 재충전을 위한 제도에서 영어 교사가 우선 배려됐으면 한다”, “영어전용교사 양성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이보다는 현재의 영어 교사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학부모 대표의 입장은 다른 것이었다. 교사의 재교육이 제일 시급하다며 교사들은 국가에서 재교육을 책임지라고 하지만 교사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모두 자기 돈 들어가며 하는데 교사들만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면 안

영어교육 개혁방향은 공교육이 영어를 책임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날 이경숙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정부에서 기안하고 실천하려고 해도 국민이 신뢰를 해야만 성공”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향해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교사에게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뜻을 표하고, 후학들을 위하고 학부모 걱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학부모와 한마음이 돼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공청회는 모두 방송으로 중계돼 보다 많은 당사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또한 인수위에서 검토되지 않은 관련 정책들이 언론을 통해 부풀려져 보도돼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던 부분도 상당히 해소됐다.

인수위는 영어 교육 개혁이 단지 교육사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걱정하는 모든 의견들을 모아 수정·보완한 후 영어 공교육 강화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고, 새 정부에서 범부처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측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강도를 높였고, 대표가 직접 나서 ‘수정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2월 4일에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영어 공교육, 영어 몰입교육이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준비되지 않은 정책 남발로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에 도전하려면 영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기유학생 문제 해결과 영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을 밝히라며 인수위 정책을 지지했다.

4. 쟁점정책 구체화 방안

1) 영어로 수업 가능한 교사의 확보

우선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원들을 많이 확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 교사 2만 3천명을 2013년까지 새롭게 채용할 것

이다. 국내외 영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영어권 국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전직 외교관과 상사 주재원 등 영어 수업이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심층적인 구술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고, 교수법과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를 거쳐 계약직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3~5년 주기로 계약을 새롭게 맺고, 5~10년마다 영어 전용교사 자격을 새롭게 부여받게 된다.

현직에 있는 영어 교사에게는 국·내외에서의 심화 연수 기회를 늘릴 것이며, 영어 사용 국가들과 교사·예비교사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원어민 교수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영어 교사 임용고사에서도 말하기와 쓰기 능력 평가를 강화할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나 주부, 지역주민, 그리고 해외교포도 '영어전용 보조교사'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학점 인정, 자원봉사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영어 교사 수급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공청회 다음날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 실력이 부족한 영어 교사를 재교육하고, 모국에 봉사하고 싶어 하는 해외교민들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 등급별로 교육하고 부족한 부분은 방과후나 방학 때 보완하는 과정을 마련해주면 된다고 수준별 학습법도 제안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시절에 강남구의 영어 과외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전남 신안군 섬 지역에 제공한 사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2) 영어 수업시간 주당 3시간으로 확대

학교 정규 영어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0년에는 3·4학년, 2011년에는 3·6학년의 영어 수업시간을 주당 3시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모든 영어 수업이 영어로 실시되도록 교사와 시설을 준비해 갈 것이다. 현재는 3·4학년이 주당 1시간, 5·6학년이 주당 2시간씩 영어 수업을 받고 있다. 중·고교 영어수업은 말하기, 쓰기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영어 수업이 가능한 교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어 교과서에 대한 규제도 점차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할 방침이다.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점차 영어로 영어 수업을 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오히려 유치원 때부터 영어 사교육을 시켜야 학교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철저한 영어 공교육 준비를 통해 점차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만반의 준비를 갖추나가고 있다.

3) 실용영어가 강화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실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제풀이 위주 수능 영어 시험을 실용영어가 강화된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교육부에서 2007년 7월 착수)으로 대체할 것이다. 다만, 별도의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입시(올해 중2, 중1 학생)에서는 4영역 중 듣기·읽기 영역을 평가하고, 2015학년도 입시(올해 초 6학년생)부터는 4영역 모두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4) 영어환경 구축

학교 밖 영어교육 기회 확대 및 방과후 영어 사교육 흡수를 위해 영어 학습 교재, 영어 동화책(storybook), 멀티미디어 등이 다양하게 구비된 시·군·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확충으로 지역 내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학습 공간을 확대한다. 한편, 학교 내 우수 영어 교육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등학교에서는 영어수업 규모 축소를 위한 영어전용교실을 확충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체험센터를 거점초등학교 별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타 정규수업 외의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재량활동시간, 방과후 학교, 방학 중 영어캠프를 활용해 학습 부담 없이 흥미와 영어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할 것이다. 예·체능 특기적성교육, 문화예술교육도 영어로 진행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밖에 방송, 인터넷, 농어촌 화상영어수업 강의 등을 지원해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지역 등에 우수한 영어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추진과정에서의 몇 가지 오해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 공약에서는 장기적으로 영어 이외의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교원양성과 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던 중 인수위가 1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어 교육 개혁방안 계획이 일부 제시됐다. 이후 영어 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점차 가중됐다. 이후 몇 가지 확인되지 않은 계획들이 마치 인수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정확하지 않은 언론기사가 인터넷에 게시되면서 그 파장이 점점 커지게 됐다. 1월 24일 ‘2010년부터 고교 일반과목도 영어로 수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떴다. 내용은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 영어 이외 일반 교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교육’이 전국의 모든 고교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전혀 검토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이다.

서둘러 경위를 파악한 인수위에서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키고 정정을 요구했다. 결국 2010년부터 영어 과목은 영어로 수업하고, 다른 과목의 영어 몰입교육은 농어촌 지역의 고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고쳐졌다. 그리고 1월 30일 공청회를 통해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오해가 가중되면서 고교에서의 영어 몰입교육은 더 이상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1월 28일 정리했다.

한편, 1월 28일자 유력 일간지 1면에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국민들을 또 한번 혼란에 빠뜨렸다. 신문에서는 인수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와 같은 내용이 30일 공청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내부조사 결과 인수위의 어느 누구도 해당기자의 취재에 응한 바가 없었다. 더구나 실제 공청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다. 오보로 인해 인수위가 다시 한번 곤란을 겪게 된 일이었다.

6. 평가

인수위에서 제시한 영어 교육 개혁방향과 원칙은 실용성과 효과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말하기·쓰기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영어 교육을 강화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한편 우수 인적 자원의 영어 교사 입직 경로를 다양화해 우수인재 활용을 통한 학교 영어 교육의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적의 효율·효과적인 인적·물적 영어 학습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해 영어 관련 사교육비의 경감 및 지역 간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약 4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해 국가 전체적인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는 한편, 전반적인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에서는 다음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영어 교육 개혁을 선정하고 인수위 활동을 통해 핵심의제로 부각시켰다. 영어 교육이 대입자율화와 함께 우리 교육의 핵심쟁점으로 자리 잡은 것은 지금의 학교 영어 교육으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새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영어 시험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교사들에게는 그들이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오해를 극복하고 인수위가 제시한 원칙과 방향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추진해 가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과의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영어 공교육 강화를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

담당 : 투자유치TF

1. 정책 논의 배경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선진국·개도국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국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투자유치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은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투자유치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가 양대 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투자유치정책을 본격 도입했으나, 지난 10년간의 노력이나 기대만큼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 내 투자 및 생활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지난 참여정부의 각종 규제와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2. 핵심정책 내용 및 논의 과정

‘경제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새 정부는 경제 분야 핵심공약의 하나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투자유치TF를 설치했다. 투자유치TF는 윤진식 팀장 주재로 자문위원회의(총 13회)를 개최해 외국인투자에 관한 대부분 이슈를 폭넓게 논의했으며, 이 같은 토의 과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방향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유치'로 정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성격을 '투자 유입'과 '투자 유치'로 구분하고 '투자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과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유입'은 별도 투자 유치 노력이 없어도 유입되는 자발적·시장지향적 투자 형태로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 경영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각종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면 증가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투자 유치'란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활동이다.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타깃기업을 선정하고 자원을 집중해 외국인투자 기업을 통해 신규 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 유입의 증가를 위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전략적 타깃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는 정책을 구별해 전자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전체적인 환경을 정비하고, 후자는 선별적 목표를 투자유치기관에 부여해 노력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투자유치TF 자문위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9차, 12차 자문위원회).

외국인투자의 자발적 유입을 늘리는 것은 전반적인 국가 수준을 기업이 활동하기에 유리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직결돼 있다. 매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바닥권을 맴도는 노사관계, 정부규제, 교육경쟁력 등을 향상시켜야 기업 활동이 촉진된다. 언어 소통 등 외국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것을 꺼리지 않게 될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외국기업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경영환경 개선사항으로 원-스톱 서비스, 산업입지, 노사관

이명박 당선인은 사야바니
두바이 투자공사 사장을 접
견하고 경제협력 방안에 대
해 의견을 나누었다.



계 등이 현안사항으로 토의됐으며,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교육·의료·교통·주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4차, 6차, 7차 자문위원회).

전략적 투자 유치활동은 능동적이며 집중화된 활동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국가경쟁력 향상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투자 유

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투자 유치산업이나 기업을 타깃팅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전략적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투자 유치 체제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정비해야 하고, 타깃기업에게 투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입지와 인센티브 등 유인수단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전략적 타깃팅을 위한 투자 유치활동 목표와 방법의 개선도 요구된다. 투자유치TF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투자 유치체제에 대해서, 4차와 5차 회의에서는 투자 유치 수단인 부지와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했으며, 9차 회의에서 전략적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3. 정책대안 :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

1) 일원화된 조직체계

전략적 투자 유치활동을 위해서 먼저 조직의 정비가 필요했다. 일관성 있는 투자 유치활동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조직이 부처의 이해를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1차 자문위원회의).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현안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통합 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산업자원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업무와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청의 통합이다. 재정경제부는 각 부처의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자문위원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외국 투자 유치나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특정 산업정책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고유의 업무와 조정기능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분산된 외국인투자 유치조직과 기능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정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3차 자문위원회의).

2) 협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타깃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기업 선정과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중요하며, 타깃기업에 투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유인도 필요하다.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이나 생산 요소에 끌려 자발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인센티브와 같은 추가적 유인이 필요 없겠지만, 많은 타깃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자발적 투자동기가 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깃기업이 우리나라 산업 정책상 필수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판단된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라도 유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타깃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과 인센티브 제공은 상호 연계돼 강력한 투자유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센티브제도는 경직적으로 운영돼 국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투자 인센티브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조세감면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령을 통해 인센티브의 구체적 요건과 내용이 모두 정해져 있어 유연성이 없으며, 더구나 투자 모국과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 TF는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현금지원 인센티브(Cash Grant)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현금 지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와 신축적 운영에 대해서 중점 논의했다(5차, 10차, 12차 자문위원회의).

3) 원활한 부지 공급체계 마련

외국인투자자의 주요한 투자 결정요인 중 하나는 부지이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고질적 장애요인으로 손꼽혀 왔다. 미국이나 영국 등 경쟁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대형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부지 부족이나 고가의 부지 매입비 등으로 인해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투자를 빼앗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유치TF는 현재의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 개념을 소유에서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유지 등을 활용해 장기

임대를 전제로 한 수요자 중심 임대산업단지를 조성·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국내외 투자기업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저가로 산업 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2차, 4차 자문위원회의).

4)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깃기업 선정을 위한 연구조직 설치도 거론됐다. 타깃팅을 위해서는 정교한 기법을 동원해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투자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정해야 하며, 기본적인 투자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교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한 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설치해 타깃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타깃 산업·기업과 연계된 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신규 산업 클러스터를 적극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는 산업별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방 산업 전문화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9차, 10차, 12차 자문위원회의).

5) 전략적 투자 유치활동 절차

이상의 투자 유치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향후의 투자 유치활동은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서비스산업처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등 전략적 선정 기준을 마련해 타깃기업을 선정한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타깃기업을 확정하고, 지식경제부, 지자체, KOTRA가 합동으로 TF를 구성, 선정된 기업에 대한 총력적인 IR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타깃기업 유치활동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매년 점검하고 타깃기업 리스트도 매년 갱신해 실효성 있는 유치활동이 되도록 했다(9차, 12차 자문위원회의).

4. 정책대안에 대한 이론과 반론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이와 같은 투자유치TF의 외국인투자정책 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첫째로는 외국인투자 유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반외자 정서로 대표되는 이러한 의견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외국기업은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기업 발전을 막고, 국가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투기성 외국자본이 우리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내고 떠나기도 하고, 대규모 외국자본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점유해 국내산업이나 중소기업 성장을 막기도 하며, 외국자본은 국가정책을 따르지 않아 정부 경제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화 시기 정부는 이러한 시각을 상당 부분 반영해 외국자본 유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국내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호주의정책보다는 외국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국가성장을 위해 더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TF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없애고 각종 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게 개선해 자발적인 시장동기형 투자가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판단했다.

2)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이견

둘째로는 투자유치TF의 타깃팅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외국인투자 유치방법에 대해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는 국내에 부족한 자본을 들여오고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 없이 가능한 많이 유치해야 하며,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에 주력했다. 투자의 효과를 고려한 선별적인 유치 활동보다는 백화점식, 다다익선(多多益善)

식의 투자 유치활동을 벌였다. 부족한 외환 확보와 이를 통한 위기 극복이 당시 국가의 당면 과제였으므로 이 시기에는 이 같은 정책이 적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우리 경제는 매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이 세계 5위에 달하고 있다. 지속적인 외환 유입과 달러화 약세는 원화 절상 압력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목표를 투자액으로 설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투자 부진현상은 부족한 투자자금보다는 낮은 투자 유인으로 인한 결과이며, 낮은 투자 유인의 가장 큰 원인은 고임금·고지가 등으로 인한 저생산성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외국인 직접투자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투자국에 새로운 산업을 창조시킬 수도 있고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는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와 같이 외국인투자 기업을 전략적으로 타깃팅하는 국가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투자유치TF는 '전략적 타깃팅을 통한 투자 유치'라는 산업 정책적 투자 유치정책 방안을 도출했다.

5. 정책 수행 기구

기업은 이익이 실현되는 곳에 투자를 한다. 시장 크기, 생산 요소 양과 질은 기업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생산 요소 공급은 투자 유치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유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요소 경쟁력은 크게 입지경쟁력과 인적자원 경쟁력이 있다. 위치, 인프라 발달 정도, 산업 집적화 정도 등이 입지경쟁력을 결정하며, 인적자원의 양과 질은 인적자원 경쟁력을 결정한다.

이러한 생산요소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여 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노력은 투자 유치의 필요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에 관련된 장애를 제거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상이한 이견과 상충된 이해를 조정해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투자 유치정책은 이러한 투자 유치 필요조건을 갖추고, 이에 기반을 둔 전략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을 타깃팅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식경제부, KOTRA나 지자체와 같은 투자 유치 담당기관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 이들 기관의 적절한 타깃팅,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효과적인 인센티브 협상 등을 통해 투자 유치의 충분조건은 성립되는 것이며, 이때 비로소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6. 평가와 계획

투자가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입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은 전반적인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경제체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투자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전략적 투자 유치정책은 외국인투자를 선별해 노력을 집중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투자유치TF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돼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면 이로 인해 다시 질 좋은 외국인투자가 유인되는, 이른바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투자유치 TF는 자문위원회의와 내부 토론을 거쳐 제기된 이상과 같은 정책대안들을 정리해 ‘외국 투자 유치 활성화’ 분야의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명박정부 국정과제’에서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인 ‘활기찬 시장경제’의 12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가 반영돼 적극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담당 : 정부혁신·규제개혁TF

1. 활동 개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은 국민을 더욱 잘 섬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운영의 열개를 짜는 작업이다. 민주화 이후 정부조직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책 수요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고, 정부 규모의 비대화, 정부운영의 비효율성, 과도한 정부규제로 글로벌 흐름과 매우 괴리돼 있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과 각종 위원회의 남설로 과도한 정부팽창이 이뤄졌고, 부처 수 또한 지나치게 많아졌다. 이에 따라 업무가 중복돼 있어 수많은 정책실패가 있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부 규모의 슬림화와 기능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명박정부의 핵심과제로 부각됐다.

이에 인수위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정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대 흐름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능은 과감히 폐지하고, 민간이 더 잘하는 것은 민간으로 보내며,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으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정부기능을 분석했다. 융합의 시대흐름에 맞춰 각 부처에 흩어진 비슷한 기능들을 한데 묶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유연하면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의 열개를 짜내는 작업을 수행했다.

2. 쟁점정책의 선정과 결론 도출과정

정부조직 개편안은 2007년 초부터 준비돼 왔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광승준 고려대 교수에게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보라”고 지시한 게 시작이었다. 이 지시를 받은 광승준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에 의뢰해 10여개 연구보고서와 개편안을 모았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가 2007년 12월 26일 정부혁신·규제개혁TF에 넘겨졌다.

TF에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과제가 넘겨진 이후부터 당선인까지 참여하는 본격 토론이 시작됐다. 쉽게 결론이 나지는 못했다. 한 개 부처를 없앴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의실험까지 하려다 보니 실무자들은 밤샘 작업을 해도 늘 시간이 부족했다.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최종 결정은 계속 미뤄졌고 당선인이 주재하는 토론은 15차례나 이어졌다.

실무자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은 각 부서의 업무 구획 나누기 작업이었다. 초기부터 개편안의 뼈대는 13부 2처로 정해져 바뀐 적이 없었다. 다만 부서 간 업무 범위를 정하느라 완성된 조직개편안만 세 차례 당선인에게 보완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여성부 등은 저마다 자기 부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며 치열한 여론전과 로비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당선인의 결재가 세 차례나 보류됐던 최종안은 1월 14일 밤 당선인에게 보고됐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1월 16일 최종 발표하게 됐다.

1월 16일에 발표한 내용은 현행 18부 4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한다는 것으로, 현행 18부 중 통일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여성부·과학기술부 등 5부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돼 전체적으로 13부로 축소 조정되는 것이었다. 현행 4실 10수석 체제인 청와대는 1실 1처 7수석 체제로 축소되고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 2명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됐다.

3.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1) 필요성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나타나고,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생태 위기가 고조되고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는 한편, 에너지값 폭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사회양극화로 성장동력이 쇠퇴하고, 사회통합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도록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몸집불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참여정부는 총 566차례에 걸쳐 조직을 개편해 공무원 11%, 장·차관급 32명, 각종 위원회 52개를 늘렸다. 교육이나 금융·의료 등에 필요이상으로 간섭해 민간과 지방의 활력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었다. 한편 재난예방이나 질서유지, 사회안전망 등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 참여정부 정부 조직 및 공무원 수 비교(초기 대비 행정기관 12%, 공무원 7.5% 증가)

구분	2003.2.24	2007년 말	증감(%)
중앙행정기관	58	65	7(12.1)
장관	33	40	7(21.2)
차관	73	96	23(31.5)
1~3급	1,017	1,214	197(19.4)
행정부공무원수	885,164	951,920	66,756(7.5)

주 : 2005년 공사로 전환된 철도청 29,623명을 감안하면 사실상 96,379명(10.9%) 증가

2)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모습

새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는 ① 앞날에 대비하고 기회를 준비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② 민간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지방의 활력을 돋우는 작은 정부 ③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 ④ 칸막이 없이 유연하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일과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이나 지방이 더 잘하는 것은 민간과 지방에게 맡겨 신바람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부 기능과 조직을 정비했다. 한편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더욱 강화했다. 사회갈등 및 사회적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한 예방·대처 기능도 보강했다. 사회복지기능을 통합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에 걸친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국민권익보호 창구를 일원화했다.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대폭 축소하고, 여러 부처로 흩어져 수행되던 비슷비슷한 기능들은 한군데로 모아 기능적 연계성을 높였다.

3) 기능별로 편제된 부처의 새로운 모습

(1) 기획재정부 : 재정기능 일원화와 정책조정 역량 내실화

그동안 정부의 정책 기획·조정기능과 재정정책 기능이 분산돼 낭비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가 제각각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예산과 국고, 조세 등 재정기능이 분산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조정비용을 유발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중요한 국가 현안인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조차 불분명한 상태이다.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의 재정전략과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기능을 결합해 미래 대비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 신설로 기획·조정기능과 재정기능이 융합됨으로써 정책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강화된 재정기능을 바탕으로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위험도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교통일부 :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의 융합

통일정책은 주변 국가, UN 등 국제기구의 대외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나, 그동안 통일정책 담당부처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로 이원화돼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양부처의 통합으로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과 주변국의 입장 등 국제적인 맥락과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 속에서 유리한 통일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도 더욱 조화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금융위원회 : 금융산업 선진화의 초석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가 결합해 금융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로의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글로벌 금융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의지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운용과 함께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기관으로서, 직접적인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에 대폭 위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과 규제개혁에 전념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식경제부 :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 선도

미래 산업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출현하고, 산업과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고 있다. 그동안 산업정책은 때로는 영역별로, 때로는 기능별로 나뉘어 땅 싸움에 날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시 부처 간 역할 조정에만 8개월 소요됐고, IPTV 도입문제도 방송·통신부처의 갈등으로 수년간 표류했다.

지식경제부의 신설은 정보통신(IT)과 산업기술, 산업정책을 통합해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과 실물경제, 산업과 지식·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끌어내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물꼬를 터나갈 중추부처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산업과 기술개발을 같은 부처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초단계부터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부처 할거주의'를 벗어나 전체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등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5) 농수산식품부 : FTA 파고에 공세적으로 대응

그동안 농어촌과 농수산업 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 WTO(세계무역기구)와 FTA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촌과 농수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 또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미약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도 애로를 겪고 있었다.

새 정부는 농수산식품부를 신설해 농어촌의 발전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역량을 결집하고자 했다.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금융지원 정책이 통합되고,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식품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교육과학부 :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 투자

교육부는 입시제도 등 단기 현안에 매몰돼 정작 국가의 미래 주역인 차세대 육성에는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다. 규제 위주의 교육정책이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정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전인적·미래지향적 관점의 평생교육,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미래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정책과 과학인력 양성기능을 결합해 학교교육 위주의 틀을 벗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도전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부' 로의 개편을 추진했다. 또한 신설되는 교육과학부는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일 것이다.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되고, 학생선발,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계획 수립 등 대학에 대한 규제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7) 보건복지여성부 :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 구현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추진돼 왔다. 비슷한 업무가 3개 기관에 나뉘어져 있다 보니 서로 자기 일이라고 우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책임을 미루는 일이 발생해 왔다.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헤매기도 했다. 일선에서는 같은 곳, 같은 사람이 담당하는데 정작 중앙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가 다른 정책을 내놓아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결국, 한 곳에서 할 일을 나누어 처리하다 보니 예산·인력이 낭비되고 일선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나,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하는 고민이 발생한 것이다.

새 정부는 보건복지여성부를 신설해 서로 담을 쌓고 있던 사회복지정책 부처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제는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평생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이나 복지시설 등을 통합해 활용함으로써 예산 등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자원의 가치 제고

우리 국토는 지금까지 육상은 건설교통부, 항만과 해양은 해양수산부, 산림은 산림청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개발해 왔다.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는 국토 및 해양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성장잠재력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고자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육상·해양·산림 등 국토자원이 통합 관리될 것이고,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해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다.

(9) 국민권익위원회 :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국민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있으나,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관은 많아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형편이다.

새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리 구제기관을 통합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만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해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해결해 줄 것이다.

(10) 정부위원회는 절반 이하로 축소

참여정부에서는 416개의 위원회가 난립해 위원회공화국을 이뤘다. 위원회는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좋은 면도 있으나, 의사결정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비판이 있다. 때로는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돼 예산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새 정부는 일부 위원회를 폐지해 전체 위원회 숫자를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환경변화로 존치 이유가 없는 경우, 운영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소관 부처 장관이 위원장인 단순 자문위원회, 해당 부처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등은 과감히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것이다.

4. 쟁점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

1) '대부처주의=선진 시스템', 검증 안된 논리?

대부처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칸막이 없이 유연하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기구의 대부처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15부, 일본은 13부·성, 프랑스는 15부로 부처 간의 벽을 허물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조정비용을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현행 정부부처가 산업별로, 영역별로 제각각 칸막이를 만들고, 땅 싸움에 날을 지새우는 시스템을 이제 고쳐야만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다.

2) 유례없는 졸속 처리?

당선인은 1년 전부터 정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 문제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했고,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축적된 정부조직 진단 결과를 개편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인수위는 학계에서 제기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방안 20여 가지를 참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이번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방향을 예견하고 있었고, 기능 개편의 대부분은 언론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20일 동안의 졸속 개편으로 보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

3) 미래전략 부처의 폐지로 국가경쟁력 약화?

(1) 정부통신부가 없어도 세계일류 가능한가?

1994년 정보통신부 출범으로 초기 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를 선도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 것은 인정하나, 현재의 정보통신부 조직으로는 산업의 IT 활용, 산업 간 융합, 신산업 창출 등의 과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초고속통신망 등 IT망은 우수하나 IT의 산업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미흡한 편이고, 반도체·휴대폰·LCD 등 IT 제조 분야는 강하지만 S/W, IT 서비스 수출은 인도의 1/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IT산업이 조선·섬유 등

주력산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고용창출 등과의 연계도 부족하다. 더구나 기업 지원 기능도 업종과 영역별로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 등에 분산돼 기술의 융합과 신산업의 출현 등 여건변화에 효과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지식경제부의 출범으로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고, 기존 제조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금은 기술융합, 산업간 컨버전스 시대로 IT산업이 다른 산업과 만날 때 효과가 극대화되고, IT산업이 오히려 발전하는 시대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산업 주무부처가 다른 산업과 함께 IT산업(H/W, S/W 및 IT 서비스)을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오히려 IT 전담부서가 있는 나라는 중국·베트남 등 IT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일부 개도국에 불과하다.

(2)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

과학기술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통합되는 것으로 과학기술부의 90% 이상의 인력·조직·기능이 교육과학부로 이관된다. 과학기술부 정원 544명 중 40명 내외, 42개과 중 4-5개팀, 소관 법률 37개 중 7개만 지식경제부로 이관된다. 과학기술부라는 '명칭'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며, 기초기술 연구개발은 여전히 교육과학부에서 수행하게 된다.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화 등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볼 때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과 기술을 동시에 수행하기보다는 지식경제부에서 기술과 산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과학기술부를 발전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지금은 과학이나 기술이나의 이론적 논쟁보다는 어떤 방향이 국가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이러한 실용주의적 개편안에 대해 '과학기술부를 타부처와 통합하면, 과학기술이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2006년 현재 GDP 대비 3.2% 수준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GDP의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

이번 개편안의 내용은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통합하는 것이다. 통일문제는 더 이상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다.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

는 국가적 과제이고, 모든 부처가 협조해 다뤄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새 정부는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일관되고 조화롭게 추진해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4강 외교, 북한 비핵화 등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북정책, 통일정책과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대북 업무는 외교통일부뿐만 아니라 국방·정보·재정·건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부처가 협조해 추진할 예정이다.

(4) 기획예산처 폐지로 사회복지 분야 위축?

국가재원 배분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가 독립부처여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신설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미래전략 차원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5.쟁점 해결을 위한 노력

인수위에서 마련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은 1월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전 부처의 기능이 대폭적으로 정비되는 것이라 726개 법률이 부칙으로 개정됐고,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5개의 법률이 제·개정돼야 했다.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이해관계자도 많고, 통합되거나 변화가 큰 부처의 공무원들이 부처의 생존을 위해 부처생존의 필요성을 정치권 등 각계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참여정부가 공들여 만들고 가꾸어온 철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조직개편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며 국회가 정부조직법안을 인수위의 안대로 의결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시사가 국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1월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정부조직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은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부처통합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입장의 대표논리는, 세계적인 추세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일정책과 여성정책은 상징성을 고려해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라는 전담부서에서 수행해야 효율적이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등도 해외에서 벤치마킹하는 대상이므로 다른 부처와 통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재편되는 것에 따른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정치권, 전문가 및 부처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원칙을 가능한 지키는 선에서 국회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1차 협상은 2월 5일에 이뤄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의원과 이한구 의원, 김형오 의원이 참석했고,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김효석 의원, 유인태 의원, 김진표 의원이 참석했다. 양측은 통일부 등 통합되는 부처의 존치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원칙은 부처이기주의나 이해집단의 이기주의를 초월해서 국가의 효율적 운영과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시대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월 8일에 이뤄진 2차 협상에서는,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양보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는 애당초 인수위가 ‘협상용’으로 폐지 목록에 올려 놓은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유엔 등 국제기구도 반대하는 것이었기에 양보한 것이라며 맞섰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이 꼭 반영하고자 하는 대안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또 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연기됐다. 이후 3차와 4차 협상이 2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이뤄졌으나 협상은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인수위에서는 2월 12일 이경숙 위원장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규제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부의 기능과 조직개편안’ 협상에 대통합민주신당 측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민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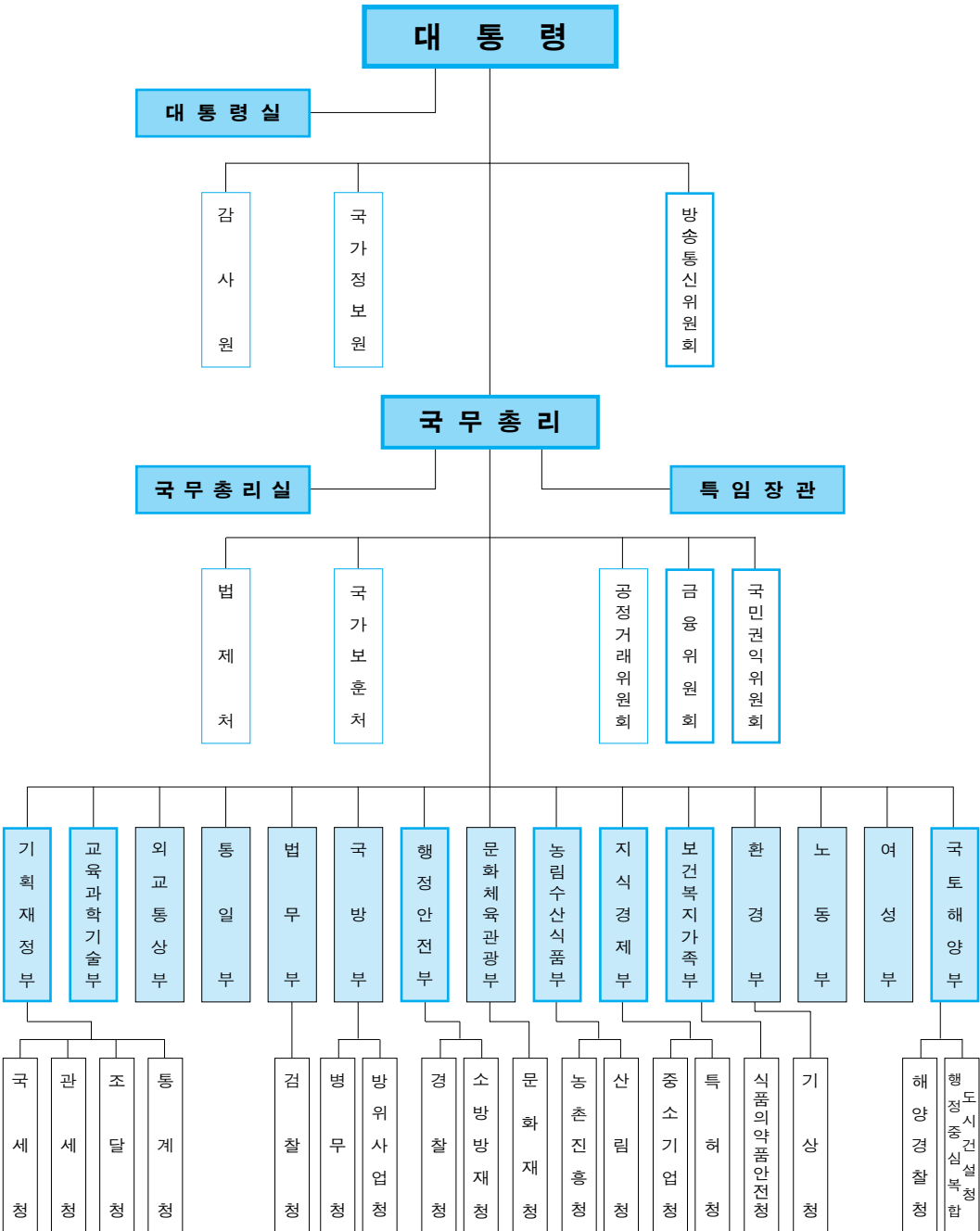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2월 21일 한 달의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었고, 2월

23일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 인수위가 당초 마련했던 13부 2처의 개편안은 15부 2처로 변경됐다. 최대쟁점이었던 해양수산부는 인수위 안대로 폐지돼 국토해양부로 통합됐고, 여성부는 부처가 존속되는 대신 가족정책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넘겨주고 기능이 축소됐다. 통일부도 독립된 부서로 남게 되면서 개성공단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아닌 통일부 업무로 존속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여야의 의원비율을 3:2로 하기로 했다.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로써 새 정부는 새롭게 짜여진 직제에 맞춰 출범할 수 있게 됐다.

6. 평가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이 발표되자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부축소와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수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박재완 팀장이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학회, 시민단체 공청회 등에 참석해 개편취지를 적극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가 확인될 수 있었다.

인수위에서는 정부조직법안을 제출한 후에도 공론화 절차를 최대한 갖추기 위해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협상을 추진했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쟁점별로 협의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결실을 거두지 못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정운영자가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을 반영해 선택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당선인에게 ‘국민을 편안하게 하게 하되, 경제를 살리라’는 시대정신을 보여주었고, 당선인은 국민의 뜻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정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하고자 한 것이다.



※ 부총리제 폐지

※ 제외기관(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피해자지원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위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대운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준비와 쟁점 대응

담당 : 한반도대운하TF

1. 활동 개요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해 관련 기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보도와 국민여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의 당위성과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프로젝트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에 대비했다. 대운하 프로젝트가 실제로 추진되기 시작할 때 예상되는 쟁점과 이의 해결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환경·문화·물류 등의 사회적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2. 쟁점 대응 방안의 배경

대통령당선인이 대선 후보 당시에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대운하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도 큰 이슈로 부각됐을 뿐만 아니라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명확한 논거 제시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반도대운하TF는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 반대측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쟁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3.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TF에서는 특히 언론에서 제기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언론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문제 및 추진 절차

(1) 언론이 밝힌 문제점

서울신문(1.9)은 초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와 경제성, 환경성, 법적 절차를 따지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환경칼럼(1.10)을 통해 “진짜 민자사업, 진짜 환경영향평가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운영수익 보장, 배후단지개발권의 특혜는 곤란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우회하는 편법은 배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1.11)을 통해 착공이 전제돼 있는 여론수렴은 곤란하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고, 중앙시평(1.24)을 통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득 또는 의견수렴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설문조사(1.14)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고객이 될 컨테이너업체 중 57%가 운송시간이 길어 경부운하 이용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칼럼(1.14)을 통해 대운하에 대한 논의는 정치와 이념 굴레를 탈피하고 객관적 자료와 논리에 의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문화일보는 사설(1.14)을 통해 대운하사업은 국민적 납득·합의를 중시해야 하며 대운하의 경제성과 미래지향성,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국민 앞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1.16)은 대운하의 추진과정상 문제점으로, 100% 민자추진에 대해 안전장치가 없는 민간참여에 의문이 있음을 제시하고 여론수렴이 요식행위화할 가능성, 주변지역의 투기조짐 발생, 환경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음을 주장했다.

(2) 한반도대운하TF의 검토 결과

대운하사업은 시장원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될 것이며, 민간의 제안이 이뤄질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대운하사업은 100%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앞으로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관련 법률에서는 운영수익보장제도가 폐지됐으며, 환경영향평가 등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경부운하는 부산항 기종점의 환적 및 물류기지, 각 터미널의 선적·양하 시스템 등이 뒷받침될 경우 장래의 수출입물동량 증가를 감안할 때 운하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2) 기술 분야

(1) 언론이 밝힌 문제점

서울신문(1.12)은 대운하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더 중요하며, 단지 바지선에 의한 컨테이너 이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기·통신·에너지·물류가 함께하는 다목적 운하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겨레(1.16)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원 연구원의 견해를 인용해 경부운하 일부구간에 범람 위기가 있으며, 수위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분류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금호강·황강·남강 등 주요 지류들의 제방 높이기 등 홍수대책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경향신문(1.27)은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의 견해를 인용해 조령터널의 위험성이 있어 분야별 전문가집단(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과학적 타당성 검토가 우선돼야 함을 제시했다. 중앙일보(1.27)는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개발사업단장의 견해를 인용해 배수 문제 분석, 주운수로 준설계획 검토 등 경제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조사와 분석이 더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세계일보(2.4)는 대운하 공기단축을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 기준면적을 대폭 완화한다는 점과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우려해 학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 한반도대운하TF의 검토 결과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의 추진은 운하로 인한 국토개조에 목적이 있으므로 추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그 결과가 반영될 것이다. 김원 연구원은 해명보도자료(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통해 한겨레 기사는 한강·낙동강에 대해 최대 9m 준설, 최대 11m 보 설치를 가정해 추정한 것이며,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경부운하계획과는 보의 위치, 보의 운영방법, 하상 준설량 및 준설구간 등이 일

치하지 않으므로 기사내용은 경부운하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발간한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질이다』에 따르면 주운보를 고수부지보다 낮게 설치하고 수문은 계획홍수량보다 크게 설치해 홍수시에는 완전 개방하므로 계획홍수위는 현재보다 낮아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령터널 구간은 화강암으로 이뤄진 단단한 지층구조로서 국내 건설기업들은 수로에 있는 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석회암으로 이뤄진 일부 구간은 누수방지를 위해 바닥과 측벽 하부를 방수시트로 시공할 계획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배수문제 및 주운수로 준설계획과 관련해 한반도대운하는 수문(水門)이 있는 '가동보'로 건설되기 때문에 홍수시 수문을 열면 통수단면이 증가해 오히려 기존 홍수위를 1~2m 저하시키는 등 치수효과가 발생하며, 굴착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지하수 변화 등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시행면적을 완화하더라도 1억 5,000만㎡로 반드시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면적 완화(3만㎡→10만㎡)는 대운하사업과 관계가 없다.

4. 정책 방향 설정 및 구체화 방안

1) 친환경적·친문화적 추진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가 친환경·친문화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TF 지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사안별 검토항목들과 그동안 언론보도 및 환경·문화재 관련 단체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법령과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문화재 조사·발굴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TF에서는 앞서 논의된 사안들이 사업조건에 충실히 반영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건설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사업시행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추진단계별로 환경·문화재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개선체제 마련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물류 인프라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물류 인프라 시설을 위한 부대사업의 발굴도 필요하다.

육로운송에서 운하운송으로 화물 수송 물량을 전환하고 또한 그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부산 간 운송비용이 기존 도로·철도 노선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항만시설과 운하시설의 연계기능, 수출화물의 선적 및 통관제도의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계기능이라 함은 부산지역의 항만에서 서울지역의 터미널행 바지선에 화물을 환적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의 물류기지를 갖추는 것이다.

3) 문제점 해소 및 국민 이해 증진

TF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반대 의견과 국민여론 등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안별 검토사항을 정리해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된 사안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반대측 비율이 찬성측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들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운하 프로젝트가 친환경·친문화적인 운하건설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GIS를 활용한 입체적인 동영상과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분야별로 상세하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F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 대국민 홍보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4)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민자사업 추진조건 마련

(1) 추진조건의 객관성·창조성·효율성 확보

한반도대운하TF, 정부부처, 추진기구 등은 사업조건에 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조건과 추진여부에 관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실제 민간부문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경우 민자대상사업으로의 확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등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및 반대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견들을 기초로 해 사업조건과 비용·편익분석에 관해 좀더 면밀하고도 객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특히 물동량 예측과 사회적 편익산정에 관한 항목에 관해서는 현재의 물류운송제도만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물류운송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젝트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을 때 정부부담액의 최소화, 추진기간의 단축 등 효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3자 제안공고의 평가조건에 총사업비 상한, 정부부담액 상한 등을 반영함으로써 협약 체결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자 선정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설계·시공 동시시행(Fast-track)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2) 경쟁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방안 제시

경쟁에 의한 사업자 선정방안으로 제3자의 참가조건, 컨소시엄 구성방법을 추진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반대측이나 언론에서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는 추진규모가 역대 가장 큰 규모임으로 인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될 대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유의해 세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혜시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부문이 공동협의체(TF)를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제안을 할 경우 시공능력 상위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컨소시엄별로 최초 제안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제안자로 인정하기 위한 제안서 제출요건에 관해 더욱 구체적인 기준과 적격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의 대운하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넓히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경부운하 전체 사업구간을 구간별로 분할해 시행하는 방안과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제한 및 우대조항을 부여(참여회사수, 중소기업, 외국기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통령 기조와의 연관성

이명박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국토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을 물길로 연결해 환경개선,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재해예방, 물류혁신, 지역경제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실천이 바로 한반도대운하 건설이다.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성숙한 세계국가'가 제시됐고, 창의적인 문화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47개 국정과제가 제시됐으며, 이 중에서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대운하 건설 추진'이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환경친화적이고도 친문화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를 위해 그동안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는 전문가 자문회의, 정부부처 실무진과의 논의 및 검토, 언론과 반대측의 문제제기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대응논리 제시, 대국민 홍보와 국민여론 수렴 등을 수행해 왔다.

6. 평가 및 향후과제

한반도대운하는 친환경적이며 친문화적인 사업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IT기술과 조선·건설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구조를 선진화하고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당선인이 최근 관광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바이는 사막을 파서 운하를 만든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창조적인 프로젝트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대운하 프로젝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왜곡하려

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확한 논거를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추진돼야 몇 가지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반도대운하TF에서는 한반도대운하 바로알기 동영상 제작해 홍보하고자 한다. 위성사진과 GIS 등을 활용해 만들어진 동영상은 한반도대운하의 친환경·친문화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자체·학회 등을 중심으로 토론회·설명회·현지답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친환경·친문화적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NGO 포함)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생태계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환경대책

담당 : 새만금TF

1.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

1) 활동 개요

지난 1991년 착공 이래 중단과 속행을 거듭해온 새만금사업은 2006년 3월 대법원의 계속공사가능 판결로 공정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같은 해 4월 역사적인 방조제 끝물막이공사가 완료됐고, 이듬해인 2007년 12월에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새만금TF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이를 실체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공약으로 발표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건설’을 조기 실현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공약이행의 선행조건은 농지 위주로 구상된 당초 토지이용계획을 새롭게 설정한 사업의 방향과 개발목적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이었다. 새만금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2007년 4월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을 과감히 변경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확인, 법적 근거와 절차 파악, 수정과 보완을 위한 자문회의 등을 거쳐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안을 마련했다.

또한 기본구상 변경에 따라 수질개선 등 환경문제, 매립토 확보방안, 용수공급 방안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며, 특히 환경대책은 새만금 유입수에 대한 수질개선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선정, 집중 논의했다.

2) 추진배경

최근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과 함께 한국·일본 등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새만금의 용도를 농지 위주에서 금융·물류·관광 등 다기능 복합용지 중심으로 변경하자는 것은 이 같은 지정학적 가치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확보, 즉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공약으로 새만금TF는 팀 구성과 함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방조제 완공에 이어 내부개발 추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은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점과제 선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질대책은 기본구상 변경에 따라 선행되어야 할 대표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 중점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3) 기본구상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기본방향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의 골자는 농업용지 71.6%를 30% 이하로 축소·조정하고, 대신 산업용지와 기타용지를 늘리는 것이었다. 이는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임을 감안해 합리성과 생산성, 경제성 등을 검토한 뒤 시대적 수요에 걸맞은 새로운 토지이용 기본구상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되, 신정부 임기 내 추진과제와 중장기과제를 검토해 향후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유보지를 대량 확보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 결과 농지축소에 따라 확대되는 기타용지를 대부분 유보용지로 전환하되, 향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예상용도를 잠정 지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특히 환경용지 등은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구상에 반드시 포함키로 했다.

(2) 관련 기관 의견청취

팀에서는 먼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의 의견과 이를 조정해온 국무조정실, 그리고 개발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했던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의견을 차례차례 청취하기로 했다.

농림부 업무현황 청취는 1월 2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의 사업공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문·자문위원의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TF가 제안한 용도변경 방안을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농림부가 농지축소 방안에 대해 전향적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를 계기로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TF팀은 일단 농지를 대폭 축소하되 법적 검토와 절차, 그리고 그 범위는 국무조정실 등 나머지 유관기관의 의견청취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는 1월 7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내부토지이용 변경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사업 시행 전에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TF에서는 새만금특별법이 발효되는 2008년 12월 이전에 기본구상변경을 확정짓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판단, 국무조정실의 적극적 검토를 당부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문·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초안으로 작성된 변경안은 농지축소로 발생하는 용지를 새로운 수요가 예측되는 에너지, 첨단산업 등에 대폭 배분하는 안으로, 이를 당선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2007년 4월 당초 안을 마련할 때 참여했던 5개 연구기관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당시 면적배분의 원칙과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기관회의는 1월 8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기본구상 마련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기본 구상안을 변경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지적했다. 이때 새롭게 검토사항으로 대두된 내용은 공업·생활용수와 매립토 확보방안, 환경문제 해결방안, 분양가 상승요인 배제방안 등이었다.

(3) 변경안 검토와 현지방문

TF에서는 당초 기본구상이 농지우선개발, 친환경순차개발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용도변경시 반영한 자료를 참고해 변화에 대응키로 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월 5일 자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농지축소를 위한 선결과제로 수질개선 등 환경문제를 꼽고, 추진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효성 있는 변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방문은 계획보다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익산시·군산시·김제시의 입장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으며,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정보는 변경안을 정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됐다.

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 초안이 만들어져 강현욱 팀장의 책상 위에 올라간 것은 1월 9일 아침이었다. 13일로 예고된 당선인 보고일자에 맞춰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작업한 결과물이었다.

이후 강현욱 팀장의 검토와 이에 따른 수정이 몇 차례 거듭됐고, 최종 보고서와 함께 변경된 도면을 만들어 10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에게 1차 보고를 했다. 강현욱 팀장의 보고를 들은 사공일 위원장은 추진 실천계획을 마련하되 거시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특히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부토지이용 가운데 원유 유통산업은 식품가공 등 친환경산업 육성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개발기본구상 변경안은 이처럼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공약을 바탕으로 초안을 잡기 시작해 전문위원·자문위원회, 소관 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보완·개정을 거듭한 끝에 비로소 하나의 안으로 탄생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새만금TF팀.

(4) 당선인 보고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당선인 보고일시가 1월 16일로 정해졌다. 이미 국정과제보고서를 통해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온 새만금TF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보다 명료하면서도 충실한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으며, 한편으로는 내부토지이



용 기본구상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비를 산출하기 시작했다.

당선인 보고서에는 내부토지이용 변경안을 비롯해 사업의 조속추진을 위한 수질개선방안과 개발가능지역의 우선개발계획, 신항만건설계획 등이 담겼으며, 사업완공 연도를 당초보다 10년 앞당긴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당선인 보고는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약 40여분 동안 이뤄졌다. 강현욱 팀장의 보고를 받은 당선인은 사업기간 단축과 신항만 건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수질개선 등 환경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 수질개선대책 마련

1) 수질대책 추진현황 파악

개발의 조기착수가 중점추진과제로 검토된 것은 새만금사업 추진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문위원, 자문위원들은 사업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히는 것 못지않게 개발을 조기에 착수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 조기착수를 위한 선결과제는 역시 수질개선이었다. 특히 새만금 상류에 위치한 왕궁축산단지가 뜨거운 감자였다. 익산시 자료에 따르면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거주지역인 이곳에서는 250여 농가가 총 11만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하루 발생하는 폐수만도 1일 700m³~1,000m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는 익산북부하수처리장 현장방문시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한 고도처리시설 보강공사를 2월 중에 발주한다고 보고했다. 하루 처리용량 700m³ 규모의 이 시설을 가동해 왕궁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돈분을 고도처리하고, 현재 공동처리 중인 일반생활하수는 별도의 개별시설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법적 수질기준인 BOD 30ppm, T-P 8ppm 보다 훨씬 개선된 물이 방류되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TF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했다. 이미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단 한 방울의 폐수도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처리시설을 통해 이번 기회에 수질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것이 TF의 내부방침이었던 것이다.

2) 무방류 시스템 도입방안 검토

(1) 제안에 대한 검토

무방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5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고도처리시설 보강공사는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보강공사를 통해 폐수의 수질을 기준치 이하의 양호한 상태로 배출할 수만 있다면 굳이 무방류시설 도입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을 비롯해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먼저 새로운 처리방식에 대한 지식 범위를 넓히기 위해 2008년 8월 완공 목표로 현재 충남 논산에 무방류돈사를 건립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양계업체인 H기업 관계자의 조언을 듣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열린 1월 12일 수질대책간담회에는 H기업이 추천한 폐수처리 전문가를 비롯해 새만금TF 팀장, 전문·자문위원뿐만 아니라 농림부 축산팀장도 참석,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H기업이 국내 최초로 건축하고 있는 신개념 돈사는 완전 밀폐형으로 폐수는 물론 냄새까지 잡는 첨단시설로 조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축산업도 이 추세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의 돈사가 들어선다면 왕궁의 폐수 걱정은 끝나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다. 일단 시설비·운영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왕궁축산단지 돈사 전체를 이 시설로 바꿀 경우 총사업비가 약 9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TF에서는 이를 'H안'이라 이름해 【방안1】로 정하고,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때 전라북도 완주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수소에너지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P기업 대표가 사무실을 찾아와 새로운 폐수처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 안이 후에 【방안2】로 검토된 이른바 '파우더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자신들이 수소발생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명 '세라믹 파우더'를 축산폐수에 투입할 경우 함수율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동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수분 98%에 가까웠던 돈분이 파우더를 투입하자 3~4시간만에 건조해져 일반 흙에 가까울 정도로 보송보송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방안의 경우 폐수는 방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역시 비용 문제가 검토대상이 됐다. 기술의 핵심인 원료의 원활한 공급 가능성도 확인해

야 할 사항으로 남았다.

이러한 방안 이외에도 전문·자문·실무위원들이 검색과 수소문을 통해 찾아낸 갖가지 방안들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관계로 검토방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 중에는 신기술을 도입한 폐수정화시설도 있었고, 톱밥돈사 등 기존의 방식을 개선한 시스템도 있었다.

(2) 효과 검증을 위한 현지방문

TF에서는 처리 시스템에 대한 실증 확인 및 검토 일환으로 현지방문을 계획했다. 우선 【방안1】과 【방안2】의 실체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두 현장은 각각 전라북도 익산과 완주로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양재삼 자문위원과 이란우 실무위원이 전라북도를 방문한 날은 1월 26일로 인수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얻게 된 공식 휴일이였다. 그러나 이미 계획된 출장이었기 때문에 일정을 미룰 수 없었다는 말에 P기업 대표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P기업이 제안한 일명 ‘파우더 처리방식’에 대한 확인은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처리의 노하우가 파우더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회사 노하우라며 굳이 성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파우더를 돈분이 포함된 폐수에 투입하자 30여분 내에 거짓말처럼 보송보송한 흙으로 변했다. 원료 가격 문제를 걱정하자 P기업 대표는 다각적 원료공급 루트를 개발하면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료분석학에 남달리 조예가 깊은 양재삼 자문위원은 리트머스 산도를 측정하는 등 간이분석을 통해 파우더 방식의 위해성 등에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가동을 전제로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집중 질문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골몰했다. 다른 방안들과 비교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3) 일부 제안, 시범사업으로 도입

양재삼 자문위원이 분석한 제안내용 검토보고서가 1월 31일 TF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개최된 전문·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채택의 가치가 충분한 제안이지만 아직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를 전면 도입하는 것보다는 우선 일부지역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TF에서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왕궁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1일 1,000m³의 축산분뇨 가운데 700m³는 고도처리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고, 나머지 300m³는 ‘H안’ 또는 ‘파우더안’을 포함, 여타 기술

들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분석·검토한 후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축산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론지었다.

3.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

새만금 수질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선 만경강(81km), 동진강(45km)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체 유입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TF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보완하거나 완공시기를 단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축산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맑은 물 유입량 증대를 위한 어우보 취수지점 변경사업 등 추가사업 추진을 제안기로 했다.

또한 만경강·동진강 둔치 경작허가에 대해서도 임대기간이 지난 뒤에는 더 이상 불허하는 방안을 수질개선 차원에서 전라북도 등 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기로 했다.

다행히도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파악한 강 유역의 수질은 당초 새만금 수질 대책 수립시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대치에 대한 확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자치단체마다 환경 관련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TF 활동을 통해 제시된 안들이 시행될 경우 수질문제는 2010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글로벌 과학연구 거점 조성

담당 : 과학비즈니스벨트TF

1. 활동 개요

과학비즈니스벨트TF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의 먹줄거리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로 글로벌화된 과학연구 거점 조성을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했다.

세계 일류화를 추구하는 선도(leading)전략으로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연구자를 끌어들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창조적 과학연구와 비즈니스·문화·예술 활동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과학비즈니스 생태 환경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과학연구 거점의 글로벌화는 우선 해외의 과학 석학 유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 유치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하기에 TF에서는 미리 해당 분야 석학들의 풀(Pool)을 구성하고, 인재 유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접촉을 해오고 있었다.

핵심인재들이 사업 시작부터 참여하면 글로벌한 관점에서 향후 계획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재 영입에 대한 작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었다. TF에서는 인재풀을 별도로 작성함과 동시에 핵심인재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해외연구소 방문, 해외거주 과학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글로벌 과학거점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내 과학기술인 및 전문가들과도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가져 글로벌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계 최고 인재를 영입하고 튼튼한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주거여건, 교육환경, 연구시설이 열악한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유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따라서 국제적인 공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럽·일본 방문 등을 통해서 국제공조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2. 쟁점정책의 선정과 배경

1) 당선인의 글로벌 협력체제 강조

2008년 1월 30일 TF 당선인 업무보고 중 당선인은 사업 시작부터 글로벌한 연구벨트 조성을 위해 글로벌 석학, 기업과의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당선인은 대선출마 이전인 2006년 10월 해외정책탐사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소들을 방문해 세계적인 연구 환경을 살펴보고, 과학 석학들과의 만남을 통해 과학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따라서 당선인은 과학연구가 세계적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체제의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미래의 먹줄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 선진 과학기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글로벌화의 필요성

현재 우리 국가경쟁력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과학기술경제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 과학기술경제로의 전환은 해외에서 우수한 과학 석학을 유인함으로써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난 6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저임의 고급 노동력과 기간산업 중심의 자본 투입을 통한 추격 전략하의 산업구조 발전에서

벗어나 선도국가에 걸맞은 지식기반을 구성할 기초연구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적절한 연구개발과 지식 생산의 기여가 높은 선진국형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두뇌 확보를 통한 기초과학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국부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글로벌 과학거점 조성을 위한 필수조건인 해외석학 유치와 글로벌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3. 쟁점정책 소개 및 의의

세계 정상급 고급 과학두뇌를 유치·활용해 최고의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연구 인력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세계적인 과학두뇌를 양성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글로벌 과학거점의 핵심인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팀을 이끌 세계적인 석학을 파격적인 대우와 장기계약을 통해 집중 유치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운영안을 준비했다. 이는 국내 연구 인력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 및 국내 출연연구기관과의 R&D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해 과학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과학 거점이 비즈니스 거점으로 연결되는 벨트로의 확장성을 지향했다.

4. 쟁점정책의 단계별 논의과정

글로벌 과학거점 조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듭했다. 특히 해외인력 유치와 글로벌 연구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했다.

1) 과학벨트 내 외국인을 위한 생활여건 조성 검토회의

과학벨트 내 외국인을 위한 생활여건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녀교육, 가족취업,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내 정주여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외국인에게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시 내국인 동료의 보증을 요구하고, 휴대폰 개통, 온라인 쇼핑 이용 등 생활필수품 구입시 내국인에 비해 절차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행정기관·병원 등에서 영어 서비스가 안되고, 해외유치 과학자 배우자의 국내취업 기회 제한으로 장기간 체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외국인투자자는 주로 전세·월세 등 임대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높은 임대료'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세·월세의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건립 지원, 주택정보 제공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비싼 학비와 외국인학교 부족이 불만사항으로 파악됐다.

이런 제한은 외국인이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든 여건을 외국인에 맞추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이며, 적극적으로 한국적인 환경을 만들고, 독특한 문화를 조성해야 외국인들도 호감을 가진다는 의견이었다. 핵심적인 교육·의료시설은 최대한 외국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야 하지만, 모든 생활환경을 외국인에게 맞추다면 오히려 특색이 없는 무채색의 거주환경이 될 것이며, 결국 글로벌 거점 구축은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2) 외국 석학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회의

외국 석학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글로벌 과학거점 구축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외국 석학의 실질적인 유인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환경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

해외 인력의 유치를 정주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면 상대적으로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이 축소되는 부분을 우려했다.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필요하지만, 불편을 없앤다고 불만사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환경, 즉 교육과 의료 등은 세계적 수준의 환경을 구축해야 하지만 연구 환경을 독특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과학자들에게는 더욱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적인 문화의 특색을 살려내는 것이 훨씬 더 해외 석학들에게는 매력적인 정주여건이 될 것이며, 한국의 성실한 연구원들이 해외 석학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내의 성실하고 유능한 대학원생들을 글로벌 거점으로 유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해외 석학을 유인하는 강력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 인력의 수준도 향상될 것이고, 이공계 기피현상도 사라지는 장점도 있다고 보았다.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진 자산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3)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일본 문부과학성 관계자 면담

일본은 연구단계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용화연구로 나뉘 문부과학성이 기초와 응용을 담당하고 기업지원은 경제산업성에서 한다.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국가종합과학기술회의로 여기에서 정부 각 부처의 과학기술을 조율한다. 일본은 ‘순수기초’와 ‘목적기초연구’ 둘로 나뉘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었다.

기초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려는 이명박정부의 과학정책 소개와 함께 RIKEN, ‘유가와’, KEK 등 일본의 좋은 연구기관들이 우리 구상과 연계해 같이 협력하면 좋은 연구가 가능하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 선진국으로서 향후 우리가 글로벌 과학거점 구축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나가는 파트너로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과학거점의 주도권에 대한 경쟁의식이 생길 경우에 일본과의 협력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과학거점의 개념을 주도권과 경쟁의 의미가 아닌 네트워크와 협력의 관점에서 정립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4) 해외 기초과학연구소 협력방안 간담회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만들기 위한 국제공동협력의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와 우수인력 유치,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향후 과학기술부에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수립해 지원키로 해 글로벌 과학거점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기로 협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연구시설이나 연구내용에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것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인력 유치나 글로벌 연구환경 조성은 결국 연구시설과 연구 자체에 대한 투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주환경이나 대학원생 연구인력 등 외적인 부분은 필요조건으로써 의미를 가지지만 해외 인력 유치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연구시설이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분야가 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시설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벨트 조성의 성공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명박 당선인이 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자사 연구소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팔미사노 IBM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5) 내부 논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결국 예산 확보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됐다. 글로벌 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시설을 만들어야 했다. 이런 작업은 전문가집단에서 오래 전부터 연구해 왔고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해왔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전문가들에게는 홍보와 설득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국내 과학자들에게 연구시설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연구시설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거대과학시설의 필요성은 과학계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돼야 하는가?’에는 아직 논의와 검토가 깊어져야 한다. 그 논의와 검토는 비단 과학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중앙정부, 지자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행돼야 하고, 충분한 검증과 동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이러한 여러 문제 제기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을 건설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즉, 글로벌 과학거점 구축의 핵심에 대한 논의는 연구시설의 내용과 국제 협력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로 귀결된 것이다.

이에 민동필 TF 팀장은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각 1인과 함께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의 핵심인 국제적 인력풀 구성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세계적 연구소인 유럽입자가속기연구소와 일본 연구소 등을 방문해 세계적 과학기술 석학과의 만남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알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5. 정책 방향 설정

세계 일류화를 추구하는 선도(leading)전략으로서 전 세계로부터 우수 연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 현지를 방문해 새 정부의 과학정책 방향을 설명

하고 세계 최고의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연구시설을 소개해 관심을 유발하는 것을 첫걸음으로 선정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글로벌 과학거점 구축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연구실(Lab.) 단위 공동연구 수행을 추진하는 ‘해외 파트너십 연구실 지원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 최고의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틈새 연구시설은 인재 유치와 국제협력의 바탕이 되는 과제이다. 창조적 과학연구와 비즈니스·문화·예술 활동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과학비즈니스 생태환경 제시를 통해 모범적인 세계연구공간(Global Research Area)을 구축해 21세기 ‘창조과학’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융합연구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6. 쟁점정책 구체화 방안

1) 세계 석학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쟁점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2008년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유럽의 CERN(스위스), OECD, IAEA 등을 방문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국제적인 홍보와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Council에 초청할 해외 석학과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가속기 구축 등을 OECD, IAEA의 정책 어젠다로 만들어 국제기구 회원국들의 공동참여를 이끌어내고,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IAEA의 Collaboration(합작) 연구센터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협의했다. 2월 13일에는 1984년 노벨상 수상자인 카를로 루비아(Carlo Rubbia) 박사와의 면담이 이뤄졌는데, 그는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야심에 찬 계획으로 평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초청을 승낙했다.

2월 15일 IAEA 사무처장 부차르트(Burchart) 교수와의 면담에서 우리의 계획을 소개했고, Burchart 교수는 한국에서 가속기에 기반을 둔 연구원 건설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아직 연구원이 건설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

리 연구원을 IAEA Collaboration Center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센터로써의 공식적 지위 확보 약속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우리 연구원이 만들어지면 IAEA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원-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IAEA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을 이용해 원하는 연구 지원을 할 수 있고, 우리 연구원은 IAEA 지정 협력기관이 됨으로써 빠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PSI 소장과 함께 우리 연구원의 국제자문역할을 수락했다. 새정부가 출범되면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더욱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2) 국제기구 간 향후 협력확대 기회 마련

스위스 PSI, CERN, 국제기구인 OECD, IAEA 등 세계적 연구원 및 국제기구에 우리 연구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연구원 건설 지원 및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확보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이 IAEA Collaboration Center 지위를 확보해 향후 제3세계 국가들과 기술이전·교육기능 부여 등으로 연구원의 국제적 공인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외의 벤치마킹 성공사례인 산업용 중심의 스페인 가속기 건설사례와 호주의 ANSTO 사례 등을 탐구할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세계 석학들의 기초과학에 대한 열정이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큰 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미래지향형 연구원 건설을 위해 중이온 가속기, 에너지 증폭기능 등 미래형 가속기 건설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의 홍보와 지지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7. 정책추진 실천계획

- 새 정부 출범 전(2008.2.25)까지 사전 추진체계 준비
 -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마련
 -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마스터플랜과 실천계획 작성(2008.2)
- 새 정부 출범 이후(2008.3~)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협력위원회 구성(2008.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시설과 연구내용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 국제협력위원회 인력풀 구성(2008.6)
 -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연구원 거버넌스 작성 및 연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Council 구성안 마련(2008.12)
- 2009년부터 연구원 Council 운영
 -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시설물 중 핵심시설은 2012년 1차 완공, 2013년부터는 전 연구시설물 정상가동을 위한 연구 운영(2009.6~12.12)
- 세계 우수 연구소 국내 유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1단계(2008)
 -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추진
 - 해외 유치기관의 지식재산권 및 수익금 분배에 관한 공통 규정 마련
 - 전략분야의 유치대상 해외 우수연구기관 탐색
 - 2단계(2009~)
 - 그간 공동연구를 수행한 상대국 연구기관의 Lab.을 국내 기관에 유치
 - 기초과학 중심의 해외 우수연구기관 매년 1개 이상 유치

유럽입자가속기연구소를 방문한 TF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 체제를 지닌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건설이 필수적이다.



8. 평가

21세기 과학계의 화두는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세계적인 두뇌들의 공동노력에 보조를 같이함을 의미하며, 이것은 미국의 3대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과학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시대부터 기술에 투자해서 2만달러 시대를 이룩했으나, 아직까지 거대과학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 체제를 가진 Big Science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다른 나라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글로벌 과학거점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며, 국민들은 과학세계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과학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목적이 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연구원 건설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매우 큰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 가속기 연구소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CERN과의 협력에서처럼 한국 과학자들 간의 갈등이 해외에 비취지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국내 연구계 의견 조정 및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추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거대과학시설의 건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 기초과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국내 학계에서 이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부정적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과학계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세계 두뇌를 유치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거부감도 예상할 수 있다. 장기 프로젝트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실패 염려 또한 이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마음으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3장

인수위 활동 개선 방안

1. 인수위 활동안내 매뉴얼
2. 인수위 사무실
3. 인수위 홈페이지와 통신시스템
4. 분과위 간 커뮤니케이션문제
5. 인수위 위원에 대한 기강 확립
6. 인수위원과 각료 후보자의 연계방안
7. 예비인수위제도 도입방안

제17대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롯해 국정운영의 틀을 새로 마련하고 이명박정부가 검토하고 새겨야 할 5대 지표,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를 정리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산업사회 국정운영 모델을 지식정보화 사회형 국정운영의 틀로 전환하는 작업이었다. 단순히 행정기구를 줄이는 작업이 아니라 국가라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비전의 문제였다. 결국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좌표로 삼고 추진해야 할 5대 지표를 제시하고 193개의 국정과제를 선정해 국정운영의 좌표로 제시하는 작업도 평가받기에 충분했다. 인수위 전체회의가 열리던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각 분과 간사단이 머리를 맞대 토론하고 고민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세 차례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거르고 또 다듬었다. 193개 국정과제 하나하나가 국민적 공감을 얻었고,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7대 인수위는 '일하는 인수위'였다. 당선인의 생활철학이 구체화된 첫 모델이었다. 인수위는 그러나 외형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고충도 있었다. 크지는 않지만 새겨 두어야 할 매듭들이 있었다. 인수위라는 조직이 한시적으로 조직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과정이긴 했지만, 미리 점검해 둔다면 극복할 수 있는 과제들이었다. 제17대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노정됐거나 아쉬웠던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수위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해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인수위 활동 안내 매뉴얼

1) 인수위 매뉴얼에 대한 평가

인수위는 그 속성상 관련 위원 거의 전부가 해당 업무를 처음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인수위 위원들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인수위의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권한과 역할을 정리해야 했다. 결코 길지 않은 인수위 활동 기간 초반 며칠은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인수위 발족에 대비해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매뉴얼을 준비했다. 모두 85쪽의 작은 책

자인데, 문제는 매뉴얼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인수위 관계 법령과 과거 인수위의 의사결정체제 등 도식적인 내용에 불과한, 인수위 활동을 안내해 주는 매뉴얼이 아니라 인수위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한 매뉴얼이었다.

2) 인수위 매뉴얼의 모델

인수위 매뉴얼은, 매뉴얼이 본래 그렇듯이 사용자들이 알아야 되는, 또는 알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어야 한다. 역대 인수위에서 설치되는 분과가 비슷했고, 분과별 업무 영역이나 역할·권한 또한 흡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참고삼아 인수위 각급 위원들이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인수위 매뉴얼에는 인수위 관련 법령과 같은 도식적인 내용 이외에 △인수위 성격 △인수위 활동 범위 △인수위 활동 방향 △각 분과별 업무 영역 △각 분과별 업무 추진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나아가 과거 인수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제시해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3) 인수위 활동 교육 프로그램

본격적인 인수위 활동에 앞서 전반적인 인수위 활동, 분과별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실무 교육 자료를 사전에 만들어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수위 활동이 한시적이다 보니 그 업무 내용이나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인수위 활동의 시행착오와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2. 인수위 사무실

인수위 사무실이 크게는 3곳, 작게는 4곳으로 분산됐다. 한국금융연수원의 경우 인수위 기구가 별관과 본관으로 나뉘 배치되는 바람에 사실상 다른 건물

에 위치한 셈이었다. 인수위 기구들이 한 곳에 입주할 만한 마땅한 공간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의 경우 공간을 얻지 못해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해 전화상담센터로 활용해야 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무실 분산은 사무실 관리는 물론 업무 추진에도 비효율적이었다. 정식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도 오며가며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궁금증을 그때그때 풀 수 있는 분과 간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사무실 공간의 부족은 특히 회의실 부족으로 이어져 업무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확보된 회의실은 대회의실 이외에 교실 한 칸 크기의 중회의실 한 곳뿐이었다. 교실 한 칸 크기의 중회의실을 둘로 나눠 사용했지만 회의실 부족난은 심했다. 심지어 식사시간을 피해 구내식당을 회의 장소로 활용해야 했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했던 인수위 활동에서 충분한 회의실 확보는 절실했다.

3. 인수위 홈페이지와 통신 시스템

인수위 홈페이지는 정보화 시대 흐름을 반영하듯 인수위 활동의 가장 역동적인 대외적 창구였다. '인수위 하루' 라는 메뉴를 만들어 인수위의 매일 매일 일정을 소개하고 인수위 활동을 동영상과 사진 뉴스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 '섬기는 인수위'를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특히 대변인실의 보도자료나 대외 브리핑 발표문을 영어로도 게시해 인수위 활동에 대한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문제는 인수위 활동을 대외적으로 소상히 알리는 수단인 홈페이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인수위가 구성되고 뒤늦게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기술적으로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밤샘작업을 강행해서 인수위 출범 6일째인 1월 1일 어렵게 홈페이지를 가동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를 서둘러 제작하다 보니 중간에 자주 수정을 해야 했고, 운영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홈페이지는 대변인실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인수위의 대외적인 창구로 인수위 출범과 함께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겠다.

인수위의 전화 시스템도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전화 회선은 충분히 확보

데 있었지만 대표전화 시스템이나 인수위를 안내하는 체제에 대한 사전 대비가 아쉬웠다. 인수위가 출범하고 곧바로 자동응답 시스템을 도입했어야 한다.

4. 분과위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

인수위는 한나라당측 인사, 정부부처 파견공무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인적구성이 다양했다. 인수위 초기 구체적인 활동영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성원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분담되지 않았다. 결국 소수 인원에 업무가 집중돼 인수위 활동의 효율성이 일시나마 떨어지기도 했다. 또 인수위 구성원, 특히 실무자 사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다. 실무자급에서는 매일 분과위 대표 전문위원회의, 그리고 백서 발간을 위한 백서편집회의가 있었지만 상호 관심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못했다. 분과위 전문위원회의의 경우 시간에 쫓겨 매일매일의 통상적인 업무 논의에 급급했다.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 선에서 인수위원들의 업무조정회의와 같은 정례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수위원들은 매주 토요일 그때그때 대두된 현안을 놓고 장시간에 걸쳐 집중 논의하는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했다. 또 인수위 출범 초기에 인수위원 전체가 1박 2일 정도 일정의 워크숍을 갖고 친목을 다지면서 심도 있는 업무조정회의를 갖는 프로그램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5. 인수위 위원에 대한 기강 확립

제17대 인수위는 국민적 호평을 받았다. ‘??일하는 인수위??’라는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이명박정부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잘 보여준 예고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인수위는 또 국민의 민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민생 관련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국민을 섬기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인수위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하나같이 고무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잠시나마 곤경에 빠졌다. 극히 일부의 적절치 못한 처신이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인수위 전체의 명예가 됐다. 한 분과 전문

위원은 개인적 판단으로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를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모 비상임 자문위원의 경우 인수위 직함을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인수위의 한 TF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지역을 방문해 부적절한 대접을 받아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물론 관련 위원들은 소속 부처로 복귀시키거나 책임을 통감하고 인수위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백성운 인수위원 겸 행정실장은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옥에 티’라며 인수위 관계자들의 불미스런 행태를 안타까워했다.

물론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의 일탈행위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짧은 기간 내에 모으다 보니 개인적인 성향이나 생활태도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인수위로서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일부의 잘못일지라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수위 구성원에 대한 사전 검증이나 검토가 어렵다면 사후 관리체제라도 가동시켰어야 했다. 우선 인수위 위원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지침을 만들어 관계자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절제 있는 처신을 당부했어야 한다. 윤리지침이 일탈행위를 직접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할지라도 스스로를 반성하고 절제시키는 심리적 지렛대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부 구성원들의 일탈행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제재하는 기구의 운영도 필요했다.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경미한 사안의 경우 간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묵인하는 셈이 됐다. 인수위 구성원들의 비정상적인 처신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6. 인수위원과 각료 후보자의 연계방안

인수위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됐던 공약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국가정책과 국정과제를 종합 정리하는 게 기본 역할이다.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와 전략은 결국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좌표가 된다. 문제는 선거공약을 자문하는 그룹과 선거공약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 그룹, 그리고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부처 책임자인 각료가 각각이라

는 점이다. 선거공약을 자문한 그룹은 논외로 차치하더라도 인수위 그룹과 차기 정부 각료는 일치시키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새 정부 내각이 구성되면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함으로써 비슷한 작업을 이중으로 진행하는 비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따지고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더구나 비슷한 정책안을 이중 삼중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이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변형되기 십상이다. 국정과제를 보는 관점이 다를 경우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새 정부의 부처 책임자가 결정하고 구체화할 국정과제를 앞서 소모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검토·연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인수위원 인선시 차기 정부 각료를 염두에 두고 발탁한다면 우선 소모적인 이중 논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 논의과정에서 변형되기 쉬운 국정과제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인수위 위원을 각료 후보자와 일치시킬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즉각적으로 국정과제를 시행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과정에서 불가피한 국정의 틈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나 인수위원을 내각 각료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7. 예비 인수위제도 도입 방안

인수위는 ‘일하는 인수위’ 모습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과욕을 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정책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것이다. 설익은 정책으로 지목된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휴대전화 요금, 유류세 인하와 같이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정책들이었다. 서민 가계부담을 새 정부 출범 이전이라도 덜어주려는 시도들이 ‘성급하게’ 비쳐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활동의 일부가 과욕으로 비친 원인은 짚어 보아야 한다. 인수위가 치밀한 검토와 연구를 생략한 채 급조됐다는 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1주일 만에 인수위 조직을 마련하고 그 조직과 기구에 맞는 맨파워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형적인 대통령제 통치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이미 예비 인수위를 구성해 정권 인수업무를 준비한다.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되면 선거전략팀과 함께 예비 인수위팀, 그리고 정책개발팀을 동시에 가동시킨다. 선거에서 이긴 상황을 상정하고 인수위 업무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정권 인수인계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만큼 정권 교체과정에 불거질 수 있는 빈틈이나 오차를 최소화한다. 정파의 승리를 넘어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우선시키는 미국인들의 지혜를 엿보게 한다.

한국 정치도 정권 장악의 차원을 넘어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왔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인수위를 구성해 선거공약을 국정운영 관점에서 검토하고, 나아가 인수위 활동까지 대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 개막

2.

제1장 대통령당선인 주요 활동

제2장 제17대 대통령 취임사 준비

제3장 제17대 대통령 취임행사

1장

대통령당선인 주요 활동

1. 경제살라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장정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3. 경제살라기
4. 국민통합
5. 성숙한 세계국가
6. 인재대국, 문화강국
7. 방문 및 주요 행사
8. 연설문
9. 외신이본 이명박 대통령
10. 이명박대통령당선인 주요 어록

1.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장정

대통령선거 이후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활동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데 집중됐다.

국민의 행복은 넉넉한 삶에 기초하며, 넉넉한 삶은 경제적 안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당선인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 ‘경제살리기’에 집중했다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당선인이 내세운 것은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이전까지의 경제성장은 정부가 주도한 측면이 강했다. 또 그것이 시대적 흐름이었다. 그러나 IMF 사태를 겪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했고, 실용보다는 형식에 얽매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연 4%대를 맴돌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투자는 위축됐고 이에 따라 고용사정도 나빠졌다.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중산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으며, 상하위 소득계층 간 간격은 더욱 확대돼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선인이 내세운 새로운 시스템은 바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경제였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충실한 도우미 역할을 해 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투자를 늘리게 만들고, 세계경제의 흐름에 발맞춰 개방을 실현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

기서 발생한 이익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당선인은 우선 국내의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냈다. 전경련회장단 등 경제계 인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간 경제연구원장, 중소기업인, 금융인, 무역인에서 농어민단체 대표,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당선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경제살리기’가 국민 행복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국민통합’은 줄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당선인이 생각한 ‘국민통합’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가 경제적 통합이며, 둘째는 이념적 통합, 셋째는 지역적 통합이다.

경제적 국민통합이란 상하위 소득계층 간 간격이 너무 커져서 발생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경제적 국민통합은 앞서 설명한 ‘경제살리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경제를 살려 그 이익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국민통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념적 국민통합이란 진보와 보수, 노와 사 등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을 일삼아왔던 과거와 결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상생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당선인은 과거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의 잘못을 비판하기에 앞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해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로 삼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의 잘된 점은 적극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미비하거나 잘못된 점은 비판하거나 비난하기에 앞서 보완하고 개선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노사화합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조화로운 사회,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적 국민통합이란 앞서 강조한 경제적·이념적 국민통합이 완성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양극화 해소와 이념적 국민통합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면 과거 번번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아왔던 지역감정과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균형이 해소돼 조화롭고 안정적인 국민통합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선인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경제살리기’라는 뿌리와 ‘국민통합’이라는 줄기를 마련해 최종적으로 꽃을 피우려고 했던 것은 국격(國格), 즉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이룩해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로 발돋움한다는 것이 당선인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용외교를 천명하고 세계와 함께 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길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IT, 문화 등 지식정보화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방위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민생현장 방문에도 적극적이었다. 태안, 이천 사고현장과 송례문 화재현장을 전격 방문했고, 전방부대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현장도 빼놓지 않고 찾았다.

당선인은 대한민국이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의 발전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한국을 ‘선진화 시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진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성과를 낸 후, 이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국정철학이다. 당선인의 활동은 이러한 국정철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어졌다.

취임식에서 취임연설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 일하는 인수위, 섬기는 인수위, 작은 인수위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위를 ‘일하는 인수위, 국민을 섬기는 인수위, 작은 인수위’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당선인이 강조한 이 세 가지 원칙은 이후 인수위의 활동을 통해 그대로 구현됐다.

당선인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12월 19일 이후 1주일만인 12월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997년 15대 인수위보다는 2일, 2002년 제16대 인수위와 비교하면 4일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회의 시간도 이전의 인수위와는 차이가 있었다. 15대 인수위에서 매일 개최됐던 간사단회의의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16대 인수위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최됐던 간사단회의의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었지만 17대 인수위에서는 시간이 오전 7시 30분으로 앞당겨졌다. 인수위 활동이 시작된 이후 한달이 되는 1월 26일과 설날 당일이었던 2월 7일을 제외하고는 휴일도 없이 이어졌던 인수위 활동도 ‘일하는 인수위’를 강조한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사례였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언론으로부터 ‘노 홀리데이(No Holyday)’, ‘월화수목금금금’, ‘출근 시간만 있고 퇴근 시간은 없는 곳’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강조하는 당선인의 모습도 인수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인수위가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면 곤란하다”는 당선인의 독려가 인수위의 일하는 분위기를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대불공단 전봇대 사례는 현장을 중시하는 당선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후부터 인수위는 과제가 주어질 때마다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줘 '일하는 인수위'라는 인식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심어주었다.

‘국민을 섬기는 인수위’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의 운용으로 구체화됐다. 국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국가운영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국민을 단순히 정책의 소비자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의 생산자로 생각하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책, 각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 그 외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 방안 등의 정책도 제안받았다. 이는 “점령군 같은 인상을 주지 말라. 정말 낮고 낮은 자세에서, 국민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라. (공무원들에게)충분한 예우를 갖추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는 당선인의 지침에 의한 것이었다.

‘작은 인수위’는 이전에 비해 20% 축소된 인수위 조직과 예산으로 반영됐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2인, 부위원장 1인, 인수위원 23인, TF 팀장 3인(인수위원에 포함된 팀장 3인 제외),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 1인 및 전문·실무위원

당선인은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라'며 인수위원들을 독려했다.



151인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 16대 인수위 23명에 비해 21% 줄어든 규모로, 그동안 늘어난 정부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 감축규모는 그 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구내식당을 적극 활용(1인 1식 3,500원)하고 인수위의 사무용 집기 및 기기는 모두 임차로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인수위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라는 5대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를 확정해 새 정부의 밑그림을 무리 없이 그려낼 수 있었다.

2) 인수위 1차 전체회의 (2007.12.26. 인수위 대회의실)

-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적으로 해결하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전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있다. 우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내야 하고, 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와 긍정과 창조,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세를 갖고 임하라는 것과, ‘과거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는 관습에서 벗어나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창조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창조적으로 찾아낸다는 세 개의 열쇠는 당선인이 인수위에게 제시한 최초의 업무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말만 무성하고 실제 이뤄진 것은 없다며 짧은 기간 무한정 일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분명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총명한 긍정적 자세,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적인 자세, 이 3가지는 당선인이 인수위에 제시한 최초의 업무지침이었다.



우리 인수위원회는 주어진 각본대로,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
는 심정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창조적인 인수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역대 정권 인수위원회를 보면 정권을 쟁취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점령군 같은 인상을 많이 줬
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수위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 정말 낮고 낮은 자세에
서, 국민을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들었을 때 “과거에 보
면 이런 것들이 참 힘들었다. 막상 해 보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았다”하는 식으로 임해서는 안된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3) 인수위 1차 업무조정회의 (2007.12.29. 인수위 대회의실)

-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과거 산업화시대의 조직으
로는 21세기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
전제는 사람과 조직을 줄이기보다는 기능 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을 계속 줄여 숫자상으로 많이 줄이는 게 좋다는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며 “목표를 세우고 줄이겠다는 생각보다는 효율적인 기
능과 업무를 전제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시대에 맞는 조직이 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정부 조직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앞으로 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는가, 또 정부가 해야
할 감독 기능과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더 강화해서 효과적으로 할 방
법은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에서도 당선인은 “지난 5년간 한 게 모두
잘못됐다는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잘된 것
은 잘된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가
과거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의 에너지를 발전
적으로 계승한 정부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인수위 시무식 (2008.1.1, 인수위 대회의실)

-생각을 바꿔라, 나를 버려라, 나라를 생각하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현충원 참배 후 인수위 시무식에 참석해 “오늘 뜨는 태양은 유난히 크고 붉었다. 해가 달라졌겠나, 보는 사람의 마음과 눈이 달라진 것이다”라며 인수위원 등이 갖춰야 할 정신자세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당선인은 우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도 10년 안에 1인당 4만달러 소득도 될 수 있고, 세계 7대 강국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대장성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1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준비를 갖춰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된다는 희망을 갖고 살고 있다”며 “2008년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우리도 10년 안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있고, 중국도 무섭게 따라오지만 중국을 오히려 좋은 경제적 파트너로 삼아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보다는 내 소속된 부서, 부서보다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 뒤에서 탄소리하는 소아병적 생각으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당선인은 인수위 시무식에 참석해 자율의 힘을 강조하며 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당선인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인수위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을 향해 “소속 부처의 이해를 반영시키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과거에 얽매이면 5년 전, 10년 전 인수위와 똑같다.

오늘 이 시간부터 생각을 바꾸고, 적어도 인수위에 몸담고 있는 두 달 동안은 나를 버려야 한다”라며 강하게 주문했다.

작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또한 각 분과에서 일하는 인수위원들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혼(魂)을 담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과거정부의 경우 문장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올려 지도자들을 속였다는 “여러분이 만든 서류에 여러분의 정신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특히 “누가 명령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스스로 지키는 자율적 질서처럼 자율의 힘이 굉장히 무섭고 위대하다”는 말로 인수위 활동에 있어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대한민국을 10년 안에 1인당 4만달러 소득과 세계 7대 강국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며, 열정과 목표의식을 갖고 인수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2008년 새해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져달라는 것이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정초에 왜 여기 나왔는가?
그냥 여기 나와서 적당히 하루 보내버리면 하루 쉰 것만 못하다.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5) 1차 국정과제보고회의 (2008.1.13, 인수위 대회의실)

-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 만드는 것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의에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각 분과위 별로 정리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정오부터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며 2시간 40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12시부터 시작된 토론은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각 분과의 현안에 관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데 주력해서 기업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도 안 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데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해마다 중복 집행 등 예산낭비를 지적한 사례를 참고로 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인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경기가 부양되어 낮은 세율의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5% 인하가 목표라면 임기 중에 점진적으로 낮춰가더라도 중소기업에 더 치중해서 먼저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교육 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입시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표명하며 “막연하게 본고사를 폐지한다는 식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봤을 때 ‘바로 이거다!’ 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보고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당선인은 정부가 보고한 안을 그대로 수용해 보고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매우 창조적인 자세로 이를 재구성해 실생활에 딱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디어는 창조적으로, 실행 방법은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반응도 있을 것이다. 자기가 소속된 조직에 변화가 오는데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갖는 것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은 오히려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보다는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나, 더 효율적이나, 또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공직자 인원을 대폭 줄이겠다, 내보내겠다, 이런 생각은 없다. 안정 속에서 강한 변화를 요구하겠다. 안정 속에서 변화한다고 해서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는 것 아니다. 안정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지만, 매우 효과적이고 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공직자들은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6) 인수위 간사단회의 (2008.1.18, 인수위 대회의실)

- 현장 중심의 살아 있는 정책을 써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선거 때 목포 대불공단에 가 봤는데 공단 옆 교량에서 대형 트럭이 커브를 트는데 전봇대가 서 있어 잘 안됐다. 그 전봇대를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안됐다”며 자신의 실제 경험을 소개했다. “당시 산업자원부 국장이 나와 있어 물어봤더니 ‘도(道)도 권한이 없고 목포시도 안되고, 산자부도 안되고, 서로 그러다 보니 전봇대 하나 옮기는 것도 안된다. 아마 지금도 안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라고 말하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책상 앞에만 앉아 업무를 보는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당선인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사무실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면서 “말로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현장에 들러야 한다”고 역설한 뒤 “살아 있는 정책을 써야 투자가 된다. 자리에 앉아서 페이퍼만으로 하면 안되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중심의 정책 마련을 재차 주문했다.

또한 모든 계획은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의 계획은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컴퓨터를 쓸 필요도 없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월별 계획을 짰 뒤 첫째주, 둘째 주 계획을 짜고, 첫째 주도 며칠까지 하는 이런 식이 돼야 한다”며 세세한 규제개혁 실천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예산 감축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을 잊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정치적 이유로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관행 때문에 오히려 낭비가 더 심하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 부처 통합과정에 따른 업무공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남는 인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인원 감축을 추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규제완화라는 말은 역대정권이 모두 다 해왔다. 다만 실천이 안된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았다. 건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조치는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국민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측을 못하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투자를 안한다. 아무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과거 말레이시아에 가 보면 외국사람이 처음 들어와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1주일 만에 다 되더라. 정부가 딱 안내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거기서 바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7) 인수위 파견공무원 오찬간담회 (2008.1.28, 인수위 구내식당)

- 공무원이 개혁의 주도세력 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파견공무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공무원이 개혁의 주도세력이 돼줄 것을 요구했다. 당선인은 공직자들이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위험수위에 온 것 같다고 우려하며 공직사회를 향해 고강도 변화와 개혁을 주문했다. 변화를 주도해야 할 사람이 주도를 하지 않고 변화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솔

당선인은 인수위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공무원=편한 일자리'라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며 "공무원이 개혁의 주도세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수범해서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공직자들은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제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분발할 때가 됐다”고 말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 주문과 함께 믿음도 표시했다. 또한 “이제 대충대충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개개인이 프로정신과 봉사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이 평생 신분보장을 받고 사는 좋은 직장이라는 사고는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서 공무원=편안한 일자리’란 인식에 대해 비판하면서 “여러분은 부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수위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새 정부의 구상을 부처에 전파하는 전령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들이 매우 우수한 능력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서울시장을 했던 4년 동안 저랑 같이 일한 공직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분발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공무원은 개혁이나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정신과 봉사정신, 이 두 가지를 가져야 한다. 대충대충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집단적 경쟁력보다는 개인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다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새 시대는 개개인이 프로 정신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력 갖춰야 한다. 보통 공직자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신분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되면 평생 신분 보장받는 좋은 직장이라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것은 옳지 않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한다. 대우도 썩 나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공무원을 하나의 편안한 ‘일자리’로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 공무원이 한 시간 잠을 덜 자면 국민은 한 시간 더 편안히 더 잘 수 있다는 생각,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여러분은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재능이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틀림없이 세계 어느 나라의 공직자보다 더 큰 효과 얻을 수 있다. 요즘 새 정부는 시대에 맞도록 정부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8) 3차 국정과제보고회의 (2008.2.5. 인수위 대회의실)

- 서민의 눈을 뒀는 민생 사안에 집중하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제3차 국정과제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적극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옥상옥(屋上屋)’이

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해 당선인은 국내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금년에는 비료값, 사료값 등이 많이 올라서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해 민생 사안을 심각하게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여러분이 제안한 모든 정책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게 될 것이다. 마무리되지 않은 정책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를 다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동안 인수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다니며 확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책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모든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 국민에게 어떤 편의를 주는 것인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더 유발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수립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규제완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란다.

며칠 전 재래시장을 한번 둘러봤다. 선거 때와는 좀 다른 심정으로 재래시장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번두리 시장이긴 하지만, 설날 대목에 아주 썰렁했다. 좌판에서 생선을 파는 할머니는 무조건 나를 붙들고 울더라. “장사가 안되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이제 장사가 잘되겠쥌”라고 말씀하면서 또 울더라. 서민들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참 걱정이다. 서민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9) 이명박정부 국정운용 합동워크숍 (2008.2.16~17,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 성장의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유우익 대통령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내정자 및 비서진, 대통령직인수위 간사단 등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합동업무조정회의에 참석해 끊임없는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 혁신과 봉사정신 등을 강조하며 선진사회와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회의 첫날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경험에 집착하면 오히려 일을 거스를 수 있다. 내일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새로운 변화와 결부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래를 지향해서 펼친 정책들이 이해를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조금 비판이 있다고 해서 주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미래에 대한 강한 도전 의식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 산업사회 시절에도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했다며 바로 그때만을 생각하는 인기 영합적 정책만 편다면 국가를 선진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선인은 이날 참석한 수석 내정자들의 자세에 관해서도 헌신과 솔선하는 자세가 될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관들부터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선인은 경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수도 살려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서민이나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그 성장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업무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은 경제 살려서 좀 일자리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 4% 정도의 경제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소외된 계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잘 돌아가지 않았다며 “한편으로 4% 성장하면 경제가 괜찮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성장의 혜택을 못받는 서민층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선인은 그 이유로 “대외지향적이며 대기업의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이었기 때문에 내수에 반영이 안된 데서 기인한다”며 새 정부는 경제도 살리지만

내수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이 6%냐, 7%냐 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의 내실이 실제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이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당선인은 합동업무조정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 활성화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사실이지만, 여소야대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축되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하는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늘 변하고 있다. 1970년대 사장, 80년대 회장, 90년대 정치인, 2000년대 사장, 나는 끊임 없이 변화하면서 산다. 1970년대 때에 나를 만난 사람은 70년대 얘기만 한다. 80년대에 나를 만난 사람은 80년대 얘기만 한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발전적이지 못하다. 과거에 얽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과거를 참고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일류국가를 만들려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항상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아주 간단하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매년 4%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그 성장의 과실이 소외된 계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한편으로 '4% 성장하면 경제가 괜찮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 서민층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수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내수에는 반영이 잘 되지 못한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경제도 살리지만 내수도 살려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야만 서민이나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도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냥 경제 성장이 6%나, 7%나 하는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성장의 내실이 실제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절약하는 정부,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 예산을 한 10% 정도 절감해서, 절약된 예산을 다시 다른 곳에 재투자해 경제성장에,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10) 인수위 해단식 (2008.2.22, 인수위 대회의실)

-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 받아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인수위 해단식에서 “학교 졸업식 같다. 여러분은 정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심정이고, 나는 떠나보내는 학교 교장 심정”라고 말했다.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정권이 바뀌고 지난 10년간 색깔과 콘텐츠의 차이가 나면서 사회가 이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에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았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고,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 칭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빈번한 사고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긴장의 이완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누적된 불만이 열리면서 노출되는 과정”이라며 송례문 방화사건, 정부중앙청사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들에 대한 편치 않은 심경을 드러냈다.

그간 인수위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는 전투다.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를 거둬야 하는 한시적 활동이라 힘들고 사생활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며 “여러분은 영원한 새 정부의 인수위원이고, 돌아가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 활동 기간 중 부친상을 당하거나 가족이 많이 아팠던 실무위원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동료들 일하는 시간에 남모르게 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정신으로 일해줘서 고맙다”고 말해 감동을 줬다. 당선인은 가벼운 농담을 섞어가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도했고, “주저하지 말고 애정 어린 제안과 충고를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해단식을 마친 후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근무한 모든 직원들과 분과위별로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인수위를 떠났다.

여러분이 인수위원회라는 역사적 책무를 띄고 모여서 일하는 동안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의욕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수위는 전투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효과를 거둬야 하는 한시적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생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각자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까지 있었으니, 무슨 돌격부대도 아니고 이런 경험 처음 해봤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제 정권이 바뀌는 등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가 이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요즘 빈번한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도 어떻게 보면 긴장이 이완되어서 생긴 것은 아닌지 싶다. 모든 것을 보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져야 하고,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디 가서 일하든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자긍심, 함께했다는 소명과 긍지를 가져주기 바란다. 여러분은 영원한 새 정부의 인수위원이고, 같은 생각을 지닌 동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발전을 위한 뜻을 같이하는 동지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항상 주저하지 마시고 새 정부에 애정 어린 제안과 충고와 권고를 부탁한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3. 경제살리기

1) 규제혁파를 통한 경제 선진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경제살리기’의 화두로 던진 분명한 과제는 ‘규제 혁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1980년대까지 정부주도에 의해 성장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를 거쳐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리즘으로 무장한 민간 기업이 있다. 당선인은 바로 그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고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 악재가 경제여건을 어둡게 둘러싸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자원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선인이 내세운 해법이 바로 ‘규제혁파’라고 하겠다. 이제 국가는 경제를 앞에서 이끄는 자리에 설 수 없으며, 서서도 안된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다. 국가는 민간 기업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던 각종 규제를 없애주고,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정부는 다시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철저하게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고 기업과 국민들을 곁에서 도와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다.

당선인은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대대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은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활기찬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규제혁파는 이를 실천하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당선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경련회장단 등 경제계 인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간경제연구원장, 중소기업인, 금융인, 무역인에서 농어민단체 대표, 주한 외국인투자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당선인은 경제대통령으로 ‘경제인 기(氣) 살리기’에 앞장섰다. 가는 곳마다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는 규제완화를 거듭 약속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러 왔다”고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당선인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활동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2) 경제인 간담회 (2007.12.28.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

당선인은 전경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말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 ‘비즈니스 프렌들리’ 할테니 과감히 투자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전경련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당선인은 “지난 10년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로 기업이 편치 않았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서는 선진국수준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이전에도 규제개혁을 해왔지만

실제로 필요한 핵심규제는 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핵심규제부터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은 정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곁에서 돕는 위치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개혁에는 완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이후에 중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에게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부탁하며 “직접 연락해도 좋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또 “이번 선거 이후 ‘정경유착’이란 단어는 없어졌다”며 “서로 부담 없이 선거를 치렀기에 당당하게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또한 “금융에 ‘기관’이란 말이 붙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금융산업으로 봐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당선인은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언급하며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당선인의 당선만으로도 투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재계가 단합해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적 노사분규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노동운동에 있어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을 당선인에게 요구했다.

또한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대표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요청했고, 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나설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와 재계가

당선인과 간담회를 마친 전 경련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허심탄회하게 경제살리기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8년 1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새해 첫 회장단 회의를 가진 뒤 내놓은 발표문에서 “당선인과 경제인 간담회 이후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대 그룹의 시설 투자계획은 전년(75조 4,827억원) 대비 19.1% 증가한 89조 9,019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회장단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왔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기업인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온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왔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함으로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은 기업에서 나온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새 정부는 문자 그대로 business friendly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제 정부가 기업인들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사실 국가가 이래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떻게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밖에 없다.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구시대적 용어는 없어졌고, 정경이 서로 협력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정경협력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 마음 놓고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5년을 그렇게 잘 하면 우리 경제도 선진국형이 되고, 다음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틀에서 앞으로 나가지 한걸음도 뒤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고, 그 틀을 만들어 나가자.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3) 민·관 경제연구기관 대표 초청간담회 (2008.1.2, 인수위 대회의실)

- 일자리 만드는 기업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만들겠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10개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 대표들과 함께하는 ‘2008년 경제 전망하에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

의 간담회에 참석해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된다, 안된다, 어렵다, 어렵다 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오후 2시부터 13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당선인은 2시간 가까이 경제연구기관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당선인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태안 기름유출사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긍정적 변화의 힘’을 보았으며, 여러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고 말했다.

또한 “대학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불러서 물어보면 7~8할이 공무원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선인은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에 대해 규제를 푸는 데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규제를 풀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할 것이고 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그 투자를 통해 또 다시 재투자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업도 시대적 추세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업 환경을 바꾸고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환경만을 따지며 부정적 자세를 보이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원자재값 오르고, 환율 좋지 않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국제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놓고, 어려워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체념을 해서는 안된다.

제가 지난번 연말에 태안반도를 두 번 갔다 왔다. 거기서 깜짝 놀랐다.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정부가 동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전국에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버스를 타고 와서, 개별적으로 단체로 이렇게 모아서 와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 바닥에 앉아서 돌을 닦는 것을 보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참 대단하다. 우리 국민들의 그런 열정, 이것을 잘 모으면 웬만한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힘을 모으면, 이론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가 뭔가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성장동력은 사실 기업들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다는 나라이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친기업적 정부로 갈 것이다.

기업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일 잘하는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갈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4) 중소기업인 초청간담회 (2008.1.3,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

- 300만 중소기업이 살면 서민 주름살 퍼진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대기업은 자율정책,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중소기업인과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당선인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앞길을 터 나가고 경쟁력을 키우면 정부는 ‘도우미 역할’을 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올해는 중소기업들이 어깨를 펴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은 기술, 시장개척, 자본 등의 측면에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정책을 쓰면서 잘할 수 있는 길만 터주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은 특히 ‘일자리 만들기’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300만 중소기업들이 활개를 치면 서민 주름살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 일부에 남아 있는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정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선인은 “경제살리기는 중소기업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도전 정신과 용기를 갖고 새 정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약 1시간 동안 참석 기업인들의 건의를 경청한 뒤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지난번 대기업인(전경련)들을 만나봤다. 대기업은 이제 기술이나 시장개척이나 자본 면에 있어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에 대기업정책은 자율 정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정부와의 협력 내지는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도전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도우미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앞길을 터나가고 경쟁력을 갖고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약간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달라질 것이다. 기업인이 존중받는 시대를 만들겠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5) 전국 금융인 간담회 (2008.1.9, 명동 금융연합회)

- 금융산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전국 금융인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은 “새 정부는 바꿀 법은 바꾸고, 규제는 없앨 것은 다 없애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활개를 펴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계가 기여할 바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금융이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세계 수준에 비하면 모든 분야가 30, 40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용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금융사 대표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한 당선인은 “금융산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앞으로는 금융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입장에서 주도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선인은 “우리가 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당선인은 전국 금융인간담회에 참석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산업이야말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말했다.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산업이 확실히 미래성장산업”이라고 금융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활개를 펴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융계가 기여할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금융산업 자체가 크게 발전해 선진화되어야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금융산업 자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는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법은 바꿀 것은 바꾸고,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 자체는 없앨 것은 없애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새 정부는, 기능하면 여러분께서 국내시장을 벗어나서 해외시장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금융과 관련해서는 민간 입장에서 바라보겠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6)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 (2008.1.11. 대한상공회의소)

- 국민에게 부담 줄 무리한 경기부양책 쓰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무리하게 투자해서 성장한다면 2~3년은 좋을 지 모르지만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며 “새 정부는 몇 년 후에 부작용이 나타날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인위적 경기부양책의 잘못된 사례로 “IMF 이후 길거리에서 주민 등록증만 내면 신용카드 내주고, 직업도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내줘서 신용대란을 불러왔다”며 “잠시 경기가 부양됐던 것 같지만 그 후유증은 아주 크고 심각하다”고 말하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당선인은 ‘친(親)기업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맞다. 친기업적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잘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사문제와 관련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참 많지만 법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기업이 수지가 안 맞으면 비정규직을 쓰게 돼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비정규직 쓰는 기업을 어떻게 도와줄지,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을 생각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은 뭔가 기회가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했다”며 “노사분규가 심한 기업체의 노동자들이 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그 기업이 10% 성장하는 게 어렵지 않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생각도 털어놓았다. 근로자들은 생산성을 향상해 보자며 마음을 바꾸고, 기업가들은 넓은 마음으로 근로자를 신뢰해야 한다며 노사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당선인은 특히 “우리만 나쁜 조건에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모두 힘을 합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정부도 이제 기업을 믿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려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불행히도 세계경제 환경이 썩 좋지는 않다. 지난 10년간은 세계경제가 매우 좋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연 4% 성장을 해왔지만, 여건이 나빠진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물론 걱정거리를 모르고 무조건 성장을 한다, 뭐 이렇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여건을 좀 바꾸면 1~2% 성장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재정투자를 해서 성장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한 1~2년, 2~3년 좋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오는 후유증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불과 몇 년 후에 부작용이 나타날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갈등이다. 지역 간의 갈등, 동서 간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이념 간 갈등... 이제까지 우리는 갈라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화합하고 융합해야 한다. 세상이 다 변해서 융합되고 통합되니까 사방에 흩어진 기능을 한쪽에 모아보자, 그것이 정부조직 개편이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7) 신성장동력 창출 전문가 간담회 (2008.1.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미래를 위해 거침없이 제안하는 분위기 만들겠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지금은 과학·기술,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대”라며 “미래에 먹고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이날 참석한 과학계 및 문화예술계 인사 12명의 의견을 주로 청취하

면서 중간중간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상도 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은 “신에너지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 기술개발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가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김홍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은 “전 세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국내에선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고 싶어도 다른 데로 가게 된다. 미국에선 소프트웨어 분야가 각광을 받는 데 반해 한국에선 3D 업종으로 인식된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어 “현재 중국도 매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고부가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인 소프트웨어 투자에 좀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당선인은 “인도에 갔더니 소프트웨어 업체 종업원 수가 2만명인가 됐다. 참으로 놀랐다. 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데, 한국에 그런 게 한두 개만 있어도 좋은데...”라며 동조했다.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가 ‘가사 도우미’ 로봇에 대해 언급할 땐 “나도 TV에서 노인을 도와주는 로봇을 봤다”면서 자세히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 대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 당선자를 도왔던 박찬모 전 포스텍 총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주 찾아와 막걸리 파티도 하면서 과학기술계 사기를 많이 진작시켰다. 당선자도 자주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했으며 가수 박진영 씨도 방송·연예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그는 “외국 파트너들이 (한국과) 손을 안 잡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투자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시장원

당선인은 과학계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은 과학과 기술이 문화 예술과 만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리 어긋나는 거다.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또 장성섭 KAI 전무가 세계 군용항공기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자 당선인은 “조선처럼 항공기술도 좀더 다양화해 중국 등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에 공급할 수 있게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국하고 같이 개발했으면 시장이 원체 크니까 길이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오는데 과학 기술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며 “망설이고 눈치만 보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 거리낌 없이 앞으로 내게 말해 달라. 나부터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의 분야 발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금은 모든 것이 융합돼 창조되는 사회”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정부조직 개편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금동화 KIST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12명의 첨단기술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참가자들은 분야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당선인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융합분야와 첨단기술 분야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오늘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일의 우리 한국이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수위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미래성장동력이다. 지금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가 서로 융합하면서 새로운 것을 탄생, 창조하는 시대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오는데 과학기술자들의 큰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 또 한국의 진취적인 기업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많은 참고되었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겠다. 분야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게 있으면 거침없이 제안하는 분위기를 제가 먼저 만들겠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4. 국민통합

1) 통합과 융합을 통해 안정된 사회 구현

국민통합의 에너지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활동 가운데 가장 큰 흐름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다. 이 둘은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두 개의 바퀴와 같다. 경제를 살려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통합의 힘을 이용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 당선인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20세기까지의 성장동력은 분류와 집중이었다. 모든 것들을 서로 쪼개서 정밀하게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렇기에 전문화와 분업화는 그 시대의 화두였다. 그러나 21세기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쪼개진 것들을 서로 통합하고 서로 다른 분야를 묶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민통합’의 방향은 세계로 향해 있다. 국내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룬 후에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와 융합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이 생각하는 큰 틀의 통합이며 융합이다.

이제 통합과 융합은 21세기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도 어느 부처를 없애고 살리는 의미가 아니라 각 기능별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통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선인이 추구하는 리더십도 통합과 융합의 리더십이다. 미리 목표를 정한 뒤에 앞장서서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격려하고 도와줘서 사람들 스스로가 신명나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내세운 ‘섬기는 정부’는 바로 이러한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당선인이 내세우는 ‘국민통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통합과 이념적 통합, 그리고 지역적 통합이 그것이다.

경제적 통합은 우선 경제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계층 간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잡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새 정부가 담당한다는 생각이다.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내세운 ‘능동적 복지’는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뿌리와 같다.

이념적 통합은 노와 사,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여와 야 등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모습을 서로 조화롭게 통합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한쪽은 수용하고 다른 쪽은 배척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모두를 포용하고 아우르는 것이 이념적 통합이다. 노와 사가 협력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여와 야가 효율적으로 결합해 상호보완관계 속에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적 통합은 동과 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통합을 의미한다. 경제적·이념적 통합을 거쳐 완성되는 국민통합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당선인은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통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부터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선인은 국회의장단 예방을 시작으로, 국회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과 회동하는 한편,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을 직접 방문해 야당 대표들과 정치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여야 협력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박근혜 전 대표 등과 만나 당내 화합과 결속방안도 직접 논의하고, 정치 원로 및 종교계 지도자들과도 잇따라 회동을 갖는 등 국민통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성공적인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협조를 약속받기도 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가는 게 좋겠다고 느낄 정도로 인프라를 지방에 투입해 길을 터줘야 한다”

당선인은 야당 대표들을 직접 찾아가 국정을 상의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 조화롭고 새로운 정치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고 밝혀, 효율적인 지방 분권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핵심요소이자, 정치 선진화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섬기는 정부’와 ‘능동적 복지’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든 이후에 세계와 융합해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이 당선인의 계획이다.

2) 국회의장단·원내대표단 예방 (2008.1.8, 국회의장실 및 국회 귀빈식당)

-국회를 존중하며 긴밀히 협조하겠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당선 후 처음 국회를 찾아가 국회의장실 방명록에 “국회를 존중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부를 국회의 동반자로 규정해 자세를 낮추면서 원만한 국정운영에 대한 바람을 담은 문구라고 할 수 있다.

당선인은 임채정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을 예방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선 “재정을 동원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당리당략은 일절 없을 것”이란 말을 거듭 써가면서 “행정부와 의회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의회를 존중하고 긴밀하게 대화·협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당선인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임채정 의장에게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학계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많이 했으리라고 보고, 국회 내 활동은 어차피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존중하는 게 관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국회의장단 예방을 마친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단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고 선진화된 사회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보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당선인은 “정치선진화,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와 새 정부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할 것이고, 의회도 동반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의

식을 갖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잘못된 것은 잘하도록 할 것이다. 사심이 없다. 민생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대한 편견은 전혀 없다. 호남 지역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내주신 지지를 보면,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 저는 지역연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선거할 때도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 두 가지를 내걸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은 개의치를 않는다. 국민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3)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 대표 방문 (2008.1.17, 국회 및 민노당 당사)

- 여야가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모델 만들자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국회와 문래동 민주노동당 당사를 잇달아 방문,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와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 등 양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열심히 하겠다”며 “여야가 같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신당과 민노당 지도부는 협력적 여야 관계에는 동의를 표명하면서도 일부 부처 통폐합 조치 등에 대해선 재검토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야당은 야당의 역할이 있다”며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보다 막강한 대통령이 되는 것 같고, 총리 위상이 많이 격하됐다. 통일부 (폐지)문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 같다”

당선인은 야당의 손학규 대표를 만나 국정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당선인은 “청와대 위상이 강화된 것은 아니며 내각을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청와대 수석들을 차관급으로 낮추고 경호실장도 처장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또 “당선인이 소외 계층에 대해 배려가 부족하지 않을



까, 남북관계에 대해 급격한 정책 변경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견해 있다”고 지적했고, 당선인은 “야당의 지적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책이 그렇게 급히 왔다갔다 할 리 없다. 잘할 테니 걱정 말라. 소외계층 배려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노당은 “환경과 복지, 여성, 통일, 노동을 중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안을 내겠다. 여성부처는 확대돼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구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당선인은 “지금은 남북 간에 대규모의 협력이 있으니까 모든 부처가 다 (각자 소관된) 남북 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가야 하는데 기능을 흩어놔서 민원인들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세계의 추세가 통합이고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몇 배 큰 나라들도 부처 수는 더 적다. 합리적 기능조정의 측면에서 생각해 달라”고 설득했다.

이처럼 당선인이 상대 당 대표를 직접 찾아가 국정을 상의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일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 대표들과 끊임없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4) 민주당·국민중심당 대표 방문 (2008.1.18, 민주당 및 국민중심당)

-세(勢)를 가지고하는 정치는 옛날 정치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당선인은 민주당 당사에서 박상천 대표 및 지도부를 만나 통일부 폐지 방안에 대해 “남북문제를 이제 밀실에서 해야 되는 시대는 지났다. 통일에 대한 준비를 통일부 혼자서 할 수 없다. 모든 부서와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부 통폐합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내가 서울시장을 할 때 보니 여성부서를 두면 다른 데에서는 오히려 관심을 안 갖는다. 이제는 모든 부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정치권의 방향에 대해서도 “여당이나 야당이라는 생각에 구속되

어서는 안된다”며 “나라 잘되게 하는 데 여야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과 회동을 마친 당선인은 곧바로 국민중심당 당사로 이동해 심대평 대표를 만나 “완전히 기능을 모아 어떤 업무도 한 군데만 가면 일을 볼 수 있게 하고, 규제를 많이 없애버리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흩어진 기능을 모으는 것을 위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차기 정부 구상을 설명했다.

당선인은 “정치전략, 당리당략적으로 할 이유가 내 경우는 전혀 없다”며 “세를 가지고 하는 정치는 옛날 정치다.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좋은 모습으로 좋은 변화 보여주면 그게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5) 농어민단체 대표 간담회 (2008.1.21, 인수위 대회의실)

-농어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농어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5년 간 꾸준히 노력해 향후 10~20년 농업정책의 기초를 닦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농촌이 당면한 과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어

당선인은 농어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농어업을 고부가가치 2차 산업으로 만들어,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확고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농촌이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농어업의 고부가가치 2차 산업화’ 비전도 제시했다. 당선인은 “쌀 농사를 지어 도저히 경쟁이 안된다고 하니 2·3차 가공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일본도 정종을 비롯한 각종 가공식품을 만들 듯이 우리도 비싼 밀가루를 쌀로 대용할 수 없는지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동남아에서 쌀국수를 먹는데 우리도 쌀국수를 먹으면 쌀소비량도 많아질 것이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선인은 또 “식품산업을 농수산 분야와 융합하는 것은 1차 생산에 머물러 있는 농수산업을 2차 가공유통업으로 육성시켜 ‘농장에서 식탁까지’ 가는 과정을 산업화함으로써 FTA를 극복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방침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길게 봐 더 좋게 하겠다는데 믿어줘야 하다”고 당부한 뒤 “나는 우리 농어촌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와 농민이 힘을 모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당선인은 또 “이제까지는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정책이 있었지만, 이제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말하며, 생산자는 좋은 가격에 물건을 팔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FTA 협정을 앞두고 농촌이 매우 걱정스러워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농수산에 관련된 과거 농림부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2차, 3차 산업시대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간의 정책을 바꿔 양쪽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려고 생각한다.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위기를 통해 기회를 만들자.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6)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2008.1.22, 서울시청 태평홀)

- 규제가 아니라 혜택으로 나아가겠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어느 한쪽을 규제해 (열악한)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 많은 혜택(favor)을 줘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 지자체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당선인은 “어느 정도는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혜택을 줘서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가는 게 낫도록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하는 게 좋다”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며 “수도권 규제는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선인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서울시장이었을 때도 중앙정부가 시·도 지사들과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면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졌다”면서 “국정의 상당 부분을 시·도 지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인은 시·도 지사들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고 “속도를 내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산업단지 조성이 지체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며 “외국은 아주 짧은 기간에 투자와 관련한 절차를 다 도와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기업이 투자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과 규제가 많다”며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당선인은 협의회가 끝난 뒤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완주 전북지사를 별도로 만나 영산강운하와 새만금 해양카지노 투자유치 등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협의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지사 중 해외 출장 중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제외한 14개 시·도 지사가 참석했다.

7) 노동계 간담회 (2008.1.23, 한국노총)

-노동자 없는 기업은 없어, 노사 힘 합쳐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이용득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 기업친화적)라는 말에는 노동자와 기업인이 함께 들어가 있다. 노동자 없는 기업은 없고 기업인 없는 비즈니스는 없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제가 당선된 이후에 기업인을 먼저 찾아갔다. 거기 가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가 되겠다’고 얘기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에는 노사가 다 들어 있는데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기간 중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큰 힘이 됐으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함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120달러가 될 것”이라며 “우리같이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상당히 힘들게 돼 있다”고 말하며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노사가 힘을 합치는 것뿐이다. 이것만이 어려운 여건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와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분기별 고위정책협의회 구성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실무급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고, 당선인은 “협력 기구를 서로 의논해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모든 원자재값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 같이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노사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어려운 여건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다. 노사가 정말 굳게 힘을 모아야 된다. 기업도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무엇보다도 노동자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원가가 10% 오르더라도 우리 노동자들의 생산성만 향상시키면, 우리는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두 축은 기업과 노동자다. 여러분이 큰 한축을 갖고 있다. 한 축이 정말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우리 노동생산성을 확보해 준다면, 모두가 감동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5. 성숙한 세계국가

1) 세계와 함께 하는 품격 있는 나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보다 안전한 한반도,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 보다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보다 안전한 한반도’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평화를 정착하겠다는 의지이며, 이를 위해 미·일·중·러 등 6자 회담 참가국들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벽을 허물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뜻이다.

‘보다 정의로운 세계질서’는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익을

당선인은 조스팽 프랑스 전 총리와 만나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탕으로 하는 실용외교를 실천해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당선인은 창조적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와 호흡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과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는 당선인이 계획하고 있는 성숙한 세계국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외개발원조(ODA)를 현재 GNI(국민순소득) 대비 0.1% 수준에서 2012년까지는 0.2%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조만간 1천명 규모의 상비군을 편성기로 하는 등 PKO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차기 정부는 현재 38위(400명)인 PKO 참여수준을 2012년까지는 세계 10위권인 2천명 선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당선인의 발걸음은 투자유치에도 이어졌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주한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해외 관련 전문가들을 연속적으로 만나 자원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쿠르드 유전개발 참여를 위해 바르자니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를 접견한 것을 비롯해 조셉나이 하버드대 교수 일행, 조스팽 프랑스 전 총리, 팔미사노 IBM 회장 일행, 리비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일행 등과 만나 양국 간의 관계 개선과 긴밀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알 사이바니 두바이투자공사 사장에게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아랍에미리트와 경제협력뿐 아니라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 사이바니 사장은 두바이와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가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20억 달러 규모의 ‘한·두바이펀드’ (가칭)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취임 후에도 이러한 실용외교, 자원외교에 더욱 공을 들일 계획이다. 주변 4강 국가 방문과 APEC, ASEM, ASEAN+3과 G8회의 등 거의 매달 해외순방에 나서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질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취임 초부터 ‘외교대통령’의 면모를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2) 미국 외교사절 (2008.1.4.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

-한·미동맹 강화 약속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아·태소위원장,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협상 대표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한·미동맹 강화 문제, 개성공단 문제,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관해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당선인은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한국을 자주 방문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미국측 인사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당선인이 미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3)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2008.1.10.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

-부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초청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부시 대통령의 미국 초청의 뜻을 전하며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사 절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선인은 부시 대통령의 방미 초청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주한 미국 대사로 있을 때 당선인이 서울 명예시민으로 해 준 것을 잊지 못한다.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주한 미국 대사 시절 당선인과의 인연을 이야기했으며,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이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를 매우 즐거워했다는 말도 전했다.

또한 힐 차관보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북한 핵문제에 관한 신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새 정부 출범 이

이명박 당선인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강화 등 창조적 실용 외교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후에는 북한 핵폐기 단계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양국 정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양자 간에 질적, 양적으로 충분하고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전략적 차원이 아닌 인류적,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4) 4개국 특사 외교

-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첫걸음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경제협력 등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 실질적 협력증진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국에 특사를 파견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4개국 특사 파견 계획을 언급한 당선인은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장정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면서 특사단 파견을 통해 상대국 정상들에게 친서를 전하는 등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 국가는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참가국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국가들이다.

(1) 특사단 파견 - 경제협력 등 실질적 협력 강조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미국 특사단장에 정몽준 한나라당 상임고문, 일본 단장에 이상득 국회 부의장, 중국 단장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러시아 단장에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선인은 2008년 1월 11일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에서 4개국 특사단과 접견을 갖고 해당국가 외교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특사인 정몽준 의원에게는 대통령 취임 후 방미 건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협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일본 특사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에게는 재일교포의 참정권 문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뜻을 말했다. 중국 특사인 박근혜 의원에게는 최근 중국의 정책변경으로 국내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에 대한 걱정을 말하며, 그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중국 당국과도 그런 사정을 잘 협의해 볼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박 의원에게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측에서 한국이 중국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잘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러시아 특사인 이재오 의원에게는 자원 외교를 고려해 동부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그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파악해 협의하고 와 달라고 말했다.

4강 특사단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출국(일본 1월 15일, 중국 1월 16일, 러시아 1월 20일, 미국 1월 21일)해 상대국 최고위 지도자, 외교장관, 의회 지도자들과 면담해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경제협력 등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2) 특사단 귀국 보고 - 대통령 취임 후 본격 행보 나설 것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를 방문한 특사단은 2008년 1월 21일 일본특사단을 시작으로 23일 중국 특사단, 29일 미국 특사단, 마지막으로 30일 러시아 특사단이 당선인에게 방문 결과를 각각 보고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난 미국 특사단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특사단도 해당국과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국민급 대우를 받고 돌아왔다. 특히 이들 4강 특사단은 각국 경제 관련 인사들과도 활발히 만나며, 당선인의 외교 코드인 ‘경제외교·실용외교’를 대변했다.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상득 특사는 후쿠다 총리를 만나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일 FTA 협상 재개, 일본의 부품공장을 한국에 짓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하자 당선인은 성과가 좋았으며 방일특사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상득 특사는 후쿠다 총리가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면, 특히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자며 이를 위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에 동감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특사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 결과와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인과의 만남 등 방중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고, 당선인은 이번에 박근혜 대표의 성공적인 특사방문으로 한·중 간의 우호 협력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격려했다.

박근혜 특사는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 고위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부탁했다며 “후 주석께서 앞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활동하는 데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또 중국이 그동안 6차 회담 의장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박근혜 특사는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당선인의 방중을 공식 요청하는 등 중국측이 상당한 배려를 했으며, 한·중 양국은 이 자리에서 ‘전면적 동반자 관계 강화’라는 새로운 관계 설정 지표를 밝히는 등 내용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미국을 방문한 정몽준 특사는 1월 22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당선인의 미국 방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미국의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FTA 비준에 협조를 구하고 뉴욕에서 금융계 인사들을 만나서는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재오 특사는 당선인이 ‘자원외교’의 핵심대상으로 지목한 러시아가 특사 단 방문을 매우 환영했다며, 당선인이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를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취임식에도 최고위 사절을 파견할 뜻을 밝혔음을 보고했다.

또 러시아측이 우리측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의사에 적극 환영을 표시하고 사할린 항구 및 교량 건설과 현대화 사업 등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바란다는 것을 보고했다. 또한 러시아 관리들을 만나 남·북·러 3국이 동부 시베리아를 공동 개발하자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특히 아나톨리 야놉스키 산업에너지부 장관대리로부터 “극동 지역의 정유 및 석유화학시설 등의 건설에 한국의 투자를 희망한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미래의 개발가치가 무궁무진한 러시아에 대한 당선인의 적극적인 관계 강화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상득 특사로부터 귀국 보고를 받고 있는 당선인.



의지, 특히 동부 시베리아 일대를 양국이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당선인의 구상에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들 국가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

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 취임식 이후 본격적인 4강 외교를 펼쳐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5) 각국 외교사절 및 방한 인사

(1) 왕이 중국 특사 (2008.1.14,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

- 한·중 협력관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것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왕이 중국정부 특사를 면담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인 왕이 특사는 접견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축하 인사를 전하며 “후진타오 주석은 베이징에서 당선인과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식 초청 의사를 밝혔다.

왕이 특사는 아울러 올해 8월 베이징올림픽과 10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도 꼭 참석해 달라는 후진타오 주석의 초청 의사도 전달했다. 또 후진타오 주석이 새로운 정세 하의 새 출발점에서 양국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이 좀더 발전하고 한반도와 국제무대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왕이 특사는 이번 방한 목적에 대해 “당선인을 비롯한 한국의 여러분과 양국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꽃피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사소통을 보다 깊이 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당선인은 이에 대해 환영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6자 회담 의장국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선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한층 더 협력적인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2) 라민 디악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 (2008.1.25,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

- 대구세계육상대회, 한국 육상 중흥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실사단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수영이나 피겨스케이팅에서도 국제적 스타를 배출했듯이 저력을 발휘해 대구 대회가 일회성 대회로 끝나지 않고 육상 중흥의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당선인은 “대구세계육상대회는 한국 육상뿐 아니라 아시아 육상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스포츠의 숙원이 육상·수영 등 기본종목에서 좋은 선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대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실사단을 이끄는 라민 디악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에게 대구육상대회를 여는 데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좋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디아크 회장은 대구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할 것이고, 2012년 대구대회가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한국 정부도 성공적인 대구 대회 개최를 위해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 아세안 대사단 (2008.1.29,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

-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협력 더욱 증진할 것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주한대사 등 아세안 대사단을 접견하고, 새 정부에서는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를 한 단계 증진시키겠다며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인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자고 말했다.

당선인은 “가까운데 있는 나라의 대사들이라 자주 뵈어야 하는데…”라며 한 지리적 인접성을 들어 좀더 가까운 외교 관계를 가질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지금 따뜻한 데서 오신 대사들은 날씨가 추운데 지내기가 어떤지 모르겠다며 추운 날씨에 대한 건강을 걱정하는 것으로 인사를 건넸다.

당선인은 브루나이 대사에게 “내가 전에 브루나이에 가서 왕을 만났는데, 큰 궁전도 구경했다. 방이 1,000개나 되더라”며 반가움을 표시했고, 태국 대사에게는 “1965년부터 1968년까지 태국에 있었다”며 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등 각 국 대사들에게 친밀감을 보이기도 했다.

(4)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일행 (2008.2.5,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

- 한·미 FTA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방한 중인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한·미

FTA가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며, 한·미 FTA가 양국 의회에서 조기에 비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리버 회장 이외에도 신기욱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장 등 미국 내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출발(New Beginnings)' 스터디 그룹의 미국측 인사들(10명)이 참석했다.

당선인은 한·미관계 강화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재임기간 중 한·미관계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터디 그룹 소속 미국측 인사들은 '새로운 출발' 프로젝트에서 한·미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새 정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5) 일본 국회의원단 (2008.2.11,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

-한·중·일의 협력은 동북아,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방한 중인 자민당 가토 고이치 전 간사장을 비롯한 일본 여야 의원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개인도 국가도 열린마음, 열린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열린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한·중·일 3개국이 서로 협력하게 되면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아시아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과거에 얽매어 있으면 오늘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가질 때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서 아시아의 미래, 양국 간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국관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 정치인의 교류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일관계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일본도 양국 경제

당선인은 일본 여야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제의했다.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6자 회담을 통해 진행되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 조스팽 프랑스 전 총리 (2008.2.12,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

-한·EU FTA, 올해 안에 합의 기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조스팽 프랑스 전 총리와의 접견에서 한국과 EU의 관계가 경제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한·EU FTA가 금년에 합의가 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조스팽 전 총리도 “현재 EU 의장국인 프랑스는 한·EU FTA가 조속히 체결되길 바라고 있다” 고 화답했다. 조스팽 총리는 또 한국의 대다수 기업이 프랑스에 진출해 있는 만큼 앞으로 산업·교육과 과학 부문에 있어서 두 나라의 발전, 협력의 여지가 크다며 “저는 과거의 지도자이지만 당선인이 한국을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편 당선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도 EU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7) 조셉나이 하버드대 교수 일행 (2008.2.13,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

-한·미관계, 미래로 향한 새 틀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조셉 나이(Joseph S. Nye Jr.) 하버드대 교수 일행을 접견하고,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한·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양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동북아의 핵문제 해결과 동북아의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새로운 모습의 한·미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한·미관계도 이제 21세기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제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성공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중동의 팔레스타인 문제에 등에 증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정책의 비중이 좀 낮다는 생각도 있다면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만남에서 조셉 나이 교수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잘 사용해 문화와 과학이 융합되고, 경제와 정치의 성공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면서 “한국의

브랜드를 해외로 확장해 나가서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더욱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최한 특별강연을 위해 방한한 나이 교수는 문화, 국제 교류 등 비강제적인 힘을 통한 ‘소프트파워’를 주창한 세계적 석학으로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국가정보위원회 회장 등을 지냈다.

6) 투자유치 활동

(1) 팔미사노 IBM 회장단 일행 (2008.2.12,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

- IBM 연구소, 한국 내 유치 논의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팔미사노 IBM 회장을 접견하고, IBM의 연구소를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선인은 IBM이 한국의 특화된 강점을 찾아내 이를 강점화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고, 이에 팔미사노 회장도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팔미사노 회장은 미국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의 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면서 특히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인력을 서비스 분야에서 뛰어난 인력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일했으며, 그 결과 미국 경제가 살아났고 미국을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서비스산업 국가로 만들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날 접견은 팔미사노 회장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심을 표명해 이루어진 것으로 팔미사노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인수위 국가 경쟁력강화특위가 벤치마킹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를 잘 참조하기를 바란다

(2) 바르자니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 (2008.2.14,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

- 쿠르드 유전개발, 한국기업에 많은 기회 달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바르자니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와의 만남에서 쿠르드 지방정부와 한국기업들 간의 유전개발과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축하와 함께 감사를 표시하며,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당선인은 경험이 많은 쿠르드 주재 한국 건설업자나 많은 기업가들이 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앞으로 쿠르드 지역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서 한국과 쿠르드 양쪽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르드 지역을 포함한 이라크와 우리가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에 바르자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한국 기업을 가장 선호하는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으며, 앞으로도 쿠르드 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3) 사이바니 두바이 투자공사 사장 (2008.2.15, 통역동 당선인 접견실)

- 한·두바이펀드(가칭) 설립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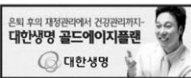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알 사이바니 두바이 투자공사 사장(두바이 은행 총재 겸임)을 접견하고, 두바이와의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알 사이바니 사장은 당선인에게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의 친서와 당선 축하인사를 전달하고, 두바이와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가 발전되길 바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우선 20억달러를 제공해 가칭 한·두바이 펀드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혔다. 이에 당선인은 양국이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경제적 교류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알 사이바니 두바이 투자공사 사장을 만나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한·두바이 펀드는 한국 내 인프라 등에 우선 투자하게 되며, 두바이 투자공사와 관련된 회사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될 예정으로 두바이측은 한국 투자자는 물론 매칭 펀드(Matching Fund)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두바이측은 동 펀드의 규모를 일단 20억달러를 목표로 하되 필요시 추가증액도 고려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국측과 세부적인 사항을 조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북핵진전 - 경제성 - 재정능력 - 국민합의 李당선인 '대북경협 4원칙' 제시

한미일 대표신론 공동 인터뷰: 동아일보-아사히-월스트리트저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대북 경협 추진 4원칙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성 △재정능력 △국민합의 4개 측면에서 대북 정책을 밝힌다. 이 당선인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경제적 목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자기가 정치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일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협 4원칙"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일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협 4원칙"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일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협 4원칙"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일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협 4원칙"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회관에서 한국 언론 대표와 언론인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 월스트리트저널과 공동 인터뷰를 하고, 세 정당의 외교 정책과 경제 운용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이 당선인은 당선 후 첫 본격 인터뷰에서 "이날 강연에서 벗어나 선전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승 기자 isunghong@donga.com

- 한미-한일관계 좋아지면 남북도 좋아질 것
- 남북정상회담 정치적-형식적으로는 안해
- 日, 경제대국에 걸맞은 성숙한 亞 외교 기대
- 이념 갈등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실용사회
- 3년 걸리는 공장설립, 6개월내 되도록 정상화

한 '한미일 대표신론' 동아일보-아사히-월스트리트저널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 마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북한과 좋아지고 생각해 왔지만, 다음 정권은 한미관계와 한일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생각하다"면서 "이것은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다. 북한에도 이를 알리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북한이 사회주의적 정권을 통해 신뢰를 얻어가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6·15회담의 틀은 깨지 않고 10·4국가를 개방하면 사회주의 체제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북한이 사회주의적 정권을 통해 신뢰를 얻어가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6·15회담의 틀은 깨지 않고 10·4국가를 개방하면 사회주의 체제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벌금형도 공천신청 자격" 한나라 내분수습 실마리

최고위 오늘 기준완화 의결 - 김무성 회석길 열려

한나라당의 4월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부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고위위원회는 2일 긴급 최고위위원회를 열어 부패 비리 연루자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천 신청 자격을 주도록 의결한 공천심사위원회를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4대목에 관계가 있는 기존(대선)은 말소(말소)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무성 최고위원 등은 공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본회에서 "공직자후보추진 규정 3조 2항은 단순히 '형량'에 따라 공천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부패 비리 연루자라도 공정한 후보에는 '징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로 돼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공천 신청 자격을 주고 공심위원이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새누리당 당수 후보에 대한 최고위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 조작"

법원, 유죄판결 5년 5개월 징역구속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해 가짜의 주가 이익을 챙기는 '사기' 부패범죄 혐의를 저질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이상준)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병환(58)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1년 징역 6개월의 자격을 선고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A12면에 관련기사

재판부는 또 한양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론스타-KEB합업신용사(KEB)에 주주로서 25%의 주권 이익을 2배가 넘는 벌금 250억 원을 각자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 씨는 1심에서의 중형 선고에도 주주의 자격이 있고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법원 구속이 유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심

Business Review

구글 따라 하려다 큰코다친다 B7면

Weekend focus

'춘천 노크' 교수-관료-언론인들 A10-11면

충청남도에도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한다

최근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대학 선정 결과는 '교육의 지방분권화', '지역균형발전', '법학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향후 법학전문대학원들의 과학적인 운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지혜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200만 충청도민과 더불어 이를 수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충청남도에는 20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50 여개의 대학과 130만 여개가 넘는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천안, 아산 신도시가 건설 중이며 충남도청의 행정 이전과 당진을 중심으로 하는 황해자유무역지구 설치 등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자치단체이다.

충청남도는 대전과는 달리 독립된 행정구역이며, 결코 대전에 소재하는 대학이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없음을 분문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대학이 예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또한 충청남도에 대한 지역 자치이며 충청민 홀대라는 차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 예비대학 선정에 있어서 지방지역에서 선정된 대학 대부분은 지역 국립대학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해 온 지방사립대학 대부분은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의 이러한 시각은 지방 대학의 발전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대학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대단히 부당한 처사이다.

우리는 최근 언론에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대학 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법학전문대학원 본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제정사를 강하게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200만 충청도민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 충청남도에는 대전과 독립된 행정자치구역이다.
- ▶ 충청남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라.

2008년 2월 2일

충청남도 로스쿨 유치위원회 · 충남지역발전협의회 · 선문대학교

6. 인재대국, 문화강국

1)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육성해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다.

우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국가장학제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목표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등장한 문화와 산업의 융합에 주목하고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에도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당선인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5년을 태평성치로 만들려면 문화예술이 꽃피야 한다’ 며,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 향상에 걸맞은 문화수준 향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 등 교육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 선진화를 강조했다.

특히 한국교총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를 확실히 표명하는 한편 다양성 측면에서 인재를 양성해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산업, 전략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보자’ 며,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년회 (2008.1.4, 이화여대 LG컨벤션홀)

-선진화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년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을 만나 “입시 자율을 대학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다. 자율화로 가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자율에 따른 책임이 매우 크다”며 2008년을 대한민국의 선진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라고 밝혔다.

당선인은 교육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개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앞으로 개혁되면 학생들이 고생을 덜 하고 부모님들도 사교육비 지출이 적어지는 그런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며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지식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정상적인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육관을 강조하면서 대학 교육도 좋은 인재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좋은 인재로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선인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대입 제도를 만들어 이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부디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인재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된 일은 교육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감독기능만 하면서 철저히 지원하는 도우미적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의 질적 향상이다.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권이 표준화를 전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부분은 표준화에 기본을 두겠지만, 다양성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다. 옛날 같으면 우리끼리 경쟁하는데 지금과 같이 열린사회에서는 온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 교육 제도가 시원찮으면 아이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3) 한국교총대표단 간담회 (2008.1.25, 인수위 대회의실)

- 가르치고 배우는 게 행복한 풍토 만들 것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며 그것이 첫째 목표라고 밝히고, 그것을 전제로 입시제도가 바뀌고 모든 분야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육은 아직도 관 주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오랜 세월동안 관 주도 아래서 학부모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고통을 겪어왔고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는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특히 교권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총과 함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며 국민들이 기본으로 돌아가 일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사기를 살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행복하고 배우는 것이 행복한 풍토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해야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한다고 본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 결국 교육상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분위기를 쇠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야말로 돈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다. 또한 제일 먼저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교총과 함께 캠페인을 한번 대대적으로 하겠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4)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 (2008.1.25, 서울 롯데호텔)

-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를 겸한 간담회에 참석해 “영어 교사 지원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졸업 후 영어 구사에 거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영어 과외를 받지 않더라도 대학 가는 데 걱정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해 영어 공교육 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책정할 것임을 시사하며 과외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당선인은 이번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이 오랫동안 검토한 뒤에 발표하는 것이며 영어 공교육과 영어 교사에 대한 제도와 지원 등 이런 것들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인은 또 입시자율화를 몇 단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공교육 자율화에 큰 목표를 두고 있다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는 공교육을 통해서 대학에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공교육 강화의 뜻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고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 학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잠재력과 창의력으로 평가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게 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장학금과 대여금을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으로 공교육에 대한 영어 교사에 대한 제도, 지원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 공교육만 받더라도 외국인과 같이 웬만한 생활은 거침없이 할 정도로 만들겠다. 영어 과외를 안 받아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은 분명히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조기에 유학을 가는 아이들이 적어지지 않겠나. 근본적으로 시대에 맞는, 그렇게 하면서도 다양성과 수월성을 감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집의 아이들도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시행하려고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는 공교육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당선인은 전국시도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공교육 강화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5) 문화예술계 간담회 (2008.1.31,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 문화예술이 꽃피야 태평성시 이룬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문화예술인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가 너무 갈라지고 분열돼서 우선 새로 통합을 하는 게 제일 급한 것 같다며 사회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새로 시작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능력있는 한국 국민의 천성을 믿고 있다”며 화합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 환경이 10년 만에 최악의 상태를 맞아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지만 쉬운 환경에서 출발하면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며 “어려움 속에서 가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 매고 단합하는 계기가 된다”며 오히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당선인은 “지금까지 ‘안되는’ 것을 거역하면서 ‘해봐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5년도 많은 것을 인내하고 실천에 옮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선인은 “향후 5년을 태평성시로 만들려면 문화예술이 꽃피워야 한다”며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은 문화예술인들은 그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기여한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하려고 한다. 5년 후 우리 문화예술이 꽃피는 선진국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서 3만달러, 4만달러 소득도 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문화수준이 따라가야 한다. 문화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 문화국민이 아니면서 소득만 높아지는 것을 저는 늘 두려워한다. 여러분께서 그 점을 늘 깨우쳐 주시기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6) 관광산업인 간담회 (2008.2.4, 인수위 대회의실)

- 관광산업은 미래신성장동력이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관광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산업, 전략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와 법·제도를 개편해 관광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관광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각종 규제를 혁파해서 관광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산업 자체에 대한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당선인은 “그동안의 정부들이 관광업을 너무 사치산업이라 보는 경향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많은 회의·토론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 같이 관광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관광산업에 대한 발전 의지를 보였다.

특히 관광산업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관광이 지난해 100억달러 적자가 났다고 들었다. 나갈 사람은 많은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나가는 사람을 탓해서는 안되며 들어 올 사람들에게 제대로 볼 것과 즐길 것을 제공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선인은 사막의 작은 나라인 두바이를 예로 들면서 “과거에는 버렸던 사막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사막을 파서 운하를 만들어 배를 다니게 한다는 계획으로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우리 관광업도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관광산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자.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여러 규제와 법·제도를 개편할 것이다.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뀌서, 지원을 해 보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이 산업 자체에 대한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말씀 중에서

7. 방문 및 주요 행사

1)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방문 (2008.1.11)

- 국방과 안보는 국가의 기초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기에 국방과 안보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이 튼튼해야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한다고 해서 남북화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남북화해, 평화유지, 통일로 가는 것은 적극 하겠지만, 한편으로 국방이 튼튼하고 안보의식을 갖는 것은 국가의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당선인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기 전에 국방부를 먼저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선인은 김장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김근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군사 대비태세와 관련된 현황을 설명 받았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 “새 정부는 군에 대해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갖고 있다”며 “남북화해와 평화는 튼튼한 안보와 병행해야 한다. 안보가 뒷받침돼야 국가발전을 위한 외국투자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군이 재난대비를 포함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

역대 대통령당선인 중에 한미연합사 방문 이전에 국방부를 먼저 방문한 것은 이명박 당선인이 처음이었다.



며 이번 방문이 군을 잘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당선인은 정부 교대기에 군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춰 국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 한·미연합사 방문 (2008.1.15)

- 한·미동맹 통해 한반도와 세계평화 지킬 것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 부대 현황을 보고 받은 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할 것이고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은 한·미연합사의 보고를 받은 뒤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매우 튼튼히 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심하게 됐다”면서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민국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국 병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 민생경제현장 방문

(1) GM대우 부평공장 방문 (2008.1.29)

- 노사화합으로 기업경쟁력 높여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인천 부평구 GM대우차 공장을 방문,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와 회사가 화합을 해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노사화합의 문화를 역설했다.

대우차 공장에 도착한 당선인은 먼저 방명록에 ‘노사화합이 회사를 경쟁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적은 후 뒤이은 환담에서 GM대우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노사가 화합하는 모범적 회사로 발전하게 된 것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칭찬한 뒤 노사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회사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즉석에서 당선인의 이름이 적힌 GM대우 재킷을 선물하며 “당선인을 GM대우의 명예직원(honorary member)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3조원을 투자했고,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3조원을 투자하겠다”며 당선인의 투자확대 정책에도 부응했다.

당선인은 직원들과 즉석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샐러리맨 출신 대통령으로서 직장인의 마음가짐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직원의 질문에 “고교 졸업 후 막노동 생활을 하던 시절 안정적 일자리를 갖는 게 소원이었다”고 말한 뒤 “하급직 노동자라도 조직이 잘돼야 자기도 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노사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 봉천동 원당재래시장 방문 (2008.2.3)

- 서민경제 잘돼야 살맛나는 세상 된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설을 앞두고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 원당 재래시장을 방문, 상인 및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서민 물가를 점검했다.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상인의 주문에 당선인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서민경제가 잘돼야 재래시장도 잘되고 그래야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당선인은 시장 내 한 식당에서 순대국으로 상인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재래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듣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요새 너무 불경기고 재래시장은 더 불경기다. 재래시장 장사 잘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며 다음 정권은 서민들 잘살게 하기 위해 열심히 5년간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더불어 “손님들이 재래시장에 오면 싸고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젊은 사람들도 재래시장으로 온다”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약속했다. 또 재래시장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젊은이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들도 교육받고, 친절교육도 해야 한다면서 재래시장 선진화에 대한 관심을 밝혔다.

또한 “장사는 남이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해야 한다”며 상인들 스스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4) 사고현장 방문

(1) 태안 유류오염 사고현장 방문 (2007.12.27)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할 것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약속한 대로 대통령 당선 뒤 다시 태안 기름유출사고 현장을 방문해 방제작업에 여념이 없는 자원봉사자와 군인, 경찰 등과 만나 일일이 악수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태안유류오염사고 현장을
방문한 당선인.



사고현장인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인근 모항항을 방문한 당선인은 “자원봉사자가 60만명이나 왔다고 하는데 외국에는 이런 선례가 없었다”며, “재

난을 당한 충남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감동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에 사고 지역 주민들은 확실한 보상 체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당선인은 보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 승례문 화재현장 (2008.2.11)

-철저히 원인규명해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이경숙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승례문 화재현장을 방문, 피해현황을 살피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당부했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현장에 도착,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사고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상징적인 곳이어서 서울에 가면 승례문 보러가자고 한다”면서 “국민 가슴이 아플 것이다. 문화적인 곳이기도 하다. 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당선인은 승례문 남단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서 도면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으며 관심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당선인은 국민의 가슴이 아플 테고, 전체적으로 사회 혼란스러운 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3) 용문산 헬기 추락사고 합동 분향소 방문 (2008.2.22)

- 이들의 희생정신을 굶어 살피소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경기도 분당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용문산 헬기 추락사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한 직후 바로 분향소로 이동한 당선인은 장병들의 영정 앞에 서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1분간 묵념하고 희생장병의 영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분향을 마친 당선인은 유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하던 중 희생 장병의 어머니가 발버둥치며 절규하자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당선인은 고(故) 선호선 대위의 갓난아기를 안고 볼을 비비는 등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고, 결혼 4개월 만에 봉변을 당한 고(故) 정재훈 소령의 부인을 위로하기도 했다. 희생 장병의 어린 딸이 “아빠를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하자 등을 토닥거리며 위로했다. 당선인은 방명록에 “이들의 희생정신을 굶어 살피소서”라고 적은 뒤 분향소를 떠났다.

5) 사회복지시설 방문 (2008.2.2, 영락애니아의 집)

-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중증뇌성마비 장애아동 양양시설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 장애아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당선인은 김윤옥 여사, 임태희 비서실장, 이봉화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위원 등과 함께 영락애니아의 집에 도착, 장은희 원장으로부터 시설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장은희 원장이 장애아동의 성장에 따라 증축을 하려 해

중증뇌성마비 장애아동 양양시설인 서울의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한 당선인.



도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자 구청과 서울시가 반반씩 하면 되겠다면서 “공무원들이 장애인 숫자만 갖고 하니까 잘 안된다”며 “중증 장애아들이 많은 곳이므로 다른 곳과는 근거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선인은 방명록에 ‘사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서명한 뒤 언어학습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의무실, 아동숙소를 차례차례 둘러보며 장애아들에게 관심을 나타냈다.

6) 자랑스러운 한국인들과 화상통화 (2008.2.5. 통일동 당선인 집무실)

- 해외 현장에서 고생하는 여러분 모두 진정한 애국자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 집무실에 있는 노트북 PC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자, 근로자, 해외주둔 한국군 등 자랑스러운 한국인들과 화상통화 시간을 가졌다.

당선인은 먼저 남극세종기지 현장연구원들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연구원으로서 다른 9개국하고 경쟁해 앞서가는 연구소가 되기 바란다”며, 이제 대한민국도 열심히 해서 좋은 나라 만들테니 걱정하지 말고, 남극에서 연구하는 모든 것이 미래 과학적 자원이 되는 만큼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이라크 자이툰부대 윤영범 소장과의 화상대화에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정부에서 우리 자이툰부대를 높이 평가하고 평화와 안정, 지역협력 등 모든 면에서 잘한다고 고마워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근무하는 동안 공지를 가지고 이 지구상에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평화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다음으로 대화한 레바논 동명부대 강찬욱 대령에게는 “레바논이 중동의 파리라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국가였는데 국내 정치가 불안하고 국제 분규에 휩쓸려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며 “우리 한국군이 유엔의 평화유지군으로堂堂하게 국제무대에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가있는 만큼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지를 갖고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동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SK건설 이철규 상무와의 대화에서는 “쿠웨이트에 12억달러나 되는 큰 현장에서 근무하는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모두가 다 애국자”라고 격려했다.

8. 연설문

■ 2008년 신년사 (2008.1.1)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 다 함께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자(戊子)년 새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들을 성취해왔습니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뚝뚝 뚫쳐 세계사에 빛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전선(前線)에 서서 저는 다시 앞을 내다봅니다. 이제 나라의 모든 부문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올라서야 합니다. 낡은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미래와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남들이 앞서간 길을 따라잡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고 있고 이미 그 곳으로 가는 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크고 작은 혼돈 속에서 저는 그 길의 경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세계일류국가 만들기에 나섭시다. 저는 이 길에 앞장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

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과거 우리는 눈앞의 성과와 개인적 이익에 연연해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원칙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폐습을 그대로 안고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선진화를 향한 모든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학교도, 기업도, 노동자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정치도 원칙을 지켜야 하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편법과 불법은 이제 더 이상 시도하지도 말고, 용인하지도 맙시다.

‘폐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립시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고치면 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실질이 빛을 발하고 효용이 커집니다. 그래야 결국 삶이 편안해지고 품격이 올라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지만 분명히 바른 길(正道)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신발 끈을 조여맙시다.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그 길이 훤히 열립니다.

저와 새로 들어설 정부부터 솔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권도 변하고 기업도 변할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야 합니다. 다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년기자회견 모두연설(2008.1.14. 프레스센터)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보내 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려는 시대적 요구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 한 달 가까이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 왔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을 경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바뀌었구나, 이제 잘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저는 곳곳에서 확인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달려와 팔을 걷어붙이고 검은 기름띠를 벗겨낸 태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긍정적 변화의 힘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태안의 재난 복구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으로는 긍정과 희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바깥을 보면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려왔던 세계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 물가도 불안해졌습니다.

긴장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길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합심해서 변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화합 속의 변화를 일구어 내야 합니다.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합니다. 방만한 조직의 나사를 조여야 합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통합과 융합은 시대의 대세입니다.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더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줘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선진화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해서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그만큼 지체시키는 일입니다.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셔야만 역사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스스로 간명(肝銘)을 하고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이양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정철학을 확립하고 이명박정부가 해야 할 국정과제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1차 보고에서 155개의 과제들을 추출해 시급히 수행해야 할 일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일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일을 해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취임 전이지만 4개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장정은 잠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실질적인 관계 증진과 창의적인 사업들을 통한 공동번영의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 합니다.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양책을 결코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과 교육개혁을 서두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법과 기초질서를 다잡는 일부터 시작해나가겠습니다.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입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규제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규제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쓰자 일부에서는 친기업적으로만 정책을 쓰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이고,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기업은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근로자가 ‘경제살리기’에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 시대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역사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저는 그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거쳐 왔습니다.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일류 국가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국민 모두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선진화의 길을 앞당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오히려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할 필요 없는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다. 언제나 시작하는 그 초심으로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주한 외국인투자 기업 신년회 연설 (2008.1.15, 신라호텔)

신 경제성장정책과 외국투자자와의 파트너십 강화

오벌린 회장님, 머포스 회장님, 이오베 회장님, 신사, 숙녀 여러분!

따뜻한 격려와 지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무자년 쥐의 해입니다. 서양에서는 쥐가 큰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이곳 동아시아에서 쥐는 지혜와 근면과 부의 상징입니다. 저는 금년 2008년이 우리의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지런히 일해 모두가 번영을 이룩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지난 약 40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196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OECD 회원국이 되었고, 1인당 GDP는 2만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민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여러분과 같은 외국 기업인들이 도와준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투입한 자본, 기술, 그리고 정열이 없었더라면 한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한국 국민을 대표해 그간 여러분이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약 4주 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747 비행기'를 탄 까닭이 아니라 '747'로 알려진 경제정책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747 공약은 세 가지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를 살리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합니다. 국민들은 현 정부하에서 이

루어진 3~5% 성장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명박정부가 더욱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능력과 배운 소양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발성 경제회복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달러인 1인당 GDP는 주변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지만, OECD 국가로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이 가진 역량과 한국 경제의 강점을 고려하면 10년 내에 4만달러 수준의 1인당 GDP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셋째, 한국은 G-7 국가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고성장을 회복해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고, 또 세계시민으로서 옹당한 의무를 다하면 세계 7대 강국, G-7 국가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747정책에 관한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저의 견해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747정책에 내포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극복해야 할 도전과 과제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금년 세계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문제, 고유가, 그리고 달러화 가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등은 여러 사람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서로 연계된 세계경제에서는 한 국가가 일정한 경제활동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한국이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경제로 신속히 발전하려면, 교육제도, 특히 대학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셋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은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경제로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금융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 한국은 반드시 동북아의 으뜸가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이명박정부는 그간 현 정부하에서 보류되었던 산업은행 등 공공부분

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은 기업규제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규제제도는 과거 정부주도 경제발전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경제는 규모도 커졌고 구조도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주도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는 이미 상당히 세계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를 시장원리와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이와 같은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런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과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협조를 해주시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인위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말하는 경제정책과 일선 관료들이 집행하는 경제정책 간에 많은 괴리가 있어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의 개인 및 법인 소득세율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높고, 세법에 대한 해석에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도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와 같은 문제는 과거정부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악화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겪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이런 모든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최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스크포스가 여러분의 고견을 구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여러분과 다시 만났을 때 그간의 성과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설은 당초 영어로 했으나 편의상 국어 번역문으로 수록했습니다.

선진화시대의 개막과 이명박정부의 국제적 역할

외신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은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산업화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화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선진한국의 구현은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여망이자 목표가 될 것입니다. 당선 이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은 축하를 보내주셨고, 직접 특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다음정부의 행동규범으로 삼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 사고와 실천적 행동을 통해 낡은 구조의 틀을 바꾸는 대변환(great transformation)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국내적으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줄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시야를 아시아와 세계로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와 호흡하는 진정한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할 것입니다. '보다 안전한 한반도,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 보다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 우리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비핵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일·중·러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하겠습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국제사회와 더불어 10년 내 북한경제 수준을 일인당 3,000달러 소득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돕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핵문제를 근원적이며 생산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세계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르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간에 보다 과감하게 개방하고, 진취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안보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한·미동맹은 보다 창조적으로 재건될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최대의 경제 파트너로서 향후 양국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일본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배가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기정부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우방국들 그리고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지역과의 접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특히 아시아 외교를 넘어 EU와의 협력 확대에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정부는 실용적 경제외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미국과의 FTA 비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재 EU와 진행 중인 FTA 협상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습니다.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관한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제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경제인들을 만나 그들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결 같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줄 것을 제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번영이 곧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해외기업들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타파와 노사문제의 안정화가 시급한 선결조건입니다. 앞으로 차기 정부는 환경, 인권, 빈곤, 질병과 같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 위협의 해소에 적극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기후협약과 같은 중요한 국제현안 타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의 청년들의 ‘한국형 평화봉사단’ 파견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함을 통해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가 미래의 공동체로 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는 융합의 세기입니다. 한국이 세계로 나아가고, 세계가 한국으로 찾아오게 하는 양 방향 교류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역할과 방법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이 만들어준 길을 걸어왔다면, 앞으로는 세계와 함께 걸어야 할 이정표를 세우고 그 길을 창조적으로 개척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TIME지 선정, 환경영웅상 시상식 수상 소감 (2008.2.1. 김포매립지 내 국립생물자원관)

환경과 경제의 상생발전, 지혜를 모읍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교관 여러분,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TIME〉지가 저를 ‘환경영웅’으로 선정한 것은 아마도 청계천 복원과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의 개편의 성과를 친환경적인 도시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 상을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지만 그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산업시대 빠른 성장과 개발의 상징이었던 서울이 ‘친환경적인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세계가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번 〈TIME〉지는 저의 과거 업적을 바탕으로 ‘환경영웅’으로 선정하였지만, 이 상을 받은 저는 제17대 대통령당선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모범되는 친환경 국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청계천 복원과 서울숲 조성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조화가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황사와 사막화 등 주변 국가들의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중국과 몽골, 북한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과 경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환경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 지구적 환경위기는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이긴 합니

다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탄소 배출권 시장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미래 성장동력인 환경산업 육성에 정부의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어린이들이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고,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교를 비롯한 주요 교육시설 내 공기의 질을 높이고, 유아·아동용품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통해서 아토피 발병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국민이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고, 서로 협력해 나갔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과 자연의 모습을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다짐을 새롭게 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상을 받은 이 자리는 여기 인천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도시인의 쓰레기를 매립해서 특별한 공원을 만든 자리에서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상을 주시고자 멀리 영국에서 오신 마이클 엘리엇 <TIME> 편집장과 특별히 저와 가깝게 지내시는 모든 각국 대사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경단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귀하신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의 수상으로 제가 더욱더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외신이 본 이명박 대통령

●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 Welcome to Normal / 미국 Newsweek, 12.31~ 1.7, B. J. Lee

한국 유권자들 이상주의 양극단에서 선회 새로운 실용주의 포용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노 대통령의 진보적 후계자 정동영 후보 및 극단적 보수파 후보보다 훨씬 앞서 40% 득표로 당선될 것이 예상됐다. 이 당선자는 대개 경제둔화와 무능한 국정스타일로 인한 노 대통령의 실망적인 지지도를 반영, 1년 넘게 여론조사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해 왔다. 그러나 그의 지지도상승은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이념적 측면을 떠나 실용주의적 중도로 기울고 있는 한국 유권자들의 중대 방향선회를 반영하는 것이

기도 하다. 싸우기 좋아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해감에 따라 한국인들은 지역적, 세대적, 혹은 이념적으로 성난 분열상을 보이기보다는 문제해결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따라서 한국의 선거는 점진적으로 미국 선거와 비슷해지고 있다고 명지대학교 김형준 정치학과 교수는 말한다. 지금은 “중도계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정확하게 그곳을 조준했다. 한나라당은 강한 보수색깔로 알려져 있고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와 대북 강경입장을 주창했으나 이 당선자는 외교정책과 교육 문제를 포함한 광범한 이슈들에 대해 좀더 유연한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북한을 포용하는 10년 된 ‘햇볕

Welcome to Normal

South Korean voters are shifting away from the idealistic extremes to embrace a new pragmatism.

By B. J. LEE

FIVE YEARS AGO, KIM DAE-JUNG was stirring against South Korea had just advanced to the World Cup semifinals, and in 7 percent of the world's most exciting emerging markets. Ordinary Koreans like Kim, a vice mayor in Seoul, were filled with pride. So when it came time to pick a president that year, Kim chose a liberal idealist, Roh Moo-hyun, who used sweeping rhetoric to call for a cure out of "participatory government."

Five years on, Kim had decided to pick Park Geun-hye, the daughter of the late president, the man Lee Myung-bak of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a former Seoul mayor and business executive, who called for the drastic and high-riding Roh-to-down-to-earth, no-nonsense, and practical tough-minded results. That became especially appealing when South Korea's economy slumped, with growth dropping to 3 percent annually (even by local standards) and South unemployment hitting double digits. Lee, who has been accused of corruption, charges he dismissed of getting things done. That's the reason he lost the election.

According to the latest survey, Lee was expected to win with 40 percent of the vote, well ahead of Roh's liberal successor, Chung Dong-young, and an ultraconservative independent, Lee had dominated the South for more than a year, reflecting Roh's dismal approval ratings, due largely to South Korea's economic recovery and his incoherent management style. But Lee's victory was also a major shift among Korean voters away from the ideological fringes that long dominated politics and toward the pragmatic policy of pragmatism and moderate policy of pragmatism while demanding more reciprocity. That looks like a winning formula in the coming year.

Above all, Lee projects competence. Born to an extremely poor farming family, the self-educated 61-year-old went on to run Hyundai, helping turn the small conglomerate into a global giant. Nicknamed Kim's "most successful salesman," Lee also proved a very successful mayor of Seoul, a metropolis of 10 million, for four years. Under his rule, the city became greener and its notorious traffic lightened up a bit. All that proved a radical contrast to Roh, who launched an ambitious reform program that included radical measures designed to expand welfare and ease social inequality—but that largely failed to pass, due to Roh's inexperience. Young voters, who had disproportionately supported Roh in 2002 (in the face of about the party's loss), have now turned to Lee, hoping he will use his management expertise to ease his job and revive the economy. "Young voters are now very realistic," says Kim Woon-hang at Seoul's Yonsei University. "They no longer dream of a utopia with perfect policies."

THEY TO BE NORMAL The country has moved, but South Koreans still have plenty of problems.

Chung. On South Korea, this headline proposal calling back into Korean exchanges, while the latter Chung—a former minister of National Unification—contingued as a "young president" who would offer even more generous aid. Lee put himself smack between them, suggesting that neither the current nor the ideal policy of engagement while demanding more reciprocity. That looks like a winning formula in the coming year.

Above all, Lee projects competence. Born to an extremely poor farming family, the self-educated 61-year-old went on to run Hyundai, helping turn the small conglomerate into a global giant. Nicknamed Kim's "most successful salesman," Lee also proved a very successful mayor of Seoul, a metropolis of 10 million, for four years. Under his rule, the city became greener and its notorious traffic lightened up a bit. All that proved a radical contrast to Roh, who launched an ambitious reform program that included radical measures designed to expand welfare and ease social inequality—but that largely failed to pass, due to Roh's inexperience. Young voters, who had disproportionately supported Roh in 2002 (in the face of about the party's loss), have now turned to Lee, hoping he will use his management expertise to ease his job and revive the economy. "Young voters are now very realistic," says Kim Woon-hang at Seoul's Yonsei University. "They no longer dream of a utopia with perfect policies."

미국 Newsweek 07.12.31~08.1.7 p43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좀더 상호주의를 요구했다. 이런 입장은 앞으로 수년 동안 매력적인 공식으로 작용할 것 같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는 능력을 투영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선거에서 불균형적으로(약 60% 수준으로)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들은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경영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이 당선자로 지지를 바꿨다.

이러한 현실주의는 이 당선자의 신망에 오점을 찍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없어 보였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12월 중순 승리의 해안으로 다가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신 문제를 푸는 리더십”을 약속했다. 그것은 흥분을 자아내거나 극적인 약속은 아닐지 모르지만 요즘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다.

● 이명박 당선인의 지략

- 중국 新民周刊, 1.14~ 1.20, 69면, 詹小洪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투쟁이 아닌 포용과 화합으로 지지를 이끌어낸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당선인은 좌판으로 생계를 도모하는 것에서 시작해 대기업 CEO, 서울시장으로, 또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성장배경은 그가 뛰어난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1년 가까운 격렬한 선거전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이 당선인의 비범한 지략을 더욱 잘 보여준다.

하나는 모든 가산(家産)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2007년 12월 5일 검찰은 이 당선인과 BBK사건이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놓았고, 이 당선인은 다음날 살 집 한 채를 제외한 가산 385억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혀 자신이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각계의 칭찬을 얻었다.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감싸 안고 이회창 전(前) 한나라당 대표를 물리친 것이다.

세 번째로 각종 정치세력을 통합하는 수완이다. 첫째, 김영삼, 김종필 등 보수파 원로들을 자신의 배후로 삼았다. 둘째,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은 16대 대선시 진보파인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동맹을 맺었었지만 이번에는 대선 전 한나라당에 입당해 이 당선인에 힘을 실어주었고 지난번 ‘잘못된 선택’에 대해 국민께 사죄했다. 정 회장의 지지는 한국 경제계 대재벌이 이 당

선인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 당선인은 당선되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한국의 2대 노조의 88만명 노동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 당선인 지지를 발표했다. 이 당선인의 과감성과 결단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명박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언론은 이 당선인의 특검법 수용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본인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이다. 특검이 구체적 증거나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둘째, 우선 대통령에 당선된 후 다시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비교적 어려운 일이며, 증거를 찾아낸다하더라도 대통령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되돌아보면 이명박 당선인은 그야말로 기막힌 묘수를 둔 것이다.

● 당선인 뜻밖에 그러나 직설적으로 김정일과 회담 제의

- Lee makes unexpected, but straightforward offer to meet with Kim /

미국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15, 3면, Choe Sang-Hun, 서울發

김정일과 서울에서 만나겠다, 제의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14일 한국의 보수파 당선인으로서 뜻밖의 제의를 통해 김정일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라도 그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과 만나겠다는 그의 제의는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의 접근방식보다도 더 직설적이었다.

노무현, 김대중 두 전임 대통령들은 각각 한 차례씩, 두 번 다 평양에서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다. 이명박 당선인은 가능한 한 자주 김정일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일이 남한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를 원한다는 당선인의 14일자 제의이자 희망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급진적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신호했다. 당선인은 북한이 핵시설단지를 불능화하고 모든 핵 자산을 신고하겠다는 합의를 이행할 때 비로소 “남북협력시대는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또한 자신의 북한 포용 노력이 한·미관계에 손상을 끼치게 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 한국 경제, 새로운 비상의 희망 보여

- 중국 인민일보, 1.15, 6면 3단, 徐寶康, 서울發

새로운 발전 약속, 과격정책은 실시하지 않을 것

신년이 시작된 후 한국 차기 대통령 이명박 당선인은 '2008년을 한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의 새로운 비상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기대도 잇달아 높아지고 있다.

작년 말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이 당선인은 경제인 간담회, 경제연구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참석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경제 목표를 제정했으며 '친기업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차기정부가 설정한 올해의 경제성장 목표는 6%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미국 경제성장 속도 둔화, 국제 석유가격 폭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소와 작년 국내 경제성장률 4.9%, 물가상승률 3.6% 등 원인으로 한국 경제의 가속화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올해 국내 경제성장 목표를 7%에서 6%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대기업정책 조정과 각종 규제완화, 정부조직 축소와 정부기능 개선, 경제 효익 제고와 발전 잠재력 발굴 등 3대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당선인이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과격한 경제자극 정책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의 적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당선인은 과격한 경제자극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 "정식취임부터 연말까지 10개월의 시간밖에 없다. 7%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 한국 새 대통령, 경제규제 풀어

- Sudkoreas Staatschef will Wirtschaft entfesseln /

독일 Handelsblatt, 1.16, 8면 4단, Finn Mayer-Kuckuk

국회 지원 있어야 개혁의지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그의 전임자가 사회적 평등을 강조해왔던 반면, 이 당선인은 경제대통령으로서 관료주의를 축소하고 세금을 인하하며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다.

1월 14일 이 당선인은 임기 첫째 정부운영구상의 핵심 사안들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정부조직 자체를 축소하고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고자 한다.

각종 위원회가 부처간 중복업무를 야기하고 업무지체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이에 반해 동일 업무에 대해 분산돼 있는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만일 우리가 이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를 묶고 있는 관료주의적 각종 규제들을 풀어내게 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부처 통합뿐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종 법률과 규정들을 폐지하고자 한다.

또한 업무성과에 따른 지원만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친경제적 노선으로 현재 5% 미만에 머물러 있는 경제성장률을 6%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부동산업계에 목직한 선물을 내놓았다. 부동산투기에 따른 소득에 대한 각종 세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이 총선 이후 적대적인 국회에 맞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경우 이는 한국의 실행력과 경제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은 비록 광범위한 행정권력을 행사하지만, 국회의 입법지원이 없다면 그의 개혁은 좌초할 수도 있다.

● 한국 차기 지도자 대북대화 촉진, 중국·일본과의 관계 강화 다짐

- Next SKorea leader pledges dialogue with NKorea and stronger ties with China, Japan / 프랑스

AFP, 1.17, 서울發

한국 최초 재계 출신 대통령, 실용적 경제 외교 약속

한국 차기 대통령은 17일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그 대가로 공산주의 북한의 생활수준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제의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 정권이나 주민들에게 다같이 혜택을 줄 것임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완전 비핵화를 조건으로 10년 이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감독 아래 영변 소재 주력 핵시설을 불능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 신고하기로 합의한 12월 31일 시한을 어겼다.

대통령당선인은 '인내심'을 잃지 않고 있다며,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다른 협상 파트너들과의 보다 강력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또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함과 아울러 한국의 가장 긴밀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최초의 재계 출신 대통령이 될 전 현대건설 CEO 이명박 당선인은 미국·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가급적 빨리 매듭짓고 다른 나라들과의 유사한 협정도 검토하는 등의 ...실용적 경제외교를 약속했다.

● “불도저”

- The “bulldozer” / 영국 Economist, 1.19~ 25

움직이기 시작한 대통령당선인

금주 기자회견에서 당선인은 축소된 정부를 약속했다. 부처의 수효는 기능을 없애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현행 18부에서 13부로 감축될 것이다.

중요한 경제와 외교 정책결정은 청와대에서 나올 것이다. 당선인은 또 국영은행들과 기타 공기업들을 민영화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법인세와 일반개인들에 대한 세금 인하도 가까운 장래에 예정돼 있다.

“한국경제는 정부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너무 복잡하다”고 당선인은 말한다. 그러나 그는 한국경제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 같다.

작년 12월 이명박 당선인은 전국 최대 기업집단 회장들에게 조국에 좀더 많이 투자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 휴대전화사업자들에게 요금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전국을 관통하는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운하계획을 경제적으로

South Korea The “bulldozer”

BY JIN
A president-elect starts to roll

ASKED about the power of the president in South Korea, an aide to Lee Myung-bak, who was elected to the post last month, said he could do anything except change a man into a woman or a woman into a man. Not yet, anyway. Mr Lee, who will assume office on February 25th, will concentrate yet more power in the presidential palace, Seoul's Blue House.

At a news conference this week, Mr Lee promised a slimmed-down government. The number of ministries will be cut from 18 to 13 by eliminating or merging functions. Important economic and foreign-policy decisions will come from his office. He has also promised to privatise state-owned banks and other businesses. Cuts in corporate and personal taxation are also in the offing. “The Korean economy is too large and too complex to be managed by the government,” he says. But he seems to intend giving it his best shot.

In December Mr Lee urged the chairman of the country's biggest conglomerates to invest more in their homeland. He has asked South Korea's mobile-phone operators to cut their charges. And he remains committed to building a canal system through the country. Critics deride the scheme as economic lunacy and a boon for construction companies such as the one Mr Lee used to run, Hyundai Construction. Others have drawn overblown comparisons between his leadership style and that of Park Chung-hee, a former mili-

tary dictator with a penchant for economic micro-management.

That may be unfair. Mr Lee was elected because the country responded to his pledge of faster economic growth. As befits a former businessman, he is pragmatic rather than ideological. He maintains uneasy relations with his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The GNP is there to win him seats in April's parliamentary election so he can pass laws.

Conservatives howled in protest when Kim Mu-nok, boss of South Korea's spy agency, told North Korea that Mr Lee's election victory would not change the South's policy of engaging it. He was forced to make a public apology and resign. The same day, as if to emphasise his hardline credentials, Mr Lee visited the American army base in central Seoul. ■

영국 Economist
08.1.19~25 30,32면
불도저

로 미친 것이며 당선인이 한때 경영했던 현대건설 같은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라고 비웃는다.

또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경제적 ‘마이크로-매니지먼트(세부사항까지 통제하는 관리방식)’ 성향을 가졌던 과거의 군사독재자 박정희 스타일과 과장되게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불공정한 평가일 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한국이 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다짐한 그의 공약에 호응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는 전직 비즈니스맨답게 이념적이기 보다는 실용적이다. 그는 자신의 소속정당인 보수 한나라당과 거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그에게 다수의석을 얻어 줌으로써 그가 필요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 한국 유권자, 업적도 주목

- 일본 마이니치, 1.21, 6면, 아사바 유키 야마구치현립대 강사, 인터뷰

한국에 정당정치 정착되고 있음을 증명

유권자는 보통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업적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투표상대를 결정한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는 기대감이 투표행동을 좌우해 왔다.

대통령 임기가 1기 5년으로 한정돼 있는 점이나 정당정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점이 주요한 이유다.

그러나 작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기대감만이 아닌 업적 면에서도 타 후보를 압도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과거 업적에도 크게 관심을 둔 점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정당은 인맥에 따른 이합집산을 반복해 왔다. 또한 선거전이 되면 여당계 후보마저 새로운 인물의 이미지로 둔갑하고 등장한다.

과거의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는 후보자의 업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은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후보자의 업적에도 유권자는 주목했

다. 이명박 후보에게는 경영인이나 서울시장으로서의 활약한 실적이 있었고 자신도 선거전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동영 후보의 대통합민주신당이 막 태어났을 뿐이었던 데 비해 한나라당은 결성한 지 10년이 지난 상태였다.

유권자가 정당의 이합집산에 혼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에 정당정치가 정착되고 있다는 시각도 가능하다.

● 한반도의 모습을 바꿀 기회

- A chance to transform the Korean peninsula /

홍콩 South China Morning Post, 2.11, Doug Bandow, 기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한미동맹관계 필요

부시 행정부의 관심이 집중된 곳은 중동이지만 한반도 역시 관심이 필요한 곳이다. 지난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은 한·미관계를 재편(reshape)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당선인은 워싱턴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한·미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국과의 협력과 한·미관계 강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층 현실적인 대북 접근방식도 취할 생각이다. 예컨대 북한의 인권문제도 거론할 방침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비핵화 문제를 남북회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이 당선인의 견해는 워싱턴에서 환영을 받겠지만 그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충돌에는 흥미가 없다.

그 역시 현 정부만큼이나 전쟁을 불사할 (혹은 전쟁을 불사하는 미국의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 워싱턴은 보다 적극적인 한국의 입장을 흡수해 대북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 당선인의 승리는 또 한·미관계의 모습을 바꿀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과 북한 쪽으로 점점

A chance to transform the Korean peninsula

Doug Bandow
The Bush administration's attention to focus on the Middle East, but the Korean peninsula also requires attention. The surprising suggestion of conservative Lee Myung-bak, who won South Korea's presidential race in a landslide, provide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reshape the US-South Korean relationship. President-elect Lee has promised to forge better relations than did the outgoing president, Bush More importantly, Mr Lee said he would "do our best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rough co-operation and a strengthene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Moreover, Mr Lee intends to take a more realistic approach to North Korea. For instance, he expects to address its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state terrorism. Mr Lee says he will include nuclear disarmament in the next Korean talks. Although Mr Lee's views will receive a warm reception in Washington, he is not interested in a confrontation on the peninsula. He is no more likely to risk war - or support a US policy that risks war - than the current government. Washington should recognize a more aggressive stance by South Korea into its nuclear negotiations with Pyongyang. Mr Lee's victory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transform Washington's view of South Korea from a position of quietistic indifference. Adverse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creasingly tilted towards China and Russia, and away from America, as growing uneasiness about the US's dependent status.

During US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November visit to Seoul, South Korea's Defense Minister Han Jong-woo said: "We cannot see that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s an imminent danger to us directly. Yet, if the North is so dangerous, why has the South tolerated all investment and commerce on Pyongyang? Why should the US undertake bilateral agreement of a potential agreement?" In any case, South Korea can do itself no good by becoming a product of the US-South Korean relationship.

The objective of protecting the South from absorption by the North has been fulfilled. has been estimated to be as much as 40 times that of the North. The South has twice as many people, possesses a vast technological edge, and is already with the more countries - including all of the advanced industrial powers and long-time Pyongyang allies China and Russia. While North Korea retains a nominal military edge, in weapons are antique and its troops ill-trained. Moreover,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built on the peninsula which binds South Korea into a position of quietistic indifference. Adverse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creasingly tilted towards China and Russia, and away from America, as growing uneasiness about the US's dependent status.

Some South Koreans don't seem to attempt to demonstrate military necessity. Foreign Minister Song Mung-soon said: "The US military will continue to stay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power to give any play a role that meets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 Korea." However, in this environment South Korea, with the world's 12th-largest economy, doesn't need a permanent defense subsidy. Korea Washington policymakers view US forces stationed there as possessing "dual-use" capabilities. Alliance advocates habitually talk about maintaining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but offer no practical role for American troops. The real US goal is "containing" China. However, Seoul does not want to turn itself into a target of the permanent enmity in a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such as defending Taiwan. America's alliance with South Korea should be seen as a means, not an end. The objective of protecting the South from absorption by the North has been fulfilled. Instead of looking for new grounds to justify an old alliance, Washington and Seoul should move to individual military co-operation to meet new circumstances.

Doug Bandow is a former special assistant to US president Ronald Reagan

홍콩 SCMP 08.2.11 A11면 한반도의 모습을 바꿀 기회

기울어온 한국인들은 한국의 종속적인 지위에 대해 갈수록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옛 동맹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진 비공식적 군사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편집자 주 : 필자 더그 밴도우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 이 당선인의 군살빼기

- Lee's Diet / 미국 Wall Street Journal, 1.23, 13면, 사설

이명박 씨는 개혁 약속을 업고 지난달 한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가장 좋은 출발점은 물론 자신의 뒷마당이다. 2월 25일 취임하는 당선인은 최근 정부 '군살빼기' 계획을 발표했다. 그 목적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고 금융·경제의 허브로 부상하려는 국가적 열망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우선 부처의 수를 18개에서 13개로 줄이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돼 보건복지부에 통합된다. 통일부도 폐지되고 많은 기능들이 외교부에 흡수된다.

관료의 수도 줄이고자 한다. 장관급 자리의 수는 40개에서 29개로, 차관급은 96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7,000여명의 일반직 공무원들도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일부는 새로운 자리에서 계속 일할 자격이 주어진다.

당선인의 이런 계획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당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군살빼기를 둘러싼 이 싸움은 이 당선인의 대통령직 수행능력의

조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 그가 이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가 지극히 어려운 협상을 성사시킬 정치적 수완이 있는지의 여부도 시험하게 될 것이다.

Lee's Diet

Lee Myung-bak won the presidency of South Korea last month on a promise of reform, and what better place to start than in his own backyard. The President-elect, who takes office on February 25, recently announced a plan to "slimline" the government. The aim is a more efficient government that's less of a drag on the economy and better suited to Korea's aspirations to become a financial and economic hub.

For starters, Mr. Lee proposes cutting the number of ministries to 13 from 18.

Gone would be the Ministry for Gender Equality and Family, folded in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 sign that he is serious about his pledge to take a tougher line on North Korea,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ould also be eliminated, many of its functions taken on by the Foreign Ministry. Gone, too, would be several presidential commissions, such as the Investigative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Mr. Lee also would reduce the bureaucratic headcount. The number of ministerial-level positions would be cut to 29 from 40, and vice-ministerial rank positions would be cut to 88 from 96. About 7,000 rank-and-file bureaucrats would be laid off, although some might be eligible for retraining and placement elsewhere.

Mr. Lee's plan still must survive the National Assembly, where it's likely to encounter stiff opposition. Not only is the President-elect facing a legislature controlled by his opposing party—the next elections won't occur until April—but he's taking on entrenched bureaucracies and sticky political wickets like unification. The fight over slimlining

will be an early test of Mr. Lee's presidency and whether he has the political gumption to stick this fight out and strike the hardest bargain possible.

The stakes are higher than they appear. During the campaign, the President-elect pledged other major economic reforms such as tax cuts and regulatory reforms. Koreans and global investors alike will be watching the battle over government reorganization for signs of Mr. Lee's commitment to fighting for these other tough, but necessary, reforms.



Lee Myung-bak

미국 WSJ08.1.23 13면, 사설 "이 당선인의 군살빼기"

10.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주요 어록

- ◇ 미래를 향한 긍정적 기운이 온 사회에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

- 당선 기자회견(2007.12.20)

- ◇ 국가에는 긍지를 가져오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겠다.

- 성탄 전야 메시지(2007.12.24)

- ◇ 백지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역대 인수위는 정권을 쟁취하거나 권한을 통해 점령군 같은 인상을 많이 줬다. 이번 인수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2007.12.26)

- ◇ 차기 정부에서는 비즈니스 프렌들(business-freindly : 친 기업적인) 정부를 만들도록 할 것

- 재계 총수 간담회에서 기업친화적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2007.12.28)

- ◇ 전임자를 잘 모시는 전통을 반드시 만들겠다.

-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찬회동에서(2007.12.28)

- ◇ 시화연풍(時和年豐)

- 2008년을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내놓은 사자성어(2007.12.30)

- ◇ 오늘 뜨는 태양은 유난히 크고 붉었다. 해가 달라졌겠다. 보는 사람의 마음과 눈이 달라진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은 나보다는 내가 소속된 부서, 부서보다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2008.1.1)

- ◇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신년 기자회견 첫 머리에서(2008.1.14)

- ◇ 어느 한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많은 혜택(favor)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페이버를 줘

서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가는 게 좋도록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기업 스스로 선택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2008.1.22)

- ◇ 사람들은 '해봐라, 그래도 안된다'고 하는데 난 '해봐라, 안된다'는 것을 거역하면서 살아왔다.

- 문화예술계 인사들 간담회(2008.1.31)

- ◇ 노동자들이 저렇게 자원 봉사하는 기본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그 기업이 10% 성장하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 태안 기름유출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언급하며

- ◇ 정부가 나서면 기업만 더 힘들어진다. 정부가 옳을 땐 뭐 하겠느냐, 기업에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겠다.

- 무역인들과의 간담회에서(2008.2.1)

- ◇ 이제 세계경제와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어땀고, 오일 값이 어땀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만 있겠습니까? 어떠한 악조건이든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세계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길을 열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힘을 모으고 마음만 조금 바뀌먹으면 됩니다. 하면 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 비전코리아국민대회에서(2008.1.22)

- ◇ 규제완화라는 말을 역대정권이 다 해왔지만, 오늘 이 시점까지도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천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수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것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국민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인수위 간사단회의(2008.1.18)

- ◇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니라 경영자에 불과합니다. 낮은 자세

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 대통령민주신당을 방문시(2008.1.17)

- ◇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좀더 노력해 달라. 관광, 금융, 보건과 관련된 헬스 케어, 환경·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각 부처, 지자체 등을 거치며 받는 도장이 770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단 하나 만드는 데 3, 4년씩 걸린다면 임기 중 공단 하나 완성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2008.2.5)

- ◇ 임기 5년은 잠깐인데 너무 갑자기 변해도 안될 것 같다. (취임) 이전과 이후 모두 '평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 문화예술계 간담회에서(2008.1.31)

- ◇ 우리 대원들 모두 사명감 갖고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나라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말고 현지에서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이 돌아올 때쯤에는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거예요.

-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과 화상대회에서(2008.2.5)

- ◇ 인수위가 설에는 좀 쉽니까? 좀 쉬고 하십시오. 마무리할 때는 숨을 좀 고르고, 조상들을 잘 섬겨서 후손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테니까 쉬는 날은 쉬시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2008.2.5)

- ◇ 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더 나은 기회를 주겠다는 게 내 결심이다. 경제 살리자는 얘기는 결국 일자리를 만들자는 얘기다. 국가가 할 일이 그것 말고 뭐가 있겠느냐.

-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서(2008.2.6)

- ◇ 국민들이 힘을 모으면 이론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실물에서는 확실히 달라진다. 올해 경제가 만만치 않지만 어렵다며 주저앉을 수 없다.

- 태안 기름유출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예로 들며

- ◇ 조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군 복무기간에 다시 느낄 것이다.

- 전방 군부대 방문시(2007.1.31)

- ◇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을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 얽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과거를 참고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에 과거 경험이 많은 사람도 많다. 그렇지만 그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의존하면 꼭 실패한다.

- 새 정부 국정운영 업무조정회의(2008.2.16)

- ◇ 인기영합적 정책, 단견적 지지를 받는 정책만 만들어서는 국가를 선진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선진대한민국, 세계일류 국가로 만들려고 하면 말 그대로 선진된 생각을 가져와야 합니다. 선진된 정책, 선진된 전략이 바로 그 시점에서는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면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 새 정부 국정운영 업무조정회의(2008.2.16)

- ◇ 내 일은 내가 책임져서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내각도, 수석도 6개월, 1년 만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발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또한 국가 중요 정책은 공동책임으로 공동토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수석 한 사람이 잘못하면 직접 책임도 있지만 공동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 새 정부 국정운영 업무조정회의(2008.2.16)

- ◇ 전 국민과 전 공무원을 다 교육시켜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아마 10년, 20년이 걸릴 거예요. 대통령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장관이 그렇게 될 것이고, 장관이 되면 국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파급되는 게 효과가 가장 빠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희생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정말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희생이 따릅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민 좀 될 겁니다.

- 새 정부 국정운영 업무조정회의(2008.2.17)

- ◇ 일본이 최근 대장성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하는 등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10년간 준비를 갖춰 나타냈다.

- 인수위 시무식에서 21세기에 걸맞은 시스템을 언급하면서(2008.1.1)

- ◇ 일부는 친기업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꺼리지만 나는 당당하게 쓰겠다.

- 경제연구기관 대표들과의 좌담회에서(2008.1.2)

- ◇ 정치인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들이 (공항 귀빈실을) 쓸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냐.

-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2008.1.3)

◇ 어떤 안보다도 정부가 손을 떼버리는 게 가장 좋다.

- 대학교육협의회 오찬에서 교육의 자율화를 언급하면서(2008.1.4)

◇ 새로 성숙된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도 이제는 그 말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외교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신년 외신기자회견에서(2008.1.17)

◇ 전신주 하나 옮기는 것도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또 오는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서 그 전에 하려고 할 거예요. 나는 또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해야 되요. 말로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정부 규제가 오히려 기업 활동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2008.1.18)

◇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수위에 온 것 같다.

- 대한강국 국민보고대회 공무원의 변화를 강조하면서(2008.1.22)

◇ 저는 앞으로 5년 일하는 동안에 두렵다고 해서 절대 대못은 안 박겠습니다. 저는 전봇대를 뽑겠습니다.

-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의 팔순연 축하를 통해(2008.1.22)

◇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Business friendly라고 하는 이야기는 Business man friendly가 아닙니다.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기업인 없는 비즈니스 없습니다. Business friendly라고 하는 말에 노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행보가 사용자 위주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2008.1.23.)

◇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으라.

-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최고의 인재로 선발하라면서(2008.1.29)

◇ 변두리 시장이었지만 설날 대목에 아주 썰렁했습니다. 좌판을 놓고 생선 파는 하는 할머니는 무조건 붙들고 읊디다.

-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설 연휴를 앞둔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실감

했다면서(2008.2.5)

◇ Best of Best는 몰라도저와 함께 일하면서 Doing their best는 될 것 같습니다.

- 청와대 수석비서관 발표자리에서 Best of Best를 뽑았냐는 질문에(2008.2.10)

◇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2008.2.12)

◇ 난산 끝에 좋은 일이 있을 것.

-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2008.2.16)

◇ (나에 대해) 뭘 알고 싶으면 최근에 나를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라.

- 합동업무조정회의에서 자신은 항상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2008.2.16)

◇ 법을 지키겠다는 소신으로 조사에 응했다.

- 특검 조사를 받은 뒤(2008.2.18)

◇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까지 왔다.

- 정부조직 협상 불발로 현행 직제에 따른 각료 명단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2008.2.18)

◇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다.

- 합동업무조정회의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부터

변화가 와야 한다면서(2008.2.18)

◇ 청계천 복원할 때 프랑스 사회학자 한 분이 찾아와서 환경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겠지만, 더 큰 변화는 서울시민의 정서가 바뀔 것이라고 얘기했다.

- 합동업무조정회의에서 주어진 환경의 변화가 우리 생활의 정서와

생활방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며(2008.2.18)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방명록 어록 모음

- 강한 안보의식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전방부대 방문(2007.12.31)
- 새해에는 국운이 융성하는 해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현충원 참배(2008.1.1)
-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년회(2008.1.4)
- 국회를 존중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국회 방문(2008.1.8)
- 국민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 국방부 방문(2008.1.11)
- 한미연합사에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냅니다.
- 한·미연합사 방문(2008.1.15)
- 노사화합이 회사를 경쟁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 인천부평 GM대우 공장방문(2008.1.29)
- 무역입국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 무역협회 방문(2008.2.1)
- 사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 중증장애아동요양시설 방문(2008.2.2)
- 이들의 희생정신을 굽어살피소서.
- 용문산 헬기 추락사고 합동 분향소 방문(2008.2.22)
- 국민을 섬기며 선진일류국가를 만드는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 국립현충원 참배(2008.2.25)

2장

제17대 대통령 취임사 준비

1. 구성및작업경과
2. 위원구성
3. 취임사의내용및 취지

1. 구성 및 작업경과

취임사준비위원회는 ‘선진화’의 국가비전과 ‘창조적 실용주의’의 국정 지도원리를 명료하게 표방할 제17대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기 위해 2008년 1월 8일 류우익 위원장 주도로 출범했다. 실무위원회는 3차에 걸친 회의·토론을 통해 국가비전과 국정 지도원리를 검토하고 초안을 작성했다. 이어 2차에 걸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초안을 재수정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6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1차 독회와 의견제시가 있었다. 이후 각 수석비서관 내정자들의 코멘트가 개별적으로 제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위원회는 1차 완성본을 작성한 다음 수석비서관 내정자들과의 전체회의를 통해 내용을 재검토했다. 이 단계에서 실무위원회의 1차 작업은 완료됐다. 이어 2차에 걸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2차 완성본이 작성됐다.

2월 18일 당선인은 2차 독회를 통해 재차 의견을 표명했고, 실무위원회와 자

취임사준비위는 ‘선진화’의 국가비전과 ‘창조적 실용주의’의 국정 지도원리를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위원회는 이를 저본(底本)으로 최종 독회를 가지고, 3차 완성본을 작성했다. 최종 수정은 류우익 위원장의 책임하에 이뤄졌으며, 당선인과의 협의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전체 과정을 개괄하면 첫째, 당선인의 국정비전과 국정철학을 다듬어온 류우익 위원장이 총괄책임을 맡았다. 둘째, 위원들은 특별히 분야를 나누지 않고 공동작업을 벌였다. 셋째, 자문(자문위원회)과 작성(실무위원회), 감수(수석비서관)를 나누고, 최종 마무리는 류우익 위원장이 맡았다. 당선인은 취임사의 내용을 매우 세심하게 검토하고 전 분야에 걸쳐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

취임식을 마치고 돌아가며 환호하는 국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내정자들이 취임사 작성에 직접 참여한 것은 새로운 특징이다. 이는 앞으로 국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석비서관 내정자들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이자, 보좌진의 견해를 청취, 존중함으로써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한층 완숙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취임사의 전체 양은 8,700여자이고, 낭독 시간은 약 25~30분 정도로 추정했다.

2. 위원구성

- 위원장 : 류우익(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국가정책연구원(GSI) 원장)
- 실무위원 : 박형준(한나라당 의원), 박재완(한나라당 의원), 신재민(당선인 비서실 정무1팀장), 이동관(청와대 대변인 내정자), 김영수(영남대 정외과 교수), 정용화(GSI 정책전문위원), 조인근(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함영준(전 조선일보 사회부장), 박성찬(당선인비서실 정무담당)
- 자문위원 : 권영빈(경기문화재단 이사장, 전 중앙일보 사장), 김우창(고려대 명예교수), 박세일(서울대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지문(고려대 영문과 교수),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배규한(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변희재(인터넷 칼럼니스트), 김범일 장로(가나안농군학교장)
- 조언역 : 이한구(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김문조(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일영(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이우찬(광고전문가), 표정훈(도서평론가)

● 활동 일지

- 1차 실무위원회 회의(2008.1.8) : ① 취임사 실무위원회의의 활동 범위, 구성 논의 ② 취임사의 성격과 스타일, 내용에 대한 논의 ③ 향후 일정에 관한 논의
- 2차 실무위원회 회의(2008.1.17) : ① 취임사 작성 원칙 논의 - 구조, 핵심 메시지, 내용, 스타일 ② 취임사 자문위원 위촉 ③ 각계 의견 수렴 방안 논의
- 3차 실무위원회 회의(2008.1.21) : 1차 초안 검토 및 토론
- 4차 실무위원/자문위원 전체회의(2008.1.26) : 2차 초안 검토 및 토론
- 5차 실무위원/자문위원 전체회의(2008.2.2) : 3차 초안 검토 및 토론
- 6차 실무위원회 회의(2008.2.5) : 4차 초안 검토 및 토론
- 당선인 1차 초안 검토(2008.2.6) : 수정 및 부가 사항 요청
- 7차 실무위원회 회의(2008.2.12) : 5차 초안 검토 및 토론
- 8차 실무위원/수석비서관 전체회의(2008.2.13) : 6차 초안 검토 및 토론
- 9차 수석비서관 회의(2008.2.14) : 7차 초안 검토 및 토론
- 10차 수석비서관 회의(2008.2.15) : 8차 초안 검토 및 토론
- 당선인 2차 초안 검토(2008.2.18) : 수정 및 부가 사항 요청
- 11차 실무위원/자문위원 전체회의(2008.2.20) : 9차 초안 검토 및 토론
- 류우익 위원장 최종 수정 및 완성(2008.2.21) : 당선인 보고 및 협의

3. 취임사의 내용 및 취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는 ‘선진화의 길’을 전체 주제로 잡았다. 이는 인수위에서 마련한 정책 밑그림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스타일은 화려한 수사는 가능한 배제하고 웅변조의 표현도 자제해 담담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온 국민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의 의미와 비전을 다짐하고자 했다. 이러한 스타일은 국민을 계몽하기보다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해 온 당선인의 국정자세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말에 앞서 무실역행을 중시하는 당선인의 평소 생활철학에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선인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다. 전체 내용은 크게 7개 분야로 구성됐다.

● 취임사 전체 내용 구분

1. 인사말
2. 국민에 대한 약속
3. 건국 60년에 대한 회고와 성찰
4.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 : 선진화를 위한 도전과 자세
5. 선진화를 위한 국정기조 : ① 정부 ② 기업과 노동자 ③ 농민 ④ 사회적 약자 ⑤ 여성 ⑥ 청년과 노인 ⑦ 장애인 ⑧ 교육과 대학 ⑨ 과학기술 ⑩ 주택과 국토 ⑪ 환경 ⑫ 문화 ⑬ 외교와 안보 ⑭ 남북관계 ⑮ 정치
6. 대한민국의 미래상
7. 국민에 대한 당부와 다짐

● 역대 대통령 취임사

국가비전

- 이승만
: 건국과 안보
- 박정희
: 조국근대화
- 전두환
: 안보와 단임제
- 노태우
: 보통사람들의 시대와
국민직선
- 김영삼
: 문민정부와 신한국
창조
- 김대중
: 국민의 정부와 평화
적 정권교체
- 노무현
: 참여정부와 동북아
중심국가

취임사 내용의 요지와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사말

특별히 700만 해외동포를 거명했다. 당선인은 해외동포를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2) 국민에 대한 약속

새 정부가 할 일을 간략히 요약했다. 섬기는 리더십, 국민이 편안한 나라,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3) 건국 60년에 대한 회고와 성찰

건국 이후 60년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국 60년에 대한 학계의 인식은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돼 있으며,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정체성 논쟁에서 핵심적인 문제였다. 취임사는 긍정적 입장을 취했으며,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한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가 오직 국민들의 피와 땀, 눈물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한국 현대사의 놀라운 성취는 기적이나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진실한 삶의 이야기”이자 “눈물겹도록 위대한 이야기”이며, 이 자부심이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보았다. 이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과도하게 강조해 온 기존의 입장에서 전환한 것이다.

4)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 : 선진화를 위한 도전과 자세

2008년을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선진화’의 개념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거시적 조망 위에 서 있다. 한국 현대사는 2008년을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다. 즉, 과거 60년은 1948년 체제의 건국, 1963년 체제의 산업화, 1987년 체제의 민주화로 구성돼 있으며, 이 3개의 사항이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과제였다. 한편 최근 10년은 건국과 산업화의 그늘이 남긴 후유증을 치유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지 못하고 정체된 시기이기도 했다. 민주화는 시장 원리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성장동력을 상실했고, 분배 정의와도 역행하는 기현상을 빚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발전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에는 이

러한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소망이 담긴 것으로 이해했다.

취임사는 다가올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선진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선진화는 1963년 체제의 재판이나 맹목적인 경제성장으로의 복귀는 아니다. 세계화, 정보화, 환경 중시라는 인류 보편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선진화’는 과거 60년의 유산을 성숙시키면서 변화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은 아직 인류가 가보지 못한 길이다. ‘선진화’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원리가 제시된 것은 이 때문이다.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창조적’이지 않으면 안되며, 기존의 이념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이념을 창조해야 하는 ‘실용주의’인 것이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대정신”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그것이 지향하는 미래상은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로 서사되고 있다. 즉, ‘선진화’에는 산업화가 인류에 선사한 풍요를 넘어서 “배려와 품격”이라는 높은 인간성의 성숙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은 어떤 점에서 백성을 잘살게 한 다음에는(富民) 백성들을 인간답게 해야 한다(教民)는 공자의 국가상과 닮아 있다. 취임사에는 “자연과 인간의 심성이 어우러진 나라”, “이치가 통하고 도리가 바로 서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이어지는 나라”라는 동방예의지국의 이미지가 관통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화는 쉬운 길이 아니다. 먼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한마음으로 모아져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극심한 내부 분열과 갈등을 겪어왔다. 국가경쟁력은 하락했고, 발전은 지체됐다. 중산층은 축소되었고, 서민생활도 어려워졌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2008년은 다가올 60년의 국운을 좌우할 갈림길이다. 이 때문에 당선인은 국민 모두에게 ‘변화’와, 변화에 따른 고통의 감수를 요청했다. 변화의 방향은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이다.

5) 선진화를 위한 국정기조

사회 각 분야와 각계각층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정책을 제시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은 자유와 경쟁, 공정성이다. 그러나 자유와 경쟁이 초래하는 계층화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따듯

한 배려 역시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의 기본이념은 책임 있고 따뜻한 자유주의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정부상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또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원칙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존중하고, 정부는 시장을 보조한다는 신발전체제 구축의 기본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정부 업무의 민간 이양, 공공부문의 경쟁 도입, 세금 인하, 규제완화, 공무원 수의 감축을 제시했다.

둘째, 산업계에는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의 원칙하에 자유롭지만 투명·공정한 기업운영과 노사의 동반관계를 요청했다. 기업은 신발전체제의 주역으로,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노동자에게는 '투쟁'이 아니라 '동반자'의 역할을 주문했다.

셋째, 농업 분야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이에 따른 농업과 농민의 곤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세계화와 시장변화에 대처하는 농림수산업의 근본적인 변신도 요구하고 있다.

취임사준비위가 최종 완성한 취임사의 전체 양은 8,700여자로 낭독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넷째, 교육과 대학 분야에서는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관치교육, 입시교육을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하고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을 주장했다. 또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서민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개념을 새로이 도입했다.

다섯째, 주택정책의 기본원리로 주택을 '재산'이 아닌 '생활의 인프라'로 이해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즉, 시장원리를 중시하면서도 주택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봤다. 국토정책의 기본원리로는 '해양지향'을 밝혔다. 이는 장구한 역사에 걸친 '대륙지향'적인 국토 상상

력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며, 대운하 프로젝트의 근본적 상상력이라 하겠다. 또한 국토 개조의 기본원칙으로 친환경성과 친문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건강성과 품격을 높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여섯째, 환경 분야에서는 생태주의와 발전주의를 조화시키고자 했다. 즉, 친환경 정책을 반성장정책으로 이해하지 않고, 환경과 조화되는 신산업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가 오히려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일곱째, 문화를 경제적 여유의 부산물로 보지 않고, 우리 삶의 격조를 높이는 장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인식하고 있다.

여덟째, 외교의 기본원칙으로 글로벌리즘, 인류의 보편적 가치, 동맹주의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신뢰에 바탕한 한미간 전략적 동맹관계의 공고화와 아시아 국가간의 연대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약속했다. 또한 자원과 에너지 외교, UN 평화유지군(PKO)의 적극 참여 및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문화외교의 강화를 제시했다. 새 정부는 동맹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글로벌 외교를 통해 대외관계를 다변화하고, 지역협력체제 구축에 협조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아홉째, 남북관계의 원칙으로 실용주의, 상호주의, 평화주의, 국제주의를 제창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 평화주의를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상호 신뢰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념보다는 남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남북문제가 민족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문제라는 인식을 강조한 것이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고, 10년 안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달러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민족과 국민의 장래를 위해 정치적 고려를 초월한 남북 정치지도자 간의 솔직한 대화를 촉구했다.

열째, 마지막으로 실용정치를 주장하고, 정치의 기본원칙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정치가 국민의 기대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으로, 소모적인 정치관행을 타파한 생산적 정치를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밤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
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
혔다.



6) 대한민국의 미래상

새 정부의 정치적 이상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와 ‘세계 속의 한국’임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첫째, 기회가 넘치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이다. 둘째, 세계의 문물이 자유롭게 한반도로 들어오고, 이를 통해 창조된 새로운 가치가 세계를 향해 나가는 선진 일류국가이다. 이는 중국 문화와 정신의 소비자였던 조선을 인류의 빛나는 문화 창조자로 다시 세우고 싶어 했던 세종대왕 이래 한국인의 오랜 정신적 꿈이라 할 수 있다.

7) 국민에 대한 당부와 다짐

정부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으며, 당선인이 국민과 함께 선진화의 길을 열기 위해 신명을 바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선인은 취임사 작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계속 주문했다. 마지막에는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따지며 많은 구절을 직접 수정했다. 당선인은 다음 몇 가지를 특히 강조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국가정체성 및 역사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거듭 표명했다.

셋째, 본인은 태생적으로 서민의 아들임을 자처하고, 사회의 그늘진 영역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강조했다.

넷째,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며,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꿈에 도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 사회지도층의 높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했다.

여섯째, 남북의 솔직한 대화와 화해를 통해 남북 공동의 번영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차 표명했다.

일곱째, 변화를 강조했고, 선진화는 변화와 고통이 따른다는 기본철학도 직접 밝혔다.

여덟째, 대한민국이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나가고, 세계가 한반도로 들어와 융합되어야 한다는 한반도의 꿈을 밝혔다.

아홉째, 국민의 편안한 삶과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재산헌납을 포함, 본인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엥흐바야르 남바르 몽골 대통령, 삼텍 훈센 캄보디아 총리,

후쿠다 야스오 일본 내각총리대신, 빅토르 줍코프 러시아 연방 총리,

무하마드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비롯한 각국 경축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 한없이 위대한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에 신명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잃었던 땅을 되찾아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업을 동시에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일구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신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입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진실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전선에서 산화한 장병들, 피약별·비바람 속에 땅을 일군 농민들, 밤낮없이 산업현장을 지켜낸 근로자들, 젊음을 바쳐 민주화를 일구어낸 청년들의 눈물겹도록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롱 속 금붙이를 들고 나와 외환위기에 맞섰던 시민들, 겨울 바닷가에서 기름을 견고 닦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사회 각 영역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온 수많은 직장인들과 공직자들,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주역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떳떳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부심이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 열어가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실의 제약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함께 전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합니다.

지난 10년, 더러는 멈칫거리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너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듯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 바

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선진 일류국가의 꿈입니다.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신화는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발전의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 더욱 힘차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국민 여러분이 하나 되어 나서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함께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세계는 우리를 저만치 앞질러가고 있습니다. 후발국들도 바짝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자원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산층은 위축되고 서민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계층 간, 집단 간의 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투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권리주장이 책임의식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분단국으로서 지고 있는 짐도 무겁습니다. 다음 60년의 국운을 좌우할 갈림길에서, 이 역사적 고비를 너끈히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국민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합니다. 변화를 거스르면 휩쓸리고 맙니다. 변화의 흐름을 타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합니다.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익숙한 것들과 과감히 헤어져야 합니다. 방향은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잘하는 곳은 더 잘하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힘이 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세금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납니다.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서는 머지않아 새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입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서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도록 돕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사랑받아야 합니다. 노(勞)와 사(使)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입니다. 어느 하나가 제몫을 못 하면 수레가 넘어집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사분규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격 한 투쟁은 결국 자멸을 가져온다.” 는 인식을 노사 모두가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은 선진화의 필수요건입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 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 를 열어야 합니다.

기업도 노조도 서로 양보하고 한걸음씩 다가서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힘을 내야 합니다. 기업이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런 때 노동자도 더 열심히 일해 주어야 합니다. 불법투쟁은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노사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정부도 원칙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수출산업이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개방에 취약한 부문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농어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농어민의 아들딸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 걱정이 곧 나라 걱정입니다.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농림수산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러선 안됩니다. 첨단 생산기술을 접목하고 유통 서비스 경영과 결합시켜 경쟁력 있는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농어민과 정부가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피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해서 시민권과 사회권의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습니다. 주거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개인 생활은 물론 사회의 안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대책도 시급합니다. 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화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꿈과 활력의 발전기입니다. 청소년들의 적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디지털,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대학의 자율화는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한국 사회 선진화의 관건입니다.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전선에 서야 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

물림을 끊겠습니다.

과학이 사회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선진화시킵니다. 한국의 몇몇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과학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 협력체제도 보다 실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입니다.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해양 지향,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래의 생활양식에 필요한 공간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친환경, 친문화적 기조를 유지하여 국토의 건강성과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지구환경 변화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이에 적응하려면 당장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참고 창의적으로 적응해야만 합니다. 식량, 환경, 물, 자원, 에너지 등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입니다. 최근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한류는 그런 전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가 함께 가야 경제적 풍요도 빛이 날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도 산업입니다.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문화강국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격조가 올라갑니다.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며, 문화로 발전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문화의 저력이 21세기의 열린 공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과 종교, 빈부의 차이를 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 동참하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고루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엔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평화와 환경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게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기여외교를 펴겠습니다. UN 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외교에 역점을 두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면 한국의 매력을 세계로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족을 위하는 길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7천만 국민을 잘살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은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변하지 않고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발전 방향과 실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용정치의 기본입니다.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소모적인 정치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생산적인 일을 쟁겨 합시다.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회와 협력하고,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이 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샐러리맨을 두루 거쳐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소중한 땅에 기회가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대한민국 지도를 세계로 넓히겠습니다. 세계의 문물이 거침없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새로운 가치로 창조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내보내는 나라, 선진 일류국가가 되게 하겠습니다. 선대의 기원이고, 당대의 희망이며, 후대와의 약속입니다.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더 튼튼하게 길러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기업인과 노동자들은 손잡고 더 진취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군인과 경찰은 국가와 사회를 더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종교인, 시민운동가, 언론인도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더 성심껏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시대적 과제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대전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저, 이명박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합심하여 떨치고 나서면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장

제17대 대통령 취임행사

1. 개요
2. 첫걸음
3. 4대 기본 원칙
4. 조직구성
5. 추진과정
6. 행사계획 및 행사 진행
7. 평가

1. 개요

제17대 대통령 취임행사의 기본 방향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겸소한 취임식이 되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추구하고 경제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취임식을 준비했다.

또한 권위주의 이미지를 벗어난 겸소한 행사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한 국민성공시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데 역점을 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치러진 대통령취임식 전경.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 슬로건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은 2008년 2월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각계인사 약 4만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국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격조 있게 거행됐다.

2. 첫걸음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이하 취임준비위) 위원장으로 임명(2008.1.3)된 박범훈 중앙대 총장과 취임준비위는 여러 차례의 회의와 토론,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의 기본 컨셉을 설정했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나타내며 새 정부의 출범목표와 방향을 최대한 많이 알리자는 컨셉하에 행사의 기본방향도 확정했다.

완벽한 취임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임준비위와 정부, 행사기획사가 삼위일체가 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취임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토론하고 협의해 관계자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2월 25일 2시간 정도의 취임식 행사 속에 새 정부 출범이 갖는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내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사준비 시점에서 행사 종료시까지를 하나의 취임식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취임식 주요 내용으로 새 정부의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취임식에서 표현할 의제로는 5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변화하는 비전을 선정했다.

대통령취임준비위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백성운 안수위 행정실장이 취임식의 기본 컨셉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3. 4대 기본 원칙

1) 국민성공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

취임식을 통해 당선인이 국민 모두에게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진정한 국민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바를 수렴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준비하는 대통령이란 것을 알리기로 했다.

2) 함께하는 국민참여

국민을 섬기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기존의 취임식과는 다르게 다수의 일반국민을 초청하되 특히, 가족단위 초청을 별도로 구성해 취임식을 가족 축제의 장으로 구현하는 데 의미를 뒀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화합을 위한 취지에서 태안 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자와 기부자 등 사회공헌자, 서해교전 유가족과 국내외 기업 대표 등을 특별초청하기로 했다.

3) 섬기는 정부 이미지 구현

국민과 보다 가까이 하려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무대 가까이에 일반국민 좌석을 별도로 배치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자원봉사자·사회공헌자·국민대표 등 특별초청자를 대통령의 좌우 무대에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이미

지를 구현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중앙통로로 입장하는 동선에 따라 약 4천여 가족석을 취임식 사상 처음으로 마련해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배치했다.

4)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

당선인은 취임준비위에 검소하고 간결하며 실용적인 취임행사를 주문했다. 500만표 이상의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란 이미지에 고취돼 호화로운 취임식을 치르기보다는 국민의 지지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순응하고 섬기겠다는 의지를 취임식에 표현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첫마당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주기를 원했다.

이에 당초 계획됐던 무대 전면 초대형 LED, 국회의사당 전면 배경장식, 공군 축하비행, 대형 태극기 연출 등을 과감히 배제했다. 국민들만을 초청해 외빈 초청도 검소하게 진행하고 초청된 외빈들과도 실질적인 외교활동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협의를 함으로써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취임식을 활용했다. 취임식 직후 곧바로 일하러 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경제살리기를 통해 국민성공시대를 만들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취임식장에 입장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4. 조직 구성

취임준비위는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에 사무실을 마련(2008.1.4)해 취임행사의 기본방향 및 운영에 대해 정부측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행사준비를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1) 취임준비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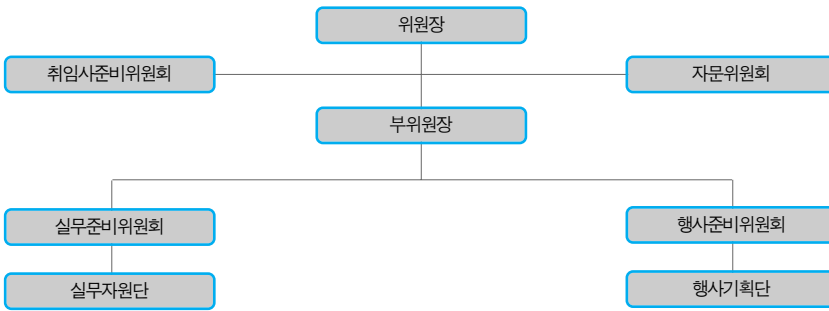
- 이어령
(중앙일보 논설위원),
- 이강숙
(서울대 음대 교수),
- 김동호
(영화진흥공사 사장),
- 김수용
(청주대 교수),
- 황병기
(이화여대 교수),
- 장민호
(국립극단),
- 김백봉
(서울시 무용단장),
- 임영웅
(한국연극연출가협회장)

1월 3일 취임준비위원장이 임명된 후 1월 4일에 부위원장으로 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을 임명했으며 그밖에 행사기획·홍보·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준비위원회, 행사 연출 등을 총괄하는 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준비위는 준비위원 전택수, 실무지원단장 이재환 등 7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원로들을 취임준비위 고문으로 위촉했다.

행사준비위는 총연출가 손진책을 준비위원으로 해 대행사와 함께 행사 진행의 모든 사항을 협의·추진했다. 행사준비위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행사 자문·조연 등 외부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돼 문화·행사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했다.

● 취임준비위원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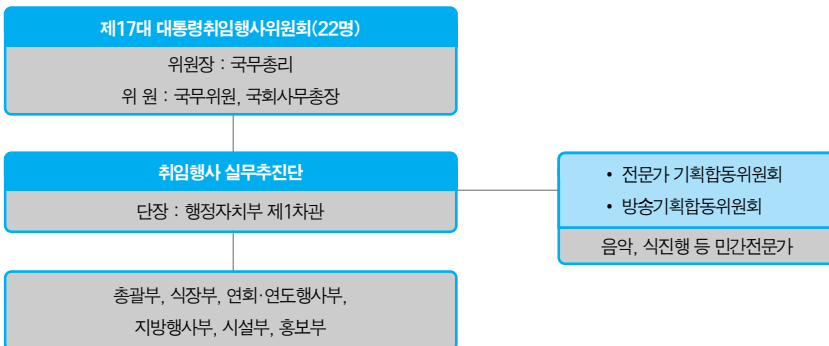


2) 정부

행정자치부는 의전행사 주무부처로서 2007년 하반기부터 취임식 행사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사 관련 소요경비 약 25억원을 확보하는 등 준비해왔다. 이어 제17대 대통령 당선과 취임준비위의 출범에 맞춰 곧바로 취임준비위원장에게 행사 추진방향과 일정을 보고했다.

2007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3위 이내 민간 기획사를 대상으로 설명회(2008.1.10)를 가져 취임행사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일기획을 기획사로 선정했다. 아울러 행사운영의 계획 수립, 검토, 운영을 위한 전문가 기획위원회와 방송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 구성도



〈전문기획위원회 위원〉

손진책(취임준비위 총감독), 전택수(취임준비위원), 이재환(취임준비위 전문위원), 황인평(행자부 의정관), 정현규(행자부 의정팀장), 윤정섭(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태룡(KBS예능1팀 제작위원), 이정아(브랜드웍스 이사), 오태호(행사연출자), 이우찬(원앤리커뮤니케이션즈 부사장), 김찬형(제일기획 상무)

〈방송기획위원회 위원〉

손진책(취임준비위원 총감독), 전택수(취임준비위원), 이재환(취임준비위 전문위원), 황인평(행자부 의정관), 정현규(행자부 의정팀장), 오세영(KBS 예능국장), 김훈수(KBS 중계부장), 최영근(MBC 예능국장), 양재철(MBC 생방송뉴스팀장), 정순영(SBS 예능국장), 이재경(SBS 중계부장), 원경태(YTN 중계부장), 이문태(전 KBS 예능국장), 이도훈(제일기획 국장)

3) 행사 기획사

행사기획사인 제일기획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취임준비위 내에 상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손진책 총연출가의 지도 아래 행사 프로그램 전반을 재구성하고, 취임준비위·행정자치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가지며 업무를 추진했다.

여러 차례 합동업무조정회의를 통해 행사기획(안)을 수정·보완해 당선인에게 행사기본계획을 보고(2008.1.15)하는 과정에서 슬로건과 엠블럼도 국민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 최고 IT 정부라는 위상에 걸맞은 계획으로 제안한 AMOLED 사용과 무대디자인 중앙에 초대형 LED를 설치하는 방안 등은 검소한 행사, 섬기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검토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무대단상 시공 업체로는 공사시공 경험이 많으며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적정예산을 제시한 한양테크(주)를, 행사장 주변 환경 장식물 등 안내표지판 등 시공업체로는 다년간 관련 경험이 풍부한 UL-Stage를 선정(2008.1.26)했다.



4) 기타 관련 부처의 협조

외교통상부는 외빈 및 교포 초청과 관련해서 의전담당관실·재외동포과가 전담해 업무를 진행했고, 취임식 당일 외빈만찬과 재외동포 간담회 등의 준비를 전담해 추진했다. 대통령 경호 업무는 대통령경호처에서 주관해 행사와 관련한 합동 경호회의를 네 차례 실시하며 경호업무에 만전을 기했다. 언론·방송사 기자단 협의는 국정홍보처와 당선인 비서실 등과 함께 기자단 풀을 구성하고 행사장 현지답사와 회의를 거쳐 출입기자단을 확정하고 방송협의 방안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조정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취임식 관련 합동 경호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등 경호업무에 만전을 기했다.



5. 추진과정

〈슬로건 공모 우수작〉

최우수상(당선작, 1명)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 : 서정애(50, 인천 서구)

우수상(2명)

황규순(44,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남상철(54,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

장려상(10명)

양형수(31, 충남 천안시 쌍용2동), 이충훈(42, 서울 구로구 구로동), 정순식(5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윤경영(47, 서울 서초구 방배동), 김세열(46, 대구 수성구 매호동), 신명자(36,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전상훈(53, 광주 남구 봉선2동), 이은주(38, 충남 아산시 방축동), 주태성(32, 인천 부평구 부개3동), 안화균(49, 경기 용인시 신갈동)

1) 장소 선정

취임행사 장소 선정은 행사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였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해 폭넓은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고려했다.

행사준비팀은 당선인에게 행사기본방향과 함께 행사 후보지를 보고(2008.1.6)했다. 전통과 민의의 상징을 지닌 국회의사당 앞마당, 경축 분위기에 적합한 광화문광장, 월드컵을 통해 시민의 광장으로 조성된 서울시청앞 광장 등 세 가지 안을 보고했다. 이중 시청앞광장은 검소하고 겸손한 행사를 지향하는 당선인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아 배제됐고, 광화문광장도 취임식 당일 교통혼잡 등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어 제외됐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국민들에게 대통령 직선제 이후 전통적인 취임식장으로 인식돼 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앞에서 거행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행사장소를 국회의사당 앞마당으로 최종 결정했다.

2) 행사 주제 및 엠블렘 공모

(1) 슬로건 공모

새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 슬로건은 처음에는 ‘마음껏! 대한민국’이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국민성공시대의 가치를 ‘선진화, 일류국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비전에 대한 확신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막연한 희망의 기다림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국민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마음껏 잠재력을 표출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시대라는 의미를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시한 것이다.

합동업무조정회의 결과 ‘마음껏’이 담은 의미가 다소 가볍고 자칫 방종을 내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용어와는 전혀 다른 과격적인 이미지가 새로운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슬로건을 ‘마음껏, 일하는 나라’, ‘마음껏, 힘껏, 대한민국’ 등으로 변용해 봤지만 이에 대한 이견이 많아 인터넷 등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슬로건을 공모했다.

1월 21~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모된 총 6,880여건의 슬로건을 검토해 300여건으로 줄인 뒤 전문가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세 개로 압축한 결과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를 최종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2) 엠블렘 선정

행사기획사에서 준비한 엠블렘은 ‘마음껏, 대한민국!’의 슬로건에 태극기와 무궁화를 모티브로 한 것이었다. 중심에 놓인 태극문양을 기준으로 사괘(건·곤·감·이)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 둘레는 무궁화로 감싸는 이미지를 구현했다.

대한민국의 힘이 모여 세계로, 미래로 펼쳐 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비상을 상징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엠블렘의 태극과 무궁화를 상징한 디자인이 무난하지만,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태극과 무궁화를 통해 국가상징을 표현하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 정부의 출범 이미지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채택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행사기획사에게 새로운 엠블렘을 제작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디자인 전문업체에게도 의뢰해 대체안을 준비했다.

제일기획에서 기존 엠블렘을 다소 변형해 새로 제출했지만,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해 신선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브랜드웍스에서 제작한 디자인은 우리 전통악기를 상징하는 태평소를 모티브로 해 생동감 있는 불꽃을 3색으로 표현해 전체적으로 역동적이었으나 일부 보완작업이 필요했다. 결국 기존 태평소 이미지에 북의 이미지를 원형으

● 슬로건·엠블렘 비교

〈당초〉



〈확정〉



로 배치, 역동성을 보다 강조한 디자인이 제시됐다. 엠블렘 명칭 태평고(太平鼓)는 이렇게 해서 공식 확정 발표됐다. 이렇게 탄생한 태평고는 취임식 공식 휘장으로 사용함은 물론 취임식 초청장, 입장카드, 주변장식물 등에 다양한 형태로 변형 사용됐다.

3) 취임식 초청자 선정방법

(1) 인터넷 국민참여

취임행사 컨셉은 기본적으로 온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에 맞췄다. 대한민국 각계각층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기는 행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의 수용인원을 면밀히 검토·판단해 4만 5천여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절반 정도인 2만 5천여명을 국민참여자로 결정하고, 대통령 특별초청 대상자, 중앙·지방 초청인사, 재외국민, 한나라당 등 정당인 약 1만여명을 초청했다.

가능한 많은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취임행사 관례상 초청대상자 수를 줄이거나 제한했다.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의 슬로건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함께 참여한다는 원칙을 초청자 구성에서부터 반영했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초청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문화관광부를 통해 관광업계와 협의했으나, 관광계획이나 초청대상자의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 중단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참여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다. 참여방식도 가족축제의 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개인참여 신청과 가족단위 참여 신청으로 구분해 신청받았다. 그 결과 인터넷 개설 2일 만에 2만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쇄도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11일간의 참여 신청기간 동안 계획인원 2만 5천명을 넘어선 4만 479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가족단위 신청자 9,887명(3,527가족)을 포함한 2만 5천명을 추첨으로 선정하고 초청했다. 참고로 지난 제16대 취임식은 18일 동안 2만 1천여명이 신청했다.

대통령 취임식에 가족단위 참여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참여한다는 사연이 가장 많았다. 선 살에 아들을 얻었다는 박영수 씨(55, 경남 진주)는 “아내와 함께 스물한 살 된 딸과 여섯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에게 희망을 주고 식당을 하면서 힘들게 가족을 이끌어가는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취임식에 참여하고 싶다는 대구의 정미현 씨(여 24)도 있었다.

취임식 참여 신청에 함께 보내준 사연 중에는 재미있는 사연도 많았다. 부부가 모두 2월 25일이 생일이라는 대구의 조계순 씨는 두 자녀와 함께 참석하고 싶다고 밝혔고, 아버지 회갑일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고 싶다는 효성 깊은 이재영 씨(29, 경기 성남), 시각장애 2급으로 생일을 맞아 취임식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윤희준 씨(46, 서울 영등포) 등도 있었다.

(2) 외빈 참여

외빈 참석자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국민들의 참석과 함께 해외 경제계 인사들의 참석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정치계 인사로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앙흐바야르 몽골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후쿠다 일본 총리, 케빈 러드 호주 총리, 줍코프 러시아 총리,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 등이 참석했고, 탕자쉬엔 중국 국무위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세갱 프랑스 감사원장, 누르베르디예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등도 참석했다.

특별참석 외빈으로는 압둘카람 전 인도 대통령,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 모리 일본 전 총리, 나카소네 일본 전 총리와 그린버그 미국씨브이스타 회장, 노부유키 일본 노무라 그룹 CEO, 로널드 앤더슨 미국 AIG 수석 부사장, 림 케펠 그룹회장, 데이비드 클라크 호주 맥쿼리 은행회장 등 폭넓은 경제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는 취임식을 경제살리기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 세 일즈 외교 마당으로 삼고자 한 대통령의 뜻과 일치했다.

4) 좌석 배치

좌석배치는 섬기는 정부의 취지에 맞추어 중앙·지방 초청인사의 좌석을 무대와 가까이 한 기존의 관례를 과감히 배제해 일반국민 참여자의 좌석을 무대 가까이 배치하고, 중앙·지방과 각계 초청 인사 등의 지정좌석은 축소했다.

좌석배치는 단상과 단하로 구분했다. 단상에는 정부 주요 인사, 외국 정상급 인사, 태안 자원봉사자, 소외계층 등 특별초청 약 1천여명을 위한 자리로 배치하고, 무대 상단 중앙에 300여명의 합창단, 좌측에는 국악 오케스트라단, 우측에는 관현악 오케스트라단을 배치해 국악과 양악이 한데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로 구성했다.

단하 좌석은 약 4만 2천여석을 준비해 행사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통령 입장 이후 이동방향에 맞추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자는 의미에서 약 4천여석의 가족단위 자리를 배치했다.

당선인이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한다는 취지를 원하고 있어 국회의사당 전면을 향한 일자형 좌석배치에서 벗어나 참석한 국민이 무대를 향해 취임식을 볼 수 있도록 방사형으로 좌석을 배치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파격적인 무대 배치를 했다. 지금까지는 관례상 정부 각료, 인수위원 등을 무대단상에 배치했으나, 이번에는 장관 내정자, 인수위원, 청와대 내정자들을 무대 단하로 배치했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일반국민 참여자의 좌석을 무대 가까이 배치했다.



다. 이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국민을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한편, 일반국민 참여자 중 장애인을 위해서는 휠체어 사용과 이동을 감안해 무대 양측에 리프트를 설치했으며, 이동과 행사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단상 가까이 배치했다.

이외에도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특별 초청했다. 특히, 지난해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엄청난 아픔을 겪은 태안지역주민과 바다를 되살리는데 솔선수범한 자원봉사자들도 특별 초청했다.

한편, 당선인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는 측면에 위치했던 좌석을 무대 중앙으로 배치했고, 경제살리기에 걸맞게 전국경제인 회장단, 중소기업 대표 등은 단상에 배치했다.

● 단상인사 국민대표 초청인사

국가안보·정체성(서행교전 참전자, 해외파병자), 자랑스러운 시민(아름다운 철도원, 대안유류사고 자원봉사자),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규제 전봇대 제보자, 노사화합 근로자, 재래시장 상인대표, 작지만 강한기업 대표자), 선행(입양 연예인, 모범환경미화원, 119대원, 택시기사), 사회공헌(특허료 기부자), 자랑스러운 한국인(남극세종기지, 과학자), 대북관련(대북투자 기업인, 금강산개성공단 근무자), 다문화 가정(이천화재유가족, 신부 등), 체육인(수영, 피겨스케이팅, 태릉선수촌장 등), 벽지주민(제주도, 마라도, 명끝 마을, 울릉도, 독도), 희망한국인(실업계 고교, 장애인 대표 등), 슬로건·국민제안 우수자 등

5) 단상 디자인

취임행사 단상 도안은 당초에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형상화한 디자인에 한강 물결을 상징하는 파랑색을 국회 중앙에서 무대까지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의사당 전면에는 예술작품을 도안해 국회의사당 본관 전체를 하나의 세트장으로 꾸며내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건물 자체 이미지가 민의를 대표하는 이미지이므로 의사당 전면을 덮은 배경은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검소하게 치르라는 당선인의 주문에도 반하고, 또 호화 치장에 지출되는 과도한 예산은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높이 약 40여m, 길이 약 100여m의 배경장식을 설치하게 되면 기상상태가 나쁠 경우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화려함과 과격을 벗어난 행사장 분위기와 조화되는 파란색의 무대 디자인에 알맞은 크기로 제작해 중앙에 설치했다. 취임식 연단은 T자로 제작해 당선인이 취임선서를 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더 가까운 위치로 걸어 나와 취임사를 하도록 설계했다.

단상도 취임선서 때는 숨겨져 있다가 당선인이 취임사를 위해 걸어 나올 때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취임식 내내 계속해서 당선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6) 기타

(1) 대통령 복장 착용 국민여론 수렴

취임식 행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섬기는 정부'의 이미지에 맞게 국민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수렴했다는 점이다. 취임준비위는 한복과 양복 착용에 관해서도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여론 조사를 앞두고 승례문 화재사건이 발생해 당초 예정보다 늦은 2008년 2월 16~18일까지 3일간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2,508명이 참여해 한복 1만 7,49명(69.7%), 양복 759명(30.3%)으로 한복 착용에 높은 지지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복장인 한복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선인은 한복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색과 곡선의 부드러움을 취임식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에 동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양복, 영부인의 한복 착용이 국민 정서상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취임식에 한복을 착용하는 것은 일부에서 국수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최종적으로 당선인은 양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취임식 당일, 대통령의 의상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인수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2) 봉황문양 배제

당선인은 봉황의 이미지가 국민과 가까이 하는 ‘섬기는 정부’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사용을 배제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창의적인 ‘태평교’를 취임식 공식 엠블렘으로 사용했다. 다만, 국가상징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환송·환영 등 각종 의전에서는 봉황문양 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3) 기념우표 제작

정보통신부는 기념우표 발행계획과 태극기·무궁화·당선인을 소재로 한 디자인, 태극기와 사진·조타수를 소재로 한 디자인 등 2종의 취임기념우표 1차 시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당선인은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무궁화와 태극기를 소재로 하는 것보다는 관행을 타파해 새롭게 디자인하며, 글로벌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영문도 표기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문 우표 디자이너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로 우표를 디자인하게 해 이중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그려진 세계지도를 배경으로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표현하는 노트북 앞에서 일하는 당선인 모습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디자인을 선정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 디자인을 토대로 기념우표 앨범 1종 500매, 시트 1종 50만장, 기념우표첩 1종 2만부, 기념우표 1종 500만매 등을 제작해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제작된 기념우표.



(4) 취임식 초청자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공

취임준비위는 참가신청자들이 추첨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초청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적인 명단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어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취임식 초청장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2월 15일까지 모두 발송했다. 한편 전 국민 휴대폰 보편화에 맞춰 국민초청자로 결정된 2만 5천명에 대해서

취임식 참가를 신청한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었다.

는 취임식 날짜를 잊지 않도록 개인신청자 및 가족단위 대표자의 핸드폰으로 SMS 서비스를 이용해 전송하기로 했으나,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자들이 초청여부를 검색하고, 행정자치부의 초청장발송 전담팀과, 취임준비위의 전화응대 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5) 임기 개시 상징행사 타종인사 선정

취임준비위는 제17대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는 2월 25일 0시를 기준으로 하는 행사를 계획했다. 2월 24일 11시 30분부터 실시되는 전야제 행사에는 팝오케스트라의 연주, 테너, 팝페라 가수의 노래에 이어 당선인의 영상메시지 녹화방송, 타종행사, 축시 낭송 등으로 준비했다.

타종인사의 선정에 있어서는 전국 각 시·도별 특성에 맞는 국민대표 1명씩 16인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경제살리기와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 걸맞은 인물을 우선으로 했으며, 해외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널리 알린 유명인사 1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한 선정인사 17명은 대통령 취임 제17대를 상징하고 새 정부 출발의 뜻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타종인사 명단

- 전국 시·도 대표(16명) : 정상원(서울, 모범시민), 김동재(부산, 해양수산), 박종분(대구, 서민경제), 이희완(인천, 안보), 안재우(대전, 인재양성), 임병성(광주, 문화예술), 오종쇄(울산, 근로자), 장미란(경기, 스포츠), 김종후(강원, 환경관광), 우관문(충북, 과학교육), 김언석(충남, 국민통합), 김양원(전북, 투자유치), 최영항(전남, 엑스포유치), 김재경(경북, 수출기업), 서영욱(경남, 중소기업), 양민웅(제주, 농업기술)
- 재외동포(1명) : 서진규(희망전도사)
- 인수위원회(2명) : 이경숙 인수위원장, 박범훈 취임준비위원장
- ※ 타종행사 출연진 : MC 김병찬, 서울팝스오케스트라(하성호), 최현수, 로즈장, 송윤아(축시 낭송)

(6) 기타

① 외빈을 고려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

취임식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약 200여명의 통역요원을 단상·단하에 고루 배치함으로써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국빈 등 주요 외빈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 해당 국어를 사용하는 통역원을 배치해 소홀함이 없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맞춰 취임식 안내책자에 취임사를 우리말과 함께 영어로 번역해 수록했고, 취임사 연설시에는 행사장 내 LED 화면에 취임사를 영자막으로 띄웠다.

② 행사 식순 변경

기존 취임식은 대통령의 취임사가 끝나면 이임 대통령 환송 후 곧바로 폐식이 진행되고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가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행사장을 벗어나려는 국민들로 인해 취임식장이 어수선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이번 행사에서는 이임 대통령 환송에 이어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가면서 국민과 함께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들며 퇴장함으로써 취임식을 찾은 국민들과 함께 분위기를 돋운 후 폐식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③ 환송·환영 행사 간소화

대통령 취임식 첫날 국립현충원 참배를 위해 사지에서 출발하는 행사도 최소한의 지역주민이 환송하는 행사로 한정해 진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풍물놀이 등도 취소했으며,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 효자동 지역주민들의 환영행사도 지역주민을 인위적으로 동원하지 않도록 했다.

7) 계획단계에서 중단된 행사

(1) 황포돛배

행사기획사는 취임식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희망의 배를 띄우고, 국민 성공시대에 대한 약속을 하는 의미에서 마포대교 나루에 정박한 황포돛배의 돛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제안했다.

대한민국호의 출범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상징을 구상한 것이었다. 황포돛배의 연출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먼저, 황포돛배 시연의 창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황포돛배 시연은 기존 행사에서 이미 연출된 것으로 대통령의 다짐을 마련하기에는 새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계절상으로 겨울에 배를 띄운다는 설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둘째, 황포돛배 시연에 따른 경호상의 문제로 주변 통제는 물론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었다.

셋째, 황포돛배 시연이 갖는 이미지가 대운하 계획 추진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과 예산문제가 있었다.

결국, 행사 계획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출발한 황포돛배 시연은 검소하고 실용적인 행사를 주문한 당선인의 의지에 맞지 않고 행사에 작위적인 면이 있으며, 경호·예산상의 문제 등이 있어 최종 논의 과정에서 중단했다.

(2) 단상 위 대형 LED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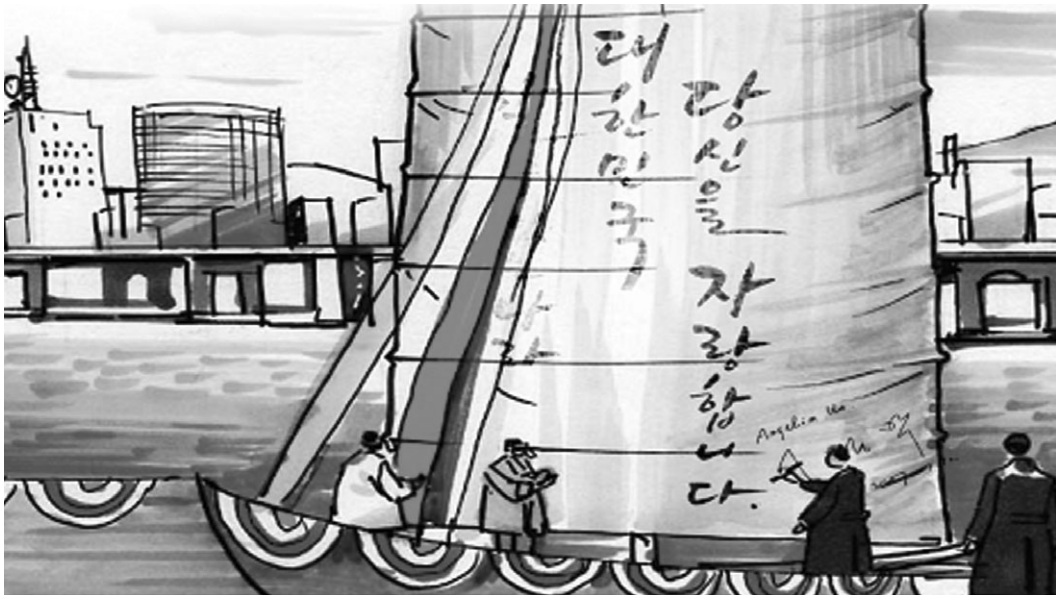
취임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의 취임사이다. 취임사에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및 철학을 담은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기대에 맞는 취임사를 보다 생동감 있게 표출하고자 무대 뒷면에 500인치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기로 했다.

당선인이 취임사를 낭독할 때 그에 맞는 동영상상을 스크린에 나타내 역동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시각화함으로써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제 행사 준비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당초 취임식 행사 중 하나로 기획되었던 황포돛배 행사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행사를 주문한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하여 취소되었다.

첫째, 취임사준비위에서는 취임사에 담을 대통령의 말씀을 행사 전일까지 수정·보완해야 하고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길 메시지는 사전에 노출되지 않아



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취임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맞춘 영상을 제작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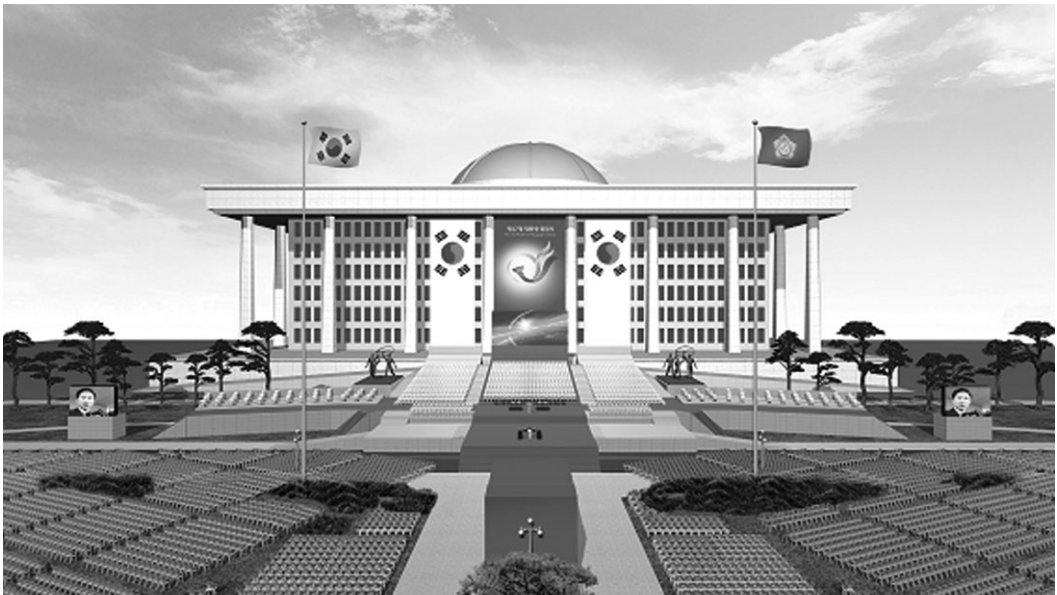
둘째, 취임사는 대통령께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말씀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데 이를 영상물로 나타내는 것과 대통령의 실제 모습이 각각 나타날 경우 국민의 시선을 흐트러지게 해 자칫 혼선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역사적인 취임사에 드러날 메시지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메시지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셋째, 무대 뒤에 설치할 대형 스크린에 대한 비용이 문제됐다. 취임식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금까지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대형 스크린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당일의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LED 운영이 곤란할 경우 무리한 예산 지출 등으로 인한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그리고 안전성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해야 하는 한계가 노출됐다.

결국 시간적인 부족, 메시지 전달의 한계, 과도한 예산 지출 등의 문제가 있어 실제 세부추진 단계에서 계획이 중단됐다. 다만, IT 세계정상이란 국가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좀더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취임준비위는 취임식 당일의 날씨와 참석자들의 동선 등 원활한 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3) 축하비행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한 비행기를 포함한 우리 공군의 우수성과 위용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의 취임선서 후 축하비행 방안을 검토했다. 공군 및 서울공항 등에서도 공중비행계획의 일환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축하비행 계획에 따르면 총 26대가 축하비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먼저, 국산 기술로 제작된 T-50기 1개 편대(3대)가 마포대교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비행하게 되면, 이어서 군장기 4개 편대(20대)가 뒤를 따르고, 마지막으로 T-50기 1개 편대(3대)가 행사장 가까이에서 하늘 위로 오색연무를 뿌리면서 상승해 대통령 취임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2008년 2월 5일 공군, 서울공항 관계자, 행정자치부, 취임준비위 등이 합동회의를 거쳐 당일 축하비행시 민간항공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방안, 안전운항 등을 위한 주변 통제 방안 최소화, 기상 악화시 비행여부 최종결정 시간(전일 18:00경)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축하비행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축하비행을 할 경우 국민의 반응, 민간항공사 불편 최소화, 축하비행시 행사장 도착시간이 적어도 8분 40초 전까지 사전 통보돼야 함에 따른 정확한 시간의 예측불가능성 등이 문제로 남아 구체적인 계획은 통제소 운영, 통제관 배치 등과 함께 2월 12일 최종 협의하기로 했다. 축하비행계획은 2월 10일 당선인에게 취임행사 준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함께 보고됐다. 이에 당선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소한 행사 취지에 맞지 않고 비행시 안전 문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등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취임준비위에서는 내부회의를 거쳐 행사 취지에는 적합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축하비행은 취소됐다



(4) VISION TREE

취임식이 거행되기 전인 2월 24일 자정, 온 국민의 희망을 모으기 위한 비전트리 행사를 계획했다.

즉, 행사 1주일 전부터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 비전트리를 설치하고, 온 국민의 희망과 꿈을 비전트리에 매달아 이를 임기 개시 상징행사로써 영상에 소개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반영하기로 하는 계획이었다.

또한 참가자들을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로 적극 추천하거나, 향후 새 정부의 국정 모니터 요원으로 운영하는 방

안도 검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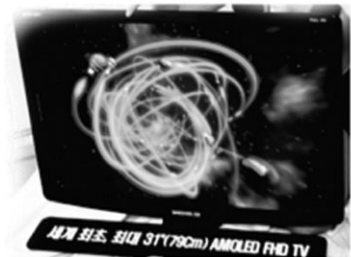
하지만, 비전트리 행사가 행사 수일 전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축 제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감소한 행사를 하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청계광장에서 2~3일간 진행하는 방안으로 축소 검토했다. 그러나 국민에게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선언하는 취임식을 축제화할 경우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고, 승례문 화재로 어수선했던 분위기여서 국민에게 불편과 위화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종 결정과정에서 배제했다.

(5) 기타

당선인의 취임사 직후 의사당 앞마당 분수대에서 무궁화꽃이 피는 퍼포먼스가 연출되고, 이어서 하늘 위로 초대형 비전태극기가 부상하도록 계획했으나, 예산과 안전성에서 검증이 되지 않아 중단됐다.

취임사 직후 비전 슬로건을 선포하고 IT 코리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초박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AMOLED)'에 대통령이 손을 올려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전송하는 방안, 남산타워에서 불꽃놀이와 서치쇼를 하는 방안 등도 배제됐다.

또한, 청계광장이나 서울광장에서 거행되는 축하공연을 시민과 함께 관람하고 남대문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직접 마련한 점퍼와 운동화를 전달받고 '이제 일하러 갑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광화문까지 걸어가서 일하는 경제대통령의 모습을 시연하는 방안, 대통령이 취임사를 연설하는 장면의 주요 키워드 및 자료를 영상으로 표출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됐으나 감소한 행사 취지 및 실제 실현 가능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배제했다.



6. 행사계획 및 진행

● 옥외행사 불능기준 (2.24, 16:00 현재 기상예보 기준)

- 기온 : 체감온도 영하 10℃이하
- 강우 : 시간당 1mm 이상
- 바람 : 초속 9m 이상(바람 1m/s 증가하면 체감온도 1° C 하강)
- 적설 : 적설량 5cm 이상
- 강설 : 시간당 1cm 이상

취임식 행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검토해야 할 것은 기상 악화로 옥외행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취임준비위는 옥외행사가 불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상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의 행사여부를 기상청, 대통령경호실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사 일주일 전부터 기상상태를 수시로 파악함은 물론 2~3일 전부터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무대·음향·방송·조명 등 실내행사 준비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상상태가 나빠 옥내 행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거행하고 참석인원을 4만 5천명에서 600명으로 참석범위를 최소화해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옥외행사에 사용되는 예포발사·의장대 시연은 생략하고 최소한의 오케스트라단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식전행사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 임기 개시 상징행사(2. 24)

시간	행사 내용
11:3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식(MC 김병찬) ○ 서울 팍스오케스트라 공연(최현수, 로즈장) ○ 대통령 영상 메시지 ○ 보신각 타종 ○ 대통령 축시 낭송 ○ 폐식

● 식전행사(2. 25)

항목	시간	행사 내용	
초청자 입장·대기	08:30~	○ 일반 참가자 입장, 객석 머플러 배부 ○ 축제성 백뮤직 운영	
사전행사 안내	09:50~10:00	○MC 인사, 행사 안내, 머플러 교육, 합창 등	
시화연풍	10:00~10:10	모으기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민의가 하나둘씩 새 희망이 되어 모여들고)	○ 인트로 영상 ○ 오프닝 공연(최소리팀 3인) ○ 한국 타악(한국타악 70인)
	10:10~10:18	세우기 (그 희망이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둘러들어 더 큰 비전을 세워 올리니)	○ 장사익, 국악합창단 ○ 노래꾼 & 국악합창, 양악+한국타악, 합동공연 등
	10:18~10:30	열기 (비전의 푸른빛이 땅을 일으키고 내일을 향해 손 내미니 희망과 꿈이 가득한 미래가 열린다)	○ 테너가수 공연(정의근) ○ 세계 타악, 자반&한국타악, B-Boy, 아크로바틱
	10:30~10:40	나아가기 (우리 이제 하나 되어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노라)	○ 대중가수(김정훈) 공연 ○ 시화연풍 아리랑 대합창
공식행사 안내	10:45~10:50	○ 공식 사회자 안내 말씀(행정자치부 의정관)	
영상	10:50~10:55	○ 장내 정리 / 사전행사 인터뷰 영상	

● 본행사

항목	시간	행사 내용
대통령 입장	10:53~11:00	○ 환영무 ○ 청사초롱 든 남녀 어린이와 함께 중앙통로 입장
소개 영상	11:00~11:01	○ 개식 선언 및 팡파르(의원회관 및 국회도서관 옥상)
국민의례	11:01~11:05	○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1절),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식사	11:05~11:08	○ 국무총리
취임선서	11:08~11:10	○ 취임선서
군악대 의장대 행진 및 예포발사	11:10~11:14	○ 국방부 군악대 의장대 시연 및 예포 발사
취임사 및 비전선포	11:14~11:44	○ 대통령
축하연주	11:44~11:53	○ 축하연주(정명훈, 베토벤 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
이임 대통령환송	11:53~11:56	○ 이임·신임대통령 내외
대통령 행진	11:56~12:04	○ 대통령 퇴장 행진, 국민대표 격려 및 인사 등
폐식 선언	12:04~12:05	○ 대통령 승차

● 식후행사

항목	시간	행사 내용
차량 행진	12:05~12:40	○ 여의도-파포대교 남단 ○ 마포대교 남단-서울광장(차량 이동)
시청와광장		○ 서울광장 시민 영접
효자동 환영행사		○ 효자동 주민 환영행사 진행 및 청와대 직원 입구 환영



● 취임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
- | | | |
|---|-------------------|---------------------|
| ○ 총감독 : 손진책 | ○ 기획총괄 : 김찬형 | ○ 제작총감독 : 이도훈 |
| ○ 연출 : 한중구 | ○ 조감독 : 신용수 엄승욱 | ○ 조연출 : 임진관 |
| ○ 미술감독 : 황영익 | ○ 음악감독 : 김재영 | ○ 안무감독 : 정재만 |
| ○ 연희감독 : 김성녀 | ○ 의상감독 : 한진국 | ○ 영상감독 : 강덕용 |
| ○ 음악조감독 : 김성국 | ○ 풍고인무 : 채향순, 김승일 | ○ 천지물림인무 : 김덕수, 최종실 |
| ○ 연주 :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 국악원 창작악단,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안산시립국악단 | | |
| ○ 연합합창단 :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부천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 | |
| ○ 연합무용단 :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무용단, 서울시립무용단, 강원도립무용단, 인천시무용단, 서울예술단, 삼성무용단, 벽사무용단, 숙대무용단 | | |
| ○ 사회 : 김제동·최정원·김학도 | | |
| ○ 지휘 : 정명훈 | | |
| ○ 노래 : 장사익(교수), 정의근(테너), 노선우(소프라노), 김장훈(가수) | | |
| ○ 타악 : 최소리, 송포 세계타악 연주단, 사물놀이 한울림 연주단, B-Boy | | |
| ○ 예포 발사 : 기수단, 군악대, 취타대, 육·해·공군의장대, 여군의장대, 전통의장대 | | |
-

7. 평가

1) 잘된 점

취임식의 가장 큰 특징은 섬기는 정부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해 화려하거나 격식을 벗어난 프로그램은 과감히 배제됐고 국민과 함께하는 취임식이 되도록 꾸몄다. 취임행사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축하비행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라는 당선인의 표현으로 취소함으로써 경제살리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중 대통령에게 점퍼와 운동화를 주는 연출, 황포돛배 서명 등 의례적이거나 지나치게 작위적인 요소도 배제했다.

대신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취지에 맞게 무대를 국민 가까이 설치하고, 좌석을 무대 앞까지 배치했다. 좌석배치에 있어서도 가족단위석을 별도로 마련해 대통령이 취임식장에 들어설 때 가까이 앉은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환영함으로써 자녀들에겐 꿈과 희망을, 부모에겐 긍지와 용기를 심어주었다. 또한, 관행상 단상에 배치하던 내각 참석자들의 자리를,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을 모시겠다는 취지로 무대 아래로 내린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

이번 취임식은 절제되고 검소한 행사이면서도 명실공히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처음으로 참가자의 절반 이상을 국민 참여를 통해 초청했다. 대통령도 전용차량을 이용해 행사장 무대 앞까지 도착했던 관례를 과감히 깨고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사당 중앙 약 200m를 도보로 걸어서 들어감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2) 미흡한 점

대통령 취임식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최고의 의전행사이다. 그런 점에서 의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관련된 전 부처가 하나로 뭉쳐 행사를 성공리에 이끌어야 한다. 각 부처 간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갖고 있는 노하우나 매뉴얼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번 취임식은 대부분 이러한 취지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일부 부분에서 부처 간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계획 수립 또는 추진단계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다소 있었다. 또 취임식은 의전행사로써 새 정부의 출범의지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품위 있고 격식을 갖춰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행사의 초기 기획단계는 의전이라는 기본 틀을 벗어나 연출을 위주로 고려한 점이 있었다. 즉, 지나치게 외형을 포장함으로써 의전행사의 취지가 화려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계획됐던 것은 새 정부의 검소한 행사 취지에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최종 행사단계에서는 이러한 점이 많이 배제되어 검소하면서도 품격 있게 준비됐지만, 앞으로는 기획사가 기본방향 단계에서부터 정부 부처 의전행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취임식은 의례적이거나 지나치게 작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검소하고 실용적으로 치러졌다.

취임식 예산은 약 25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행사예산에 필요한 경비는 매우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이 빠지게 되고,



행사의 큰 틀이 바뀌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검소한 행사라는 근본적인 틀은 지켰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제대로 알리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취임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국민참여를 절반 이상으로 한 것은 그 의미를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초청인원을 결정한 것은 좋은 시도였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초청에 있어서 사전에 취임준비위에 인터넷 시스템 구축 예산이 전무해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다 보니, 계획한 프로그램 등이 원하는 날짜와 방법으로 구축되지 못했다. 취임준비위 활동을 홍보하거나 국민참여 관련 문제점을 인터넷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데에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향후에는 취임준비위의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예산편성과 별도 업체와의 계약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3) 평가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은 ‘검소한 행사,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 가족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임식 행사의 무대 단상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손을 잡은 역동적인 장면이 그 의미를 함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행사장을 가득 매운 4만 5천여명은 질서정연하게 관람하면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다. 행사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모토로 해 글로벌 정부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두 달여라는 다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임준비위와 행정자치부, 기획사가 상호 협력으로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 취임준비위원회 주요 일정표

일자	실무준비위원회	행사준비위원회
1.3	○ 박범훈 취임준비위원장 임명	
1.4	○ 취임행사 관련 정부측 보고(1차) -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 취임식, 외빈초청원칙(안) 등	
1.5	○ 취임행사 관련 보고(2차) - 기획사 선정, 자문위원회 구성 등	
1.6	○ 취임준비위 사무실 설치(별관 3층) - 조직 구성,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파견	
1.7	○ 취임준비위 운영계획 보고 - 인수위 백성운 행정실장	
1.8	○ 제17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시안 보고 - 기존 관행 타파, 글로벌한 디자인 - 영문 포함 등	
1.9	○ 외교통상부 외빈초청계획 보고 ○ 국립국악원 등 행사지원 협조	
1.10	○ 취임식 기획사 선정(제일기획) ○ 국립극장장, 행정자치부 제1차관 행사 협조	○ 기획사 선정
1.11	○ 기획사 연석 합동회의 ○ 합동워크숍 계획 수립	○ 취임준비위, 행정자치부 방문계획 협의
1.12~13	○ 합동워크숍(양평, 남한강수련원) 취임준비위,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제일기획사	○ 합동워크숍 참석(프리젠테이션, 토론 등)
1.14	○ 외교통상부 초청방침 회의	
1.15	○ 행사기본계획 당선인 보고 ○ 기념우표 시안 보고(2차) ○ 취임식 관련 국무총리 예방 협조	○ 세부 프로그램 구성안 협의 - 임기 개시 상징행사, 프로그램 구성 - 무대디자인, 영상안 협의
1.16	○ 기념우표 최종안 확정 보고	○ 세부 프로그램 구성안 협의 - 무대구조물, 대형LED, 무대디자인 ○ 와이드로, AMOLED 가능성 조사
1.17	○ 엠블렘 추가 디자인 보고 ○ 식전행사 프로그램 협의	○ 세부 프로그램 구성안 수정 - 식전행사, 오케스트라 협의 등
1.18	○ 취임식 기본계획 1차 보고(당선인)	○ 당선인 보고안 작성 - 엠블렘, 어플리케이션 등 수정
1.19	○ 엠블렘 디자인 협의(2차)	○ 업무협의(주요의제, 당선인 보고 등)
1.20	○ 국민참여·슬로건 등 참여방안 보도자료 배포	
1.21	○ 취임준비위 홈페이지 개설 ○ 인터넷 국민참여 신청 페이지 오픈	○ 영상제작회의 ○ 출연진 섭외 및 추진계획 협의 - 출연진 관련 기본 운영계획 등
1.22	○ 취임식 엠블렘 협의(3차)	○ 엠블렘, 식전행사 안무연출 협의 ○ 영상제작 협의, 스탠드식 협의 ○ 머플러 제작 협의
1.23	○ 취임식 엠블렘 협의(4차) ○ 취임식 슬로건 공모(인터넷) ○ 인터넷 국민참여 현황 브리핑	○ 프로그램 수정 및 연출안 협의 - 프로그램 콘티(안), 예산작업 등
1.24	○ 취임식 엠블렘 확정 당선인 보고	○ 프로그램 수정 및 연출안 협의 - 무대, 시스템, 제작 ○ 경호팀 협의(업무 공유 등)

1.25	○ 취임준비위 보안교육 ○ 백서 발간 회의	○ 프로그램 수정 및 연출안 내부 협의 ○ 무대·환경장식물 관련 현장답사
1.26	○ 해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 참여방법 협의 (외교통상부)	○ 식전문화행사 국악회의 ○ 영상제작회의, 남산타워 등 답사
1.27	○ 인터넷 국민참여 추천방식 협의 ○ 국정홍보처 취임식 기자단 관련 협의	○ 식전행사 시화연풍 음악 회의 ○ 임기 개시 상징행사 관련 검토
1.28	○ 슬로건 공모작 우수작 선정방법 논의 ○ 전문가기획합동위원회의	○ 전문가합동위원 및 행정자치부 차관 보고 ○ 경호팀 미팅, 비전트리 시물레이션
1.29	○ 행사추진상황 점검회의 ○ 공군 축하비행 협의 ○ 무대장식 및 주변장식물 업체 선정	○ 행사 추진상황 점검회의 ○ 환영무, 합창단 안무 등 협의
1.30	○ 방송기획합동회의	○ 방송 관련 주요 의제 협의 ○ 출연진 관련 협의
1.31	○ 슬로건 공모 마감 : 추천방식 협의 ○ 예산 관련 회의	○ 국회의사당 시스템 현장답사 ○ 음향 통신 관련 경호팀 협의
2.1	○ 인터넷 국민참여 추천방안 협의	○ 프로그램 변경 각 파트별 수정작업 ○ 시화연풍 관련 김장훈 미팅
2.2	○ 항공대 축하비행 관련 회의	○ 내부 스템 프로그램 협의 - 중앙LED 제외 추가대안, 환영무 관련 협의
2.3	○ 언론사 브리핑 : 국회 앞마당	○ 국회의사당 출연진 현장답사 ○ 시화연풍 시나리오, 슬로건 디자인 작업 등
2.4	○ 방송전문가회의: 전야제, 취임행사 방향 협의	○ 전체 스템 프로그램 회의 - 프로그램 변경, 시화연풍 협의 등
2.5	○ 축하비행 관련 회의 : 잠정 결정 ○ 경호 관련 회의 : 행사시 경호 등 ○ 초청자 좌석배치 방안	○ 경호 관련 전체회의 ○ 전체 스템 프로그램 회의
2.6	○ 행사계획안 작성	○ 전체 스템 프로그램 회의
2.8	○ 무대단상 설치 관련 협의	○ 중앙·사회자 포디움 사용 협의 ○ 음악 녹음, 영상 제작 협의 ○ 출연진 대기공간 협의
2.9	○ 행사계획(안) 협의	○ 장치·장식물 배치도 작업 ○ 경호 시스템 및 스태프 제작 협의 ○ 김장훈 곡 녹음 등
2.10	○ 행사계획(안) 당선인 보고	○ 당선인 보고 ○ 한국타악 연습일정, 무대 오케스트라 단상 하단· 영상조정실 공간계획
2.11	○ 이재오 의원 방문 행사(안) 보고 ○ 취임식 방송사와의 협의 ○ 국회의사당 답사(무대, 방송, 군악대)	○ 청와대 경호팀 답사(프롬프트 확인) ○ 국회 답사(무대 디자인, 방송 협의) ○ 전력추진 관련 일정 협의 ○ 군악대, 의장대 등 지휘관 협의
2.12	○ 당선인 복장 인터넷 게시 협의 ○ 백서 편집회의 ○ 전야제 행사·예산 등 관련 협의	○ 3MC 시나리오 관련 협의 ○ 의장대 현장 리허설 ○ 포디움 리프트 작업, 국회 공간 협조 ○ 최소리·김장훈 AR 작업
2.13	○ 공식행사 음악 녹음 ○ 경호 관련 회의	○ 행사 음악 녹음 ○ 청와대경호팀 회의(경호, 검측, 통신) ○ 프롬프트, 포디엄 협의 ○ 출연진 연습(남산타워)

2.14	○ 보신각 타종 행사 관련 협의 - 오케스트라 협연, 당선인 영상 녹화 ○ 서울시청앞 광장 행사 계획 협의	○ 연습(국회의사당 앞마당)
2.15	○ 경호 관련 관계관 회의(청와대경호실) ○ 복장착용 관련 인터넷 게시 협조 ○ 대통령 복장 착용 관련 보고	“
2.16	○ 단상인사 계획 협의 ○ 가회동 환송, 효자동 환영행사 협의 - 서울 종로구청 담당자 등	“
2.17	○ 프롬프트·포디움 리프트 현장점검 ○ 기획사 콘티 구성(안) 협의	“
2.18	○ 취임식 준비상황 인수위원장 보고 ○ 행정자치부 취임식 세부상황 보고	“
2.19	○ 머플러 배부 관련 협의 ○ 취임식 당일 업무분장 협의 ○ 준비상황 보고(총무·의전비서관)	“
2. 20	○ 팸플릿 : 영문, 사진, 서명 등 협의	“
2. 20	○ 선서문 : 표지, 내지, 코팅 등	“
2. 21	○ 전아제 행사 : 타종인사, 계획 협의 ○ 가회동·효자동 행사계획 협의 등	“
2. 22	○ 당선인 보고 : 취임행사 준비상황 - 당선인 시간계획별 행동 및 배려사항 - 취임사 포디엄 설치 등 협의	“
2. 23	○ 여행연습	○ 여행연습
2. 23	○ 비서실장 보고 : 행사준비상황, 단상인사 배치 등	
2. 24	○ 종합연습 ○ 임기개시 타종행사	○ 임기 개시 타종행사 무대설치 등 ○ 종합연습
2. 25	○ 취임식(국회의사당) ○ 경축연회(세종문화회관) ○ 외빈만찬(영빈관)	○ 취임식 개최



인수위원회 현장 스케치

3.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2007.12.26)

당선인, 경제인 간담회 참석 (2007.12.28)

인수위 첫 업무조정 회의(2007.12.29)

새해 첫날 맞은 인수위 (2008.1.1)

교육인적자원부부터 업무보고 시작 (2008.1.2)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2008.1.3)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2008.1.3)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2008.1.5)

업무조정 회의에 열든 참석(2008.1.5)

산업자원부 업무보고 (2008.1.6)

통일부 업무보고 (2008.1.7)

한나라당-인수위 연석회의 (2008.1.7)

국정과제 1차 보고회의(2008.1.13)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2008.1.14)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2008.1.16)

만금 TF 현장설명회(2008.1.17)

당선인 간담회의 첫 참석 (2008.1.18)

당선인, 농어민단체대표 간담회 (2008.1.21)

당선인, 시도지사협의회참석 (2008.1.22)

인수위, 현장 속으로 (2008.1.22)

당선인, 한국노총 간담회 (2008.1.23)

행정실의 하루 (2008.1.24)

인수위 첫전체조회 (2008.1.25)

인수위 파견 공무원과의 오찬간담회(2008.1.28)

영어 공교육 정상화 방안공청회 (2008.1.30)

당선인, 문화예술계 원로와의 간담회 (2008.1.31)

국정과제 3차 보고회의 (2008.2.5)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공모 마감 (2008.2.5)

이명박정부 국정운영 합동워크숍 (2008.2.16~19)

정부조직법협상 타결 (2008.2.20)

인수위 해단식 (2008.2.22)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2008.2.25)

실용정부 밑그림 그리기의 대장정 시작하다

아직도 성탄 분위기에 젖어 있던 2007년 12월 2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삼청동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건물로 검정색 카니발이 들어섰다. 연수원 앞마당에 두 줄로 도열해 있던 사람들이 카니발에서 내린 이명박 제17대 대통령당선인을 맞았다.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도 차에서 내렸다.

당선인은 도열해 있던 30여명의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김형오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맹형규, 박형준 의원,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모습도 보였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들이었다.

인수위원들과 악수를 나눈 당선인은 성큼성큼 연수원 별관 입구로 걸어갔다. 인수위원들도 뒤를 따라 입구 양편으로 늘어섰다. 계단을 올라간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숙 총장과 함께 길이 1m는 족히 넘어 보이는 노란색 나무판을 들어올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란 글씨가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이었다.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은 들고 있던 현판을 건물 원편벽에 걸었다. 그동안 기업 CEO로서 또는 서울특별시 시장으로서 적지 않게 현판을 걸었을 터이지만 당선인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 같았다. 도열해 있던 인수위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현판을 건 다음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원 전원이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도열한 인수위원들의 머리 위 벽면에는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경제를 꼭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1개 특위 7개 분과로 인수위 구성

기념촬영을 마친 일행은 곧바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인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서였다. 당선인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죽 둘러보았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인수위를 이끌면서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핵심 인물들이 다 모여 있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원들이 현판식 후 박수를 치며 인수위 출범을 자축하고 있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닷새 후인 12월 25일 오후 5시에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부위원장은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전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때 1개 특위와 7개 분과 체제로 구성된 인수위 조직도 발표했다.

위원장 산하에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실무기구로 △기획조정분과(국정목표 수립, 운영기획·총괄조정, 국정과제 설정, 국정로드맵 담당) △정부문과(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담당) △외교통일안보분과(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담당) △법무행정분과(행정자치부, 법무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검찰청, 경찰청 담당) △경제Ⅰ분과(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담당) △경제Ⅱ분과(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담당) △사회교육문화분과(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담당) 등 7개 분과를 두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산하에 △정부혁신·규제개혁TF △투자유치TF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 △한반도대운하TF △새만금TF △과학비즈니스벨트TF 등 6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 밖의 기구로 당선인 자문위원단과 취임준비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등을 두기로 했다. 또 대변인실과 행정실을 두고 취임준비위원회 및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와 연계토록 했다.

슬림화와 효율성 위해 16대 대비 인력과 예산 20% 감축

당선인은 다음날인 12월 26일에 후속 인사로 인수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오후에 곧바로 현관식을 갖고 인수위원회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선인은 이경숙 위원장과 김형오 부위원장에게 이어 인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변인에는 이동관(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행정실장에는 백성운(전 경기부지사)이 임명됐다. 기획조정분과에는 맹형규(국회의원, 간사), 박형준(국회의원), 광승준(고려대 교수)을, 정무분과에는 진수희(국회의원, 간사), 남주홍(경기대 교수)을, 외교통일안보분과에는 박진(국회의원, 간사), 현인택(고려대 교수), 홍두승(서울대 교수)을, 법무행정분과에는 정동기(전 법무부 차관, 간사), 이달곤(서울대 교수)을, 경제Ⅰ분과에는 강만수(전 재정경제원 차관, 간사), 백용호(이화여대 교수), 이창용(서울대 교수)을, 경제Ⅱ분과에는 최경환(국회의원, 간사), 홍문표(국회의원), 최재덕(전 건교부차관)을, 사회교육문화분과에는 이주호(국회의원, 간사), 김대식(동서대 교수), 이봉화(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임명했다.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과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감독센터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과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공동 부위원장에, 투자유치TF 팀장에 윤진식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에 박재완 국회의원을,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 팀장에 허증수 경북대 교수를, 한반도대운하TF 팀장에 장석효 전 서울시 부시장을, 새만금TF 팀장에 강현욱 전 전북지사를, 과학비즈니스벨트TF 팀장에 민동필 서울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당선인은 이경숙 위원장과 김형오 부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잘 좀 해줘요”, “열심히 하세요”라는 당부를 연발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에 앞선 오후 2시에 인선발표를 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인수위에



현판식 후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이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성공적인 인수위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문위원단이 있어 전문성 등은 자문위원단을 통해 보충하고 인수위원은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실무형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60일간의 시한부 대장정에 들어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대 비해 20% 줄여 구성하기로 하고 후속 인선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12월 30일에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34명을 포함한 71명의 전문위원, 31일에는

정부파견 38명을 포함한 76명의 실무위원과 사무직 등 총 184명의 인수위 구성을 마쳤다.

이는 지난 16대 때에 비해 21% 감축된 숫자로, 당선인이 슬림화되고 효율성 있는 인수위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부처 파견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3배수로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 개혁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낮은 자세로 국민 섬기는 모습 보여 달라”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곧바로 2층 대회의실로 옮겨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선인은 종전까지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띄우던 것과 달리 엄숙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인수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위원들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국민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날이고, 국민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며 인수위원들이 잘해주면 국민은 차기 5년에 희망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당선인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누차 강조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인수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수위 △우선순위를 잘 가려내는 인수위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대에 맞는 변화는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로 임해 달라며 위원간 화합을 주



인수위 첫 전체회의. 인수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창조적 인수위, 행동하는 인수위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문했다. 당선인은 특히 “언론이 인수위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 하지만 잘 정제된 결과를 갖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 의견을 앞세워 국민에게 실망감을 줘선 안 된다는 점을 두 차례나 지적했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인수위 운영규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토의에 들어갔다. 정동기 간사는 “4조 1항의 ‘행정’이란 부분은 ‘법무행정’이란 말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사공일 위원장은 “국가경쟁력강화특위가 하나의 분과처럼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진 간사는 “전문위원이나 행정위원에는 인원 제한이 없느냐?”고 궁금한 사항을 묻기도 했다.

이후 당선인은 일일이 위원들을 소개했고, 비교적 편한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형오 부위원장이 “조만간 워크숍을 갖자”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8대 어젠다 선정과 인수위 운영 규정 마련

한편 인수위는 출범 다음날인 12월 27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회의를 열어 인수위 세부 운영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는 앞으로 추진할 8대 어젠다(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가 이날 내놓은 8대 어젠다는 △성장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민생경제대책 △공공 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 활성화 △교육개혁 △부동산 안정화 대책 △부패 척결방안 △청년실업 해소방안 △보육 및 노인복지대책 마련 등이었다.

인수위는 최우선 과제로 성장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민생경제 분야를 선정하고,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운영 관련 규정도 정했다. 회의는 매주 화요일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 공동 주재의 전체회의 외에 매일 오전 7시 30분 김형오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회의와 함께 수시로 각 분과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터뷰 / 이경숙 인수위원장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따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은 인수위원회 제도가 생긴 1998년 이후 첫 여성 위원장이란 타이틀을 달았다.

이경숙 위원장은 1994년 숙대 13대 총장이 된 이후 4번 연속 직선총장으로 당선돼 최장수 총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경숙 위원

장의 인선에 대해 “직선으로 네 번이나 총장을 역임한 인물로 화합 속에서 변화를 이끌 적임자이자,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점이 임명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지난 두 달 동안 1년에 맞먹는 강도로 일을 했다고 회상하고, 인수위 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사실 이번 인수위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전혀 색깔이 다른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아야 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선발된 사람들이 모두 능력 있는 분이라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감했다. 인수위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모두 소중한 존재였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자문위원들이 물의를 일으켜 인수위의 도덕성, 섬김의 정신을 훼손시켰으로써 인수위 전체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마음 아파했다. 논의 중인 과제들이 결정된 것으로 기사화되고, 오락가락했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을 때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다고 했다.

“사실보도가 아닌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나는 원망하기보다 그런 기자들도 다 우리 인수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감시자로서, 조언자로서, 비판자로서, 정책 검증자로서, 거름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세 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오히려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이 돼 주었다는 측면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명박 당선인과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경숙 위원장은 지난 두 달 동안 당선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것도 소중한 경험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사람들이 당선인에 대해 현대건설 사장 시절의 불도저적인 면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당선인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매일 변하고 있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굉장히 사색적이고 사고가 깊은 분이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되면 강하게 밀어붙인다. 또 하나는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분이다. 그리고 굉장히 소탈하다는 것인데 이 점은 그전에 나도 잘 몰랐다. 회의장에서도 자신이 직접 커피를 타다 마시는데 이것이 가식이 아니라 몸이 뻔 일상임을 알 수 있었다. 같이 있으면 대통령하고 같이 있다는 느낌보다는 가족과 같이 있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력도 대단하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목표가 뚜렷하고 가치관이 분명하다. 항상 솔선수범한다. 지도자가 모범이 돼야 국민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최고로 만들고 싶은 열정이 가득하다.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일본의 시간도 아쉽게 생각하는 행동주의자이다. 이런 대통령을 만난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인수위원장으로서는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막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경숙 위원장. 섬김 경영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해 보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경제 살리기 행보에 본격 나서다

인수위가 구성돼 정권 인수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새 정부의 제일 모토인 ‘경제살리기’ 행보에 우선 나섰다. 그 첫걸음은 12월 28일 열린 경제인과의 간담회였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LG, SK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어 새해 둘째 날인 1월 2일에는 민·관 경제연구기관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실천적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에는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며 “경제살리기 정책에는 중소기업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4대 재벌총수 참석, 취재열기 뜨거워

2008년 12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20층에 있는 경제인클럽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을 헤치고 낮익은 얼굴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안 공적인 자리, 특히 전경련 모임에 잘 얼굴을 드러내지 않던 삼성 이건희 회장과 LG 구본무 회장의 모습이 보였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도 자리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재계를 움직이는 4대 그룹의 총수가 모인 것이다. 그리고 전경련 회장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구택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21명의 재계 총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경숙 위원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강만수 경제 I 분과 간사, 최경환 경제 II 분과 간사,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의 모습도 보였다. 당선인과 재계 총수들이 경제 활성화 및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우리나라 경제계를 움직이는 재벌총수와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는 자리여서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취재진과 경호원의 몸싸움이 여러 차례 목격될 정도였다.

조금 뒤, 이명박 당선인이 간담회장에 들어섰다. 당선인은 간담회장을 돌며 재계 인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건희 회장에게는 “별일 없으십니까?”라는 인사말을 건내며 악수했고, 정

몽구 회장에게는 “여수엑스포 유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격려의 말을 건넸다. 지난해 폭력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는 “요즘 열심히 하시더라”고 관심을 표명했다. 간담회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면서 2시간 10분이나 이어졌다. 당선인이 의견을 많이 나누자며 거창한 식사보다는 도시락 식사를 제안했던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정부되겠다”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전경련을 찾아온 것은 새 정부가 기업인 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고, 온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은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새 정부를 비즈니

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기업하기 좋은)한 정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도 투명 경영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선인은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 앞으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피력



경제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 새 정부를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 정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다소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취임한다고 해서 부동산 값이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다”고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주택 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면서 부당한 개발 이익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당선인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를 기업인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치렀고 정경유착이란 단어는 없어졌다”며 서로 부담 없이 선거를 치렀기에 당당하게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설명했다. 당선인은 이어 “중소기업과의 상생도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그러한 면에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당선인에게 “기업 투자 환경 만들어 달라” 주문

앞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선만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으며,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서두를 꺼낸 뒤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시장경제원칙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도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 기업인들은 이명박 당선인의 당선 자체가 투자 분위기를 좋게 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채용규모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앞다퉀 밝혔다.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거나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담회는 마치 단합대회를 방불케 했다. 모두 기업 CEO 출신의 대통령 당선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4대 그룹을 포함한 모든 회장들이 몇 년 만에 모였으니 재계가 단합해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자.” “우리 경제 특성상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투자 확대는 대기업이 앞장서고, 투자의 성과가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골고루 가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도 힘을 쏟자.”

그러면서도 노사 평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불법적 노사분규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장애요인임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재계 총수들과 자리를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인들은 투자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투자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요청도 많았다.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가 외자유치 및 기업의 투자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추세임을 소개하고, 새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방안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칭) 설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을 수 없어”

당선인의 경제살리기 행보는 새해 1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 대표들과의 간담회와 1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로 이어졌다.

경제연구기관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당선인은 경제 활성화의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은 알지만 ‘안 된다’, ‘어렵다’라며 주저앉지 말고 길을 찾아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당선인은 2시간 가까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7% 성장을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동력을 기업이 스스로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규제개혁과 노사문제, 투자 촉진, 공공부문 개혁, 자유무역협정(FTA), 청년인력 해외 진출, 연구기술 투자문제 등 전반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했다. 당선인은 이를 진지하게 경청했다.

당선인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일자리 만들기과 서민의 주름살을 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또 “새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 정책에는 중소기업이 중심을 차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앞길을 터 나가고 경쟁력을 키우면 정부는 ‘도우미 역할’을 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올해는 중소기업들이 어깨를 펴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선인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정서가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 자세가 돼 있다면서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항 귀빈실을 기업인들에게 개방하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 것임을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 밑그림 그리기의 위명업

인수위 출범 나흘째이던 12월 29일 오후 2시, 인수위 대회의실로 인수위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인수위 발족 이후 첫 업무조정회의(워크숍)를 열기 위해서였다.

이날 이명박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화 시대의 조직으로는 21세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으로 바뀌야 한다”면서 사람과 조직을 줄이기보다는 그 기능을 조정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에 대한 도우미여야 한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은 “목표를 세우고 줄이겠다는 생각보다는 효율적인 기능과 업무를 전제로 한 조직개편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능을 조절하다 보면 시대에 맞는 조직이 된다고 “이상과 현실이 잘 조화됐으면 좋겠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



인수위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인수위의 업무방향을 논의한 첫 업무조정회의.
인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 얼굴을 익히기도 했다.

으면 어려운 만큼 이상적인 방법과 현실적인 방안을 잘 절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를 ‘실용주의 정부’로 하겠다고 표명했던 당선인으로서의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슬림화되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임을 강조한 것이다.

당선인은 특히 “정부조직 개편은 인사 및 내각 구성과도 관계가 있어 상당히 시급한 일인 만큼 우선순위를 앞쪽에 뒀으면 좋겠다”며 “가능하면 17대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화무쌍할 향후 5년, 미래 대응해 정책 만들어야”

당선인은 인수위의 활동 방향과 관련, “잘했든 못했든 5년간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파악하고 거기에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5년간이 모두 잘못됐다는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봐야 한다”면서 지난 5년보다 더 빠르고 변화무쌍할 미래 5년에 대응해 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워크숍을 통해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돼야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온다”면서 인수위원들이 짧은 기간에 5년 국정의 초석을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당선인은 “국민들이 새 정부는 효과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느냐 하는 것이 다음 정권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일할 것을 주문했다.

12월 26일의 첫 전체회의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날도 당선인은 정제된 언론 발표를 주문했다. 언론에 개인의 견해가 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서 “잘 협의해서 정제된 말이 언론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4C를 바탕으로 서민과 소외계층 먼저 챙기는 인수위 돼야

이경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는 인수위가 돼야 한다면서 “사람이 중심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사람이 주인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 마음 하나로 인수위를 꾸려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어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상징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4C’로 정리했다”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의 ‘케어(Care)’,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디빌리티(Credibility)’, 화합(협력)하자는 의미의 ‘코퍼레이션(Cooperation)’, 마지막으로 창조성을 뜻하는 ‘크리에이티

비티(Creativity)’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일하는 게 출세나 자리를 보장하는 개인영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 싶다”면서 두 달이 안되는 기간에 밤낮없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과도한 기대가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라가 바뀌겠느냐. 국민이 인내 속에 기다려 주시고, 당선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수위가 더 많은 노력을 하자”고 독려했다.

이명박정부는 “국운융성의 시대가 될 것”

한편 워크숍에서는 토론에 앞서 참석한 인수위원들이 일일이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색적인 소개와 좌우명이 쏟아졌다.

사공일 특위위원장은 군에 입대해 점호를 할 때 ‘훈병 0030468 사공일’ 하니까 ‘야, 군번이 뭐 그렇게 길어?’라고 고참이 편지를 주더라고 했다. 이름 ‘사공일’을 숫자 ‘401’로 오해한 해프닝을 소개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낸 것이다.

강현욱 새만금TF 팀장은 새만금과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전북 사람들이 자신을 ‘강만금’이라 부른다고 하며, 20년 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으로 있을 때 이 프로젝트의 대통령 재가를 받은 사실을 털어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임에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새만금사업을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해주었기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이동관 대변인은 청계천이 시작되는 곳에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1주일에 두 번 정도 청계천을 산책하면서 국민의 행복 총량을 넓혀 왔다는 것 만으로도 청계천을 복원한 분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소개했다.

이화여대 교수인 백용호 위원은 최근에 ‘섬긴다’는 단어를 평생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가정에서는 집사람도 잘 섬기고, 또 대학에서는 총장님도 잘 섬기고, 여기서는 위원장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세 분 다 여자 분들이니 아마 여자를 섬기라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말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김형오 부위원장도 “딸만 둘인데 전에 박근혜 전 대표를 모셨고, 원내대표 시절에는 전채희 정책위 의장과 함께 일했고, 이번에는 이경숙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 여성을 모시고 살 팔자인가 보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형준 위원은 최근 좌우명을 ‘외유내강’에서 ‘운철기삼’으로 바꾸었다면서 “운(運)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명박정부는 ‘국운융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의 박수를 받았다.



업무조정회의에 들어 인수위원과 악수를 나누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이 짧은 기간에 5년 국정의 초석을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새 정부의 명칭은 '이명박정부'로

워크숍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이념과 국정운영 철학,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공유하고, 앞으로 인수위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자기소개로 분위기를 돋운 다음 기초발제와 심층토론을 진행했다.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위원이 '새 정부의 철학적 기초'를 주제로 기초발제를 했으며, 광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과 강만수 경제 I 분과 간사는 각각 '국정 어젠다', '주요 공약'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민생경제대책과 정부조직 개편 등 8대 의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형준 위원의 기초발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론이 전개됐다. 1987년 체제에서 2008년 체제로 가는 과제가 뭔지 여러 의견이 제시됐고, 자유주의와 실용주의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다.

공약 관련 발제에서는 분야별로 제시된 '3대 비전, 10대 희망, 43대 과제, 92개 약속'을 토대로 당선인의 공약 총정리가 이뤄졌다. 특히 새 정부의 호칭 문제를 놓고 학술토론을 방불케 하는 토론이 벌어졌다. 호칭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개념화된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이명박정부'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명박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파워풀하다. 굳이 작위적이고 관념화된 이름을 붙일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이 쏟아졌던 것이다.

성공적 인수위 위해 노 홀리데이로 새해 첫걸음

무자년 새해 첫날은 예전과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10년 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는 해를 맞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다.

어제 떠오른 태양이나 오늘 떠오른 태양이나 같은 태양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짐이 어떠하나에 따라 그 느낌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인수위의 2008년 새해 업무는 ‘노 홀리데이(No Holiday)’ 원칙에 따라 법정공휴일인 1월 1
일 시작됐다. 새해 업무개시를 알리는 시무식은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에 열
렸으나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는 오전 일찍부터 분과위별로 회의
가 열리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국운이 융성하는 한해가 되기를

당선인도 통의동에 있는 당선인 사무실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첫해를 맞았다. 오전 8시께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은 당선인은 이경숙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 전원, 강재섭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및 당협 위원장 등 300여명과 함께 현화·분향한
뒤 방명록에 “새해에는 국운이 융성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당선인은 곧바로 한나라당 단배식이 열리는 염창동 당사로 향했다. 모처럼 ‘친정’을 찾은 당
선인은 당직자와 사무처 직원들의 환호를 받으며 연단에 올라 축사를 했다

이어 오전 10시께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이 아침 일찍부터 근무를 하고 있던 인수
위 사무실을 찾았다. 당선인은 이경숙 위원장 등과 함께 분과별 사무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근
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브리핑실을 둘러보면서 기자들에게 “불편하지 않느냐?”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고생한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200여명의 인수위 및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차기정부 출범 첫해를 맞는 각오를 다진 뒤 구내식당에서 떡국을 먹었다. 당선인은 시무식에 앞
서 무자년(戊子年)을 맞는 의미로 쥐띠 여직원으로부터 환영의 꽃다발을 받았다.

시무식에서 이경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정말 행운아”라고 말했다.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설계도를 만드는 데 역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5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이명박정부’를 벤치마킹하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기도 했다.

“소아병적, 이기적 사고 버려야”

인수위와 당선인 비서실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당선인의 연설 테마는 ‘기강확립’이었다. 연설의 첫 대목은 이명박정부 첫해맞이 소감, 끝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이었으나 당선인은 20여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시종 엄숙한 표정으로 직원들의 철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당선인은 시무식 연설에서 인수위 직원들에게 “소아병적인 발상을 버리라”고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50여일간의 인수위 활동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당선인은 먼저 “어느 소속에서 왔든 과거 경력이 어떻든 인수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이 돼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은 ‘나 자신, 소속 기관’ 보다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두 달 동안 자신을 버려라”며 자기희생을 요구했다.

또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뚜렷한 열정과 목표의식을 가진다면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인수위에 이름만 걸치면 다음에 가는 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소아병적, 이기적 발상으로는 큰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몇백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일본·중국 등 강대국의 변화와 후진국들의 폐단을 소개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타났다. 중국은 얼마 후면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허구한 날 ‘샌드위치’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된다”고 자신했다.

당선인은 또 1980년대 경제 불황을 겪던 미국의 한 업체가 직원들이 쓸데없이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실 문의 위, 아래를 잘랐다는 일화를 소개한 뒤 “적당히 하루를 보내려면 하루 쉰 것만 못하다”며 업무집중을 독려했다.



노 홀리데이 인수위.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새해 첫날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이 출근해 근무를 하고 있던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당선인은 시무식에 앞서 무자년 쥐띠 해를 맞는 의미로 쥐띠 여직원(투자유치TF, 국정홍보처 파견)으로부터 환영의 꽃다발을 받았다.

이밖에 당선인은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고들 말도 많이 하고 문서도 그렇게 만드는데 정작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다면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이 만드는 서류에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무식은 다소 무거운 연설로 인해 엄숙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당선인이 강조하는 ‘탈(脫) 권위주의’를 엿볼 수 있었다. 당초 시무

식장 연단에는 당선인과 위원장 등의 좌석이 마련됐으나 당선인은 미리 행사장을 둘러본 뒤 “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또 시무식장이 좁아 일부 직원들이 뒤쪽에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을 본 뒤 “내가 뒤로 좀 가서 하겠다. 또 줄서지 말고 앞으로 좀 나오고 옆에도 자유롭게 서세요”라면서 “아예 내가 안으로 들어갈까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당선인은 연설 후 분위기가 딱딱해지자 “정초부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서 미안하다”면서 직원들을 행사장 양쪽으로 갈라서게 한 뒤 서로 신년인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자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와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오픈

인수위는 이날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http://17insu.or.kr>)를 오픈했다. 인수위 홈페이지는 인수위 관련 소식을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늘색을 배경으로 초기화면에서 손쉽게 각 분야 정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디자인됐다.

홈페이지는 ‘인수위 길라잡이’와 ‘인수위 하루’, ‘인수위 알림마당’, ‘미디어스크랩’, ‘국민 성공정책제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각종 인수위 관련 정보와 함께 국민성공정책제안 코너를 설치해 다양한 정책을 직접 인수위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 내 별도기구인 국민성공제안센터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뒤 인수위 각 분과별로 배당해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도록 할 예정이었다. 무고 같은 네거티브 방지를 위해 실명으로만 제안을 받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인수위 길라잡이’는 인수위원장 인사말과 조직도 등을 소개하고 ‘인수위 하루’는 간사단과 각 분과의 일정 등을 공개하는 역할을 했다. ‘인수위 알림마당’에는 대변인 브리핑과 보도 자료를 올려 인수위 활동내용과 성과를 국민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정숙 인수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인수위는 국민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가 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 다 함께 열어가자”

당선인은 ‘2008년 신년사’를 통해 “이제 나라의 모든 부분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낡은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미래와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세계일류국가 만들기에 나서자고 말했다.

당선인은 “이 길에 앞장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또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원칙을 무시하기도 하는 폐습을 그대로 안고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면서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으며 가정에서부터 학교, 기업, 노동자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치도 원칙을 지켜야 하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려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인데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금 형편이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지만 분명히 바른 길(正道)이 있으니 마음을 다잡고 신발끈을 조여 매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당선인은 “저와 새로 들어설 정부부터 솔선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치권도 변하고 기업도 변할 것”이라면서 “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넘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사무식 연설에서 인수위 직원들에게 “소아병적인 발상을 버리라”고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인수위 활동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첫 업무보고라는 부담감과 긴장감 곳곳에

1월 2일 오후 2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가 시작된 삼청동 소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층 국제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48개 정부부처 중 첫 업무보고인데다 인수위가 사전에 업무보고 7대 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에 보낸 만큼 간간한 업무보고가 될 것이 감지되어온 터였기 때문이었다. 7대 지침은 ① 각 부처의 기능·연혁·기구·정원·예산 등 일반 현황 ② 노무현정부에서 실행한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③ 5건 이내 당면 현안 사항의 추진 경과·필요성·문제점 ④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 ⑤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방안 ⑥ 예산 10% 절감 방안 ⑦ 산하기관 합리화 방안이었다.

특히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교육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교육인적자원부가 개혁의 타깃으로 분류돼 왔다는 점에서 긴장의 정도는 더한 듯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확실한 군기잡기 차원에서 ‘시범케이스’로 교육부를 첫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맞춤형, 슬림화된 업무보고 지향

인수위는 지난해 12월 31일 가진 2차 전체회의에서 새해 1월 2일부터 진행할 각 부처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지 중점 논의했다. “업무보고로 행정공백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군기잡기식 보고’를 지양하고 ‘맞춤형 보고’를 지향하겠다”는 것이 이날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내에 업무보고를 끝내기로 했다.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을 책임자로 해서 핵심 국장과 일부 과장만 참석하는 슬림화된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고시간도 종전에는 하루 종일 걸렸지만 가능하면 단축해서 몇 시간 안에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경숙 위원장은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업무보고부터 패러다임을 바꾸자”며 최대한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김형오 부위원장도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점검하며 보고를 준비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간부들. 인수위는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장·차관보다는 실·국장급이 참석하도록 했다.

“5년 동안 진행됐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보고받는 게 아니라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고가 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1월 2일 아침에 열린 간사단회의에서도 이경숙 위원장이 형식·외형적인 것에 치우침 없이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업무를 챙기고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지만 말과 태도는 상당히 공손하게,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임해 주실 줄 믿는다”고 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상호간에 우리가 원했던 기준을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꼼꼼히 챙겨 보시면서 형식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역대 인수위들의 활동 내용을 읽어 보니까 열심히 했지만 형식으로 흐른 것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첫 업무보고 시작되다

이러한 업무보고 지침에 따라 인수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장·차관 대신 핵심 실·국장 위주로 참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김경희 정책홍보관리실장, 심은석 교육과정정책관,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관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서는 사회교육문화분과 이주호 간사와 김대식, 이봉화 위원이 참석했고,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법무행정분과 이달곤 위원까지 나와 첫 업무보고에 쏠린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찌감치 회의장에 나와,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서류를 챙기며 준비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인수위원들이 하나둘 도착할 때마다 책상 위에 보고문건이 놓여졌고, 인수위원들도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문건을 넘겨보면서 첫 보고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었다.

당초 이경숙 위원장이 나와 첫 업무보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업무보고에 임하는 태도를 다잡으려 했으나 같은 시각 당선인이 주관하는 민·관 경제연구기관 대표 간담회에 참석하느라 정시에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

분과위 간사인 이주호 위원은 이 위원장의 참석이 늦어지자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수위 양측 참석 인사를 한명씩 소개하면서 박수를 유도했지만 경직된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주호 간사는 중앙정부 중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됐다면서 “교육이 국가의 미래인 만큼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의 중요성이 막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처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이고 “모범적인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짧은 모두발언을 한 뒤 회의를 비공개로 돌렸다.

인수위는 회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보안에도 상당히 신경을 쏟는 표정이었다. 사전에 회의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던 통상 회의와 달리 위원들이 착석한 이후에야 자료를 배포했다. 또 문건 위에 숫자를 표시해둬 자료가 없어질 경우 유출자 색출이 용이토록 했고, 그나마 배포된 자료도 보고가 끝난 후 회수하겠다고 미리 설명을 하는 등 기밀 단속에 매우 신경을 썼다. 당시 인수위 활동에 대한 언론의 추측보도와 내부 실무자끼리의 논의사항이 여과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대한 당선인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책임 회피성, 자화자찬형 보고에 질책 쏟아져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는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사람과 정 책기조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 자리였다.

이날 업무보고의 핵심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기능개편과 당선인의 공약실천 방향 등 두 가지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먼저 업무보고를 한 뒤 인수위측이 던지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2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16대 인수위 때 진행한 부처의 업무보고가 하루 종일 걸렸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짧은 업무보고라 할 수 있었다. 불필요하게 장시간 보고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행정공백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보고하라는 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는 ‘간간한’ 보고를 공언한 인수위의 방침을 감안한 듯 기존 정책의 연



인수위의 첫 업무보고인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 장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및 조직축소와 수능등급제 개선,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속성을 일정정도 유지하면서도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최대한 맞춘 듯한 안을 보고했다. 그로 인해 상당부분 퇴짜를 맞거나 ‘책임 회피성’이라는 이유로 호된 질책이 있었다.

특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고려사항’, ‘선결과제’라는 용어를 끼워 넣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성 평가도 인수위의 질타를 피할 수 없었다. 또 ‘과감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등 구체성이 결여된 표현이 많아 집행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쓴 소리도 들어야 했다.

일례로 초중등 교원의 임용권한 이양에 대해 “교원단체, 노조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이고, 특목고 설립지정권한 이행에 대해 ‘과열진학경쟁 방지대책 필요’라는 전제를 달았다가 인수위로부터 “전제조건을 달아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미뤄선 안 된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대학의 학생정원 관련 권한이양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교육여건 확보 필요”라는 선결조건을 다는 바람에 “당선인이 ‘혼을 담아 내 자신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실용적 국정운영 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능등급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3월에 여론수렴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가 “현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데 새 정부가 출범한 후인 3월에 보고한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너무나 안이한 보고 아니냐?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2월초까지 결론을 내려 보고해 달라”고 요구받기도 했다.

150개 기숙형 공립학교, 50개 마이스터교 등 이른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약을 되풀이할 뿐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의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핀잔을

감수해야 했다.

결국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 이양문제에 관한 중앙부처는 가급적 머리 역할을 하고 수족기능은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라”는 주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공무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동시에 과거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달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고객지향적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참여정부 교육정책 수행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참석자는 “참여정부의 이념지향적 정책운용 때문에 이해갈등 조정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분권과 자율을 추진했으나 학생, 학부모의 체감이 낮았다. 특목고의 대입제도에 대해 정부의 통제가 심했고 공교육 신뢰가 부족했다”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인수위의 질타가 이어지자 “문제점과 시행착오도 있지만 고민과 고뇌에 찬 가슴으로 만든 업무보고서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사회교육문화분과 이주호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는 그동안 10년 이상 지속돼온 관치관행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힘든 점을 감안해도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평했다.

한편 인수위는 1월 2일에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1월 3일에 국무총리실, 중앙인사위원회,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법제처, 1월 4일에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농림부, 여성가족부, 1월 5일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부, 1월 6일에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조달청, 1월 7일에 청와대, 통일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1월 8일에 감사원, 국방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방위사업청, 병무청, 문화재청, 국가청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인터뷰 /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는데 매진

한나라당 비례대표 초선의원인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분과의 관할 업무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며 입을 열었다.

“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복지·문화·노동·여성·환경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짧은 기간과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다루는데 한계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했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정부조직을 개편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주호 간사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융합해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첫걸음을 내딛은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점이 앞으로도 현장에서 조화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우리 교육에서 풀리지 않았던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 자평했다.

이슈인 점이 있는지 묻자, 더 넓은 분야에 대해 더 많은 분들과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설명 기회가 충분히 없고, 언론을 통해 일부 잘못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된 경우가 있었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이 그랬다며 인수위의 본래 취지가 잘못 전달돼 생겨난 몇 가지 문제점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는 김대식 위원과 이봉화 위원이 각각 분야를 나눠 맡아 짐을 상당히 덜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교육 분야에 좀더 매진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교육부 조직과 기능 개편, 대학 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 등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을 새 정부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세운 것이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정부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1월 2일 업무보고를 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인수위 출범 후 새해 휴일도 반납하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느라 고생한 인수위와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더군다나 여러 민감한 정책들이 산적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관련자들 또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고 소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및 조직축소와 관련해 각종 규제정책의 지방이양을 포함해 수능등급제 개선,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 이후 개별 세부 주제별로 10여 차례 이상 추가업무협의를 거쳐 부처개편과 국정과제 수립에 들어갈 내용으로 다듬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과 약속한 부분을 실행해 옮기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섬김’과 ‘실용’으로 ‘살기 좋은 나라’의 길찾기

새해를 맞은 희망과 설렘이 채 가라앉지 않은 1월 3일 오전 9시 55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삼성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회의실에서는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경숙 위원장을 비롯해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그리고 국무총리실 보고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언론사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폭죽놀이하듯 현란하게 터졌다. 비공개 회의인 탓에 사진 촬영이 있는 후 기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장내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다. 마주하고 앉은 인수위원들과 보고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복싱경기에서 공이 울리기 전 두 선수가 기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지나칠까?

전날 첫번째 업무보고인 교육인적자원부 보고에서 공무원들의 방어논리에 대해 인수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에 또 다른 결전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아니면 오래 전에 경험했던 국정감사장의 고압적 분위기를 떠올린 것은 아니었을까?

인수위에서는 이미 정부기능의 통폐합과 축소를 여러 차례 천명했다. 교육부가 그 ‘0’ 순위란 말이 난무했기에 전날의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는 공격과 방어의 논리가 작용했을 터였다. 국무총리실의 비대화 지적도 누누이 있어왔기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견됐던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겐 ‘보신주의’, ‘철밥통’이란 어휘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공무원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고 방어자세를 취할 것은 당연한 예상이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보고가 시작되고

팽팽한 긴장감과는 달리 보고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새 정부의 기본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이경숙 위원장의 인사말에서 폭풍의 전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진수희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원 소개와 박철곤 국무조정실 기획관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보고자 소개가 끝난 뒤에 이어진 진수희 간사의 모두발언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미리 받은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핵심사항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하다”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장면. 이 자리에서 대통령 비서실과의 업무중복과 국무총리실 조직 비대화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는 발언에 차분하던 장내 분위기가 일순 무거워졌다.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대해 일반국민보다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대목은 폭풍전야로 여겨졌다. 보고내용이 충실하지만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묻어난다는 말은 선전포고로 들렸다. 그러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애국심으로 좋은 방안을 찾는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는 마무리 발언에서 잠시 분위기가 안정을 되찾았다.

진수희 간사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보고가 시작됐다. 박철곤 기획관은 미리 배포한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국무총리실의 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평가, 당면 현안, 당선인 공약 실천계획, 예산 10% 절감 및 활용 방안, 소관 규제완화 방안, 산하기관 합리화 방안 등을 차분히 보고했다.

진수희 간사의 모두발언에서 지적됐던 현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고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수성의 의지가 곳곳에서 묻어났다. 물론 주기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거나,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미흡했다는 반성도 있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7~8조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러나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의 조직과 권한 비대화에 대한 처방전은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원들의 가열찬 반격이 예상됐다.

국무총리실 조직과 기능 비대화 지적

국무총리실의 보고가 끝나자 진수희 간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동안 총리실이 너무 많은 권한으로 부처 위에 군림한 것은 아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의 업무 중복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인력이 늘었는데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것인지도 궁금하다. 이러한 문제제기 관점에서 국무총리실의 적절한 권한과 업무, 조직규모가 어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적은 날카로웠다. 박철곤 기획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어떻게 반격할 것인지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당당한 반격은 없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조직으로서 부처가 하기 힘든 일, 청와대가 하기 어중간한 일을 위임받아 하다 보니 업무와 인원이 늘어났다. 다음 정부가 대통령과 총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업무량이 많아 새벽에 퇴근하기 일쑤지만 성과 발표는 해당부처나 청와대서 하기 때문에 생색도 나지 않는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는 청와대 하청업자에 불과하다.”

의외의 발언이었다. 그런데 반응도 의외였다. ‘청와대의 하청업자’라는 자조적인 발언에도 위원들의 공격이나 질책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고위공무원이 그런 패배주의적인 자세로 일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둡다’라는 정도의 질책은 나올 법도 했다.

어찌 보면 김빠진 자리였다. 씨름장에서도 같은 소속사 선수끼리 싸우더라도 한치 양보가 없는데 그야말로 ‘이건 아니잖아’였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터였다. 여당의 당정협의회 자리라 함이 오히려 적합할 정도였다.

강한 방어와 질타는 보이지 않아

그 이유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수록 서서히 드러났다. 조직 비대화에 대해 총리비서실 국장이 지난 10년간 자리가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하자 진수희 간사가 차단하고 나섰다. “여기는 국정감사 자리가 아니다. 하나하나 방어하려 하지 말고 생산적 조직을 만들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대답하라”고 지적했다.

이경숙 위원장도 거들었다. “새 정부의 모토는 국민을 섬기는 국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그 선봉에 서야 한다. 이런 공감대로 가슴을 열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남주홍 위원도 한마디했다. “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의 지적은 총리실이 옥상옥이 돼버렸고, 너무 비대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날의 행정조정실은 코디 역할을 잘했다. 옛날 서류를 들춰보고 당시를 벤치마킹하면 국무총리실이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

새정부 예산절감 지침 마련에 보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감사원 등 정부의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인수를 담당하는 정무분과의 진수희 간사.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성 의원으로서 처음 간사를 맡았을 때에는 여러모로 부담을 가졌음을 숨기지 않았다. 정무분과 소관 기관들은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작지만 유능하고 효율적인 실용정부를

만들어나갈 핵심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조직과 구성, 그리고 향후 운영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무분과 간사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각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당의 정책, 전문가들의 견해를 검토하며 분과 내부토론을 거쳤다. 그런 다음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각 부처가 나아갈 기본방향을 확정해 국정과제로 도출해내어 이명박정부의 성공적 출발을 뒷받침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1월 3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매우 의미가 깊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바람직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총리와 내각의 관계, 이에 근거한 국무총리의 역할,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국무총리실의 조직과 운영방향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국무총리실은 업무보고 당시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 진수희 간사의 평가였다. 대통령의 국정보좌와 관련해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이 총리에 따라 유동적이고, 그에 따라 총리실의 업무성과와 위상도 가변적이었던 점을 인정했지만, 현재의 조직이나 인력, 소관업무의 개편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업무보고 후 분과의 내부 결론은 국무총리의 보좌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총리실, 기능 중복이 없고 효율적인 총리실, 그리고 규제개혁, 사회갈등·위험의 관리 등 개별 부처가 맡기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총리실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초하에 몇 가지 제안을 정부혁신·규제개혁TF에 전달했으며,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정무분과 간사로서 두 달 동안 일한 가장 큰 보람은 당선인이 1월 13일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지시한 “감사원의 2~3년간 예산중복 집행 및 낭비에 대한 지적을 참고해 예산절감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회계검사의 내실화 및 이를 통한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정무분과가 잡고 있던 기본 방향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즉시 지난 5년간 감사원이 예산낭비와 관련해 지적한 사례 분석에 들어갔고, 총 8,004건 가운데 각 부처에서 공통·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사례 200여건을 종합 분석해 예산낭비 사례지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이라는 한 권의 책을 만들어냈다. 이 책은 앞으로 당선인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10% 예산절감’을 위한 준칙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누구의 발언도 질타하거나 질책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충고요 조언이었다. 1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 보고 때와 같은 분위기를 예견했으나 한참 빗나갔다. 그제야 인수위에서 부처 업무보고 입장을 읽을 수 있었다. ‘섬김’과 ‘실용’이란 이명박 정부의 담론이 인수위 보고석상에서도 도도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국무총리실 간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미흡했다는 반성을 표명하기도 했다.

‘섬김’과 ‘실용’으로 미래 방향 찾으려는 노력 돋보여

인수위 발족 후의 각종 인터뷰나 브리핑에서 그런 기조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2007년 12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그런 자세를 밝힌 바 있었다.

“앞으로 새 정부는 섬기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동기를 부여해 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임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모 기업의 CEO가 ‘섬김경영’으로 고질적인 노사분규 사업장을 무분규 사업장으로 변모시켰던 사례를 떠올리게 했다.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고 섬기고 받들겠다고 하는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12월 31일의 제2차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실용을 강조했다.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때 각 부처의 행정 공백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무자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요 인원만 참석해 진행하기로 했다. 군기잡기식 보고를 지양하고 맞춤형 보고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보고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 국무총리실 간부들의 표정은 밝았다. 막연한 두려움을 씻어냈기 때문일까? 능력을 중시하는 새 정부에서는 맘껏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일까?

한편 정부분과는 1월 5일 국가정보원, 1월 8일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1월 7일로 예정돼 있던 청와대 업무보고가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창과 방패의 치열한 논리 싸움

국정보고 둘째 날인 1월 3일, 국정홍보처 업무보고가 열리는 삼청동 소재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대회의실은 아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다른 부처와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국정홍보처 폐지를 밝힌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정권과 대통령 홍보에만 초점을 두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신문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렇기에 국정홍보처는 어떡해서든 국정홍보처가 존치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고, 인수위는 국정홍보처의 잘잘못을 따지며 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할 것이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추구할 '알뜰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논의 자체가 뒤로 밀릴 수도 있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모습보다는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가는 재판장을 연상하는 편이 나올지도 몰랐다.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에 쏠린 귀와 눈

이런 분위기를 예고하듯 10시에 시작될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보고회장에 미리 입장한 국정홍보처 관계자들의 표정은 어둡고 굳어 있었다. 실무적인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실·국장 위주로 참석하라는 인수위의 지침에 따라 김희범 정책홍보실장 직무대리(홍보분석담당관), 서강수 콘텐츠운영단장, 조신 홍보관리관, 이철화 혁신기획관, 김진호 방송제작기획관 등 9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으로 기자실에 대못질을 해 원성을 산 국정홍보처장과 차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들이 초조히 개회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10시가 가까워오자 인수위 참석자들이 하나둘 보고회장으로 들어섰다. 보고회를 주관하는 법무행정분과 정동기 간사를 비롯해 이달곤 인수위원과 분과 소속의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모습이 보였다. 기획조정분과의 맹형규 간사와 박형준 인수위원도 자리를 했다.

이날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언론의 관심은 단연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에 쏠렸다.



업무보고회장에 참석한 국정홍보처 간부들. 국정홍보처는 쟁점이었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마련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인수위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분과 핵심자가 참석했다는 것만 보아도 인수위가 그 어느 부처보다 국정홍보처의 업무보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엿볼 수 있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보병을 지원하기 위해 포병부대가 합세한 것과 같다고나 할까.

“이제 관제홍보 시대는 끝났다”

보고회를 주재할 김형오 부위원장이 자리에 앉자 사회를 맡은 정동기 간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정동기 간사가 입을 열어 무거운 침묵을 깼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성과와 반성,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및 공약사항 실천계획 등을 진술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모쪼록 오늘 업무보고가 국정홍보처의 기능과 역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봉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어 김형오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도 이날의 업무보고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사실 국정홍보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동안 언론과 국민에게 활동사항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홍보처의 취재지원 선

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한 것이자, 인수위로서 없어질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냉소적인 발언이었다. 그런 다음 김 부위원장은 “관제홍보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못 박으며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언론의 자유가 피어나는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폐지하려면 문화관광부로 기능 이관하라”

취재기자들이 퇴장하고 비공개로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국정홍보처의 김희범 정책홍보실장 직무대리가 배포한 A4용지 15쪽 분량의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지난 5년간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공약 실천계획(국정홍보처 폐지, 한국정책방송 폐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개선)의 두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1998년 공보처 부활론의 배경과 교훈을 적시하며 “국정홍보처 때리기는 정부정책 홍보에 대한 진정성을 훼손하는 자충수로 작용해 1999년 홍보처 신설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국정홍보처 폐지 방안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첫째는 현행대로 존속시키는 방안이었다. 그 논거로 범정부적인 홍보협력 및 조율의 필요성을 들었다. 보고를 듣는 인수위 참석자들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었다. 보고는 계속 이어졌다.

둘째로 제시한 안은 문화관광부와 통합하되, 현 수준의 국정홍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대신 국무조정실로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홍보기능 분산시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 홍보 구현 한계, 국내외 연계 홍보 차질’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정책방송(K-TV)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영상기록 보존 관리 불가능과 민영화시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존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마련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방향은 옳았으나 언론의 반발로 본질이 퇴색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거나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현장. 대선공약에 국정홍보처 폐지가 들어 있었던 터라 인수위와 국정홍보처간의 팽팽한 기 싸움이 전개됐다.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돼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관제홍보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무색하게 했다. 한마디로 국정홍보 시스템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조직방어 논리로 일관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조직방어 논리에 매몰됐다”

뒤이은 질의·응답에서 포연이 자욱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했다. 첫 질의자로 맹형규 간사가 나섰다. 예상과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맹형규 간사는 “국회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국정홍보처에 대해서는 할 얘기를 해야겠다”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반성은 별로 없고 자화자찬만 있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질의자들도 “자료준비가 부족하고 내부적 반성이 필요하다”, “방어논리가 아닌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 “홍보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홍보의 기능에 대한 관료와 정부 중심의 구태적 인식을 버리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언론과 다른 정부 부처들을 대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과 쓴소리를 쏟아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의 브리핑에서 이동관 대변인이 “조곤조곤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이 오갔다”고 밝혔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서로 자신들의 논리를 굽히지 않으며 첨예한 설전이 오갔다.

인수위가 “대통령과 정권의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며 강하게 몰아세웠지만 국정홍보처도 지지 않고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국정홍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회의 내내 팽팽한 긴장과 대립이 이어졌다. 또 “우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라거나 “공화국은 바뀌어도 관료는 영원하다”, “정부조직법상 언론기능이 없는 가장 약한 조직이 질타를 받는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부처 폐지 주장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의 반발과 논란을 야기해 취지가 퇴색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취재 시스템 마련은 시대적 필요”라고 항변했다. 국정홍보처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5년을 주기로 존폐가 거론되는 것은 국정과 정책홍보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된다”고 맞받기도 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의 비판은 혹독했다. 위원들은 “국정홍보처 답변이 국정홍보 시스템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조직방어 논리에 매몰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팽팽한 존치논리로 말쑥했던 국정홍보처.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서 폐지되고 국정홍보 기능만 문화관광체육부로 이관되어 하나의 국으로 살아남았다.



인터뷰 / 정동기 법무행정분과 간사

통합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

법무부 차관 퇴임 한 달 만에 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에 임명된 정동기 간사는 임명장 수여식 당일 인수위원 임명사실을 통보받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업무에 임했다. 그런 까닭에 백지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선인의 말씀대로 백지 위에 창조적인 인수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당선인께서는 또 최종 보고서에는 영혼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래서 우선 법무행정분과의 전문위원, 실무위원, 자문위원들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업무에는 사적인 이해관계나 자신이 속한 기관의 이익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지시켰다고 한다.

“저 스스로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위원들의 처신이 자칫 인수위의 위상이나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스스로 술선수범해 일체의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두 달 동안의 인수위 활동 중에서 인수위 출범 전후에 발생한 태안선박 유류유출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송례문 화재사고 등 엄청난 재난을 계기로 그동안 발생한 재해와 대형사고를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해 통합적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낸 것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국정홍보의 방향성’과 소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패키지’가 쟁점이었다며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국정홍보처는 참여정부하에서 정권홍보, 대통령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온 부처여서 인수위에서 국정홍보 기능의 개선방향을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인수위원 모두 ‘국정홍보 기능’은 매우 중요하고,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다만 과거의 일방적 홍보를 탈피하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을 섬긴다’는 홍보의 기본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인식변화와 함께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책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면서 정부부처의 홍보에 대한 사전협의와 조정기능 등은 폐지하고 기타 주요한 기능은 문화관광부로서 이관해 실질적인 국정홍보 기능만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았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폐지키로 하되, 취재 접근권 강화와 언론의 취재편의 제고 방향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정부조직 개편 후속작업으로 인한 청사 재배치 등과 맞물려 추진함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결과 인수위원이 모두가 공감한 사실은 정부 부처는 부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부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새롭게 들어설 새 정부의 조직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출총제 폐지해 투자활성화 도모하자”

‘금산분리’와 함께 재계와 시민단체 간 해묵은 논쟁의 화두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로 표기) 폐지가 핫이슈로 떠오른 시기에 열리는 경제 I분과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는 여타 부처의 업무보고 못지 않게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출총제의 폐지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대선에 승리하면서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출총제 폐지와 기업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당선인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기조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그런 상황에서 출총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 업무보고가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이를 전 ‘폐지’가 대선공약이었던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에서 국정홍보처가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을 지켜봤기에 공정거래위 업무보고 자리가 묘한 스틸감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현장. 이날의 관심은 출총제 폐지에 모아졌다. 공정거래위는 당선인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출총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출충제는 간접적인 상호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기업의 확장을 억제하고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예방해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로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 때 도입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해외 자본들의 시도가 늘면서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8년 2월 폐지됐으나 경제력집중 문제가 제기돼 이듬해 말 다시 부활되는 우여곡절을 거쳤다.

이후에도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투자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악성 규제의 표본이라며 출충제를 비난해왔고, 수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예외규정도 많아지는 등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인수위는 출충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공정거래위 업무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는 그동안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을 깨는 부드러운 분위기

그랬기에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처럼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서도 공정거래위와 인수위의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의 업무보고는 처음부터 예상을 빗나가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의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삼청동에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수위에서는 주무분과인 경제 I 분과의 강만수 간사를 비롯해 백용호 위원, 이창용 위원, 조원동 전문위원, 장수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다른 업무보고에 들렀다가 뒤늦게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에서는 이동규 사무처장을 비롯해 이동훈 기업협력단장, 한철수 시장분석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이틀 전에 열렸던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현장이 동영상을 보고 있듯이 생생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은 전혀 오버랩되지 않았다.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현장이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재판장 같았던 데 비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은 정부부처 간의 업무협의 자리처럼 분위기가 부드러웠다.

왜 그랬을까?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풀렸다. 우선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강만수 인수위 경제 I 분과 간사의 태도에서 감지됐다.

강 간사는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도록 해서 미안하다”면서 지금까지 공정거래위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일을 했고 사회적 기여도 많았다고 격려했다. 그 정도야 격식을 갖추기 위한 의례적인 인사말로 들릴 수도 있었다.

“우리는 기존 5년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 선택된 대통령과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받는 입장이다. 헌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신분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이명박정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은 이명박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우리 공약의 현실적인 타당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며 인수를 받는 것이지 기존 정책을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다.”

강만수 간사의 말을 듣자 그제야 전날 간사단 회의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공무원들에게 인격적 예우를 하면서 내용 파악에 충실해 달라.”

강만수 간사는 이러한 이경숙 위원장의 발언을 의식한 것 같았다. 괜히 굵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을 터였다. 특히 강만수 간사는 인수위가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을 뜯어 고치려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상치되는 것은 상처되는 대로, 일치되는 것은 일치되는 대로 나가면 된다”면서 “오해 없기를 바란다. 정치적 심판이 끝난 것이니 국민의 지지를 받은 공약이 잘 시행되도록 이야기를 나눠 달라”고 당부했다.

1월 2일에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나 1월 3일에 열린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에서 “안이하다”, “기대에 못 미친다”며 호되게 질타해 ‘군기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돌았던 것에 비해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이었다.

출총제 폐지에 이심전심

이 뿐만 아니었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공정거래위의 보고도 전혀 전의를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가 원하는 모범답안을 갖고 나왔던 것이다.

공정거래위 이동규 사무처장이 발표에 앞서 인사말에서 눈치챌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가 그동안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해 온 일을 보고 드리고 또 답변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정거래위가 하는 일이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안이 당선인의 공약과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정책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이날의 업무보고는 출총제 폐지 등 인수위의 뜻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함으로써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인터뷰 / 강만수 경제 I 분과 간사

경제 살리기 의밀그림 그리기에 주력

김영삼 정부시절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거쳐 재정경제원 차관에게까지 오르며 금융과 세제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거쳤던 강만수 경제 I 분과 간사는 10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핵심공약인 '경제 살리기' 의 밀그림을 그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경제 I 분과 간사를 맡으면서 10년

전 첫 인수위원회가 조직돼 활동될 당시 정부부처에 몸담았던 관료 출신으로서 경제 I 분과와 현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인수위의 책임과 역할의 한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피력했다.

"60일 이후 출범할 새로운 정부의 내각에 공약을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활동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현 정부의 내각과 소속 공무원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 현 정부의 내각은 현 정부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공무원은 새로운 정부와 함께 할 동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I 분과의 역할은 공약의 내용을 실천 가능한 상태로 구체화하는데 두고 현 정부 공무원과의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현 정부 공무원에게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비전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쌍방향 대화과정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경제 분야 소관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며 508개에 달하는 대선공약을 구체화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었으나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실천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를 구체화해 새 정부 내각 활동의 지침을 마련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요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개별 공약과제 실천의 여건 등을 점검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그 후 부문별로 자문위원회, 전문가 등과 함께 공약 실천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연구원장, 금융 및 경제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도 수차례 개최했다. 과제 하나 하나가 소중했다. 주어진 시간 내에 휴일과 밤낮없이 일함으로써 국정과제 추진 추진방향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새 정부의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규제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최고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특히 출총제 등 그동안 기업의 경영행위를 제약하고 있으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관련 공약의 핵심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들 규제의 폐지에 대해 인수위와 공정거래위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폐지에 따른 보완 방안 필요성과 그 보완방안의 내용에 대해 다소 의견차가 있었다. 그간 대기업이 보여준 문어발식 확장경영 행태와 소액주주의 보호 필요성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강만수 간사는 업무보고 및 그 후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출총제 폐지와 함께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시 사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국정과제를 정리했다"면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이에 따른 보완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 업무보고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미 인수위가 원하는 답을 갖고 나왔다는 뜻이 분명했다. 덕분에 이날 보고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와는 전혀 판판이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공정거래위는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 보다 기업의 자율과 시장의 기능에 의해 시정될 수 있도록 사후감시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측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출총제의 폐지와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총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필요할 때의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부채비율 200% 제한 및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보유금지 등을 폐지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 지원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 경제를 챙기는 차원에서 유통,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다수·집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한 최근 급신장한 다단계업과 관련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자리를 마무리했다.

“한국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인수위 업무조정회의는 인수위원들이 모여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자리이다. 1월 5일, 인수위 발족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업무조정회의에는 낯선 이방인이 눈에 띄었다.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사공일 위원장 옆에 앉은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엘든(David Gordon Eldon).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수위 명단이 발표될 때부터 관심을 끌었던 엘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인 금융 전문가이다. 당시 직함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 벽안의 외국인이 인수위에 합류한 것도 유례없는 일이지만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역점사업을 다룰 특별기구의 공동수장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인인 엘든은 37년을 국제금융계에서 보낸 국제금융맨으로 통했다. 2005년 5월 HSBC 회장에서 은퇴한 후 DIFCA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37년 국제금융 경험으로 한국에 기여할 것”

이날 엘든 공동위원장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지난 수년간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 왔지만 잠재력만큼 발휘하지 못한 한국에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며 인수위에 참여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보다 글로벌한 환경에 대해 조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의욕을 나타냈다.

엘든 공동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께서 인수위 참여를 요청하셨을 때 상당한 영광이라 생각했다. 한국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라며 처음 제의받았을 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자문해봤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37년 동안 금융계에 몸담아 오면서,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녔던 국제적 경험들이 글로벌 시장과 국제금융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업무조정회의에 참석한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HSBC 회장에서 은퇴한 후 DIFCA회장으로 있는 그는 37년을 국제금융계에서 보낸 국제금융맨으로 통한다.

엘든 공동위원장은 또 2001년 2월에 서울국제경제자문회의에 참여해서 서울과 국제 재계가 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당시 서울시장으로 있던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세계적 금융그룹인 HSBC의 회장이던 엘든 위원장은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세계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학자들을 초빙해 구성한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의 의장이었다.

그는 “당시 이 시장을 보면서 상당한 비전과 추진력이 있는 분이고, 열린 세계관을 가진 분이란 것도 느꼈다”며 “이 시장을 한국 국민들이 활용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엘든 공동위원장의 인수위 합류를 축하하면서 ‘귀중한 손님이 아니라 식구라’고 그를 소개하고 “국제적인 경험과 명성이 높아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주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규제중복이 문제, 두바이처럼 풀어야”

푸른 눈의 은발 신사인 엘든 위원장은 방한기간 동안 언론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외국인이 인수위 요직에 발탁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당선인의 역점 사업을 다룰 특별기구의 공동 수장을 맡았기 때문이었다.

그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공동위원장 선정 당시 홍콩에 머물고 있던 그가 방한하자 기자들이 공항에서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1월 6일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200여 명의 내외신 기자가 취재경쟁을 벌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엘튼 공동위원장은 “해외의 성공적인 금융센터의 경우 단일화된 규제와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있다”면서 “한국은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가 중복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이 국제금융특별지구를 설립한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강조한 뒤 “두 바이의 경험에서 가장 좋았던 정책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대운하와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와 관련해 아직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개인적 경험에서 보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이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외국인투자자가 접촉해오고 관심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투자의향을 밝힌 해외투자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환경이 얼마나 개방되고 투명한가, 법과 경쟁원칙이 공정한가 등을 고려한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아직 한국이 그런 여건을 갖췄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엘튼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공일. 사공일 공동위원장은 엘튼 공동위원장이 해외에 거주하며 우리나라 투자유치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가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해외투자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내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개방경제를 표방하는 이명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대선 결과는 한국인의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엘튼 공동위원장은 1월 4일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및 인수위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상의한 뒤 8일 출국했다. 한 달 계획으로 중국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지를 돌며 외자유치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다루는 기구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과 엘든이 이끌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다루는 기구로 출범했다. 당선인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기구로 당선인의 넘버원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와 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 공약, 차기 정부의 역점과제인 정부조직 및 공기업 재편작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책, 세계적 이슈로 부각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등을 주로 다루기 위해 산하에 6개의 TF를 두고 있다. 투자유치TF를 비롯해 정부혁신·규제개혁TF, 기후변화·에너지TF, 한반도대운하TF, 새만금TF, 과학비즈니스 벨트TF가 그것이다.

엘든 공동위원장은 홍콩에 거주하는 관계로 인수위에 상근하지는 않는다. 대신 수시로 당선인과 직·간접 접촉을 갖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특히 해외투자 유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자문도 하고 아이디어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사공일 공동위원장은 “엘든 공동위원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금융인이고 지인이 많다. 당선인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경영철학도 잘 알고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 있다”고 그의 행보를 소개했다.



인터뷰 / 사공일 경쟁력강화특별 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980년대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과 재무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이다. IMF 특별고문으로 지난해 귀국해 1993년에 비영리 단체인 세계경제연구원을 창설해 15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부처 장관 기용설이 나돌 정도로 인

기높은(?) 정통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했다는 사공일 공동위원장. 그는 위원장을 맡을 당시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과거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정부를 떠나서도 세계경제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가 변화 속에서 어떤 국정 우선 순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냐 고민해왔다. 이를 알리기 위해 신문에 글도 쓰고 강연도 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국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국정운영 방향이 과거지향적이고 시대착오적이었기 때문에 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됐고, 국가경쟁력이 실추되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이명박 당선인을 뽑았다. 이는 국정 우선순위를 ‘경제살리기’에 두라는 것이다. 그래서 당선인이 내건 공약과 내가 지난 15년간 주장해온 것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가까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해 위원장을 맡았다.”

사공일 공동위원장은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경쟁력강화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당선인의 화답이었다며 “경제를 살려내 경제대통령이 되려면 국가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 특위를 설치한 것만 봐도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특위 설치 배경을 들려주었다.

이런 배경과 목적에 맞게 특위가 활동해왔으며, 먼저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을 시대 상황과 국제여건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 실천계획,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본 틀을 만들었다고 특위의 활동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한시적인 조직인 인수위라는 한계와 성격 때문에 빨리 조치했으면 좋은 것들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강화 업무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특위 기능이 정부로 옮겨지는 것이 다행이자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사공일 공동위원장은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특사자격으로 다보스 포럼을 다녀왔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적인 정상들이 참석하는 자리이다. 당선인이 초청을 받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특사 자격으로 대신 참석했다. 가서 한국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당선인을 대신해서 설명하고, IMF, OECD 관계자, 세계적 기업인, 언론인을 만나 우리나라의 입장을 알렸다.”

그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리더십 브랜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당선인의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의지에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머리 맞대다

산업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노 홀리데이’ 답게 일요일인 1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 50분까지 2시간 50분 동안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산업자원부 업무보고는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과 합동 보고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들 부처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경제살리기의 실무부처라는 점에서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업무보고는 산업자원부 20분, 중소기업청 20분, 특허청 10분 순서로 진행됐다. 업무보고 후 질의·응답은 기관 구분 없이 혼용해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인수위에서는 김형오 부위원장, 업무보고 주무분과인 경제Ⅱ분과의 최경환 간사,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 허중수 기후변화·에너지TF 팀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김영학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나도성 중소기업청 차장, 이태용 특허청 차장 등이 보고에 나섰다.

“정부는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야”

최경환 간사는 업무보고 시작을 알리면서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임해준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을 뽑아주었다며 이런 가운데 기업 도우미라 할 수 있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받게 돼 뜻 깊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 활성화 일자리 만드는 주무부처로 역할을 해줘야 하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하며, 특허청은 기술강국으로 가는 길잡이로서 특허 관련 시스템의 개선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과 정부관계에서 정부는 결국 기업이라는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라며 “그 서비스도 일률·일방이 아니라 기업 맞춤형



산업자원부 업무보고 현장. 인수위는 경제 살리기의 핵심부처라 할 수 있는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아울러 실물경제 살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형 서비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당선인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나갈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하겠다. 미래사업 키우겠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기업들은 참 기업하기 힘들다. 갈수록 어렵다고 말한다”며 이런 소리가 안 나오려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나갈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면 우리나라 특허가 적지 않지만, 그 중 잠자는 특허가 대부분”이라며 살아 있는 특허, 실용화되는 특허를 만들어 새 시대를 맞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살리기에 초점 맞춰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예상대로 당선인의 ‘747 경제살리기’ 공약과 관련한 경제 위주의 업무 보고와 정책 방안이 이어졌다.

산업자원부의 보고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추진전략 △유가 100달러 시대 대응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강구 등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생산적 노사문화의 정착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조세 지원 강화 추진 등 소위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 및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산업자원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주요 부처이자 ‘기업 도우미’로서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 받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유가 100달러 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가격 조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2012년까지 석유 및 가스의 자주 개발률을 2008년 5.7%에서 2012년에는 18.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과 신형기업 육성을 통해 연간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육성과 주변개발을 위한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대형마트 진입에 따른 서민경제 살리기 대응책과 재래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특허청은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특허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와 특허기술 거래 시장 개설 등의 방침을 보고했다.

“실물경제 살릴 방안, 현장에서 찾아야”

업무보고는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간간히 인수위 관계자의 질타가 터져나오기도 했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들렸다.

“지난 5년 동안 기업 환경이 나빠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산업자원부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하는 느낌이 든다.”(인수위 관계자)

“우리나라 투자의 95% 이상을 대기업이 담당하는데 투자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줬느냐는 것에는 반성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한다.”(산업자원부 담당자)

“그동안 정부에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온갖 시책을 다 폈지만 중소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재래시장도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인수위 관계자)



업무보고에 참석한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간부들이 긴장된 얼굴로 인수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인터뷰 / 최경환 경제Ⅱ분과 간사

민생과 기업활동 진작방안 마련

최경환 경제Ⅱ분과 간사는 한나라당 초선의원이지만 여의도 정가에서 '팔방미인'으로 통한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특유의 친화력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언론사 논설위원을 거쳐 대선판에서 '이명박·박근혜 캠프'를 넘나들며 맹활약했다.

인수위에서 그가 이끌고 있는 경제Ⅱ분과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민생에 직접 관련된 부처들을 관할한다. 그는 경제Ⅱ분과 간사를 맡으면서 무엇보다 그동안 침체돼 있는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제 주무부처의 공무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했으나 경제Ⅱ분과 간사로서 많은 현안과 각계각층의 민원과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해 가면서 지금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Ⅱ분과는 산업, 농수산, 과학기술, 정보통신, 건설교통 등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의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이에 따라 짧은 인수위 기간이지만 민생안정과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사안을 검토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방안 △ LPG 경차 도입 △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가격 지원 △ 통신비 인하방안 등 많은 사안이 검토됐다. 대불산단의 전봇대 제거로 상징되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완화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것이다.

“인수위 활동기간이 워낙 짧고, 인수위의 법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들을 모두 완결하고 종료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향후 새 정부에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큰 편익을 주는 정책으로 완결되도록 인계했다.” 인수위 활동 기간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가 무엇이었느냐는 물음에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국정지표에 맞추어 공약과 현안사항들을 정리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전체 192개 중 경제Ⅱ분과 50개)를 도출한 것이라는 즉답이 돌아왔다. 경제Ⅱ분과는 산업·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및 IT 분야, 농림어업 분야, 건설교통 및 해양 분야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에 관련 행사·간담회 및 언론 브리핑과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매우 많았다. 아울러 이동통신 요금인하,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서민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LPG 경차도입, 연탄가격 지원 확대 및 주유소 가격공개,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 등 새로운 정책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경제Ⅱ분과는 먼저 1월 4일부터 1월 7일에 걸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6개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 국정과제 수립의 기초를 삼았다. 그리고 총 23차례에 걸친 각종 업계, 학계, 관련 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 건의나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분양가, 통신비 인하 및 저소득층 연탄가격지원 등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정책들과 총 50개의 향후 국정과제를 수립한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최경환 간사는 밝혔다.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지 말고 당장 재래시장 한번 가 봐라. 지역구에 가보면 재래시장마다 한 마디로 죽겠다고 한다. 재래시장을 살리지 않고 어떻게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 왜 안 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인수위 관계자)

“친기업적인 측면에서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이 해야 될 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혼자서 목소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여건이 있었다.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것 같다.”(산업자원부 담당자)

기업활동 도우미를 지식경제부로 개편

최경환 경제Ⅱ분과 간사는 산업자원부 업무보고 결과를 이렇게 회상했다.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로서 기업들의 활동 지원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처이다. 업무보고의 첫번째 쟁점은 기업투자활성화였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부진 원인 분석 및 친기업적 정서 조성방안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확대방안 △수도권 규제 완화방안의 대폭적인 보완 등을 요청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두 번째는 유가 100달러 시대에 대응한 고유가 대책이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산업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및 수출 전략산업화 △에너지 자원 펀드조성 등을 통한 해외자원개발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다.

셋째는 중소기업에 관한 것이었다.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요자지향적인 지원체제로 정비하는 일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진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과 더불어 재래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최경환 간사는 또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하게 인식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업무보고 때 도출됐던 문제점이나 주요 이슈들은 대부분 국정과제로 채택돼 향후 5년간 국정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기업이 마음 놓고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든든한 후원조직인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개편했다.

존폐기로 속에서 통일의 새판 모색하다

1월 7일, 삼청동 소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는 통일부의 축소·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열려서인지 다소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시중 진지하고 차분하게 진행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업무보고에서 통상 일부 간부들만 참석하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통일부는 고경빈 정책홍보본부장을 비롯해 장·차관을 제외한 간부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일부 간부들은 1층 현관에서 인수위원들을 직접 마중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성실한 보고를 위해 간부 전원이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통일부의 존치 이유를 적극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되기도 했다. 그만큼 통일부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통일부 축소·폐지 방안에 반대하는 진보단체들이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통폐합 방안’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고, 평화통일정책을 추구하도록 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하며 “통일부를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하는 방안도 남북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규탄하는 가운데서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통일부의 존폐 논의 속에서 업무보고 시작

박진 간사는 인사말에서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과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되거나 처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진 간사의 발언은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일부가 외교통상부와 통합되거나 처로 축소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이어서 많은 시사점을 안고 있었다. 참석한 통일부 관계자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통일부의 개편 방향은 더 이상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통일부 업무보고 장면. 축소 내지는 외교통상부와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정신 등을 들어 존치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사업지원단을 축소해 남북경협본부 산하에 두고, 이산가족 업무는 대한적십자사에, 방북증 교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인수위 참석자들은 “통일부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이른바 내재적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거나 “지난 5년간 통일부에 이른바 실세장관이 오면서 다른 어느 부처보다 조직이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통일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통일부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 신뢰 조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증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대해 강한 자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조직의 존폐 앞에서 신념을 고집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통일부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이 많았고, 평화와 안보의 진전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특히 그동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이 안돼 대북정책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자아비판하는 것으로 보고를 시작했다.

400억 달러 국제협력자금 조성 위해 남북협력기금 규모 확대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일의 미래상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면서 “짧게는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만 멀리 봐선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하니 통일의 미래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국민들이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면 과제는 북한 핵 폐기인 만큼 통일부도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월 중 예정된 남북 회담 및 현지 조사와 관련 △ 보건의료 사업과 쌀·비료 지원 등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 상업 베이스의 자원 개발협력을 비롯해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성이 확인된 시급한 사업은 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추진하며 △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조선단지 건설 등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기초조사 등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인수위 측은 “남북협력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통일부의 재량이 너무 많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아 사실상 ‘묻지마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1991년부터 설치·운용됐으며 1991년 정부 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7년 11월 말까지 총 4조 2천 10억원을 조성, 3조 5천 47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협을 위한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자금 조성과 관련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규모를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으로 확대 △ 국제 금융기구의 장기저리 자금 △ 해외 직접투자 유치(연 평균 10% 경제성장 시 연 13억~30억 달러 유입 가능) △ 북·일 관계 개선(100억 달러 내외)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남북대화도 북핵 폐기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인수위측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해결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다 내실 있는 새터민 정책 개선방안과 함께 올바른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일 교육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국가의 기본책무로서 보다 분명한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 “향후 북핵 상황 등을 고려해 ‘A/R CDM 사업’ 착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A/R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이 비감축의무국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거나 개도국이 시행한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사들여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업무보고에서 박진 간사는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역대 정부가 북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참여 정부에서도 남북통일 업무를 큰 의욕을 갖고 추진했다”고 언급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남북관계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안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서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점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의 실효성 제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전략적 접근 확대,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방식의 개선 및 대내외적 지지기반 강화 등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가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에 경도된 결과 북한의 진정한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와 정책적 실패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경협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개혁·개방, 북한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돼야 하고, 남북대화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 폐기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남북간 합의사항의 승계 또는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치기로 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금 사용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실질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사후 평가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남북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당면현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새 정부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고, 당선인의 핵심공약의 하나인 ‘비핵·개방·3000’ 구상의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5개 분야 사업의 구체화 계획과 기타 10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등을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업무보고장에서 긴장된 얼굴로 업무보고에 임하는 통일부 간부들. 통일부는 부처 존속을 적극 설명하려는 듯 장·차관을 제외한 간부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인터뷰 / 박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

외교통일안보정책의 큰 그림 그려

한나라당 2선 의원인 외교통일안보분과 박진 간사. 그는 간사에 임명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국정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상황이 야기됐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핵문제가 악화됐고, 지나치게 ‘자주’ 만을 내세운 나머지 한미동맹관계가 악화됐다.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추락했다.”

이처럼 왜곡되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실용적인 외교·안보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새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했다는 것이다.

인수위 활동을 통해 향후 5년간 이명박정부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렸다는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그동안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지나치게 경도돼 왔다는 지적을 서슴지 않았다.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21세기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익중심의 실용적인 외교·안보정책을 구현해나갈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진전과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다.”

인수위가 2002년 서해교전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격상시키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서해교전 전사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 장병들과 국민들로부터 격려의 전화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조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떠났던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이 귀국키로 했다는 소식도 들었다며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던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늦게나마 작은 위로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그는 외교통일안보분과의 활동성과를 외교 분야, 통일 분야, 국방 분야로 나눠 조리 있게 설명하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실리외교를 전개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외교 △‘4만달러 시대’ 조기 진입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성숙한 세계국가’ 고양 외교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

통일 분야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올 경우 경제협력과 수출진흥을 통해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방 분야에서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튼튼하고 강한 국방태세 확립 및 미래전에 대비한 정부기술군 육성 △한·미 동맹관계와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한 한·미 군사관계 강화 및 군사외교 확대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예비 당정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반갑게 손을 잡았다. 2008년 1월 7일 11시 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 20층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인수위간의 연석회의에서였다.

이날의 자리는 여러 모로 의미가 깊었다. 당과 정부가 만나 업무를 협의하는 당정회의의 예비 모임이라 할 수 있지만 1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를 실감하는지 한나라당과 인수위에서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오가는



한나라당-인수위 연석회의에서 손을 맞잡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이경숙 인수위원장.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회의는 10년만의 예비 당정회의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말에는 윤기가 흘렀다.

한나라당에서는 강재섭 대표를 비롯해 안상수 원내대표, 나경원 대변인,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10여명이 참석했고, 인수위에서는 이경숙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오 부위원장, 맹형규 기초분과 간사, 백성운 행정실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나경원 당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강재섭 당대표와 이경숙 위원장의 인사말, 안상수 원내대표의 인수위에 대한 요청사항, 백성운 행정실장의 인수위 경과보고에 이어 토론이 벌어졌다.

긴밀한 협조가 최우선 과제

한나라당 지도부와 인수위 관계자들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가 향후 원활한 당정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하고 새 정부가 '일하는 정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당이 인수위의 보고를 듣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각료 인사청문회 일정 등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임시국회 현안의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해 인수위 활동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긴밀한 협조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고,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인수위와 당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 논의가 필수적이다. 당정협의를 지속되고 활성화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 전에 새 내각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모두 마치려면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늦어도 오는 1월 15일까지 당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강재섭 대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최대한 빨리 해달라”면서 당에서 공천을 빨리 하고 싶어도 이런 일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다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에선 인수위가 1월 15일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당에 전달하면, 1월 20일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행자위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친 뒤 1월 25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인사청문안의 경우 가급적 2월 4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월 26일에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경숙 위원장은 “소홀히 해선 안 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면서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밤낮으로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이 같은 예비 당정협의'를 굳이 정례화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새 정부

법률상 없는 정책 결정 기능을 대신한다는 일부 비판이나 오해는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인수위 활동이 천천히,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경숙 위원장은 “인수위의 위상을 한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라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그는 이어 “결국 우리가 떠나면 한나라당에서 입법을 통해 정책화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인수위가 성과물을 많이 낸다는 평을 들을 때마다 송구스럽다. 인수위 성과물이 아니고 한나라당 정책의 성과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운하나 통일부 폐지 문제 등이 너무 빨리 논란거리가 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당에서 제시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 논란과 관련,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대운하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병수 소장은 “통일부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일부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문헌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통일·외교·안보 담당)은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를 대외정책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부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 가칭 ‘통일외교통상부’로 통합하고 남북교류협력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인 박재완 의원은 “통일부 폐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 중”이라고 대답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최고위원은 한국노총에서 당선인의 당선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음을 거론했다. “당선인이 기업인 방문과 동시에, 또는 먼저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면서 한국노총 관계자가 한나라당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많은 얘기가 오갔다. 방만한 위원회의 축소 개편 문제, 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 분리 완화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날 회의는 10년 만에 여당의 지위를 되찾게 되는 한나라당으로선 감격스런 자리이기도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탄생시킨 정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인수위의 온도 차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래도 한나라당은 4월의 총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비해 인수위는 새 정부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는 의욕이 앞서 있다는 점을 숨기지 못했다.

“옷 좀 벗고 합시다”

2008년 1월 13일, 일요일이지만 인수위 대회의실은 북적거렸다. 인수위 발족 이후 19일 동안 활동하며 마련한 국정과제를 1차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하는 회의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보고회의에는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 등 인수위원 전원,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공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 의장과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맹형규 기초분과 간사의 인수위 활동 경과보고가 끝나자 당선인이 느닷없이 “이제 시작입니까? 그럼 옷 좀 벗고 합시다”라며 양복 윗도리를 벗자 30여명의 참석자들이 뒤따라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 장면. 인수위는 그동안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립한 제1차 국정과제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벌였다.

양복 윗도리를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러자 회의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검은 양복으로 인해 엄숙하고 근엄하던 분위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자유스럽고 밝은 분위기로 바뀌었다. 착 가라앉아 있던 겨울 방에 매화 화분 하나를 들여놓은 느낌이랄까.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참관하며 누누이 들었던 ‘국정감사장’ 분위기가 아니라 ‘당정협의’ 자리 같았다고나 할까. 아니 그보다 자유분방함과 젊음이 넘쳐나던 어느 벤처기업의 토론장을 떠올렸다면 너무 앞서간 것일까?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지향

국정과제 보고에 앞서 이경숙 위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세계일류국가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돼 국민 요구에 서비스로 답하는 봉사하고 섬기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채택된 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도 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보고는 △국정철학 및 비전 △경제 분야 △비경제 분야 △국가경쟁력 특위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박형준 기초분과 위원이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운영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명박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적 요구, 즉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의 역사’로 긍정 평가하고 건국-산업화-민주화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모델을 지향하기로 했다.

이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철학으로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를, 행동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를 제시했다. 또 이명박정부가 실현할 국정목표로 ‘신발전체제’를 설정하고, 5대 국정지표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능동적 복지와 고(高)신뢰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을 제시했다.

진지하면서도 격의 없는 회의장 분위기

당선인이 양복 윗도리를 벗는 순간 달라졌던 보고회장 분위기는 2시간으로 예정된 회의가 진지해지고 길어질 것이 예견됐다. 당선인은 조용히 앉아 보고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하나 하나를 뜯어보려는 듯이 상체를 구부리고 앞에 놓인 보고서를 열독했다. 보고서에 줄을 치기도 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옆에 앉은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었다.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커피를 스스로 타서 마시기도 했다. 다른 참석자들



국정과제 보고를 받은 후 소감을 피력하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사안마다 경험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주도했다.

도 마찬가지였다. 참석자들은 전화를 받으러 가는지 화장실에 가는지 자주 자리를 뜨기도 했다. 엄숙하고 근엄한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벤처기업 회의장 분위기와 다를 바 없이 진지하면 서도 격의 없었다.

국정철학과 비전 보고에 이어 기초분과 곽승준 위원이 경제 분야를, 박형준 위원이 비경제 분야, 그리고 윤진식 국가경쟁력특위 부위원장이 국가경쟁력 분야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날 인수 위가 보고한 1차 국정과제는 155개였다. 분야별로는 경제 52개, 사회·교육·문화 24개, 외교·통 일·안보 54개, 정부·법무·행정 17개, 경쟁력 강화 8개 등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기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을 보고했다.

이어 서민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경감, 유류세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 료 출퇴근시 50% 할인, LPG 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도 보고했다.

이어 각 분과 간사와 위원들이 중심이 돼 당선인과 국정과제별 토론을 벌였다. 7% 성장 달성 방안,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 방안, 서민생활 부담완화를 위한 통신비 경감 방안,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완화 방안, 법인세 조정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경험에 바탕 둔 현실적 방안 주문

당선인은 사안마다 경험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주도했다. 정책을 시행했을 때 과연 예상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현장을 찾아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통신비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화를 많이 쓰는 건지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독과점인지 알아야 한다. 일단 연령대별 사용량 통계부터 만들어라. 할인을 해도 이걸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무작정 내리면 그만큼 더 쓸 수 있으니 대책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류세 인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서민들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느냐?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Ⅱ분과 간사가 소형차의 LPG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결국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당선인의 실물 경제적 의견 제시는 농어가 부채 탕감 문제에 이르러서는 더욱 빛을 발했다. 농어가 부채 탕감 문제의 해결책으로 농협이 농기계를 대여해주고 농사를 지어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다.

“전국을 다녀보니 일모작인 한국에서 농가마다 농기계가 있더라. 농기계 사느라 융자받고 그러다 고장 나면 또 못 쓰고… 농기계회사만 좋은 일 시킨다. 농협이 소유한 농기계를 대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지역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돌려쓸 수 있을 거다. 아예 농기계 기술자까지 붙여 빌려주면 농민들이 다른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농기계 업체는 삼모작 하는 중국 같은 시장을 개척하면 된다.”

창조적 실용주의를 예견할 수 있는 자리

이날 보고회에서 당선인이 주문한 것은 새 정부가 표방한 국정운영 방향이 ‘창조적 실용주의’인 만큼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고민을 해서 국정과제를 완성하라는 것이었다. 탁상공론보다는 고객 수요와 현장 확인을 중시하라는 것이 결론이었다.

도시락을 시켜 먹으면서 4시간 40분이나 진행한 이날 보고회회의는 한마디로 실용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당선인이 말하는 실용정부의 앞날을 예견하고, 실용주의적 회의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보고가 끝난 뒤 RV 차량을 타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당선인의 모습도 바로 실용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답답함 씻어 내린 시원한 빗줄기

1월 14일 오전 9시 50분. 인수위 대회의실은 다시 찾아온 강추위를 녹이고도 남을 정도로 열기가 가득 차 있었다. TV 생중계용 조명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은 아니었다. 실내를 가득 메운 80여명의 기자들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분주히 오가는 인수위 직원들의 바쁜 몸놀림 때문만도 아니었다. 곧 출범할 이명박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늠해보는 자리라는 기대감이 뿜어내는 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열기는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의 한마디로 더욱 뜨거워졌다.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 달라진 부분이 있어 다시 이메일로 수정 자료를 보내 드렸으니 참고하시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 당선인은 이날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개편과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 말은 당선인이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회견문을 다듬었다는 뜻일 터였다. 한 마디라도 더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없이 웅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실내가 한여름처럼 여겨졌다.

그 열기 속으로 당선인이 입장해 한나라당, 인수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는 단상에 올랐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플래시 불빛으로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정부조직 개편과 규제개혁에 중점 둘 것”

당선인의 모두발언이 시작됐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보내준 국민의 성원에 감사를 표한 뒤 경제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태안에서 ‘긍정적 변화의 힘’을 보았다고 말했다.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화합 속의 변화’를 일궈내야 하며 이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역설했다. 또 정부 이양을 위해 새로운 국정철학을 확립하고,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국정과제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는 실용주의 정부라고 정의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하겠다고 글로벌 코리아를 위해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공동번영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힘을 집중하겠지만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며,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과 교육 개혁을 서두르는 한편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이 서로 믿고 나라의 선진화에 매진하자며, 국민들이 나라 걱정할 필요 없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자원외교 총리론 개진

모두발언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당선인의 생각과 국정철학이 더욱 생생하고 명료하게 드러날 기회였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들으며 어디선가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는 착각을 했다. 실내를 가득 매운 내외신 기자들이 당선인의 말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트북 컴퓨터의 자판을 정신없이 두드리는 소리 때문이었을까? 수십 명이 두드려 대는 자판소리는 마치 소나기가 양철지붕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치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첫 질문은 청와대와 총리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구상하



기자회견 내용을 입력하는 기자들의 바쁜 손과 노트북 컴퓨터. 수십명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양철지붕에 소나기 쏟아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고 있느냐와 원하는 총리상은 무엇이나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새 정부의 모습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지라 할 수 있었다. 이미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총리실 권한 비대화가 지적됐고, 이후 새 정부의 청와대 권한 집중화 우려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당선인은 “대통령상을 물어야지, 총리상을 묻느냐?”는 ‘농담식 핀잔’으로 웃음을 이끌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 그런 다음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대통령과 총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하되 청와대는 조정 기능에 한정해 일하고 총리는 세계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의 역할이 많다.”

자원외교 총리론의 개진이었다. 당선인이 평소 ‘자원외교’를 강조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역시’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차기 총리 후보감을 떠올리느라 바쁘게 두뇌를 회전시킬 터였다.

뒤이어 총리 인선이 늦어진 이유, 한·미 및 남북관계, 4월 총선의 공천 문제, 야권과의 관계 설정 등 민감한 정치·외교적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총리 후보는 예정대로 1월말 확정할 것이며,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면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북·미관계도 좋아질 것이라며 격의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내비쳤다.

공천은 당이 공정하게 잘할 것이라며 ‘총선 불개입’을 선언했으며,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질문이 경제 문제로 옮겨가자 기업인 출신답게 당선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공약사항인 7% 성장에 대해서는 여건상 새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을 100% 관장하기 힘들기에 7% 성장은 당장 달성할 수 없으나 6%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7%에 집착해 과도한 경부양책을 써서는 안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결론으로 여겨졌다.

종합부동산세 인하, 수도권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경제 현실에 맞춰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실용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당선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수치나 일정에 연연하지 않고 실적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대목은 한반도대운하 문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중요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연내 착공’, ‘임기 내 완공’이란 주변의 말들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었다.

난마와 같이 어려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대학이 본고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을 세 차례나 반복하며 대학입시제도를 자율화하면 본고사가 생기고 사교육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걱정을 차단했다.

마지막 질문은 민감한 사안인 ‘BBK 특검’에 관한 것이었다.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당선인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그걸 꼭 물어봐야 하겠습니까?”라며 살짝 비켜서며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하게 조사했고, 특검도 잘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뱉었다.

선택해준 국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5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은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장을 방불케 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과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엿보였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알뜰한 정부, 군살을 뺄 것, 할 수 있다, 못해낼 것이 없다는 표현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자신감에 찬 당선인의 당당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한반도대운하 건설의 강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계천 복원 때도 4천번이 넘는 만남의 자리를 갖고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했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기업 CEO에서 서울시장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험난한 난관을 극복해온 특유의 자신감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자신감은 바로 자신을 선택해준 국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제야 소나기 소리의 진원지를 알 것 같았다. 확산에 차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당선인의 막힘없고 시원시원한 답변을 들으며 무더위를 식혀주고, 스모그로 찌든 답답한 하늘을 씻어 내리는 한줄기 소나기를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당선인은 이날 총리론을 묻는 기자에게 ‘자원외교 총리론’을 밝혔다.

새 정부의 대들보를 세우다

2008년 1월 16일 오후 2시. 인수위 대회의실 가득 매운 기자들 사이를 뚫고 이경숙 위원장이 단상에 섰다. 그 좌우로 김형오 부위원장을 비롯해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 박형준 위원, 곽승준 위원,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 백성운 행정실장이 늘어섰다. 그 자리에서 가장 시선을 끈 인물은 박재완 팀장이었다.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순간이었으며, 박재완 팀장이 정부조직 개편을 총괄했기 때문이었다.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슬림화

이경숙 위원장이 우선 정부조직 개편의 경위와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뒤를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의 개편 경위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이경숙 인수위원장. 이날 인수위는 18부 4처인 기존 중앙부처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형오 부위원장이 상세한 내용을 보충 설명했다. 그 다음 박재완, 박형준, 곽승준 등 개편작업 주역들이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중앙행정조직을 현행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에서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고, 이와 함께 청와대는 4실 10수석에서 1실 1처 7수석 체제로 조직을 축소하며, 무임소 국무위원인 특임장관직 두 자리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8부 가운데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5부를 통폐합해 13부로 축소 조정하고,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2처를 폐지했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인재과학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문화관광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 부문),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로 구성됐다.

경제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을 넘겨받게 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또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 정책과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연구개발 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고, 경호실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장 산하에 경호처와 함께 국정기획과 정무, 민정, 경제, 사회정책, 인재과학문화, 외교안보 등 7수석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해 방송·통신 융합 등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짜게 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로 통합되고, 12개 기획단을 폐지하거나 각 부처로 환원하기로 했다.

난립 시비를 빚었던 각종 위원회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하고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 201개만 남기기로 했다.

통일부 폐지에 쏟아지는 질문

김형오 부위원장의 보충 설명이 끝나고 조직개편 작업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재완 팀장과 박형준 위원, 곽승준 위원이 앞으로 나섰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박재완 팀장이 주로 답변했다.

- 통일부 폐지 이유는? 통합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특정부처의 전유물로서 독점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통일부가 추진하는 여러 대북경협과 인도적 교류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각 부처로 돌려주되 다만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북한과의 교섭·접촉 창구나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을 다루는 통일정책 기능은 외교부와 합친 것이다. 국회도 이런 논리를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공무원이 5.3% 감축된다면서 인원 감축 안된다 하는데 설명해 달라.

“우선 1차적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은 일반공무원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6,9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다. 참여정부에서 늘린 정원 중 다 채우지 못하고 결원으로 일부 남아 있는 정원도 있다. 자연감소 인력까지 종합해 감안하면 공무원 정원을 5.3%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참고로 외환위기 이후 1998년 당시 1차에 4.8% 줄였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줄인다. 당시 10.9% 줄이려고 계획했다 9%에 그친 적이 있지만 이번엔 29.9%의 공무원을 줄이니 건국 이래 최대의 개편작업이다.”

- 내각중심 체제를 말했는데 청와대에 국정기획수석이 있다. 배치되는 것 아닌가?

“국정기획수석이 매우 거창하게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빅브라더’ 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수석 1명에 비서관 3명이다. 비서관 2명은 국책과제 담당이며 1명이 미래전략을 짠다.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각 부처에 지시,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청와대 인사수석 폐지에도 주목해 달라. 인사수석 폐지로 각 부처에 인사권을 돌려줬다. 청와대의 각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줄이려는 의지로 해석해 달라.”

“정부 조직 바꿀 자료 모아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1년여 전부터 준비돼 왔다. 당선인이 곽승준 위원(당시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내가 당선된다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보라”고 지시한 것에서 출발되었다. 이 지시를 받은 곽승준 위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에 의뢰해 10여개 연구보고서와 개편안을 모았다.

이 자료들이 정말 쓰이게 된 것은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007년 말이었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 책임자로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결정되면서 축적돼 있던 자료들이 그에게 건네졌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지난해 12월 26일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당선인의 주도 아래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 박형준,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이 핵심으로 참여했다.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출신인 박재완 팀장은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총무처와 감사원, 재무부, 청와대 등에서 관료생활을 했고, 1996년에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

다.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 등 정부혁신에 관한 책과 논문을 발표한 일도 있었다. 그야말로 이 일에 최고 책임자라 해도 손색이 없었다. 박재완 팀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 기능과 조직의 큰 틀이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대선 공약이었던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혁파해야 하는 일도 중요했다. 중차대한 이 두 업무를 모두 담당해야 하는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을 맡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평소 관심을 갖고 공부해오던 주제라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박형준 위원은 17대 국회 등원 전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내며 지방자치나 조직 개편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박 위원은 조직개편안 가운데 비경제 부문인 정보통신·방송·문화 관련 부서의 개편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했다. 그는 ‘인재과학부’ 등 부처 이름을 직접 짓는 등 ‘작명가’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광승준 인수위원은 대선 기간 때 당선인의 정책을 총괄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인 그는 이번 조직개편 작업에서 경제·금융 관련 부서의 개편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재완 팀장은 실무를 책임지고 밑그림을 그렸다. 조직개편에 관한 토론과 논의는 박 팀장이 짜은 개편안에서 시작했다. 박형준 위원은 당선인과 인수위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했다. 광승준 위원은 주로 당선인의 의중을 박 팀장 등에게 전달하면서 조직개편이 행정체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박형준 기조분과 위원은 각 분과의 의견을 모았고,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은 비서실과 인수위 간 의견을 조율하며 작업에 참여했다.

정부부처의 집중 로비를 뚫고

박재완 팀장과 광승준 위원이 윤곽을 잡자 당선인까지 참여하는 본격 토론이 시작됐다. 한 번 시작하면 도시락을 먹어가며 5~6시간씩 매달리는 지난한 토론이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과 박형준 위원 등도 참석해 지혜를 보탰다.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았다. 한 개 부처를 없앴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의실험까지 하려다 보니 실무자들은 밤샘 작업을 해도 늘 시간이 부족했다.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다. 이 때문에 임박한 듯했던 결정은 번번이 미뤄졌고 당선인이 주재하는 토론은 10여차례나 이어졌다.

가장 고민한 부분은 각 부서의 업무 구획 나누기 작업이었다. 외부 관측과는 달리 부처의 통폐합이나 폐지·흡수 문제는 이미 초기부터 의견이 모아져 논의과정에서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

박재완 팀장은 “초기부터 개편안의 뼈대는 13부 2처로 정해져 바뀔 적이 없다. 하지만 부서 간 업무 범위를 정하느라 완성된 조직개편안만 세 차례 당선인에게 보완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등은 저마다 자기 부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며 치열한 여론전과 로비

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재완 팀장은 “순수 과학을 연구해 온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과학기술부가 독립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다 죽는다’는 호소가 가장 뿌리치기 어려웠다”고 곤혹스러움을 털어냈다. 이 과정에서 당선인은 농수산식품부 이름을 직접 짓는 등 꼼꼼하게 조직개편안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팀장은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한번 회의를 하면 짧게는 4~5시간, 길게는 7시간이 걸리기도 했다”며 사무실에서 밤을 새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털어냈다. 수차례 자정이 넘는 시각까지 통의동 당선인 사무실을 드나들거나 휴대전화를 통해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고 개편안을 조율했다.

결국 세 차례나 당선인의 보완 지시로 ‘퇴짜’를 맞은 끝에 최종안이 1월 14일 밤 당선인에게 보고됐고, 1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발표를 마친 뒤 박재완 팀장이 남긴 한마디는 그동안의 시원섭섭함 그 자체였다.

“48년 만에 가장 작은 정부의 뼈대를 세웠다.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개편이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섰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고생 끝에 옥동자를 순산한 산모처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만끽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과 우리도 시대 흐름에 뒤지지 않고 선진국 못지 않은 작은 정부의 틀을 갖추었다는 자긍심 때문이었다.”



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

“새만금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국책사업이다. 그런데도 환경문제로 인해 지역사업으로 전략돼 그동안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께서는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어제 새만금TF에서 개발계획을 보고했는데 당선인의 의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당선인은 새만금 개발을 국가 부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세계인이 공감하는 청사진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계획을 전북도민들에게 꼭 알려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강현욱 인수위 새만금TF 팀장)

“이명박 당선인이 새만금을 3대 국책사업으로 정했다는 말을 듣고는 30만 군산시민이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강현욱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확 풀어지는 것 같다.”(문동신 군산시장)

시련의 연속이었던 새만금사업

화끈한 선물 보따리에 멋진 화답이 오간 그 자리는 2008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인수위 새만금TF의 현장설명회였다.

익산북부하수처리장-김제시의 새만금 개발예정지-새만금전시장-군산자동차엑스포전시장-군산산업단지로 이어지는 현장방문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열기를 돋웠고, 모여든 지역주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이런 열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강현욱 팀장은 새만금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전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부안군, 김제군, 군산시를 연결하는 33km의 방조제를 쌓아 401km²(토지면적 283km², 호수면적 118km²)의 국토를 새로 만드는 대규모 간척종합개발사업이었다. 토지면적만 도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그러나 국토 확장과 대규모 우량농지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새만금사업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1991년에 첫삽을 뜨고 공사에 들어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두 번이나 사업이 중단되고 백지화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자칫 쌓다 만 방조제가 바다에

드러누운 채 흉물스럽게 방치됐을 수도 있었다.

2006년 3월의 대법원 최종판결을 계기로 다시 공사가 진척돼 한 달 만에 33km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완공됐다. 아득히 수평선 너머에 있던 고군산군도의 안쪽 바다가 호수로 변하고 광활한 갯벌은 육지로 변했다.

당선인과 강현욱 팀장의 의기투합

방조제 끝막이가 완료된 후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원래 계획대로 72%를 농지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산업 및 관광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개발계획을 세울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지역주민들은 당초 계획을 바꿔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아줄 것을 원하고 있었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세 번이나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새만금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대선 때에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당선인은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새만금TF를 발족시켰고, 그 팀장에 강현욱 전 전북지사를 임명했다.

한때 환경과괴의 원흉으로 지목돼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던 새만금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거듭나게 하려는 당선인의 야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환경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새만금TF의 새만금 현장 방문. 강현욱 새만금TF 팀장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전하며 새만금사업의 선결조건은 수질개선이라고 밝혔다.

강현욱 팀장은 전북지사 시절 ‘강만금’이란 애칭이 붙을 만큼 새만금사업에 애착을 보였던 인물이었다. 당선인과 강현욱 팀장의 의기가 투합한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을 바라는 전북도민들의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새만금TF 현장방문단이 가는 곳마다 지역주민이 몰려드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새만금이 전북을 100년간 먹여 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새만금, 농지에서 세계적 자유경제도시로

강현욱 팀장이 현장방문에서 설명한 새만금 개발계획은 이러한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경제중심도시라는 대전제 아래 전체 부지 중 30% 수준이었던 산업용지 비율을 70%로 대폭 확대하고, 당초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겨 2020년까지 새만금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는 것이다.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개발하기 위해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30만톤급 배가 드나들도록 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배후 해양물류단지를 만들고, 방조제 주변 다기능 복합부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계획을 전달하는 강현욱 팀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육자배기 가락이 끼어들기나 한 듯이 신명이 나 있었다.

“당선인께서 보고를 받으신 후 투자유치가 쉽고,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을 먼저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수제를 쌓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곳을 우선 개발할 것이다. 특히 버즈 두바이에 버금가는 랜드마크 타워를 세워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새만 사업을 일관되고 힘 있게 추진하려면 추진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 해야 한다고 건의드렸습니다.”

수질개선이 새만금사업의 선결조건

이날 강현욱 팀장도 밝혔고, 전라북도에서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듯이 새만금사업의 선결조건은 수질개선이었다.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새만금은 썩은 호수로 변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첫 방문지인 익산북부하수처리장에 마련된 보고회장에서 전북 환경보건국장과 익산시 부시장이 차례로 나와 수질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한마디로 수질이 나쁜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왕궁축산단지의 완벽한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다. 익산 부시장이 2011년까지 국제기준치 이하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강현욱 팀장은 더욱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당선인께서는 1년 앞당겨 2010년까지 새만금의 수질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보하라고



호수로 변한 새만금 바닷가에서 강현욱 팀장에게 새만금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이건설 김제시장.
김제시장은 방문단에게 예정에도 없던 현장방문을 요청하는등 열의를 보였다.

하셨다. 정부, 전라북도, 익산시 모두가 한마음이 돼 해결해야 한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끌어오겠다. 절대로 중도에 흐지부지되거나 포기해서는 안되며, 지금까지의 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한마디로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만금은 없다는 것이었다. 개발과 환경이라는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휘둘러 왔던 과거의 전력을 거울삼아 환경문제부터 확실히 해결하고 개발에 들어가겠다는 이명박정부의 강력하고 명쾌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새만금에서 경험하게 될 이명박의 창조력

방문단이 탄 버스가 33km에 달하는 방조제를 달리기 시작했다. 방조제 안쪽은 점차 육지와 호수로 변해가고 있었고, 바깥에는 푸른 물결이 넘실대고 있었다. 서해안에서는 좀체 보기 힘든 푸른 바다였다. 그 바다 위에 선유도가 손에 잡힐 듯이 떠 있었다. 신선이 와서 놀다 갔다 해서 이름 지어진 선유도(仙遊島), 그 아름다움이 베트남의 하롱베이에 견줄 만하다는 선유도는 앞으로 국제적 관광지로 바뀔 것이다. 신시도(선유도 동쪽에 위치한 섬)에 버즈 두바이에 버금가는 타워가 세워지고, 그 앞바다에는 국제적 항만이 들어서고, 새만금 호수 주위에 첨단산업단지과 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중동의 모래사막을 세계적인 도시로 바꾼 ‘셰이크 모하메드의 창조력’을 뛰어넘는 ‘이명박의 창조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아느냐?”

“지난 대선 때 목포에 있는 대불공단을 방문했는데 선박블럭 제조회사들이 길가의 전봇대 때문에 선박블럭 운반에 지장이 많다며 관계 기관에 전봇대를 옮겨달라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잘 안되고 있다더라. 아마 지금도 안 됐을 것이다.”

2008년 1월 18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당선인의 한 마디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언론은 연이어 공무원의 ‘탁상행정, 복지부동, 책임 떠넘기기’를 꼬집었다. 그러자 그 동안 꿈쩍도 않던 관계 기관들이 ‘불난 호떡집’처럼 부산을 떨었고, 이를 뒤인 1월 20일에는 전봇대 1개를 철거하고, 또 하나는 인도 안쪽으로 5m정도 옮겼다.

규제의 상징으로 등장한 전봇대

두 개의 전봇대는 순식간에 ‘이명박식 규제완화’의 상징이자, ‘공무원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별칭을 동시에 얻었다. 지난 5년간 ‘전봇대 하나’ 옮기지 못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은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됐고, 상대적으로 당선인의 ‘실용정부론’은 큰 기대감을 낳았다.

전봇대는 규제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다. 이경숙 위원장은 1월 21일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높은 분이 이야기하면 5년 걸릴 게 5일 안에 해결되는 탁상행정은 이제 끝나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국가 선진화를 가로막는 게 이런 전봇대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실질적 전봇대보다 마음의 전봇대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전봇대 사건이 공식 사회 변화의 첫 신호라고 한다면,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변화의 첫 시



간사단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을 주문하며 언급한 ‘대불공단 전봇대’는 규제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작”이라며 “특정 부처 살아남기, 공무원의 ‘내 자리 지키기’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었다. 코레일 이철 사장은 1월 21일 사퇴를 발표하면서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불합리의 상징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코레일에는 그러한 전봇대가 수백 개 있다”고 지적하며 ‘전봇대’를 규제의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정부조직 축소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방안 마련 주문

‘산업의 피’라 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전봇대가 어쩌다 개혁을 가로막는 규제의 상징이 돼버린 것일까? 왜 당선인은 한번도 참석하지 않던 간사단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대불공단의 전봇대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

1월 16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를 전후해 인수위를 찾는 당선인의 발걸음이 잦아졌다. 1월 13일에는 국정과제 1차보고를 받기 위해 찾았으며, 다음날인 14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인수위에서 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정안 발표 다음날인 17일에도 인수위를 깜짝 방문한 데 이어 18일에는 처음으로 이경숙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단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새 정부의 우선추진과제를 보고받기 위함이었지만 정부조직 개편작업의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하고, 인수위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주위의 평가였다.

1월 18일의 간사단회의에서 샌드위치로 아침식사까지 한 당선인은 작성한 듯 30분간 얘기했다. 당선인은 이날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정책 발표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살아 있는 정책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우선 어떻게 해야 공백 없이 융합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세밀하게 조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간부직에서 자리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인사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 보기에 오히려 통합하는 것이 부작용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인원을 제자리에 두고 남은 인원은 교육과정을 밟도록 한다든지 구체적 계획을 세우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조직 내 실무부처를 어떻게 재편해야 각 부처가 안정될 수 있을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짜줄 것과, 각 당이나 의회 등 필요한 곳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남는 인원에 대해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남는 인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하거나 교육과정을 밟아서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도 과거식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교육방식으로는 안된다.”

이어 당선인은 설익은 정책의 선부른 공표를 자제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날 인수위가 발표 후 곧바로 철회한 ‘산업평화정착TF’ 구성 문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들렸다.



매일 아침에 열리는 간사단회의에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살아 있는 정책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검토단계에 있는 것을 선불리 발표했다가 나중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비치면 국민에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과욕하는 게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지만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 달라.”

현장감 있고 살아 있는 규제개혁 마련해야

그러나 이날 발언의 방점은 규제개혁에 있었다. 당선인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투자환경이 바뀔 거라며 해외에서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막연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타임 스케줄도 상반기, 하반기 식으로 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월별, 주별 세분화된 계획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금년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의 계획은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컴퓨터를 쓸 필요도 없다. 월별 계획을 짰 뒤 첫째 주, 둘째 주 계획을 짜고, 첫째 주도 며칠까지 하는 이런 식이 돼야 한다.”

세세한 규제개혁 로드맵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당선인은 이처럼 “살아 있는 정책을 펼치라”며 대불공단의 전봇대 이전 문제를 사례로 들었던 것이다. 원래 대불공단은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저조한 분양률을 고민해오다 3~4년 전부터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아 선박블럭 제작업체가 2004년부터 대거 입주하면서 전봇대 문제가 불거졌다. 대형블럭을 싣고 나가려 할 때 블럭이 전봇대에 닿아 이동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그래서 입주

업체들이 전봇대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자체와 한전이 서로 미루다 보니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며 당선인이 “이젠 책임자들이 직접 챙기고 몸에 와 닿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당선인은 “전라남도도 권한이 없고 목포시도 안되고 산자부도 안되고, 서로 그러다 보니 신고 나갈 블록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도 전봇대 하나 옮기는 것이 몇 달째 안되고 있더라”며 책임자가 방문해 살아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은 기업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외국의 사례를 꺼내며 “마하티르 수상 시절에 말레이시아에 가보니 외국인 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1주일이면 다 되더라”며 공장 이전 확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기업여건을 탓했다.

당선인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사무실에서 떠들어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오히려 웃는다. 지방을 한번 둘러보라”며 말이 아닌 살아 있는 현장정책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장 중심의 살아 있는 정책 개발과 행정을 펼쳐야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된다”며 민생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살아 있는 규제개혁정책 개발을 주문한 것이다.

경제살리기에 이어 규제개혁 행보 본격화

규제 전봇대가 사회의 화젯거리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당선인은 규제개혁에 관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정부조직의 슬림화와 규제개혁은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경제살리기의 양 날개였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이후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당선인의 규제개혁 행보는 1월 22일 오전에 신라호텔에서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대한강국 국민보고대회’에서도 계속됐다.

“지난 한 달 동안 국정을 살살이 살피면서 이렇게 막히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참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고, 이렇게 사방이 막혔는데 용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 조금만 해 보려고 하면 다 막혀 있다. 우리가 조금만 길을 터 주면 참 잘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당선인은 “공무원들이 만든 보고서를 보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언제 할 것인지 등이 불분명한 애매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일종의 보신주의라고 지적했다.

당선인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재계 CEO 등 각계 전문가들을 향해 “여러분이 잘해 달라는 말은 않겠다. 우리가 잘하겠다는 말만 드리겠다”고 언급한 부분은 그동안 민(民)에 군림하다시피한 관(官), 이 ‘갑을 관계’가 확실하게 자리바꿈을 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FTA를 농어촌 전화위복 계기로 만들어야”

농어업 문제는 정말로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전통적 농업국가에서 1960년대 이후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공업국가로 탈바꿈하면서 그 위상이 축소돼온 농어업이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풀기 위해 역대정권이 해법을 내놓았지만 난제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쌓여온 실정이다. 해마다 거의 빠짐없이 농민들의 시위장면이 언론을 장식했다.

특히 한·미 FTA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농어업 문제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은 상황이었다. 거기에서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진흥청 폐지가 결정돼 있어 ‘농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 등 34명의 농어민단체 대표들과 자리를 같이했다. 해법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잘못하면 굶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었다. 성난 농어민단체 대표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당선인은 이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이었다.

진지한 토론 위해 무릎 맞대게 자리 배치

그랬기 때문이었을까? 1월 21일 오후 2시에 농어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가 열리는 인수위 대회의실은 분위기 자체가 다른 간담회와 사뭇 달랐다. 다른 간담회에서는 ‘ㄷ’ 자형이나 ‘ㄱ’ 자형으로 테이블을 배치해 자리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테이블 없이 의자만으로 빙 둘러앉도록 했다. 서로 가까이서 얼굴 바라보며 무릎을 맞대고 진지한 토론을 해보자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자리 배치였다.

특히 당선인은 다른 때와는 달리 넥타이를 매지 않은 노타이 차림으로 참석했다. 오히려 농어민단체 대표들이 말쑥한 넥타이 차림이었다. 사회를 맡은 홍문표 경제Ⅱ분과 인수위원이 “농어민단체 대표는 넥타이를 땀는데 당선인께서 넥타이를 안 매서 거꾸로 된 것 같다”고 하자 당선인이 “내가 농민 대표”라고 해서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농어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농어촌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었다. 지금까지 당선인이 참석하는 간담회에 주로 인수위 관계자만 참석했지만 이날은 인수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이한구 정책위 의장과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해 무게를 실어주었고, 당선인 비서실에서 임태희 비서실장과 주호영 대변인이 참석했다.

홍문표 경제Ⅱ분과 위원은 “농정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한 간담회는 최근 많은 사회단체 간담회보다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간담회”라며 은근히 농어민단체 대표들의 기를 살려주려 애를 썼다.

당선인도 “이런 모임에 당, 인수위, 국회가 자리를 함께한 것은 인수위가 만들어진 뒤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옷(상의)도 벗고 넥타이도 풀고 하자”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주도했다.

이정숙 인수위원장은 “이렇게 대대적인 간담회를 하는 것은 그만큼 농어촌에 대한 당선인의 애정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며 기본적인 산업구조나 내용이 건설해질 때 우리나라의 기초도 튼튼해진다는 당선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보조를 맞췄다.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농어촌이 살 수 있어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FTA 협정을 앞두고 농촌이 매우 걱정스러워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전화위복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농촌이 정부와 함께 좋은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참석자들에게 기탄없는 제안을 주문했다.

새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농촌이 당면한 과제는 FTA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앞

으로 10년, 20년 농촌이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농수산물식품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농어업이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2~3차 산업으로 가야 농어촌이 잘되고 수요자들도 덕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는 농민에게도 도움 되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정책이 오랜 기간 있었지만 이제는 양자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정책을 펴고자 한다. 어려움이 있지만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서 꾸준히 나가게 되면 농촌도 잘사는 농촌이 되고 많은 사람이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시대를 열 수 있다. 새 정부는 기업이 잘되는 것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농촌이 잘사는 것을 더욱 중요한 정책의 밑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농촌진흥청 폐지 재고요청 줄이어

농어민 대표로 모두발언을 맡은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광야의 버림받은 양을 찾아 헤매는 애정을 가진 지도자”라며 그런 점에서 당선인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배려할 줄 아는 어버이 같고 목자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당선인을 추켜세웠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간담회는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다. 당선인은 간담회 내내 한·미 FTA와 농촌진흥청 폐지 문제에 대한 농어민 대표단의 지적과 호소를 들어야 했다.

박의규 회장은 “한·미 FTA로 350만 농민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며 새로운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쌀 목표가격 동결, 비료·농약·농기자재 부가세 인하 내지 면제, 농촌진흥청 폐지 재고 등을 요청했다.

문경식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 받고 제대로 유통되도록 협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협동조합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원칙적 대응과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촉구하고 도축세 폐지와 도축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우정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정부기관으로서 농업 연구기관이 지속돼야 정책을 농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호소했고, 윤요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도 “FTA에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농촌진흥청이 존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이 중간에 “폐지가 아니라 출연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당선인이 마무리 발언에서 “농촌진흥청을 그대로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농촌진흥청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길게 봐서 더 좋게 하겠다는 것이니 믿어 달라. 우리는 없어지면 없어진다고 하지 없어지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간담회 참석자들과의 기념촬영. 농어민단체 대표들은 한-미 FTA로 농어민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특단의 대책과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농민이 합심해서 길을 열자”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수위원회는 불과 두 달 정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줄거리만 잡고, 5년간 꾸준히 계속해서 조직의 변화를 가져와 향후 10년, 20년의 기초를 닦겠다”며 “5년 동안 내가 다 하고 가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또 농촌이 당면한 과제가 FTA 체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농수산물식품부를 만든 것도 앞으로 10년, 20년 농촌이 살아갈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다시 설명했다. 쌀농사 지어 도저히 경쟁이 안된다고 하니까 2차, 3차 가공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일본도 정종을 만든다. 우리도 비싼 밀가루를 쌀로 대용할 수 없는지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동남아에서도 다 쌀국수를 먹는데 우리만 밀가루 국수를 먹느냐?”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농민과 정부가 합심해 길을 열자며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 서로 의논하고 뭘 도와주면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위기를 통해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뒤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마주 앉아 같이 밤을 새면서라도 고민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4시 40분에야 마무리됐다. 그만큼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농어민단체 대표들의 요청이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국정의 상당부분 시도지사와 협의하겠다”

1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서울시청을 찾았다. 2006년 6월 30일 대권도전이라는 웅대한 포부를 가슴에 안고 서울시장을 퇴임한 지 꼭 570일만의 일이었다. 인생에 있어 어느 한순간이라도 다 소중하겠지만 당선인에게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4년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소중했을 터였다.

청계천 복원과 광역교통망 도입 등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으로 서울을 변모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리하여 지난 대선에서 승리해 한 달 뒤에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될 대통령당선인의 자격으로 친정을 찾은 것이다.

효율적인 지방분권이 국정 성공요소

당선인이 서울시청을 찾은 것은 태평홀에서 열리는 제18차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당선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대 회장을 지냈고, 사무처를 발족시키는 등 활성화를 꾀했던 협의회에 참석한 것 또한 여러모로 의미가 깊었다.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문제를 협의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입장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중앙정부의 예비 수장으로서 시·도의 요청사항을 청취하러 온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당선인이라는 자격 이전에 전 서울특별시장이자 다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한 뒤 시·도 지사 출신의 첫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국정의 많은 부분을 시·도 지사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누누이 강조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눈 분도 계시지만 인수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별적으로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

“지방분권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국정이 잘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어느 쪽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제1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선인은 국정의 상당부분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한과 제도상 여러 가지 고칠 점이 많지만,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임기 5년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

“취임하기 전에 약속한다. 많은 분들이 약속을 했지만 잘 안된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 체장으로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훨씬 원활한 대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의 상당부분을 시·도 지사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이었을 때도 중앙정부가 시·도 지사들과 좀 효과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면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

수도권 규제는 국가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야

1월 16일의 정부조직 개정안 발표 이후 ‘규제개혁’ 전도사로 나서 가는 곳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온 당선인의 행보는 이날도 멈추지 않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급선무란 점을 역설했다.

당선인은 최근 지자체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언급하며 어느 한쪽을 규제 해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페이버(favor)를 줘서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가는 게 좋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는 이해가 서로 다르지만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지방도 규제를 풀어주면 잘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곳은 묶어 놓고 안되는 곳은 풀어 놔다.”

당선인은 시·도 지사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도 규제개혁에 관한 말을 이어갔다.

산업단지가 부족해 당장 기업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문제만은 서둘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단을 하든 빌 하든 3~4년씩 걸린다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계획을 세우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굉장한 시간이 소모된다”고 지적한 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1년 안에 착공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 시·도 지사가 함께 참여한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은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할 계획도 알렸다.

“한 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그 다음 회의에서 해결돼 넘어가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해결되고 그렇게 1~2년 지나면 공무원들이 규제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시·도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 요청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분권형 헌법 개정, 국세와 지방세 조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3대 분야 12개 정책을 건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해외출장 중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을 제외한 14명은 발언을 통해 해당 시·도의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0년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해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비자제도 개선을, 허남식 부산시장은 강서구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첨단 운하도시와 복합물류거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김범일 대구시장은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제3산업단지 및 서대구산업단지 재정비,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범국가적 추진과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등에 대한 건설 지원을, 박성호 대전시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축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광주시는 20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박맹우 울산시장은 울산국가공단 확장 등 3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책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첨단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과 팔당 수질개선 근본대책 강구 등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 방안을, 김진선 강원지사는 동북아 물류 허브 형성을 위해 한반도중단철도(TKR) 구축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건의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청주공항의 백두산 전문공항 지정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유치를 요청했으며, 이완구 충남지사는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중앙정부의 사고수습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김태호 경남지사는 조선 및 기자재 집적화단지 조성공과 공동 물류센터 구축을, 김태환 제주지사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이 제작한 넥타이가 화제였다. 전국 시·도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화합 넥타이’로 이름 붙여진 이 넥타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상징물을 담고 있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진선 강원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의 제안으로 간담회 즉석에서 당선인을 포함한 전원이 이 넥타이로 고쳐 매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전남·북 지사와 개별 회동, 지역발전 의지 재확인

한편 당선인은 시·도 지사 간담회를 마친 뒤 통의동 집무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완주 전북지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경제 장기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당선인은 먼저 박준영 전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시·도가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 아니냐?”며 지역발전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영 지사는 포물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 당선인의 여러 가지 호남 관련 현안 공약들을 언급한 뒤 영산강운하(호남운하)에 대한 일부 환경단체의 우려를 함께 전했다. 이에 이 당선자는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완주 전북지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전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 당선인은 김 지사와의 면담에 앞서 사진기자들이 포즈를 요구하자 “좋은 사진 많이 찍어서 전북에 많이 알려야지”라고 분위기를 띄운 뒤 시종일관 새만금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끝난 후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완주 전북지사와 별도의 자리를 갖고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사진은 박준영 전남지사와의 회담 장면.

김 지사가 “현재는 농림부가 새만금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나 청와대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하자 당선인은 “산업단지로 바뀌면 농수산물식품부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줬다.

살아있는 정책 만들기 본격 행보

1월 22일 아침부터 인수위가 분주했다. 비좁은 사무실에서 일에 빠져 있던 직원들이 정문에 주차한 버스에 오르고 있었다. 현장방문을 떠나기 위해서였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현장방문을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하루만도 외교통일안보분과가 평택의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았으며, 투자유치TF는 동탄신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인투자 기업을 방문했다. 또 사회교육문화분과는 당인리발전소(서울화력발전소)와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장애인 중증요양시설인 경기도 광주의 한사랑마을을 찾았다.

이처럼 인수위가 현장 속으로 파고들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현장중심의 살아 있는 정책개발과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선인은 1월 18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인수위가 실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살아 있는 정책을 써야 투자가 된다. 페이퍼만으로 하면 안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만들어야 한다. 자리에 앉아서 해서는 안된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을 강하게 주문했다. 당선인은 특히 “민생을 알려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민생에 관련되고 기업하기 좋은 것에 차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부처 업무보고 등으로 한달 동안 정책현안 등을 파악한 뒤 곧바로 국민들의 삶이 묻어나는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현장에서 청취한 생생한 제안

현장의 목소리는 책상 위에서 검토하는 보고서와는 차원이 달랐다.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평택 2함대 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외교통일안보분과 박진 간사를 비롯해 현인택, 홍두승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해 교전 당시 침몰됐던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를 찾는 한편 함정에 올라 NLL 인근 해상도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인수위 분과들의 현장방문이 줄을 이었다. 사진은 외교통일안보분과 방문단이 해군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서해교전 전사자들에게 묵념을 하고 있는 장면.

직접 둘러봤다.

방문단이 문무대왕함에서 가진 해군 장병과의 함상대화에서는 생생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취직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군인은 사회에 있을 때보다 부족한 게 현실이다. 현역 장병들에게 군 복무 가산점제도를 주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여군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추세고 기혼 여군 또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과 양육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복지제도나 시설이 미흡하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군인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인들은 사회성이 어둡고 재테크에도 서툴러 모은 돈이 없다. 오로지 군인연금만 믿고 있는데 불안하다. 현 상태에서 유지해 주기 바란다.”

사병에서부터 영관급 장교까지 기다렸다는 듯 현장의 고민들을 털어놓자 인수위원들은 진지하게 정책적 검토에 들어갔다.

홍두승 위원은 군복무가산점제도에 대해 “군 복무에 대해 적절하게 보완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론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국방과제를 정리하면서 군복무가산 점도 한번쯤 짚어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진 간사는 여군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군의 장기복무도 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인력 확충을 위한 과제를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출산과 보육을 위한 시설 지

원, 피복 지원, 장기 복무를 위한 기회 부여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인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군인연금은 일반 연금과 달리 병역의무에 헌신하는 군인들의 문제인 만큼 국가예산으로 확충해서 만약 부족하다면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 간사는 함상대화가 끝난 후 “함상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부대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해서 인수위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탄신도시 외국인투자 기업 방문

투자유치TF는 동탄 외국인투자 기업의 이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실사단을 구성하고 현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탄지역은 신도시 지정으로 향후 5년 동안 공장 증설 투자가 안될 뿐 아니라 공장이 신도시에 수용될 경우 공장 이전부지 마련도 쉽지 않은 곳이었다. 볼보트럭코리아 등 17개 외국계 기업들은 신도시가 들어와도 공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동탄이 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공장증설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토지 수용시 공장 이전부지 확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여러 기업이 이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한 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투자유치TF는 1월 7일 1차 투자유치자문회의를 열고 동탄 외국기업의 강제 이전 문제를 당면한 최대 현안과제로 파악해 건설교통부 관계자에게 동탄 입주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다.

‘당인리발전소’를 ‘문화발전소’로 추진

2월 22일, 사회교육문화분과는 김대식 인수위원과 유인촌 자문위원 등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당인리발전소를 둘러봤다.

마포구 당인동 한강변에 위치한 당인리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공식 이름은 서울화력발전소였다. 1930년부터 서울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1970년대 한때 서울 전체 전력 수요의 75%를 담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마포와 여의도 일대 5만 3천여 가구에만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오는 2012년 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노후 산업시설의 문화공간화를 통해 창조적 감수성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킴으로서 창조문화강국을 실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당선인은 당인리발전소 부지를 ‘문화창작발전소’로 만들겠다고 대선 때 공약했다. 이에 따

라 당인리발전소를 홍대·신촌 등 주변의 문화적 특성과 연계한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인수위에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이다.

김대식 위원은 “이명박 당선인께서 노후 산업시설의 문화공간화를 통해 창조적 감수성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영국 템즈강변의 화력



사회교육문화분과는 1월 23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을 잇달아 방문해 체육계의 현안을 청취했다. 유인촌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발전소 부지를 재활용해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테이트모던 갤러리처럼 공업화의 상징인 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진 발전소측은 발전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지상을 공원으로 가꾸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장섭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전기생산 단가 중 제일 비싼 단가로 생산하지만 반드시 이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할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동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발전시설을 지하화한다는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전소를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이해당사자 간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이에 인수위는 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서울시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해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합의를 보기로 결론지었다.

분과별 현장방문 줄이어

인수위는 1월 22일 이후 1월 말까지 각 분과별로 현장방문 일정을 빽빽하게 소화했다.

사회교육문화분과는 1월 23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을 잇달아 방문해 체육계의 현안을 청취했다. 28일에는 한류의 선봉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TV 드라마의 제작 현장을 찾았다. 경제Ⅱ분과는 1월 25일 대구 임베디드SW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탐방활동을 벌인 뒤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애로점을 청취했다.

정무분과는 29일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대문구 홍은3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며, 법무행정분과는 30일 국립경찰병원을 찾아 시위로 인해 부상당한 전경들을 위로했다. 외무통일안보분과는 29일에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돕는 하나원을 찾았으며,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31일 과학·문화예술 교류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엔노와사가 모두 포함돼”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사회정책에서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 주십시오.”(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여러분이 결심하면 노동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멋진 하모니였다. 2008년 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에 당선인의 화답이 이어졌다.

한국노총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집행부 임원, 25개 산별위원장, 박대수 서울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한 16개 시·도 지역본부 의장단 등 45명이 참석했다. 당선인측에서는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강만수 경제 I 분과 간사, 광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 한나라당의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전재희 최고위원, 배일도 의원,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과 주호영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장에 도착한 당선인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안내로 45명의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에는 노와사가 함께 있어

당선인은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자측과는 긴밀히 접촉하며 친기업적(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방향은 뚜렷이 제시하지 않았다. 당선인의 친기업적 행보가 두드러진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걱정과 불만이 잇따랐다. ‘경제살리기’의 한 축인 노동계를 무시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돌았다. 대선 때 정책연대를 하며 당선인을 지지했던 한국노총은 “인수위에 노동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노동정책이 실종됐다”느니, “만나주지 않는다”느니 하며 서운함을 토로한다는 말까지 들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광호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아주 오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정책연대를 맺어온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노사협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사진 오른쪽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기다림 끝에 간담회가 개최됐다”며 간접적으로 그런 속내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당선인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여준 것에 감사를 표한 뒤 해명에 나섰다.

“왜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는지? 왜 기업인 프렌들리만 얘기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섭섭한 생각을 가진 분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맨 프렌들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즈니스 프렌들리에는 노동자와 기업인이 함께 있다”며 노동자 없는 기업이 없고, 기업인 없는 비즈니스는 없듯이 ‘비즈니스 프렌들리’에는 노사가 다 함께 있는 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여러분과는 정책연대를 했고,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래서 부탁할 때는 기업인을 먼저 만나는 게 맞다.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한 것이니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양해를 구했다.

경제위기 극복은 노사 협력으로

당선인은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값이 올라가고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세계경제의 나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노사가 힘을 합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데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기업이 성장을 해야 한다면서 “300만개의 중소기업·소기업에서 어렵다고 한 사람씩 내보내면 300만명이 일자리를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2곳에서 1명만 채용해도 15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 기업은 노동자로부터 신뢰받아야 하고,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10~20%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며 원가가 10% 오르더라도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또 “한국경제의 두 축 중 큰 한 축인 노동자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을 확보해준다면 아마 기업도 감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노동자들이 적대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을 기업인들이 갖게 된다”며 한국노총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한 번 더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굉장히 안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선인은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차기 한국노총 위원장에 단독으로 출마한 장석춘 전국 금속노련 위원장에게 협력을 당부하며 “단일 후보로 출마하셨다고요? 단일후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경선 치르고 본선 치르느라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리 쉽게 단일후보가 됐나요? 하여튼 축하합니다”라며 딱딱했던 분위기를 농담으로 풀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4자 대화 실무협의 추진 약속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인이 성공하는 경제대통령이 되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노동·사회정책에서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실 것을 희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이용득 위원장의 안내로 한국노총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는 45명의 한국노총 간부가 참석했다.

망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 안정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는 노동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노총 위원장과 임원 등 지도부와 청와대 담당 수석,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정책협의회를 매 분기별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인수위 단계에서 국정과제에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인수위 간 협의 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당선인은 “양측 간의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자”며 서로 의논해서 계속 대화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규제와 간섭에서 탈피해 노사 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대 노총과 경총, 상의 등 노사관계 4자 회동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노총의 정책과 운동방향을 이해하는 정치인이 드물고 인수위에도 노동전문가가 거의 없다”며 참신하고 능력 있는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에 다수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선인의 인사말이 끝난 뒤에 이어진 한국노총의 정책제안에서는 비정규직대책과 차별해소 문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과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회적 대화기구 확대,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보장, 공기업 민영화 자제 등이 요청됐다.

이에 대해 당선인은 “여러분 덕분에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연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며 양대 노총과 경총, 상의와의 4자 회동도 당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선인은 이어 “총선에서의 노동계 참여 문제 등도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안다”며 “역사상 처음 정책연대한 한국노총도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앞으로 이용득 위원장의 지난 4년간의 큰 족적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돋보이게 하는 힘

1월 24일 아침 6시 30분, 인수위의 안살람을 맡고 있는 행정실이 분주해지고 있었다. 7시 30분에 시작되는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돌아갔다. 간사단회의가 끝나면 행정실은 또 다른 아침을 시작한다. 간사단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운 행정실장의 지시사항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간사단회의에서는 전날 KBS 9시 뉴스로 불거진 고종완 자문위원의 ‘고액 부동산 투자 상담 물의’ 건에 대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전날 고종완을 해임했지만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인 RE멤버스 고종완 대표가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면서 전화상담은 30분에 50만원씩, 방문상담은 1시간에 100만원씩 받으며 투자자문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문위원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위라는 지적이었다.

고종완 자문위원 문제 후속조치 마련

아침 9시, 간사단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운 실장은 행정실 정무팀을 소집했다. 간사단회의에서 논의된 고종완 문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정인학·이영섭 전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나온 주낙영 국장·이윤호·오경화·황재봉·홍용준 실무위원 등이 모였다.

“인수위에 파견돼온 공무원과 자문위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다. 박광무 문제가 그랬고, 고종완 문제가 또 터졌다. 모 신문은 보니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이 농촌진흥청에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내부와 국민들에게 알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백성운 실장이 말끝을 맺자 참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자문위원 직함을 충선준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규제하기 어렵더라도 개인 영리를 취하는 경우는 규제해야 한다.”

“분과위원별로 자체조사를 하고 요주의 인물은 미리 경고를 하도록 함이 어떨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백성운 행정실장. 이날 백실장은 검찰에 고종원의 수사를 의뢰하고 인수위 내에 자체 심사가구를 설치해 불미스런 일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파견 나온 공무원이 부처 이익을 위해 인수위 목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는 수많은 지류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과 같은데 어느 지류가 오염돼 있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문제 소지가 있는 곳을 미리 찾아내 정확할 수 있는 자체 감찰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백성운 실장은 자신의 생각을 직원들에게 주입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스타일이다. 분분한 의견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첫째, 분과위에서 자문위원 활동을 파악해 문제소지를 색출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둘째, 인수위 명의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셋째, 고종완씨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행정실로 돌아온 정무팀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 백성운 실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기자회견문을 완성했다.

백성운 실장, 기자회견 열고 제발방지 약속

오후 1시 50분, 백성운 실장은 기자회견문을 들고 브리핑 룸으로 향했다. 300여명의 기자가

노트북 컴퓨터를 앞에 놓고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성운 실장이 단상에 서자 TV 카메라와 스틸 카메라 렌즈가 일시에 그를 향해 열렸다. 뜨거운 취재열기였다.

백성운 실장은 그 열기에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공식적인 기자 브리핑은 두 번 째였다. 백성운 실장은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서게 되네요”라고 운을 뗐다. 전날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취임식 참여 신청과 슬로건 공모에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는 내용으로 브리핑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백성운 실장은 한번 해본 탓인지 전날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문을 읽어내려 갔다.

고종완을 서울 중앙지점에 수사의뢰하고, 유사한 사례 발생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응분의 처분이 따를 것이며, 인수위 내에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해 불미스런 일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회견문 낭독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줄을 이었다. 무슨 죄에 해당되느냐? 자문위원 수는 몇 명이나? 추천인은 누구인가? 브리핑 룸 밖에까지 30여명의 기자가 따라 나와 백성운 실장을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계속 퍼부었다. 기자들의 질문은 백성운 실장이 건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어졌다. 그만큼 고종완 문제는 인수위나 언론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인수위 한 달 정리하고 새로운 한 달 준비

오후 3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운 실장은 찾아온 손님들 잠시 면담한 뒤 다시 정부팀을 소집했다. 1월 28일 아침 6시 25분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KBS1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전화 출연할 답변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KBS에서 보낸 질문 초안을 놓고 각 질문에 대한 맞춤 답변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짜냈다. 토론은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됐다. 직원들이 백운기 앵커 입장에 서서 질문을 하면 백성운 실장이 답변하고, 그러면 직원이 연결되는 예상 질문을 이어 던졌다. 백성운 실장이 다시 답변을 하고, 예상 질문이 이어졌다.

“인수위 출범 한 달의 성과는?”

“지금까지 활동에서 가장 주력했던 점은?”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들을 성급하게 내놓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백성운 실장과 정부팀원들이 질문하고 답하면서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안성맞춤 답변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질문이 문제였다.

“1단계 활동이 총론 성격의 방향 제시였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텐데 교육정책, 경제정책, 한반도대운하 등 굵직굵직한 정책현안들의 틀은 어떻게



고종완 자문위원의 부적절한 처신문제가 불거지자 재발방지책을 주재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는 백성운 행정실장.

잡아가고 계신지?”

교육정책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인수위에서 내놓은 정책방안에 대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다. 의견도 많고 전문가도 많고, 한마디로 딱 부러진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것이 교육정책이 아닌가?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론이날 듯하면 또 다른 의문과 문제점이 쏟아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 내렸던 결론도 허점을 노출하기 일쑤였다. 결론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때 백성운 실장이 길을 잡아주었다.

“그런데 교육정책에 대해 내가 자세히 답변하는 것이 옳을까? 이는 해당분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경제정책도 그렇고 한반도대운하도 그렇고.”

줄을 잇는 방송 출연요청

저녁 6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린 정부팀원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자리를 정돈하려는 순간 백성운 실장의 호출이 또 날아왔다. 이번에는 케이블 방송인 mbn에서 1월 25일, 그러니까 다음날 오후 3시에 출연요청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이 회의도 앞선 오후 3시 회의와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형태의 질의응답을 통해 백성운 실장의 생각이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도중에 백성운 실장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다른 방송의 출연요청이었다. 며칠 사이 행정실과 백성운 실장은 상한가를 치고 있었다. 인수위 활동 1개월을 정리하고 남은 한 달 업무를 전망해 보는 내용, 그리고 취임준비위 부위원장장으로서 취임식 준비상황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고종완 사건’이 돌출되면서 이에 관한 인수위의 조치와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도 있었다.

저녁 11시, 정문을 나서는 행정실 직원들의 어깨를 짚은 어둠이 포근히 감싸 안아주었다.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라는 격려처럼.



인터뷰 / 백성운 행정실장

“인수위의 시작과 끝을 책임졌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성운 인수위원은 행정실장을 맡은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는 2007년 12월 29일에 열린 업무조정회의에서 이런 생각을 피력했다.

“저는 행정하고 인연이 끈질긴 인연을 갖고 있다. 행정고시 합격 후 내무부 행정계장을 맡았고, 청와대 행정수석실 근무와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안국포럼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이제는 행정하고 결별하고 정치에 입문하겠구나 했는데 경선캠프가 차려지면서 종합행정실장을 맡았다. 대선 후 이제는 행정 딱지를 떼겠구나 했는데 행정실장을 맡게 됐다. 왜 행정과 이토록 인연이 끈질긴지 생각해보니 아직까지 행정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성하고 행정실장을 열심히 해 이번에는 정치에 입문하고 싶다.”

행정실은 인수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곳이다.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수위 활동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신경조직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행정실의 몫이다. 또 인수위 활동의 마디마디를 총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를 담당하는 곳도 행정실이다. 그리고 인수위 인력들의 복무상황을 점검·지원하는 것도 행정실의 임무이다.

특히 백성운 실장은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취임준비 활동을 지원하고 이의 대외 홍보활동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백성운 실장은 인수위의 처음(사무공간 마련)부터 끝(취임식과 백서 발간)까지를 책임졌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면서도 잠시도 방심하거나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는 곳이 행정실이라는 것이 백성운 실장의 설명이다.

백성운 실장은 지난해 12월 25일 늦은 밤,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안국포럼 창설부터 경선, 대선을 치르면서 거의 2년 동안 밤잠 한번 마음 놓고 자보지 못하다가 오랜 만에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전화를 받자 대뜸 “당신이 행정실장 맡아서 인수위 빨리 출범시켜!” 하고 뚝 끊어버리더라.

“이튿날 삼청동 인수위로 가봤더니 사무실에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행정실 소속 직원들과 밤새 책상을 재배치하고 인터넷과 전화선을 까는 등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했다. 그리하여 정확히 12월 31일에 인수위를 본격 출범시켰다. 빠른 시간에 잘 준비했다고 간사단 회의에서 박수를 받을 때에는 행정실장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꼈다.”

백성운 실장은 제17대 인수위가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열성적으로 일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면서도 몇 가지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의 불미스런 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옥의 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설 익은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도 못내 아쉬워했다. 민생관련 정책을 빨리 마련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한것이 악용과잉으로 비쳐진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수위의 대단원이라 할 수 있는 인수위 백서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라며, 실용성에 바탕을 둔 현장감 있는 백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하루 휴식 소식에 쏟아진 환호성

1월 25일. 평소 매일 아침의 간사단회의와 정부부처 업무보고, 각종 간담회가 열리던 인수위 대회의실이 책상과 의자 하나 없이 텅 비워졌다. 10시가 가까워오자 그 텅 빈 공간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인수위 첫 전체조회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그동안 인수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기는 시무식 이후 두 번째였다.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자 그 왁자지껄한 소리가 마치 봄철 무논의 개구리 울음소리 같았다. 잠시 후 이경숙 위원장이 입장하자 장내가 잠잠해졌다.



인수위 전체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조화를 하고 있다. 이날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당선인이 수고 많았으며 내일 하루 쉬라고 했다"고 전하자 환호성이 쏟아졌다.

“하루를 열흘같이 일해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장은 인수위가 지난 한 달 동안 일의 중요성이나 업무 강도에 비춰 300일에 필적하는 일을 해낸 것에 감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부처나 한나라당, 그리고 각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엘리트들이 인수위에 와서 고생 많았다고 치하했다.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것’을 크게 보도해 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우리의 보람이고 자랑으로 기록될 수 있는 ‘섬기는 정부’가 탄생되도록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태어나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회고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인수위가 지난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국정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해 현장 중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여정들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는 당선인의 의지와 뜻과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에 대한, 새 정부에 대한,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넘친다면서 한 달 동안의 인수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한 달 동안 사회가 확 바뀌었다. 곳곳에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꿈이 있고 바라볼 목표가 있다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인은 잠재력 중 3% 발휘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처럼 10%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하나하나가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도 인수위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입법화·정책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창의력 있게 만들어낸 그림들이 실천되는 보람을 느끼기를 바란다며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6일 하루 폭 쉬고 일요일에 뵙자”

이경숙 위원장의 말을 조용하게 경청하던 실내가 갑자기 박수소리와 환호성으로 넘쳐났다. 당선인이 다음날 하루를 쉬라고 했다는 말을 이경숙 위원장이 전했기 때문이었다.

“당선인도 여러분의 헌신 노력에 대해 고마워하고 격려하면서 말씀을 전해왔다. 수고가 많으셨다고 했다. 한 달간 고생한 것 잘 아신다면서 한 달이 되는 내일 하루는 폭 쉬라고 하셨다. 한 달간 밀린 잠 폭 주무시고 소홀했던 가족관계도 복원하시고 일요일에 뵙기로 하겠다.”

환호성이 잦아들자 이경숙 위원장은 좋은 얘기했으니까 다짐하는 말씀 드리겠다고 이틀 전에 불거진 고종완 자문위원의 불법행위를 언급하면서 한두 명의 불미스러운 일이 “밤낮으로 모든 것 반납하고 일하는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노 홀리데이 원칙에 따라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달을 달려온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직원들이 음료수를 채운 종이컵으로 건배를 하며 환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이경숙 위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다음 참석자들은 모두 준비된 음료수를 종이컵에 채웠다. 김형오 부위원장이 건배 제의를 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건배를 할 때 이제는 위하 ‘야’ 가 아니고 위하 ‘여’ 라고 하자.”

그동안 10년 야당으로 있으면서 “위하야”라고 건배를 했지만 이제 여당이 됐으니 “위하여”로 바로잡자는 의미였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음료수 잔을 든 채 “1978년에 기자생활을 그만두고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작은 책상에서 일하고 있다”고 회고하고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새 정부에 넘겨주도록 하자며 그동안 의욕과잉에서 벗어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그런 다음 “인수위의 성공적 마무리와 이명박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여!”하고 소리 높였다. 그러자 참석자 전원이 음료수 잔을 높이 들고 “위하여!”를 외쳤다.

인수위 한 달 ‘대체로 무난’ 평가받아

‘실용주의 정부’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2007년 12월 26일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매일 오전 7시 30분 간사단회의를 시작으로 정부 업무보고, 분과위 회의, 외부 단체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 밤늦게까지 빼곡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 토요일에는 각 분과별 간사들을 중심으로 업무조정 회의를 열고, 일요일에도 분과별 회의와 보고를 진행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인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 주간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했다.

이 같은 강행군은 워낙 ‘일을 좋아하는’ 당선인의 성격 탓도 있지만 6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의 밑그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뼈든한 일정 때문이기도 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부처를 포함한 5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1차 국정과제를 마련해 1월 14일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어 1월 16일에는 18부 4처였던 중앙행정 조직을 13부 2처로 대폭 슬림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해 국회로 넘겼다.

인수위의 한 달 활동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성급한 정책 발표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논란도 빚었지만 이명박정부 5년의 청사진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는 것이었다.

인수위 활동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민간의 자율과 시장역할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 위한 첫 행보인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이었다. 이후 인수위는 남은 한 달 동안 규제개혁을 위한 준비작업에 몰두할 예정이었다.

당선인이 직접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규제개혁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규제개혁이란 명제가 최대의 화두가 되면서 공직사회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전봇대 발언’ 외에도 당선인은 1월 22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공직자들이 어찌면 이 시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 수위에 와 있다”면서 “이렇게 막히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참 기적이다. 길만 터주면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용케 길목은 다 막아놨다”고 말해 규제개혁과 향후 작업 강도를 짐작케 했다.

당선인의 규제혁파를 향한 고강도 발언에 맞춰 인수위는 5천여건에 달하는 각종 정부규제에 대한 대대적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12학년도부터 대학수능시험 과목을 현행 8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대입시를 대학이 주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입시자율화 방안과 함께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내놓았다. 두 건 모두 교육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의 주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과거 정권의 인수위와는 달리 정부기관의 맞춤형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고 신속·체계적인 정권인수 업무를 진행, 국민들에게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과제나 주요 정책과제들을 새 정부에서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다”

1월 28일 11시 50분. 인수위에 파견된 80여명의 공무원들이 하나둘 구내식당으로 모여들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는 이경숙 위원장과 김형오 부위원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도 보였다.

자리에 앉은 공무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동안 당선인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여러 차례 질타한 적이 있었다. 1월 18일에는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예로 들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을 꼬집었다. 특히 1월 2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주최 ‘대한강국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서는 시대의 걸림돌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공직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 공직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변화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다. 어느 부서는 부서



인수위에 근무하는 정부처 공무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주체라고 밝혔다.

공직자들이 산하기업의 기업인들을 동원해서 인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부서 없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로비하고 다닌다. 그건 옛날 방식이다. 그래 가지고는 ‘Great Korea(위대한 한국)’를 만들 수 없다.”

당선인은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도 자기 자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공직자도 불과 20~30년 전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오기까지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시대에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 수위에 온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이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은 당선인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인수위에 파견돼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파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캔스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공무원이 변화·개혁 주도해야”

백성운 행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12시에 당선인이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선인은 “공무원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태의연한 모습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의 양면작전이었다.

당선인은 한 달 동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자신이 공직자를 변화와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공직자들이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치켜세우며, 서울시장 4년 동안 같이 일한 공직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공무원은 개혁이나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이 변화와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공무원 사회가 먼저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감축 등에 대해 공직사회가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였다. 대신 공직사회가 개혁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도 “공무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잉여인력을 몇 프로 삭감하든가 이런 것이 보도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명박정부가 지향하는 게 따뜻한 시장, 패자부활을 인정하는 시장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따뜻한 공직사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당선인은 공직자들이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확한 진로를 가지면 선진사회, 선진국가를 만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정신으로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프로정신과 봉사정신 갖춰야

당선인은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질타와 충고도 감추지 않았다. 공무원 조직이 시대에 뒤떨어진 점을 비판하며 과감한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당선인은 오랫동안 기업 CEO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보신주의’를 경험했기에 이에 대해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른바 ‘대불공단 전봇대’ 파문에서 이 같은 인식은 그대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선인의 이날 공직사회를 향한 러브콜은 단순한 ‘속도조절’일 수도 있었다. 실제로 당선인은 화기애애했던 간담회에서 ‘일침’을 빼놓지 않았다.

공무원이 평생 신분을 보장받는 ‘철밥통’으로 비치면서 인기가 높은 세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공무원이 되면 평생 편안하게 신분보장 받고 살아가는 좋은 직장이란 사고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선인은 대신 공무원들이 한 번 더 분발할 때가 됐으며 프로정신과 봉사정신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대충대충 하는 시대는 지났고, 개개인 모두가 프로정신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명 한명이 우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철저한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 여러분이 잠을 한 시간 덜 자면 국민은 한 시간 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자가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21세기를 준비할 수 없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틀림없이 세계 어느 나라 공직자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이날 간담회에는 80여명의 인수위 근무 공무원들이 참석해 당선인과 대화를 나눴다.

“소속 부서의 이익을 지키거나 인수위 사정을 부서에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며 부처의 일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인수위에 나와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거부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곳곳에서 조직개편에 반대하며 자기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다.”

당선인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리고 돌아가서도 일해주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참석한 공무원들의 각오와 건의 이어져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각오와 당선인에 대한 건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외교통상부 강수연 서기관(외교통일안보분과 실무위원)은 “해외 공관의 효율화와 업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명박식 CEO 리더십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해석해보고 있었다며 “조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미션을 줘서 뿔 수밖에 없게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 입장에서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한다고 밝히고 따뜻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정보통신부 형태근 국장(경제Ⅱ분과 전문위원)은 정보통신부는 폐지가 아니라 융합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가 새 정부 5년 동안 확실히 전달돼야 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IT강국을 일군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인력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농림부 박현출 농업정책국장(경제Ⅱ분과 전문위원)은 “농어업 문제는 전 세계 공통적인 고민거리라며 농수산물품부로 개편한 것이 우리 농업과 어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농어촌과 농어업 끌고 가지 않으면 당선인께서 구상하고 계신 선진한국이 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배상훈 과장(사회교육문화분과 실무위원)은 “영어 공교육은 한반도대운하만큼이나 국가경쟁력과 국운을 좌우하는 크고 어려운 프로젝트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통령 프로젝트화해야 임기 중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혁은 시민사회 전문가들에 의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선인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청 이강덕 경무관(법무행정분과 전문위원)은 “국민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볼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등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교육만으로 영어 회화가능하게 될 것”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 공교육은 과연 가능한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인수위가 마련한 ‘영어 공교육 정상화 방안’ 공청회가 바로 그것이었다. 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성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SBS-TV가 녹화로 방송했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이경숙 위원장과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와 발제자인 천세영 자문위원(충남대 교수)이 정면에 자리했다. 그 오른쪽에는 학계를 대표한 패널이 자리했으며, 왼쪽에는 교육현장을 대표하는 패널이 자리를 잡았다.

“확정된 정부 입장 이야기하는 자리 아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경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에서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방향, 재원마련 방안 등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영어 공교육 활성화 취지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과 과도한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최종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영어 교사 수급과 교육과정 개편, 친영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어 잘하는 주부와 노인 등 다각적인 영어교사 수급정책을 마련하고, 교육과정도 영어 교과서 위주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화 위주의 교재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영어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도 역시 새롭게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며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년 동안 4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고, 2만 3천명에 달하는 영어 교육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게 되면 영어 공교육 활성화는 국가 프로젝트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확신했다. 또, ‘코드공청회’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는 새 정부의 확정된 입장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텔레비전으로 녹화중계된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 공청회' 장면. 교육현장 근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영어공교육에 관해 의견을 피력했다.

“영어 교사 위한 따뜻한 정책 필요”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병갑 구로중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고통을 전달하면서, 영어 수업 혁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을 둘러싼 논쟁이 좀더 현실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어 교사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고용휴직제와 심화연수 등 운영과정에서 영어 교사들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최 교장은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재정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우조 교수 역시 초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영어 전용교사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투자 재원을 늘려 양질의 교사용 지도서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정 오마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는 영어 교육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아니 어려움을 토로했다.

“초등학교 영어 수업이 1주일에 한 시간이다 보니 대부분 따로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거기다 집에서 영어를 할 기회도 없고, 아이들끼리 영어 대화를 할 수도 없다. 이처럼 영어 사용이 단절되다 보니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상적인 방법은 담임이 영어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에 장운금 교수는 영어의 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도서관 활용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영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현하고, 반복 교육해서

영어 교육이 학급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연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30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다는 임동원 청운중학교 교장은 학생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보람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어 전용교사를 2만 3천명 양성하겠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며 영어전용교사 확보뿐만 아니라 현재 영어 교사의 수준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대구교대 교수는 영어 전용교사의 확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 시간에 많은 교사들이 상당 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신 영어 가르치다가 다른 과목도 가르치는 부담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교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경자 씨는 영어 교사들의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어 교사 재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 이외에 교사들도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방과후 영어교육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재뿐 아니라 방송 등에서도 외국 만화영화를 한국어 더빙보다 원어로 처리하는 등 영어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관심을 써 달라고 말했다.

“외래어표기법 수정·보완할 필요성 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이경숙 위원장은 영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연구·검토한 내용 중 영어표기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발음 변화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외래어표기법에 대한 수정을 국립국어연구원에 촉구할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대해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나올 말쑥은 거의 나왔다”며 좋은 방안들을 앞으로 새로운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시행해보지도 않았고 강력한 의지 없이는 획기적인 공교육 방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연 될까 하는 염려가 있다”며 확실하게 준비하고 차근차근 추진하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주호 간사는 “토론회 전까지 많은 고통이 있었다”며 인수위의 첫번째 방안인 만큼 계속 노력해 좋은 방안으로 완성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첫걸음을 디뎠다”고 평가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청회는 오전 11시 36분 끝났다. 인수위는 이날의 공청회를 토대로 기존 로드맵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영어 공교육 강화 최종안을 확정, 새 정부로 넘겨 시행토록 했다.



영어공교육 공청회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사회교육문화분과 이주호 간사.
인수위의 첫번째 방안인 만큼 계속 노력해 좋은 방안으로 완성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더 많은 의견 듣고 최종안 확정”

공청회가 끝난 뒤 이동관 대변인은 “인수위와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는 국민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제2의 청계천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반드시 실현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인수위의 안은 정확히 말하면 영어 공교육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시안”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더욱 수렴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구체적인 최종안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반대 단체 대표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이정숙 위원장의 뜻”이라며 “앞으로도 영어 공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편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에 찬성론자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 대변인은 “기본 취지가 영어 공교육 강화였던 만큼 그동안 영어 교육에 대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분들을 중심으로 모셨다”며 현직 교사 등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섭외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는 찬반 논란을 넘어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앞서가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처음에는 회의적 시각이 있었지만 결국 청계천이 완성됐을 때 국민 모두가 감동받았던

것처럼 영어 공교육 강화는 나라를 바꾸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꿈을 드리는 희망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 공교육 관련 오해 많이 풀렸다”

이경숙 위원장은 다음 날인 1월 31일 아침에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전날 열린 영어 공교육 관련 공청회에 대해 무사히 잘 마쳤으며 “공청회를 통해 영어 공교육과 관련된 오해가 많이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영어 공교육을 하면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기리기 아빠가 더 양산된다는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다”며 영어 공교육 완성의 이유 중 하나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들이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시작하면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텐데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어야 한다”며 인수위가 여론수렴을 더 차분하게 하면서 방향만 잡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당선인도 힘을 실어주었다. “영어 공교육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우리 모두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세계화된 시점에서 영어로 인해 국가 간 빈부격차가 나고 개인 소득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만큼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부연하기도 했다.

당선인은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서 자라는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 갈 때는 그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 국가경쟁력으로서 영어실력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분열치유하고 문화예술의 새 물결 이루자”

새해 첫 달을 마무리하는 1월 3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전면 중앙에 있는 거울못 호숫가에 자리잡고 있는 ‘거울못’ 레스토랑은 문화·예술의 향기로 가득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예술계 원로들이 속속 모여들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문학평론가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이강숙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수용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황병기 이화여대 교수, 임권택 영화감독, 정연희 소설가협회 이사장, 연극인 장민호, 김백봉 서울시립무용단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 등 문화예술계 원로가 그들이었다. 안형일 국립오페라단장, 김종규 박물관협회장, 최만린 국립현대미술관장, 신달자 한국시립협회 부회장, 육완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 등의 얼굴도 보였다.

빙 둘러앉아 앞에 놓인 차와 다과를 들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30여명의 문화예술계 원로들 사이에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김대식 인수위원, 박범훈 취임준비위원장, 유인촌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의 얼굴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문화예술계 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원로와의 간담회. 이 자리에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30여명의 원로 문화예술인이 참석했다.

자리였다.

잠시 후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 주호영 대변인과 함께 입장한 당선인이 유인촌 자문위원의 소개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많은 문화예술인과는 구면인 듯 오가는 인사말이 정겨웠다.

문화의 새 물결 찾아주시길

유인촌 자문위원의 사회로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 전 장관은 당선인이 청계천을 되살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새물맞이’ 행사에 참석해 ‘새물맞이’에 결자를 넣으면 ‘새물결맞이’가 돼서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더니 “그럼 지금 당장 넣어야지요”라고 했던 것을 회상하며 “하찮은 종이에 도 결이 있어서 결을 거스르면 찢기 힘들지만 결을 따라 찢으면 쉽게 찢을 수 있는데 당선인에게서 민족의 결, 문화의 결, 거대한 흐름의 결을 찾아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화답하듯 당선인이 덕담으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선거가 끝난 후에 여러 모임에 참석했지만 이날 모임이 최고라고 말한 것이다. 평소에 존경하는 문화예술인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려면 1년은 걸릴 텐데 한자리에서 뵙게 돼 정말 반갑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당선인은 새 정부 5년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자신은 선거 다음날 하루만 기분이 좋다가 국민의 기대를 얼마만큼 이룰 수 있을지 걱정하느라 그 다음부터 마음이 무거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갈라지고 흩어진 곳이 많아 새로 통합하는 게 제일 급한 것 같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해내는 우리 국민의 천성과 능력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흩어지고 갈라진 곳이 많다’는 당선인의 말은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당선인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 참석한 문화예술계 원로들은 지난 10년 동안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분열됐던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이날 참석자 중 어느 분은 ‘잃어버린 10년’이니 ‘원로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다’는 표현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그동안 문화예술계는 진보 진영이 정부의 지원과 요직을 독식한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떠돌았다. 당선인도 그런 현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화기애애하고 여유로운 레스토랑의 실내와는 다르게 바깥의 거울못은 그동안의 강추위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참석자들에게는 얼어붙은 거울못이 마치 ‘잃어버린 10년’처럼 여겨질지도 몰랐다. 그랬기에 20여일 전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연석회의장에서 느꼈던 화기애애함과 여유로움을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일까?

문화예술이 꽃피어야 태평성치 가능해

당선인은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시대라고 강조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가치가 어떠한가’, ‘문화의 국가가 돼야 한다’,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진부하다”며 행동으로 옮겨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을 태평성치로 만들려면 문화예술이 더욱 꽃을 피워야 할 것이라며 “그런 쪽으로 많은 정책을 배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당선인은 앞으로 문화예술인들과 자주 만나고 싶다는 소망도 피력했다. 환영사에서 이어령 전 장관이 “한 달 뒤에 취임하면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어령 대선배가 5년 후에나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1년에 한 번씩은 볼 생각이 다. 중간점검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김종규 박물관협회장은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각종 박물관 행사에 꼭 참석했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문화치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당선인의 서울시장 퇴임 후 문화계 원로들이 유인촌 자문위원의 연극공연이 끝나고 뒤풀이로 삼겹살집에서 소주 파티를 했던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때 참석자들이 문화시장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5년 후 대통령직을 끝낸 뒤에도 여기 참석자들이 모여 뒤풀이를 하면서 문화대통령이라 부를 만한지 평가를 하자”며 즉석 제안했고, 당선인은 “자비를 내겠다면 무조건 좋다”며 화답해 간담회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당선인이 자주 공연장 찾기를

당선인의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당선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당선인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첫 발언에 나선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의 문화 콘텐츠 관리가 문화관광부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강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총장은 교육법 밑에 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이 있어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 예술 정책을 왈가왈부하는 횡포가 있다며 대통령령을 법률로 격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장민호 국립극단 원로단원은 1년에 한두 번쯤 공연장을 찾아와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악계를 대표한 황병기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아주 쉽고 당장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약간 어려운 부탁 하나 하겠다”라며 중요한 공연에 가끔 나와서 관람해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주기를 부탁했다.

무용계를 대표한 육원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은 국립현대무용단 창단의 필요성을 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앞으로 5년을 태평성치로 만들려면 문화예술이 더욱 꽃을 피워야 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달했으며,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은 남자 무용수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설명하고 국제대회에 입상한 발레 무용수에게만 병역특례 혜택을 주도록 개정된 「병역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학계를 대표한 정연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국민들의 독서량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보니 문학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많은 문학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교육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부회장은 우리 문학의 해외 소개와 외국 해외 한국인들이 우리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당선인은 취임한 뒤 찾아오면 실무자를 옆에 앉혀놓고 즉각 반영하겠다고며 문화예술인이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져 4만달러 국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수준도 높여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 후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당선인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등 근무 때 파리에 가서 오페라 관람”

실제로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국내 최초의 국악전용극장을 세

우는가 하면 서울시향에 세계적 지휘자인 정명훈을 영입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당선인은 자신이 현대 출신이라 문화예술에 별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1970년대 중동에 근무할 때 비행기 타고 파리에 오페라 보러 다닌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여러 분야의 문화계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 매우 기뻐하며 “당선인의 경제대통령 이미지가 강해 문화예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문화 마인드가 충분히 갖춰진 것 같아 우려가 사라졌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의 간담회는 10년 만의 정권교체가 문화예술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으로 작용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인수위 김대식 위원은 이날의 자리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느끼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선진화의 중심에 문화예술이 있다고 본다. 오늘 간담회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때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예술을 창조해내는 문화예술인들의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지난 10년간 문화예술정책을 진보진영이 독식했다는 평가 등 문화외적 요소에 의해 문화정책이 좌우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문화외적 요소로 인해 문화정책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고 본다.”

새 정부 실천계획서이자 업무지침서 나왔다

드디어 1개월여의 산고 끝에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목표, 192개(향후 1개가 추가돼 193개로 최종 결정)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보고했다.

보고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이경숙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 전원,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이한구 정책위 의장과 권경석 수석조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먼저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그동안 해온 일을 잘 마무리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다음 정부 출발에 큰 보탬이 되는 정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 인수위에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격려와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그동안 인수위는 모두 110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고 267회의 각종 협의, 총 54회의 현지 의견수렴, 국민과 공직자의 정책제안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현장 친화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추진했다”면서 “국정과제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새 정부에 넘기는 즉시 시행돼도 착오 없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마무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 발표

당선인의 모두발언에 이어 맹형규 기초분과 간사가 국정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로 정해졌다. 5대 국정지표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21대 전략목표를 정하고 192개 세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중요도에 따라 핵심과제-중점과제-일반과제로 정리된 국정과제 중에서도 ‘친 기업정책’ 들은 대부분 핵심과제로 정리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살리기 위한 감세와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 포함)를



새 정부의 실천계획서이자 업무지침서인 국정과제 제3차 보고회의가 열린 인수위 대회의실.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포함한 전략적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추진방침을 재확인하고, 신성장동력 비전 제시와 새만금의 동북아경제 중심도시화,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를 핵심과제로 분류하고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외 분야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한·미 전략동맹,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자원·에너지외교 강화, 국방개혁 2020 보완 추진,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복지 분야의 핵심과제로는 국민·기초노령연금 통합,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 등을 선정하고,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예산 10% 절감,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와는 별도로 규제개혁, 기후변화, 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특별 정책과제를 별도로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

이날 발표된 국정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신발전체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5대 국정지표와 지표별 국정과제를 핵심·중점·일반과제로 세분화했다.

국정지표와 과제는 각종 공약에 대한 새 정부의 실천계획서이며 이명박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철학과 전략이 확실히 표출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발굴, 분류한 것으로 새 정부가 '일' 로써 국

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평가의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국정과제가 새 정부 내각에 대한 과업(mission) 지침서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원이 분명한 과업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행정 각부가 성과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장 하나 짓는데 도장 770개 필요하다니

당선인의 모두발언에 이어 맹형규 기초분과 간사의 상세보고, 각 분과별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 내용에 대해 당선인과 한승수 총리 내정자가 의견을 피력했다.

당선인은 신성장동력과 관련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에 좀더 노력해 달라”며 “관광·금융·보건과 관련된 헬스 케어, 환경·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 “지구 기후변화로 환경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관련 산업으로만 약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도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 적용을 받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에 대해 “인수위가 강구 중인 감세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무엇보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잘 준비해서 새 정부가 출발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해 당선인은 국내외



모두 발언을 통해 인수위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마지막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례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국내 사례와 관련해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각 부처, 지자체 등을 거치며 받는 도장이 770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단 하나 만드는데 3~4년씩 걸린다면 임기 중 공단 하나 완성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인터뷰 /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

농칠 뻔했던 과제 되살린 것 보람

인수위의 사실상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분과를 총지휘하면서 당과 조율도 책 임지고 있는 맹형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SBS 8시 뉴스 앵커 출신으로 3선의 한나라당 의원인 그는 한심한 외모와 깍듯한 매너로 인해 '신사'로 통 한다.

그는 인수위 활동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는 말을 실감케 한 60일이었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이 이명박정부에 거 는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인수위 업무의 강도도 함께 높아졌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지난 60일 동안 인수위는 향후 5년 동안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공약과 여러 정책 아이디어들을 실현 가능한 형태로 다듬고, 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했다며 “국정과제 하나하나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기획조정분과가 각 분과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정책과 과제들을 모아서 조정하고, 또 각 분과에 서 농칠 부분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인수위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챙긴다는 심정으로 일했다 고 밝혔다.

“각 분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다른 분과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많이 일해야 했다. 덕분에 기초분과 위원들의 고생이 많았다. 이 자리를 빌어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는 특별히 보람 있었던 일로는 농칠 뻔했던 과제들을 다시 살려낸 것을 꼽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속가능한 국 토환경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서울특별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등을 통해 도시 디자 인의 화두를 던진 이후 특색 없이 천편일률적인 한국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 다. 이를 반영해 대선 공약에 ‘Designed in Korea’라고 해서 디자인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방안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약이 다른 정책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꼭 필요한 정책이었기에 그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 과제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더욱 격상될 것이라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공장 하나를 짓는데 갖가지 규제에 묶여 도장을 수천 번 찍어야 하고 기간 또한 2~3년이나 걸리는 병폐 를 없애기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성안한 일, 여러 부처로 지리정보가 갈라져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NGIS(국가지 리정보체계)의 통합·조정안을 마련한 것과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골자의 광역교통망체계 개선안 등도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정권이 만든 좌절과 실망 속에서 다시 희망과 꿈을 되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고 전제한 그는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분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이 변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다면 당선인이 확고한 방향과 원칙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 확신 한다고 덧붙였다. 흔들림 없이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이명박정부는 1년 후, 3년 후뿐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가 더 욱 빛나는 정부가 될 것이라 믿는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도 든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외국기업이 투자를 해서 공장 허가까지 나오는 데 불과 2~3개월이면 착공할 수 있다며 “우리도 주된 업무의 80~90%는 주무부서가 하고 협조부서와의 행정절차 등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지낸 한승수 총리 내정자도 “기후변화와 연계해 성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 분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서 우리가 빨리 시작하면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수정·보완해 새 정부에 전달할 것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나치게 성장, 투자, 대기업 위주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기업 위주라는 표현은 저희의 의도나 실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은 “법인세 인하도 과표구간을 설정한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다”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태아에서 노후까지, 일과 여가와 교육이 함께하는 적극적 복지체제로 어떻게 재편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라는 큰 비전에 비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활성화라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불거지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건설 역시 글로벌 코리아 국정지표 항목에서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친환경, 친문화적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추진한다”는 게 인수위의 표현이었다. 박형준 위원은 “대운하의 반대여론을 관리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운하는 위낙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정치적 이슈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주요 공약이니만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오늘 발표한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실천계획서이자 향후 이명박정부가 할 일을 정리한 대국민 보고서이자 업무지침서”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가 최종본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선인의 지침을 받아 국정과제 보고서를 수정·보완할 것이라면서 보완작업을 거친 뒤 새 정부의 내각에 전달하고, 국정과제별로 코드를 부여해 임기 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된 국정과제를 보완해 1월 22일 해단식에서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국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에 근무하는 조종국 외사계장은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 제안서 하나를 보냈다.

“안산 반월·시화공단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4만~5만명에 달하는데 정작 안산에는 이들을 관리할 출입국관리사무소조차 하나 없다. 불법체류자가 넘쳐나고 폭행·절도 등 범죄혐의로 지난해 형사입건된 외국인 근로자만 408명에 이른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부도를 낸 익명의 50대 중년 남성은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 전화를 걸어 딱한 사연을 하소연했다.

“20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꼬박꼬박 낸 세금만 몇 십억원인데 막상 부도가 나니 국가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다. 성공한 기업가만 우대할 게 아니라 산재보험처럼 실패한 기업가의 재화를 돕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환·고충 듣는 자리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과 사연의 일부이다. 공직자부터 일반 서민까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인수위와 새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만든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1월 1일부터 인수위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제안접수 창구를 열었다. 그 후 팩스나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한 국민제안도 받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애환·고충을 이명박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출발한 이 센터는 인수위 지하 1층에 자리를 잡았다. 지하에 있어 기자들의 발길도 뜸하지만 센터 직원 23명의 보람은 인수위 여느 핵심 분과 못지 않았다. 직원 중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시민단체 쪽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상목 센터장은 21세 때 야학 교사를 시작으로 20여년간 빈민운동·노동인권운동 등에 몸담은 시민단체 원로그룹에 속한다. ‘빈민운동의 대부’라 불렸던 고 제정구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국민성공정책제안 마감을 앞두고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를 찾은 이경숙 인수위원장.
2월 5일 마감 때까지 국민제안과 공직자 제안을 합쳐 총 4만 4,694건이 접수됐다.

그는 2006년 10월 김진홍 뉴라이트연합 상임의장 추천으로 이명박 캠프에 합류해 대선 때 한나라당 상황분석실 팀장을 맡기도 했다.

16대에 비해 공직자 제안도 받아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2월 5일까지 36일간 국민제안을 접수받았다. 또한 1월 4일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책, 각종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 그 외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 방안 등의 정책을 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제안센터는 5년 전인 16대 인수위 시절에도 운영됐다. 그러나 이번 17대 인수위와는 명칭부터 차이가 있었다. 16대 때에는 ‘국민참여센터’였으나 17대에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였다. 센터 명칭이 바뀔에 따라 종전의 민원 접수에서 정책제안·검토기관으로 센터의 의미와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단순한 의견·진정에 대한 접수에 머물지 않고 미래 실행을 염두에 둔 ‘정책제안’으로 센터 기능이 강화됐다. 따라서 수동적이던 16대의 단순 접수 기능에서 탈피해 국민과의 능동적이고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상목 센터장은 공직자 제안도 16대에는 없었던 17대 정책제안센터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업무특성상 공직자들이 직접 정책제안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3천건이 넘는 정책제안이 접수됐는데 그중에는 우수한 내용의 정책제안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면서 이 센터장은 일반국민들에 비해 공직자들의 정책제안은 정책적 시사점이 클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공직자 정책제안 기능을 유지·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관심과 열의가 매우 뜨거웠다”

2월 5일 마감 때까지 국민제안과 공직자 제안을 합쳐 총 4만 4,694건이 접수됐다. 국민제안은 4만 1,668건이나 됐는데 인터넷 제안이 3만 7,627건, 팩스·우편·방문·전화 접수가 4,041건이었다. 공직자 제안은 3,026건이었다.

이상목 센터장은 “접수된 4만 4,694건은 16대 인수위 때 같은 기간 접수된 2만 7,583건보다 크게 증가해 국민의 관심과 열의가 매우 뜨거웠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1천여건은 실제 새 정부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며 국민 한명 한명의 작은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때 보람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땐 그저 국민 제안을 받아서 청와대 민원실에 넘겨주는 역할만 했지만 우리는 사후처리에 더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인수위가 가지는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국민제안 하나하나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안센터는 각종 아이디어 중 쓸 만한 것은 추려서 인수위 해당 분과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필요할 땐 현장조사도 나갔다. 인수위 인터넷 홈페이지(17insu.or.kr)에 접속하면 자기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접수에서 반영까지 5단계 중 어느 선까지 진척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상목 센터장은 안산단원경찰서 민원 건은 인수위 법무행정분과에서 새 정부 중점과제에 넣기로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으며 “안산에 출입국관리소의 출장소를 만들고, 파출소와 비슷한 외국인 전담 경찰특별지구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부도난 기업가의 하소연에 대해서도 배려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경제 I 분과에 넘겨 놓은 상태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경찰서 내 불법시위 단속업무가 증거 수집은 정보과, 시위대 해산은 경비과, 처벌은 수사과 등으로 나뉘어져 서로 핑퐁(떠넘기기)만 한다는 내부 제보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단순 접수 기능에 머물지 않고 쌍방향으로 국민과 소통

이상목 센터장은 제안센터의 성공적 활동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숨기지



근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상목 센터장(가운데). 그는 21세 때 야학 교사를 시작으로 20여년간 빈민운동·노동인권운동 등에 몸담은 시민단체 원로에 속한다.

않았다. 수동적인 단순 접수 기능에 머물지 않고 쌍방향으로 국민과 소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 제안의 경우 4만여건이 넘는 국민제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처리 과정·결과 등에 대한 실시간 통보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대응성을 높였다. 제안의 80%에 이르는 인터넷 접수의 경우에는 ‘접수, 검토중, 검토완료, 제안반영’의 모든 처리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우편과 팩스 및 이메일 접수 제안에 대해서도 접수 즉시 접수여부를 제안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으로 신속히 통보했다.”

이상목 센터장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발굴한 것이라고 서슴지 않고 언급했다. 4만여건의 일반제안 중에서 인터넷·우편·팩스 및 공직자 제안 약 5천건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층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중 약 100건을 우수정책 과제로 선정했는데 이를 12개 분야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12대 분야 100대 과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점추진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해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생각과 철학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자”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2월 16일 자신과 함께 새 정부에서 호흡을 맞춰나갈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내정자 및 비서관, 인수위 간사단 등과 함께 워크숍을 갖고 호흡 맞추기에 나섰다.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명박정부 국정운영에 관한 합동워크숍’에서였다. 워크숍은 인수위·청와대·내각의 핵심들이 모여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따라서 장관 내정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정치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지 못해 내각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만 참석했다.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라”

아침 9시에 시작된 이날 워크숍에서 당선인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소상히 밝혔다. 특히 끊임없는 변화와 미래지향적 사고, 혁신을 강조했다.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일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일까를 아는 것”이라며 “오늘을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할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과오가 있다”면서 “제가 늘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인은 1970년대 사장, 1980년대 회장, 1990년대 정치인, 2000년대 서울시장 등으로 인생을 살면서 늘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을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과거를 참고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변화를 강조했다.

새 정부 인사들에게 강한 정책 추진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때로 오늘의 정책이 국민 이해를 못 받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미래지향으로 정책을 펴다 보면 이해를 못 받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주춤하면 안된다”면서 때가 되면 이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전봇대 뽑기’ 발언과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을 예로 들면서 “전봇대를 뽑으라고 하면 즉각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영어 공부를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복잡한 얘기를 하면 당장 지지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춤한 일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당선인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내각과 청와대의 업무를 평가하겠다고며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가 성공신화를 만들 제도적 뒷받침 필요

류우익 청와대 대통령실장 내정자는 대통령실 운영방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류 내정자는 워크숍 발제를 통해 “이제 당선인의 성공 스토리를 개인의 신화와 성공이 아니라 국가적인 것으로 확대하고 연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성공 스토리 재가동을 위한 국정철학을 ‘창조적 실용주의’, ‘실용정치’, ‘실용정부’로 제시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고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곳이라고 정의한 뒤 △정보와 지식과 여론, 의견을 종합하고 판단해 대통령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조력 △대통령의 뜻을 내각과 의회, 시민단체, 국민에게 전달 △대통령이 일일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의 일부 대행 등을 3대 업무로 규정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는 자원의외교도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에너지 수입만 해 오는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자원의외교보다는 우리의 개발경험이라든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자원 보유국과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의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지금 새로운 체제로 들어가는 시점에 와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신발전체제를 더욱더 연구하고 강화해서, 새로운 전략에 바탕해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맹형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인수위의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수도권 광역 교통망 대책 및 규제개혁 로드맵 등의 진행현황을 설명했다. 맹 간사는 또 “이명박정부 출범 100일 플랜 초안을 하나 만들어 봤다”고 소개하면서 “이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8대 국회 원 구성 전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 초안이고, 여러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밤 11시까지 숨가쁜 토의 이어져

이어 인수위 간사위원과 전문위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내정자들이 6개 분과로 나뉘어 밤 11시까지 토론을 벌였다. 밤 11시까지 계속된 분임토의에서 참석자들은 분과별 회의와 전체회의를 번갈아 열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한승수 총리 후보가 각 분과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국정운영에 관한 합동워크숍' 장면. 16~17일의 1차 워크숍에는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수석 내정자, 18~19일의 2차 워크숍에는 인수위원회와 장관 내정자가 참석했다.

돌며 토론에 참석했다. 수석비서관들과 인수위원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정철학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개진했다. 회의가 끝날 때마다 잠시 숨을 돌리는 게 휴식의 전부일 정도로 숨가쁘게 토의가 이어졌다.

토의가 끝난 뒤 연수원 식당에서 두부김치보쌈을 안주로 간단한 단합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일부 참석자들이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을 돌렸다. 당선인도 한승수 총리 후보자와 팔짱을 낀 채 한 잔을 마셨다.

다음 날 아침에는 당선인과 워크숍 참석자들이 정말로 발을 맞췄다. 함께 교육원 운동장 열다섯 바퀴를 빠르게 걷는 아침운동을 한 것이다. 오전 6시 50분부터 50분간 진행된 이날 운동은 한 바퀴가 350m여서 모두 5km에 달하는 만만치 않은 거리였지만 72세인 한승수 총리 후보자도 참석해 건강을 자랑했다. 당선인 비서실장 자격으로 참석한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운동복을 준비하지 못해 구두를 신은 채 운동장을 뛰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선인은 트랙 안쪽으로 달리는 참석자들에게 "그렇게 돌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지"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호트러짐 없는 공직자세 요구

워크숍 둘째 날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분임토의 내용을 보고하고 당선인의 지침을 받았다.



1차 워크숍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대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소상히 밝힌 이 자리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미래지향적 사고, 혁신을 강조했다.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고, 상당히 효과적인 회의를 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며 빠른 시간 내에 내각이 확정되면 취임 전 한 번 더 업무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해 국무위원 확정 후 또 한 차례의 워크숍을 예고했다. 참석자들도 정부조직법 개정

안 협상 파행으로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 국가 주요 시책들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새 내각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을 6개월이나 1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긴장과 술선수범을 당부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자기희생과 청렴도 강조했다. “청와대 있는 사람들이 힘을 과시해선 안된다. 수석이 되면 친구들과 술 한잔 먹어도 말이 나온다. 인수위에도 ‘뺨’을 써 들어온 사람들이 꼭 사고 치더라”고 말한 것이다.

“밤새워 토론해 결론 내고 철저히 집행하라”

2월 17일의 워크숍에서 당선인이 언급한 대로 2월 18일에도 1박 2일 일정으로 국정운용 워크숍이 열렸다. 당선인이 2월 18일 오후 8시에 새 정부 국무위원을 발표한 후 곧바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겨 워크숍을 개최한 것이다.

앞선 국정운용 워크숍에 국정 인수인계의 핵심인 국무위원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만큼 당선인을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수위 간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9시 55분부터 시작된 워크숍에서 당선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니깐 방이 가득 찬 것 같다.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기대가 크다”면서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조 각발표를 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선인은 아울러 “요즘처럼 세계적 경제위기가 닥치는 가운데 어떻게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고 희망을 줄 것인지 내셔널 어젠다(국가적 과제)를 밤새워 토론하고 결론을 내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며 참석한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독려했다.

워크숍은 당초 새벽 2시까지 분과별 토론이 예정됐으나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가 “첫날부터 밤을 새우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밤 12시까지만 하자”고 제안해 공식 행사가 끝났다. 이에 당선인은 “뒤풀이 자리도 일하는 자리니 이제 다른 일하러 갑시다”라며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다른 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도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손수 차를 타서 마시는 소탈함을 보여주었다.

뒤돌이는 즉석에서 팀별 회식 분위기가 조성됐다. 팀별로 무대 앞으로 나와 당선인과 소폭을 마시며 단합을 다졌다. 당선인은 이경숙 위원장,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등 여성들과 함께 소폭을 마시기에 앞서 “내가 눈이 작아서 잘 안 볼 줄 알겠지만 다 보고 있다. 서울시에서 일해 보니까 정말 여성들이 일 잘하더라”고 칭찬한 후 “어리석은 남성들이여, 여성을 보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당선자인은 또 “국무위원 후보들이 60대가 많다고 하는데 요즘 60대는 예전의 30~40대”라며 30~40대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앞선 워크숍 때처럼 19일 아침을 운동장 구보로 열었다. 당선인 뒤로 30여명이 줄 지어 운동장 열다섯 바퀴를 50여분간 돌았다. 일곱 바퀴를 돈 뒤 당선인은 “방향을 바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자”고 제안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의 브리핑에서 이를 두고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자 ‘서민과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이라는 컨셉을 구현해 보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글로벌하게 일할 수 있게 자리부터 바꿔라”

아침 식사 후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분과별 토의,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토론이 열렸다.

참석한 장관 내정자들은 “영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국어를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문화를 보이고 들리는 문화로 발전시키겠다”(유인촌 문화부 장관 내정자), “5천년 동안 농어업은 생산에 주력했지만 이제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하다”(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포부를 쏟아냈다.

그러자 당선인이 마무리 발언에서 “열다섯 장관 후보자들의 짧은 보고를 들으면서 ‘참 잘 뽑았다. 누가 이렇게 잘 뽑았을까’란 생각을 했다”고 농담을 던져 회의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당선인은 이어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욕심밖에 없는,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선 “새로 부임하면 지난 10년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공직사회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자리 배치나 결재방식 등 사소한 것부터 글로벌한 기준에 맞게 변화시켜라. 어느 장관이 잘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렇다고 단합해서 똑같이 하지 말고 각자 개성대로 해 보라”, “디지털 시대엔 분·초당 계획을 세워야 한다. ‘월말까지, 주말까지, 중순까지’란 아날로그 시대 용어를 쓰지 말고, 하루도 오전과 오후로 세분해 써라”, “산하기관에 지침을 내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스스로가 먼저 바뀌면 과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통상적 업무나 결재에만 몰입하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 한다” 등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청계천 복원이란 환경이 서울시민의 생활양식을 바꾸더라”며 거듭 장관들의 분발을 독려했다.

당선인이 어느 자리에선가 지난해 두바이 방문 때의 경험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셰이크 무하마드 국왕과 오랫동안 국정철학에 대해 얘기했다. 놀라운 건 장관이나 하위직 공무원, 공기업 장관 누구를 만나도 국왕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

나흘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국정운용 워크숍은 당선인이 적어도 새 정부를 이끌어 나갈 정부 각료와 청와대 수석은 자신과 생각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어느 기업에서 즐겨 쓰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지닌 ‘한방향’이란 용어를 떠올리게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기나긴 협상 끝에 새 정부 골격 확정

‘통일부와 여성부는 존치, 해양수산부는 폐지한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에 최대 암초로 등장했던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새 정부 출범을 불과 5일 앞둔 2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1월 21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지 꼭 한 달만의 일이었다.

1월 20일 2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을 나서는 김형오 부위원장은 안경을 고쳐 쓰며 취임식 예행연습이 한창인 의사당 앞뜰을 바라보았다. 닷새 후면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저 자리에서 제 17대 대통령에 취임할 터였다.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지난 11일에는 타결돼야 했던 개편안을 여드레나 늦게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김형오 부위원장의 얼굴에 가득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대를 메다

이번 협상은 예비야당인 통합민주당과 예비여당인 한나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협상과정은 말 그대로 ‘벼랑끝 대치’와 극한대결 속에 반전을 거듭했다.

인수위가 1월 16일 18부 4처인 현행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김형오 부위원장은 이렇게 큰 진통을 예상하지 못했다. 새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가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작은 정부’는 시대적 흐름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좋았던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 제출 1주일 후인 28일을 국회 처리시한으로 못박자 통합민주당이 “예비야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45개 관련 법안을 심의할 국회 상임위 지정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는 사이 국회 협상은 양당간 제대로 된 협의기구조차 꾸리지 못한 채 한나라당이 1차 목표로 정한 1월 28일을 훌쩍 넘겨버렸다.



4차 협상이 결렬된 다음날 대책 협의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간사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형오 부위원장이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뼈격거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여야를 넘나들며 조직개편안 조속 처리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1월 31일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단, 정조위원장단, 상임위 간사단에게 조직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한 것을 비롯해 2월 1일에는 당 소속 행자위, 통외통위 위원들과 회동했으며, 2월 4일 오전에는 한나라당 소속 과기정, 농해수,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조찬회동을 가졌다. 통합민주당과의 협상에 앞서 내부전열부터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국회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도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효석 원내대표와 유인태 국회 행자위원장을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엄격히 말하면 새 정부가 정상 출범하느냐 아니면 파행 출범하느냐는 전적으로 통합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조직개편안이 늦어도 2월 12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치권 설득과는 별개로 언론접촉을 통해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호적 여론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켰다. TV·라디오 인터뷰는 물론 방송 토론, 선관위 주재 토론 등에 잇따라 출연해 ‘정부개혁 전도사’ 역할을 열성적으로 한 것이다.

협상 결렬, 전방위적 협상 타결 나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협상이 시작된 것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5일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 의장,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통합민주당에서 김효석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 의장, 유인태 행자위원장이 참여하는 6인 회동이 꾸러지면서였다.

첫 회동에서 한나라당은 각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2월 12일 처리 일정을 제시했지만 통합민주당은 여론수렴 및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 탐색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사흘 후인 2월 8일의 2차 협상에서 통일부를 존치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을 위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6인 협상단이 마주 앉았다.
양당은 5차례 걸친 공식 협상 끝에 2월 20일 합의에 이르렀다.

는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또 10일 3차 협상에서 금감원장을 금융위 위원에 포함시키고 과거사 위 통폐합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때는 협상 타결이 눈앞에 보이기도 했다.

11일 재개된 4차 협상은 예상과 달리 1시간 만에 결렬됐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을 존치하지는 통합민주당의 추가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월 12일 인수위 간사단회의는 한나라당과의 연합 대책회의로 변했다. 당선인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 의장까지 참석해 전략을 논의했다. 시한이 촉박해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방위적으로 통합민주당을 설득하고 협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경숙 위원장이 이날 오후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김형오 부위원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당선인으로부터 사실상 개편안 처리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공식 협상 외에도 물밑으로 통합민주당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험로 뚫기에 힘을 기울였다. 14일 밤 유인태 행자위원장과 만나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되 여성가족부와 농촌진흥청을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뤄냈던 것이다.

하지만 당선인이 이 절충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은 또다시 급랭

했다. 통합민주당은 해양수산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왔고, 그 선두에는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있었다. 통합민주당 내에도 타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손학규 대표의 주장을 꺾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경대처 끝에 극적 타결 끌어내

2월 16일, 기다리다 못한 당선인이 강경 자세로 돌아섰다. 이날 저녁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인수위원 간 국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통합민주당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2월 18일 오후 1시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회동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후 1시 협상을 테드라인으로 잡고 있었던 당선인은 더 이상 협상은 어렵다고 판단,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초강수를 뒀다. 통합민주당은 이 무렵 협상 타결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선인의 각료 발표로 인해 없던 일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이 있는데 통합민주당은 10년간 쓰던 낡고 헌 부대에 새 술을 담으라고 했다. 또 새 부대에는 칼집을 내려 했다. 새 정부 출범 1주일을 남기고 아직 정부조직법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다. 더 이상 발목잡거나 부처 이기주의, 이익집단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김형오 부위원장의 말은 당시 인수위 전체 분위기를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협상결렬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합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새 정부의 ‘파행 출범’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듯했다. 이런 가운데 20일에 손학규 대표가 해양수산부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됐다.

“2월 20일 오전 6시 15분쯤 유인태 최고위원으로부터 손학규 대표가 해양수산부를 양보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얘길 전해 들었다. 곧바로 당선인에게 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보고 하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날 낮 11시 40분 6자 협상이 재개됐고 오후 2시 30분 타결안을 공식발표하는 등 한 달을 끌어온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다.

2월 14일 밤에 합의했던 내용과 유사했다. 1월 16일에 발표됐던 13부 2처라는 개정안에 통일부와 여성부가 살아난 15부 2처로 확정됐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애초의 구상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다.

양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1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3명, 기권 13명이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 37일 만의 일이었다. 이로써 새 정부는 새롭게 짜여진 직제에 맞춰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인터뷰 /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인수위 활동의 기초 마련

한때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김형오 부위원장. 인수위의 2인자로서 인수위 내부, 당과 인수위 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했다. 기자 출신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뒤 정계에 입문한 한나라당 4선 의원이다.

인수위가 두 달 동안 1년에 버금가는 일을 해냈다고 평가하는 그는 인수위 활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한나라당이 10년 동안 야당을 했기 때문에 인수위 경험자가 거의 없었다.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는 부처 업무보고 지침을 내가 정립했다. 5년 전에 보니까 부처 업무보고 받는데 너무 시간을 낭비하더라. 그래서 부처당 하루 종일 보고 받던 것을 2시간으로 줄이고, 전체 기간도 2주에서 1주일 만에 끝내도록 했다. 보고도 장·차관이 하던 것을 국·실장 급이 하도록 하고, 지시·명령이 아닌 업무협의라는 관점에서 하라고 했다. 이처럼 부처 업무보고 7대 기준을 미리 제시해 부처들이 맞춤형 보고를 하도록 했더니 16대 인수위 때 14일 걸렸던 것이 이번엔 7일로 단축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인수위가 지난 10년간의 병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욕과잉을 은연중에 갖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으며 다음 인수위는 목적을 벗어나 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 사회의 안정을 바탕으로 일해야 하고, 전임 정권의 잘한 점은 잘한 것으로 받아들이야 하며, 자문위원 숫자를 대폭 줄여 인수위가 권력기관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인수위에서의 그의 활동을 꼽으라면 단연 정부조직 개편안의 마련과 국회 통과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정권 초기에 개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다.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까지 통합민주당과의 협의과정이 참으로 어려웠다. 때문에 그는 해양수산부 폐지에 따른 지역구의 항의와 거센 반발에 남모름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가장 난감한 입장에 빠진 사람이 나왔다. 지역구가 부산의 영도라는 섬인데 해양수산 가족이 부산에서도 제일 많다. 또 공무원 생활 10여년, 국회의원 16년 하면서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공무원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들은 내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실망 많이 했다고 하더라. 그래도 통합과 융합은 시대적인 대세이니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이번 조직개편 방향은 옳다고 본다.”

해양수산부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필요한 부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섬인 영국이나 일본에도 해양수산부가 없다며 해양과 수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산은 농림부에, 해양은 건설교통부에 포함시켜 건설과 교통, 해양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편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2월 20일에 마지막 협상을 하면서 해양환경 기능과 해양경찰청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옮겨 해양수산부 시절의 수산 분야만 빼놓고 해양에 관한 모든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다. 수산 분야에 1급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실장 내지 본부장 자리를 증설함으로써 수산 부문이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니 그만큼 제가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발전에 뜻 같이하는 영원한 동지이기를”

2월 22일 오전 11시, 인수위 2층 대회의실은 사람들의 와글거리는 소리로 옆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힘들 정도였다. 평소 각종 회의를 여느라 책상과 의자가 자리잡고 있던 대회의실이 말끔히 비워지고 그 빈 공간에 인수위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인수위를 이끌어온 인수위원들의 얼굴도 보였고, 인수위원들을 보좌해온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들도 모두 자리를 했다. 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두 모이기는 1월 25일 전체조회 이후 처음이었다. 아니 이렇게 모두 모이는 것 자체가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이 열리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막중한 일을 해냈다는 후련함과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행사장 곳곳에 흠뻑 배어 있었다.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에 전범이 될 것

해단식은 당초 10시에 열리기로 돼 있었으나 헬기 사고로 사망한 군인들의 영결식에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이 참석하고 오후 11시로 늦춰졌다. 그 때문에 분과별로 당선인과 사진 촬영하려던 계획은 취소됐다는 백성운 행정실장의 설명에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어리기도 했다.

11시 예정이던 해단식은 11시 10분에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이 양측으로 갈라선 사람들 사이를 지나 연단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우선 이경숙 위원장이 인수위에 시설을 제공해준 기관장에 대한 감사 인사패를 전달했다.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수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차례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경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힘든 임무를 마친 여러분을 가정과 직장으로 원대 복귀시키는 심정”이라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끝으로 50여일의 숨가뻐던 여정을 마치고 역사의 뒤편길로 물러난다”면서 그동안 밤새워가며 역사적인 소임을 다해낸 자랑스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세상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처음 마음먹었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장에 입장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원장, 류우익 대통령실장.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 역사적 소명다했다며 인수위의 노고를 치하했다.

것을 되새기며 자꾸만 부족한 것, 미흡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며 50여일에 걸쳐 거둔 성과와 인수위의 활동 과정은 새 정부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에 전범이 될 것이라고 추겨 세우고 “그동안 정말 정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봄은 이미 시작됐다”며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따뜻한 바람을 물고 오는 60년 대한민국사의 새로운 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인수위, 새 정부를 위해 역사적 소명 다했다”

인사말을 마친 이경숙 위원장은 인수위 활동의 최종 결과물을 집약한 「국정과제보고서」, 「규제개혁보고서」, 「예산절감보고서」를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연보라색 보자기에 싸인 보고서를 받아든 당선인의 얼굴에는 감회가 어렸다.

이날 당선인은 해단식 분위기가 학교 졸업식 같다며 “여러분은 정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심정일 것이고 이경숙 위원장과 저는 여러분을 떠나보내는 학교 교장과 같은 심정”이라고 해단식을 갖는 심경을 털어냈다.

이어 당선인은 인수위가 10년 만에 탄생하는 정부를 위해 역사적인 소명을 했다고 치하하며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인수위 직원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 새 정부 출범에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해준 것,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또 “여러분이 인수위원이라는 역사적인 책무를 맡아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한 것은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선진화로 이끌고, 국민 모두를 사랑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오늘 해단식을 하지만 여러분은 자기 위치에 돌아가더라도 누구보다도 새로운 정권에 대한 애정을 가질 것이고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인수위원이고 국가 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동지”라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항상 새로운 정부에 애정어린 충고와 제안을 해 달라며 “특히 공직자들은 돌아가면 그 부서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바꿔나가는 변화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친 위독해도 못 가다니” 당선인 인수위 직원 치하

당선인은 이어 지난 50여일간의 인수위 활동에 대한 노고를 직접 치하했다. 특히 기획조정분과 진현환(건설교통부 파견),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 김용진(기획예산처 파견) 실무위원과 비서실 이상희 씨의 경우 당선인이 직접 이름까지 호명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당선인은 진현환 실무위원에 대해서는 “부친상을 당했는데도 동료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남모르게 부친상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주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실무위원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매우 위독하신데도 정부조직 개편안이 끝난 다음에 갔다고 하는데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이상희 씨에게는 “누나가 암 4

기라 위독한데도 병문안도 제대로 못하고 일에 묻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당선인은 이처럼 헌신적으로 일해준 인수위 모든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자기자리로 가서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만나거든 혹시 내가 못 알아보더라도 인수위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고 인사하면 경의를 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은 “두 달간 수고가 몇 년의 수고와 같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건강하고, 취임식 날 다 오셨으면 좋겠다”며 ‘누가 오는지 다 보겠다’는 농담으로 인사말을 마쳤다.

“일 많이 하다 접시 깬 것으로 봐줬으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두 달 가까운 활동 기간 중 ‘경제살리기’를 핵심으로 한 국정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긍정평가도 받았고, 국민정서와 배치되거나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들어야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짧은 기간에 새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많은 일을 했고, 과속과 월권 비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접시도 깬 것으로 국민들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의 인사말을 마치고 당선인과의 분과별 사진촬영이 이어졌다. 당초 해단식이 1시간 늦춰진 관계로 사진촬영이 취소됐지만 당선인이 점심식사를 잠시 늦추더라도 사진촬영을 하려고 했던 것.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분과, 특위 TF 등 각 사무실별로 스무 번이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아야 했다.

사람들의 밝은 표정과 인수위 활동 58일의 기록은 빛으로 바뀌어 저마다 의미 있는 사진으로 변해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이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란 슬로건으로 2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마당에서 4만 5천여명의 축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새 정부 출발의 첫장인 이날 취임식은 ‘섬기는 정부, 실용 정부, 글로벌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행사장 연단을 최대한 낮추고 국민대표 70여명을 단상에 초청하는 등 ‘국민화합의 장’으로 치러졌다.

백성운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렵게 사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화해와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게 될 취임식은 크게 보신각종 타종으로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사전행사, 취임식에 앞서 시화연풍이란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펼쳐 보인 식전문화공연, 대통령의 취임선서와 취임사로 진행된 취임식 본행사, 그리고 식후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민대표 17인 보신각종 33번 타종

2월 25일 11시에 거행되는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대통령 임기가 공식 시작됨을 알리는 서울 보신각종이 25일 0시에 33번 울렸다. 2월 24일 밤 11시 30분부터 보신각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임기개시 상징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보신각종 타종에는 국민화합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재외동포 중에서 선출한 국민대표 등 17인과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박범훈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 참여했다. 국민대표 17인은 제17대 대통령을 상징했다.

타종인사로 참여한 17인의 국민대표 중 전라남도에서는 해양수산을 상징하는 여수엑스포 대표가,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투자 유치에 성과를 낸 공무원이, 인제교육 양성 도시에 걸맞게 대전에서는 카이스트 학생 대표가, 부산에서는 20여년 동안 원양어선을 탄 사람이, 서울에서는 고시공부를 포기하고 자동차 정비공으로 ‘작은 행복’을 누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축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취임식에는 외국 귀빈과 전직대통령, 국민대표, 일반국민 등 4만 5천여명이 참석했다.

리는 직장인이 국민대표로 참여했다. 그리고 경기도 대표로 세계적인 역도선수 장미란이, 인천 대표로 서해교전 당시 장교로 참전한 이희완 대위가, 재외동포를 대표해서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군 장교가 된 서진규 씨가 참여했다.

한편 보신각종이 33번 울리는 동안 김종해(전 한국시인협회 회장) 시인이 쓴 '대한민국, 당신의 이름을 하늘에 펴라'며 라는 시를 영화배우 송윤아가 낭송했다.

취임식장 가자, 여의도 메운 구름 인파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월 25일 아침, 흐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일대는 사람의 물결로 뒤덮였다. 이날 취임식 참석자는 모두 4만 5천여명. 이중 인터넷 추첨으로 2만 5천여명이 선발됐고, 해외동포, 중앙과 지방의 초청인사, 정당인 등 1만 7천여명이 초청됐다. 4만 5천여명의 참석자가 일시에 국회의사당으로 몰리다보니 진풍경이 벌어졌다.

지방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을 싣고 온 전세버스가 줄을 지었고, 일반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어 전철로 사람이 몰리자 여의도를 지나는 5호선 전철역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떠밀려서 전철역 밖으로 나왔고, 건널목을 건너야 했다. 전철역에서 나와서도 인파에 떠밀려 행사장으로 가야했다. 행사장 입구에 도착해서도 많은 사람이 일시에 비표를 받고 검색대를 통과하느라 한참을 지체해야 했다.

곳은 날씨에다 기다림에 지쳐 짜증이 날만한데도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다. 5년 만에 한번씩 찾아오는 행사인데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취임식을 위해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을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가회동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취임식장인 국회의사당으로 떠났다. 이 대통령 내외는 전용 차량을 타고서 사이드카 등의 호위 속에 광화문과 세종로, 반포대교를 거쳐 호국선열들의 묘소가 있는 현충원을 방문했다.

오전 10시 15분께 현충원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는 정문 뒤로 솟아오르는 분수를 맞이하며 300여m 가량을 차량으로 이동한 뒤 현충문 앞에 내려 분향소가 있는 현충탑에서 호국선열에 분향 및 헌화를 한 뒤 묵념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명록에 ‘국민을 섬기며 선진인류국가를 만드는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는 글을 남긴 뒤 취임식장인 국회의사당 광장으로 향했다.

역대 최대규모 축하사절 이명박정부 탄생 환영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는 역대 가장 많은 외국 정상이 축하사절로 참석했다.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앵호바야르 남바르 몽골 대통령, 후쿠다 일본 총리, 훈 센 캄보디아 총리 등이다.

또한 전직 정상급 인사도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많이 참석했다. 압둘 칼람 인도 전 대통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한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기다리고 있던 화동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다.

령,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 밥 호크 호주 전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 모시 요시로 일본 전 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빅토르 줍코프 러시아 총리,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필립 세갱 프랑스 감사원장, 라쉬드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그리고 탕자쉬엔 중국 국무위원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석했다.

외교사절 중에도 정계, 경제계, 학계, 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등의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주요 외국인사 약 80여명도 참석했다. 정계 인사로는 천연가스가 풍부한 러시아 칼미키야 공화국의 키르잔 일류지노프 수반을 비롯해서 연해주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다르킨 주지사 등이, 경제계 인사로는 코가 노부유키 노무라 그룹 CEO,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의 빈센트 회장 등이 있고, 하인즈 워드 미 프로축구 선수가 명예 서울시민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외에도 일본과 중국, 스페인 등 10여개국에서 국회의원, 기업가 등 1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대표들도 취임식 단상에 앉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독립유공자 및 서해교전 참전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가족, 4·19, 5·18민주화항쟁 관련 인사 등도 초청됐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지만 강한 기업의 대표들도 초대됐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대표들도 단상에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다. 특별초청된 50여명의 국민대표들 가운데는 단연 박태환, 김연아 선수가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정부의 모토인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경제계 총수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리했다.

이와는 별도로 1월 31일 마감한 대통령 취임식 국민참여 신청을 통해 추천된 2만 5천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이들 중 9,887명(3,528가족)이 가족단위로 신청한 사람들이며 국민참여 신청자 중 특별한 사연을 적은 300여명은 추천과 별도로 초청됐다.

시화연풍으로 국민화합의 한마당 연출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1시간 전인 오전 9시 53분부터 개그맨 김제동·김학도, 아나운서 최원정의 사회로 식전행사가 시작됐다.

식전 문화공연 명칭은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의미의 ‘시화연풍(時和年豐)’이었다. ‘시화연풍’은 이명박 대통령의 올해 신년회호로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뜻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이 화합하는 시대를 열고 해마다 경제가 성장한

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더불어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드는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사자성어였다.

식전행사는 전통 타악기 공연을 시작으로 박범훈 위원장이 직접 곡을 붙인 축하곡인 ‘시화연풍’을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국악원 단원들의 연주에 맞춰 소리꾼 장사익 씨와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부르면서 흥을 돋웠다.

이밖에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민속공연단의 공연과 함께 가수 김장훈의 축하곡 열창, 비보이 축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도 펼쳐졌다. 나눔을 상징하는 의미로 초대된 ‘기부 천사’ 김장훈은 ‘우리 기쁜날’을 열창하며 새 정부의 출발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을 펼쳤다

그야말로 식전 문화공연은 국악에 클래식, 민요, 가요, 재즈, 심지어 ‘막춤’까지 포함돼 전통과 현대, 전위와 대중성, 클래식과 팝, 국악과 월드뮤직이 어울려 한국인 특유 마당놀이의 흥으로 표현됐다. 학연, 지연, 빈부, 노사 등 모든 계층의 조화와 풍요, 그리고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 박범훈 취임준비위원장의 설명이었다.

“취임식은 낮은 자세에서 국민을 섬기겠다는 당선인의 정치철학을 반영해 구성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이라는 엄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담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소리, 몸짓, 의상에 한국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이에 입장음악은 한국적인(국악) 것으로 하고 피날레 음악은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음악으로 했다.”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오전 10시 52분. 이 대통령 내외를 태운 차량이 삼엄한 경비 속에 국회 정문 앞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으며, 의사당 정면을 향해 200m 가량 걸어 들어온 뒤 청사초롱을 든 남녀 어린이의 안내를 받아 연단 위 좌석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간간이 오른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와 악수하면서 가벼운 인사말을 건넨 뒤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 참석 내외빈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드디어 오전 11시. 개식 선언이 이뤄지자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광파르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면서 역사적인 취임식의 막이 올랐다.

이 당선인이 취임선서를 할 취임식 연단은 ‘섬기는 정부’의 기치를 반영, 청중석 바로 앞까지 당겨 권위의를 배제했다. 또한 대통령 문양인 봉황 대신 엠블렘으로 선정된 ‘태평고’는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넘어 선진화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취임식장은 합창석이 이명박 대통령 등 내빈 뒤에 있고 그 앞에 취임축하 무대가 설치됐다. 대통령이 식전행사를 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실제로 공연하는 사람의 뒤를 보게 돼 있었던 것이다.

취임식 총연출자 손진책은 “상하 개념 없이 한 호흡으로 함께 가자는 뜻”이라며 이번 취임식을 통해 글로벌 국가로서의 국가비전, 국민화합, 친숙한 최고경영자(CEO)형 대통령, 섬기는 대통령에 대해 낮은 자세로 접근해 표현했다고 밝혔다.

취임식 본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로 시작됐고 이어 한덕수 총리의 식사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오늘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날이고 미래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줄 것을 온 국민과 함께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선 이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선서를 했다.

곧이어 군악대 행진과 의장대 사열이 이뤄졌고, 이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답했다. 그 순간 ‘이명박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예포 21발이 여의도별을 갈랐다.

포성이 가라앉자 이 대통령은 이제 T자형 단상의 객석 방향에 설치된 연단으로 이동해 취임연설을 시작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넘어 선진화로 나아가자”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답게 취임사의 절반이 넘는 얘기를 ‘경제’에 초

점을 맞췄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2008년을 새 역사 창조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넘어서 선진화로 나아가자”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 10년 더러 멈춰서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 나와 네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다”고 말하면서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 갈등을 녹이고 투쟁을 풀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펼칠 경제정책 구상과 관련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할 것이며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세금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선 이후 줄곧 강조했던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다. 또한 대학의 자율화는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한국 사회 선진화의 관건이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모적 정치 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국화와 협력하고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향한 전진이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이명박’을 연호하며 새 정부의 성공 기원

연설이 끝나자마자 서울시향이 연주하고 연합합창단이 합창하는 베토벤 9번 교향곡 4악장 ‘환희의 송가’가 9분 동안 이어지면서 새 대통령의 탄생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이 곡의 지휘는 세계적 지휘자 정명훈이 맡았다. 정명훈은 지휘를 끝낸 뒤 지휘봉을 대통령에게 건네 눈길을 끌었다.

연주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이임 대통령 환송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 자리로 걸어가 인사를 나눈 후 참석한 전직 대통령, 내외빈 인사, 정당 대표들과도 악수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환한 표정으로 연단 중앙계단을 걸어내려오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노 전 대통령이 승용차에 탑승해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로 떠나는 장면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서야 입장할 때처럼 중앙통로를 통



취임식에 참석한 일반 국민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느라 취임식이 길어졌다.

해 국회 정문까지 행진했다. 이 대통령이 퇴장행진을 하기 위해 다시 국회 중앙통로로 나서자 정문 앞까지 국민대표, 한류스타, 공연 출연진, 군 의장대, 취타대, 군악대가 일렬로 도열해 새 대통령의 앞날을 축복했다.

일반인 참석자들도 박범훈 취임준비위원장이 작곡한 '시화연풍 아리랑'을 합창하면서 미리 받은 빨강, 파랑, 흰색 목도리를 흔들며 취임식장은 그야말로 형형색색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합의 물결을 이뤘다.

이 대통령은 퇴장을 하면서 주변의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당초 8분으로 예정됐던 퇴장시간이 17분으로 늘어났다. 국회 정문까지 걸어난 이 대통령은 손을 흔든 뒤 승용차에 탑승해 청와대로 향했다.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이명박'을 연호하며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은 연설과 퇴장 시간이 길어져 당초 예상보다 21분 늦은 12시21분 대 단원의 막을 내렸다.

취임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오후 4시부터 4시 반까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경축연회,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빈 만찬, 밤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부록

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
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구표
5.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 및 특별위원회 위원·팀장 분장업무
6.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및 TF 팀장
7.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근무자 현황
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 일지



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7.28 법률 제761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2. “대통령직”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 (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5.7.28>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한다.

제7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원의 직무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

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백서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6854호, 2003.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부칙(국회법) <제7614호, 2005. 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생략



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3.2.4 대통령령 17897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의료지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3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서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 제4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팀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을 둘 수 있다.
- ④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②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팀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실·팀 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 (업무담당자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과약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 (백서발간)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7897 호, 2003. 2. 4>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3.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제2호(2007.12.31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주요 과제를 관리한다.
- 제4조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획조정·정무·외교통일안보·법무행정·경제1·경제2·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및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활동상황과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조정을 담당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별지 1과 같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실·팀의 하부 조직을 둔다.
- 제5조 (대변인실) ① 위원회 활동 등의 대외 공표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변인실을 둔다.
- ② 대변인실에는 대변인 1인과 부대변인 약간 명을 두며,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6조 (행정실) ①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 ② 행정실은 인수위원회의 운영, 행정지원 및 서무, 취임식 준비 지원, 백서발간 등을 담당한다.
- 제7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팀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은 소관분야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 사항과 업무추진 상황을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자문위원의 임무) ① 자문위원은 인수위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자문·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자문위원 중 일부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에 두어 정책연구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실무위원·실무요원을 둔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장실에 보좌역과 필요한 요원을 둔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실·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전체회의 및 간사 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 전체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회의는 매일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간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주요정책 보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요 당면 현안문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정책 및 기타 주요정책사항을 수시로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행정실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요청) 위원이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 또는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시행하고 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바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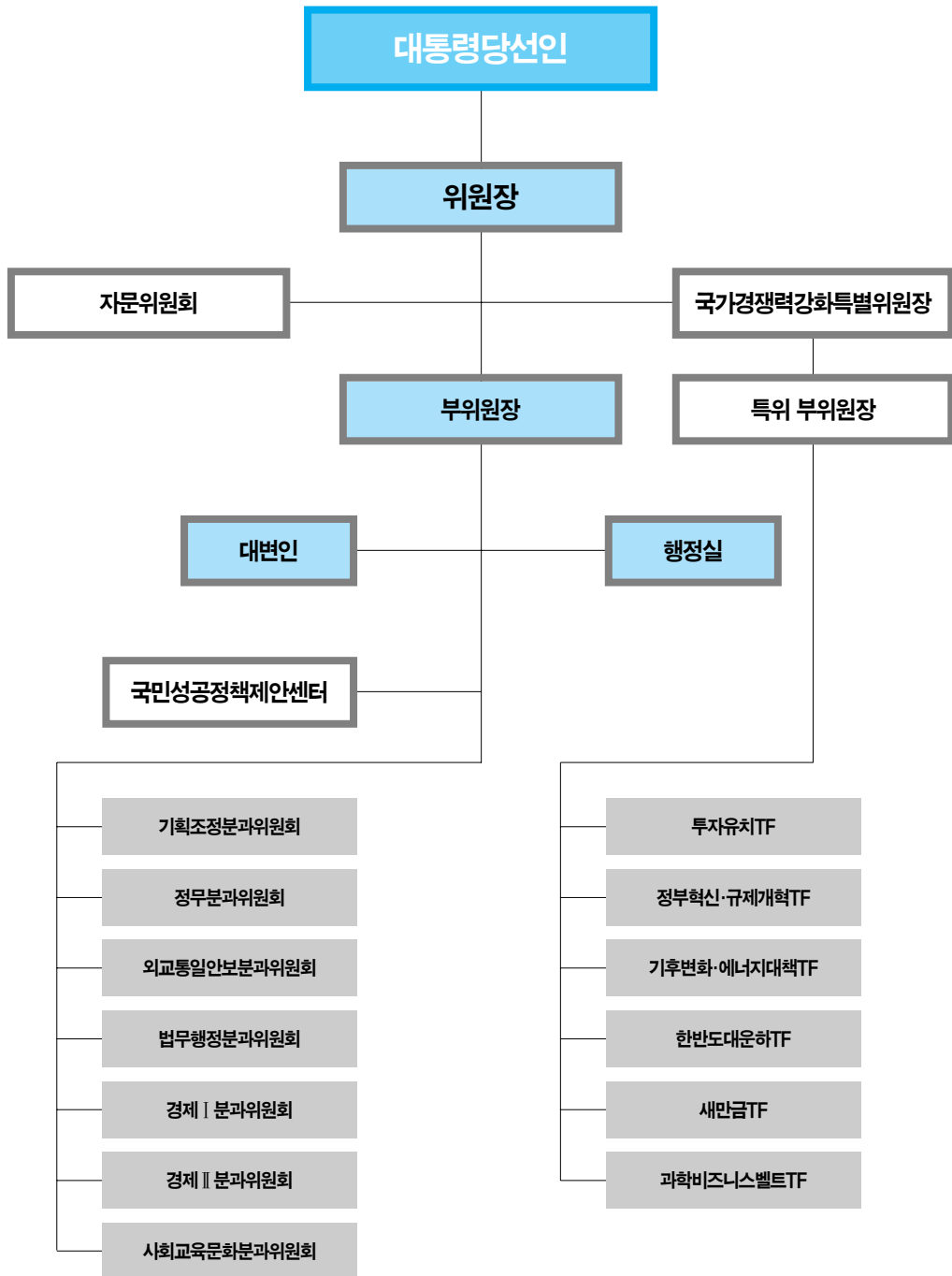
제15조 (결산) 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인수업무와 관련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며 정산된 잔여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활동비)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위임)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구표





5.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 및 특별위원회 위원·팀장 분장업무

구분	위원명	분장업무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	김형오	
대변인	이동관	위원회 활동 등의 대외공표 및 홍보
행정실	백성운	위원회 각종 회의지원, 서무, 회계, 인사, 취임식 준비지원, 백서발간 등
기획조정분과위원회	△맹형규 박형준 곽승준	국정목표 수립, 운영기획, 총괄조정 국정과제 설정, 국정 실천계획
정부분과위원회	△진수희 남주홍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박 진 현인택 홍두승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법무행정분과위원회	△정동기 이달곤	행정자치부, 법무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검찰청, 경찰청
경제 I 분과위원회	△강만수 백용호 이창용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제 II 분과위원회	△최경환 홍문표 최재덕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이주호 김대식 이봉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회	△사공일 △데이비드 엘든 윤진식 박재완 허증수 장석호 강현욱 민동필	투자유치, 정부혁신·규제개혁,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한반도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 △은 간사 및 특위 위원장. 허증수 위원은 2월 18일자로 사퇴



6.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및 TF팀장

위원장단



이경숙 위원장(인수위원)



김형오 부위원장(인수위원)



이동관 대변인(인수위원)



백성운 행정실장(인수위원)

기획조정 분과위원회



맹형규 간사(인수위원)



박형준 인수위원



박승준 인수위원

정무분과위원회



진수희 간사(인수위원)



남주홍 인수위원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회



박진 간사(인수위원)



현인택 인수위원



홍두승 인수위원

법무행정 분과위원회



정동기 간사(인수위원)



이달곤 인수위원

경제 I 분과위원회



강만수 간사(인수위원)



백용호 인수위원



이창용 인수위원

경제Ⅱ
분과위원회



최경환 간사(인수위원)



홍문표 인수위원



최재덕 인수위원

사회교육문화
분과위원회



이주호 간사(인수위원)



김대식 인수위원



이봉화 인수위원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사공일 공동위원장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



윤진식 부위원장
(인수위원, 투자유치TF 팀장)



박재완 인수위원(정부혁신
·규제개혁TF 팀장)



허중수 인수위원(기후변화-에너지
대책TF 팀장, 2월 18일자 사퇴)



장석효 팀장
(한반도대운하TF)



강현욱 팀장(새만금TF)



민동필 팀장
(과학비즈니스벨트TF)



7.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근무자 현황

구분		성명	
대변인실	전문위원	강승규 한오섭(선대위)	
	실무위원	김홍식 김재윤(선대위)	
	사무직원	김정훈(선대위)	
행정실	전문위원	이영섭(선대위)	
	실무위원	주낙영 문연호 공재광 허남식 위현수(행정자치부)	
		이윤호 홍용준 한상경(선대위)	
	백서발간팀	전문위원	정인학(선대위)
		실무위원	강승구 김정문 이도환(선대위) 염운주(당)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신정수(국무조정실) 조원동(재정경제부)	
		도태호(건설교통부) 김동연(기획예산처) 김준경(KDI)	
		김용태(중앙일보) 정인철(매일경제)	
		이태규 김해진(선대위) 이동관(선대위)	
	실무위원	김종문(국무조정실) 이충면(외교통상부)	
		김완섭(기획예산처) 윤한홍(서울시)	
	정재용(선대위) 박광명 조철희 이종호(당) 이동현(영남대)		
정무분과	전문위원	성용락(감사원) 심오택(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1명)	
		김광동 김대현 이병용 전영태(당)	
	실무위원	정영주(국무총리비서실) 홍순범(감사원)	
		구만섭(중앙인사위원회) 국가정보원(2명)	
		구인호(선진연대) 계충민 김상훈(선대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전문위원	엄종식(통일부) 이용준(외교통상부) 임관빈(국방부)	
		오동섭 최유성(당) 김연철(한남대) 박상현(선대위)	
	실무위원	정소운(통일부) 강수연(외교통상부)	
		양세봉(국방부) 강은호(방위사업청)	
		이치우 정연상(당) 조해구(선대위) 백진현(영남대)	
법무행정분과	전문위원	정병두 진경준(법무부) 황준기(행정자치부)	
		이강덕(경찰청) 김병일(서울시)	
		김필규(변호사) 오세경(선대위)	
	실무위원	서승우(행정자치부) 송민현 이동권(경찰청) 강수상(국정홍보처)	
		김덕수(선진연대) 김문영(당) 이진규(여의도연구소)	

경제Ⅰ분과	전문위원	최중경(재정경제부) 김규옥(기획예산처)
		김주현(금융감독위) 이현동(국세청)
		장수만(선대위) 권태식(당) 김윤환(고려대)
		이상직(대구산업정보대)
	실무위원	최상목(재정경제부) 김운창(금융감독원)
송광조(국세청) 황명석(공정거래위원회)		
이현석(선대위) 임우근(당)		
경제Ⅱ분과	전문위원	윤수영(재정경제부) 박현출(농림부)
		형태근(정보통신부) 서종대(건설교통부)
		곽인섭(해양수산부)
		김태경(선대위) 전승준(고려대)
	실무위원	용홍택(과학기술부) 이주명(농림부)
		도경환(산업자원부) 이상진(정보통신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장훈 남궁형(선대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전문위원	엄상현(교육인적자원부) 김재원(문화관광부)
		최희주(보건복지부) 홍준석(환경부) 조재정(노동부)
		진성호 이선용 조은희(선대위)
	실무위원	배상훈(교육인적자원부) 김홍기(서울시)
		이영호 김영미 이재임(선대위) 이준호(당)
		구혜영(한양대)
투자유치TF	전문위원	이관해(선대위) 하찬호(외교통상부)
	실무위원	조상명(서울시) 박경로(청소년운동연합)
정부혁신·규제개혁TF	전문위원	이호영(국무조정실) 정광호(서울대)
	실무위원	김용진(기획예산처) 이창균(지방행정연구원)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	전문위원	이강후(산업자원부) 고윤화(환경부)
	실무위원	김창모(외교통상부) 박녹(영남대)
한반도대운하TF	전문위원	이재봉(국무조정실)
	실무위원	김필홍(환경부) 서기동 김형렬(건설교통부)
새민금TF	전문위원	김경안(당) 류철상(한국건설협회)
	실무위원	성기만(전라북도) 이란우(당)
과학비즈니스벨트TF	전문위원	장석명(서울시) 손영복(한국기술거래소)
	실무위원	양성광(과학기술부) 김은성(한국학술진흥재단)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센터장	이상목(선대위)
	전문위원	이운하(선대위)
	실무위원	김의환(국가청렴위원회)



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 일지

일자	내용
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원회 현판식 ○ 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 ○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 인수위원회 직인, 회계직 공무원 직인 등록 및 공고
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태안 유류오염사고 현장방문 ○ 중앙부처 업무보고 계획 통보 ○ 인수위원회 사업자 고유번호 부여 신청 및 개시 ○ 인수위원회 예산집행 등에 관한 위임전결기준 마련 ○ 임기제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협조 요청(청와대) ○ 국회 속기사 근무지원 요청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경제계 인사 간담회(전경련회관) ○ 인수위원회 회계직 공무원 임명 ○ 공무원 파견 대상자 추천 요청 ○ 분과 운영방안 확정 및 업무 분장
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원회 합동업무조정회의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최전방부대 방문 /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실무위원·자문위원 임명장 수여 ○ 각 분과위 협력관회의 개최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충원 참배 ○ 인수위원회 시무식 ○ 중앙부처 업무보고 일정 및 작성기준 등 통보 ○ 각 분과위 서무 관계관 회의 개최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민·관경제연구원장 초청간담회(인수위 대회의실) ○ 각 분과위 서무 관계관 회의 ○ 정부·공공기관 등의 인사에 관한 협조 요청(중앙인사위원회) ○ 부처 업무보고 : 교육인적자원부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관) ○ 각 분과위 서무 관계관 회의 ○ 부처 업무보고 : 교육인적자원부·국무총리실·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환경부·국정홍보처 ○ 현장방문 : 상암 DMC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년회 / 미국 외교사절 접견 ○ 부처 업무보고 :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경찰청·해양수산부·농림부·해양환경청·농촌진흥청·산림청·여성가족부·기상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기획예산처·환경부·건설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회의 : 문화예술·인문사회 분야 간담회 / 방송미디어 간담회 / 대학총장과의 오찬 간담회 / 출연연 선임부장 초청 간담회 ○ 현장방문 :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신용회복 지원 관련 추가 기자 브리핑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업무보고 : 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정보통신부 ○ 회의 :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회의 / 데이비드 엘튼 공동위원장 투자전략회의 / 농어민단체 간담회 / 농림수산 분야 및 해양수산 분야 업체 간담회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업무보고 : 법무부·검찰청·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국세청·조달청·통계청·관세청·과학기술부·기상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너지기술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농촌진흥청 ○ 회의 : 747 공약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 ○ 데이비드 엘튼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업무보고 : 통일부·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산업자원부·국가보훈처·민주평통 자문회의·국가비상기획위원회·외교통상부 ○ 회의 :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 정책자문회의 / 747 공약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 / 재향군인회 간담회 / 제1차 한국노총 정책 간담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국회의장단·원내대표단 예방 / 이천 냉동창고 화재현장 방문 ○ 부처 업무보고 : 감사원·국방부·국가청렴위원회·기획예산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노동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문화재청·과학기술부·수자원공사·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 회의 : FTA 관련 수산 부문 후속대책 정책 간담회 / 여성단체 간담회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전국 금융인 초청 간담회(금융연합회관) ○ 부처 업무보고 : 한국은행·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 회의 :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식품산업 육성 및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관련 간담회 ○ 현장방문 : 만화가 이현세 사무실 ○ 위원장, 일본 외무성 차관 접견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면담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접견 ○ 부처 업무보고 : 소방방재청·국무조정실·KDI ○ 회의 : 태안 유류오염사고 관련 서해안 지역 수협조합장 간담회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 / 토지공사·전경련·산업단지공단 간담회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미·일·중·러 특사단 접견 /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 인사회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문 ○ 부처 업무보고 :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 회의 : 외교통일국방 분야 국정과제 자문회의 / 공직자 부패척결 자문회의 / 지방분권 이양 추진 관련 자문회의 /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자문회의 / 출연연구기관 운영 효율화 제고를 위한 관계관 회의 /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관련 회의 / 문화 분야 상임자문회의 / 태안 유류오염사고 관련 정책 간담회 /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정책간담회 ○ 서울시 의견 청취,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투자유치 관련 업무협의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향 관련 연석회의 / 시도지사협의회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 기관 정비 관련 자문회의 / 건설교통부 업무협의 / 민생 관련 건설·교통 부문 자문회의 /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간담회 ○ 위원장, KAIST 총장 면담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에 대한 국정과제보고회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왕이 중국 특사 접견 ○ 회의 : 출연연구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자 회의 / 주요 국정과제 관련 외부 전문가 초빙 내부 간담회 / 인수위원장·여성정책자문위원 간담회 / 제2차 한국노총 정책 간담회 / 제1차 민주노총 정책 간담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덕R&D특구추진본부, 충남 행복도시 지원·도청 이전추진단 협의 ○ 인수위원장, 왕이 중국 특사 접견 및 David Sedney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면담 / 체신노조 위원장 면담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주한 외국인투자 기업 신년인사회 / 한·미 연합사 방문 ○ 회의 : 747 공약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최종회의 / 한·미 FTA 관련 농림 분야 대책 회의 / 벤처 기업인과의 간담회 / 환경산업계와의 현장 간담회 ○ 현장방문 :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발전소 및 국립생물자원관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광역경제권 관련 제1차 외부자문회의 / 교육자치 관련 전문가 업무협의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전략회의 /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 전문가 초청 합동업무조정회의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전략회의 /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전문가 회의 / 온실가스 감축 전문가 초청 합동업무조정회의 / 제2차 민주노총 정책 간담회 / 국방 관련 국정과제 해당부서 간담회 / 문화예술계 간담회 / 토지이용규제 완화방안 간담회 ○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 현장방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 방문 ○ 회의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전략회의 / 과학비즈니스벨트내 주요 시설 설치 전문가 검토회의 / 전경련 간담회 / 국방 관련 해당 부서와 간담회 / 환경산업계 현장 간담회 / 과학계 주요인사 초청 정책 간담회 ○ 현장방문 : 새만금사업 관련 현장 ○ 체신노조위원장 면담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신성장동력 창출 전문가 간담회 / 민주당·국민중심당 방문 ○ 회의 : 경제·에너지 외교 관련 정책 간담회 / 국방 관련 국정과제 해당부처 간담회 / 금융규제 개혁 관련 간담회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 / 관광 분야 간담회, 광역경제권 관련 16개 시·도 지역 경제진흥담당관 회의 / 공직 청렴성 제고 방안 자문회의 ○ 현장방문 : 한국관광공사 / 새만금사업 관련 현장 / 삼성종합기술연구소 / LG전자기술연구원 ○ 예산 10% 절감을 위한 감사 결과 분석 관련 기자회견, 일본 문부과학성 관계자 면담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글로벌 코리아 관련 정책 간담회, 부동산 현안 관련 간담회, 제4차 한국노총 정책 간담회, 과학계 주요 인사 초청 정책 간담회, 전문위원회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전문가 회의, 인재과학부 기능·조직에 관한 전문가 회의 ○ 현장방문 : 대불산업단지 내 기업 애로사항 현장조사단 파견 / 한국화이자제약 ○ 정부 성과관리 및 공무원 역량 강화 토론회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관람 ○ 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 활성화 방안 협의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농어민단체 대표 간담회(인수위 대회의실)/일본 특사단 접견 ○ 회의 : 문화산업 분야 자문회의 / 문화예술 분야 자문회의, 공직자 부패척결 자문회의 / 서비스 분야 자문회의 / 규제개혁 로드맵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 / 공장설립 절차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전문가 회의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 Martin Wolf FT 경제편집장과의 간담회 /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간담회 / 과학계 주요인사 간담회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서울시청) ○ 부처 업무보고 :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관계부처 ○ 회의 : 교통개발연구원 자문회의 / 방송·통신 융합 간담회 / 주영 특파원과 간담회 /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 ○ 현장방문 : 외교통일안보분과 국정과제 관련 /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발전소) / 서울시립어린이병원, 한사랑마을 / 동탄신도시 입주 외국인투자 기업 /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후보지역 ○ 영국 경제계 인사 대상 신정부 정책설명회 /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대토론회 /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발표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노동계 간담회(한국노총) ○ 회의 : 출연연 및 연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 규제개혁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세미나 / 한반도 평화구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방안 간담회 / 체육계 간담회 / 다보스 취재기자단 간담회 /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 정책 간담회 ○ 현장방문 : 복지 분야 현장 / 대한체육회 / 생활체육협의회 ○ 인수위원장, 불교계 인사 면담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기자실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 국정과제 관련 간담회 / 새 정부 출범과 정부혁신 토론회 / 운수업계 간담회 / 원자력연구원 전문가 초청 설명회 ○ 현장방문 : 호스피스시설 모현센터 /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후보지역 ○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다보스포럼 참석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한국교총 대표단 간담회(인수위 대회의실) / 라민 디악 국제육상경기연맹회장 접견 /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 / 금융시장 동향 간담회 ○ 회의 : 광역특별회계 관련 관계자 협의회 / 국제평화유지활동 확대방안 세미나 / 체육 분야 자문회의 / 한반도 대운하 자문위원단 워크숍 / 문화경제학회 주관 대운하와 지역발전 세미나 / 농촌진흥청 및 관련 단체 간담회 / 운수업계와의 간담회 ○ 현장방문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현장 ○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설명(국회 행정자치위)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위, 출범 1개월 계기 휴무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민·군 통합복지체계 구축 관련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인수위 파견공무원 오찬 간담회 / 총리후보자 지명 기자회견 ○ 회의 : 국방 관련 관계 부서 합동회의 /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교육정책 관련 간담회 / 영어 공교육 완성 관련 간담회, 고교 다양화 300 관련 전문가 회의 / 과학계 주요 인사 초청 정책간담회 / 원자력연구원 전문가 초청 설명회 ○ 현장방문 : 파주촬영세트장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아세안 대사단 접견 / GM대우 부평공장 방문 ○ 회의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 / 영어 공교육 완성 관련 전문가 회의 / 수해·재해 경감 관리기술 전문가 설명회(수자원공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전문가 설명회(대전발전연구원) / 포럼 푸른한국 주관 심포지엄 /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희망복지129 공약 관련 간담회 / 운

	수업계 간담회 / 과학관 및 문화사업 간담회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대표자단 간담회 / 주한 미국 대사관 농무참사관 면담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 홍은3동 주민센터 / 하나원 / 강북정수센터 ○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광역경제권 관련 관계 부처 의견 검토회의 / 출연연구기관 발전방안 간담회 / 경마산업 관련 간담회 /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설치방안 간담회 /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관련 공청회 ○ 현장방문 : 전방지역 / 경찰병원 / 관악고용지원센터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문화예술계간담회(국립중앙박물관) ○ 부처 업무보고 : 국방부 본부 조직개편안 보고 ○ 회의 : 네트워크 고도화 및 융합 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 친환경·고부가가치 미래 지능형 자동차 간담회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회의 /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방안 간담회 / 기후변화 대응 관련 CO₂ 다량배출 업체 간담회 ○ 현장방문 : 보육공약 점검을 위한 어린이집 / 문화예술 교류현장 ○ 국정과제 준비상황 당선인 보고 / 부동산 택시 해외건설 등 건설·교통 분야 주요 현안 당선인 보고 / 인수위원장, 세계박람회기구 사무총장 면담 / 한반도평화연구원 관계자 면담 / 태안 기름유출사고 지역주민 대표 면담 / 공직자 부패척결 관련 자문교수 면담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무역협회 방문 / 환경영웅상 시상식 참석 ○ 회의 : 지분형 임대주택 세부 추진방안 자문 간담회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간담회 / 기초연구센터 연구 활성화 방안 간담회 / 서민금융 확대 관련 자문회의 /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후보 지역 주요 인사 간담회 ○ 현장방문 : 서울지방 노동청 / 서울고용지원센터 방문 ○ 부동산, 택시, 해외 건설 등 건설·교통 분야 주요 현안 당선인 보고 / 주한 EU 대사 면담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사회복지시설 영락애니아의 집 방문 ○ 회의 : 농가의 비료 및 사료 구입부담 완화대책 협의회 / 공무원 노동단체 간담회 / 해외 기초과학연구소 협력방안 간담회 ○ 현장방문 : 중증 장애 아동요양시설 현장 방문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봉천동 원당재래시장 방문 ○ 새 정부 출범 전 절차상의 쟁점 당선인 보고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관광산업인 간담회(인수위 대회의실) ○ 회의 : 게임업계 간담회 / 제2차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방안 간담회 / 과학비즈니스벨트내 유비쿼터스 보건 의료 관련 간담회 /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후보지역 주요 인사 간담회 / 한반도대운하 홍보동영상 제작안 자문회의 ○ 현장방문 : 게임산업 현장방문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현장방문 ○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면담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인, 해외 자랑스런 한국인들과 화상통화 / 리비아 코리아 소사이터티 회장 일행 접견 ○ 부처 업무보고 : 문화관광부 ○ 회의 : 광역경제권 관련 산업자원부 회의 / 영화산업계 간담회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전문가 초청 설명회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 / 연구병원 관련 간담회 ○ 현장방문 : 영화진흥위원회

	○ 당선인에 대한 국정과제보고회
2.7	○ 설 휴무
2.8	○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 점검 / 예산낭비 사례집 출판
2.10	○ 예산낭비 사례집 관련 기자회견 / 원자력 분야 전문가 업무 면담(한국수력원자력)
2.11	○ 당선인, 인수위원회 송례문 화재현장 방문 / 일본 중의원 대표단 접견 /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단 면담 ○ 회의 : 부산 신행 배후부지 기반시설 민간 투자 관계자 회의 / 과학계 주요 인사 자문회의 /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진성화 방안 간담회
2.12	○ 당선인, 조스팽 프랑스 전총리 접견 / 팔미사노 IBM 회장단 일행 접견 ○ 회의 : 광역경제권 후속조치 관련 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수출전략 회의 / 광주시와 영산강운하 관련 논의 / 대구시와 경부운하 관련 논의 ○ 현장방문 : 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협력을 위한 방문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당선인 보고 / 과학비즈니스벨트 당선인 보고
2.13	○ 당선인, 조셉나이 하버드대 교수일행 접견 ○ 회의 : 민·관 투자 활성화 방안 관계 부처 최종 합동회의 / 글로벌 리더 양성 산·학·관 합의 관련 간담회 / 낙동강연구원 세미나 ○ 현장방문 : 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협력을 위한 방문 / 가속기등 과학벨트 관련 주요 시설 현지조사(부산 고리원전)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면담 / 기후변화·에너지대책 언론 브리핑 /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2.14	○ 당선인, 바르자니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 접견 ○ 회의 : 광역경제권 사업과 유형관련 협의(행자부) / 한나라당 국제위원회·분과 합동 토론회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 정책 간담회 ○ 현장방문 : 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협력을 위한 방문(OECD)
2.15	○ 당선인, 알 사이바니 두바이 투자공사 사장 접견 ○ 회의 :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관련 설명회 ○ 현장방문 : 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협력을 위한 방문(IAEA 본부) ○ 한반도대운하 관련 두바이투자공사 사장 논의
2.16 ~ 2.17	○ 회의 : 국정운용 합동업무 조정회의 ○ 원자력 발전 관련 전문가 업무면담
2.18	○ 회의 : 대구시 달성군과 경부운하 협의 ○ 위원장, 시군자치구의회의협의회 시도대표단 면담
2.19	○ 회의 : 광역경제권 추진 관련 수도권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 ○ 부산시·군산시·김해시와 운하 관련 논의, 전북운하·새만금개발추진위원회 제안
2.20	○ 회의 : 서울시, 경북도·고령군과 경부운하 관련 협의 ○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당선인 보고
2.21	○ 당선인,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대표 접견 /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접견 ○ 회의 : 당정회의
2.22	○ 당선인, 웅문산 헬기 추락사고 합동분향소 방문 / 필립 세갱 프랑스 감사원장 접견 / 국무위원 후보자 회의 /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주요 인사 접견 ○ 인수위 해단식



국민성공시대를 기다리며 (편집후기)

인류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동굴의 벽에다 그림을 그렸고, 손톱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돌을 쪼아 족적을 남겼다. 알 듯 모를 듯 그려진 그림과 지금은 뜻조차 해독하기 힘든 그것들은 인류 문명의 씨앗이 됐다.

기록은 단순히 그 시대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를 규정하는 작업이다. 기록이라는 작업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아간 인간 활동의 총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한 시대를 정리하는 것이다. 기록을 통해 그 시대 활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추구해야 할 지평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록은 역사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역사를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명박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한동안 우리는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이분법적 발상에 집착해 스스로를 제한하며 사회 발전 동력을 소모했다. 성장 우선주의와 분배 우선주의의 극단적 논쟁에 빠져들며 총체적으로 국부를 성장시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해법은 생각조차 못했다. 소모적 이념논쟁은 특히 북한 문제에서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며 우리 내부의 분란을 부풀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등장은 한동안 한국사회가 매몰됐던 이념논쟁의 허구를 일깨워 주었다. 한국사회가 민주화시대를 넘어 선진화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제창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창조적 실용주의'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7%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비전은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일체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당선인의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첫 과정이었다.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실무위원들은 정권을 원만하게 인수받는 작업과 함께 창조적 실용주의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인수위는 '일하는 인수위상(象)'을 실천했다.

일하는 인수위란 단순히 처리하는 업무량을 높였다거나 근무시간을 늘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정책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 타당성과 효용성을 따지고 검토했다. 각계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입장을 경청했다. 당선인이 지적한 것처럼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세를 가졌다. 그리고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책의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인수위는 '섬기는 인수위상'을 실천했다. 인수위와 생각이 다른 가치관을 외면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애써 찾으려 노력했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체온도 재보려고 노력했다. 세상 모두의 외침을 통합하되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나가야 할 좌표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모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을 향하면서 발상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려고 지혜를 짜냈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는 결코 몸집이 크지 않았다. 규모는 작았지만 비전은 크고 높았으며, 실천 의지는 강하고 단단했다.

백서는 기록이다. 건국시대를 넘어 산업시대를 거치고 민주화시대의 진통을 딛고 선진국시대로 나아가는 시대정신의 기록이다. 이번 백서는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시대적 가치에 대한 반성이요, 새로운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었다. 인수위 활동이라는 채널을 통해 서기 2008년, 단기 4341년 지금의 조국 대한민국을 더듬어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치를 모색하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 창조적 실용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돼 일상생활 속에 자리를 잡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백서를 준비하면서 기록성에 먼저 주목했다. 인수위 백서는 인수위 활동을 객관적으로, 그것도 있는 그대로 정확한 어휘로 기술하려 했다. 백서의 기술 내용은 인수위 활동의 주체들도 동의해야 하는 한편 인수위 활동을 지켜본 파수꾼들 또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인수위 활동은 국정과제를 추출해서 그 국정과제의 경중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매겨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이정표를 세워주는 작업이었다. 이정표는 정확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인수위

각 분과위와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집대성해서 제1권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1권의 백서 내용은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해 전세계에 배부하도록 했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면서 이명박정부의 국정 좌표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또 인수위 백서에서는 인수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시대정신이 갖는 의미를 밝혀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수위 활동으로 구체화된 결과물만을 요약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입장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의견을 밝혀 한 시대를 비추보는 거울이 되도록 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보다는 우리 선택이 최선의 길이었다는 얘기를 담고 싶었다.

우리의 허물을 뒤돌아보는 작업도 잊지 않았다. 제17대 인수위를 이을 제18대 인수위에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바람을 바탕에 깔았다. 사회적 쟁점이 됐던 인수위의 국정과제가 선정되고 정리되는 마디마디를 밝히면서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 등도 모아서 제2권에 담았다.

원시인들이 동굴 벽에 그들의 발자취를 새기던 숭고한 자세를 조금이라도 닮아 보려고 노력했다. 대나무를 쪼갠 죽간에 한 자 한 자를 정성스레 새기는 마음가짐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백서에는 훗날 눈길을 끌지 못할 내용도 있을 것이다.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 했다.

제17대 백서는 백서발간팀 위원들과 각 분과위의 백서 편집위원들이 원고를 쓰고 정리했지만, 백서는 그들의 것이 아니다. 백서가 발간되기까지 백서 발간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지만, 백서는 역시 그들의 것은 아니다. 백서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끌고 함께 일하며 땀 흘렸던 모두의 작품이요, 인수위 활동을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본 국민들 모두의 것이다. 이들 모두가 이제 인수위 백서를 만들던 그 설렘으로 이명박정부를 응원하고 격려할 것이다. 국민성공시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백서 편찬위원회

편집위원

맹형규(기획조정분과 간사 / 인수위원)

백성운(행정실장 / 인수위원)

박형준(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조원동(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분과·특위 집필위원

신금자(대변인실 정책연구위원/전 선대위 MB미디어 부팀장), 공재광(행정실 실무위원/행정자치부 주민생활기획팀), 김종문(기획조정분과 실무위원/국무조정실), 이상훈(정무분과 정책연구위원/윤건영 의원 보좌관), 조해구(외교통일안 보분과 실무위원/전 선대위 후보 보좌역), 서승우(법무행정분과 실무위원/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송광조(경제Ⅰ분과 실무위원/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김태경(경제Ⅱ분과 전문위원/전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 김길성(경제Ⅱ분과 정책연구위원/법무법인 홍운 고문), 김영미(사회교육문화분과 실무위원/전 한나라당 여성국 부국장), 이관해(투자유치TF 전문위원/전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신승훈(투자유치TF 정책연구위원/코트라 투자전략팀), 김하균(정부혁신·규제개혁 TF 비공식파견/행정자치부 진단기획팀장), 이강후(기후변화및에너지대책TF 전문위원/산업자원부 국장), 김기수(한반도대응하TF 비공식파견/전 KDI 전문위원), 이란우(새만금TF 실무위원/전 전라북도 공보관), 이철규(과학·비즈니스벨트 TF 자문위원/은하도시포럼 사무국장), 김선진(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자문위원/전 선대위 홍보팀장), 이홍준(취임준비위원회 실무위원/행정자치부), 김영수(취임사준비위원회 실무위원/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서발간팀

정인학(전문위원 겸 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이사대우)

강승구(실무위원, 전 선대위 서울시당 상근부대변인)

김정문(실무위원, 전 선대위 서울시당 상근부대변인)

장형규(자문위원, 소설가, 디자인전문회사 (주)로프트 대표)

염운주(실무위원, 전 선대위 서울시당 대외협력총괄단장)

이도환(실무위원, 아동문학평론가, 한남대학교 문창과 강사)

서남수(기획위원, 국정홍보처)

전소향(사진취재, 국정홍보처)

손경숙(행정실무, 국정홍보처)